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기획조정실, 무역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2020. 1.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예산 및 금융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기획조정실·무역위원회·국가기술표준원

2020·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기획조정실	1
I. 세 입	3
<일반회계>	
(1) 토지대여료	7
(2) 건물대여료	11
(3) 기타재산수입	14
(4) 과징금	17
(5) 기타경상이전수입	19
II. 세 출	23
<일반회계>	
(1)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26
(2)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34
(3)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50
(4)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정보화)	60
2. 무역위원회	73
<일반회계>	
(1) 무역구제지원사업	76
3. 국가기술표준원	89
<일반회계>	
(1) 신기술제품인증	93
(2) 국제표준활동지원	106
(3)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122
(4)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	137

(5)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155
(6)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176
(7)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186
(8) 국가표준활성화	207
(9) 안전인증역량강화(R&D)	233
(10)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R&D)	248
(11) 표준안전기반구축(R&D)	269
(12)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R&D)	278
(13)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293
(14) 안전제도기반조성	309
(15)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	321
(16)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333
(17)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351
(18)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378
(19)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 구축(정보화)	387
(20)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408
(21) 기술표준정책	413

<전력기금>

(22) 이차전지화재안전성검증센터구축(R&D)	421
---------------------------------	-----

기획조정실

세 입

수입예산 총괄표(운영지원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결산	2019예산		2020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총 계	193,276	159,986	159,986	217,299	217,299	57,313	35.8
51 관유물대여료	20,577	16,889	16,889	21,710	21,710	4,821	28.5
토지대여료 (51-511)	17,221	13,742	13,742	17,148	17,148	3,406	24.8
건물대여료 (51-512)	3,356	3,147	3,147	4,562	4,562	1,415	44.9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4,574	16,779	16,779	38,593	38,593	21,814	130
기타재산수입 (54-545)	14,574	16,779	16,779	38,593	38,593	21,814	130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279	709	709	1,851	1,851	1,142	161
과태료 (56-563)	211	254	254	600	600	346	136
징계부가금 (56-564)	5	0	0	0	0	0	-
과징금 (56-565)	1,062	455	455	1,251	1,251	796	175
58 가산금	6	9	9	14	14	5	55.6
가산금 (58-581)	6	9	9	14	14	5	55.6
59 기타경상 이전수입	149,070	124,919	124,919	154,190	154,190	29,271	23.4
기타경상 이전수입 (59-596)	149,070	124,919	124,919	154,190	154,190	29,271	23.4

구 분	2018결산	2019예산		2020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69 잡수입 (재화및용역 판매수입)	18	42	42	45	45	3	7
기타잡수입 (69-691)	16	42	42	45	45	3	7
기타영업외잡 수익 (69-697)	2	0	0	0	0	0	-
69 잡수입 (수입대체 경비수입)	607	639	639	896	896	257	40.2
기타잡수입 (69-691)	607	639	639	896	896	257	40.2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 대	7,146	0	0	0	0	0	-
토지매각대 (72-721)	7,146	0	0	0	0	0	-

(1) 토지대여료
51 - 511

< 회계명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토지대여료	13,483	13,742	13,742	17,148	17,148	3,406	24.8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1항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
 -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하여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권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게 임대한 토지 임대료

다. 2020년 세입 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9예산	13,742,000	○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 7,432백만원 - 임대가능면적 × ('15~'17) 입주율 가중평균 × 임대료 단가 × (1 - ('15~'17) 감면율 가중평균) × 지분율

		비						
		지역	임대료(원)	임대 면적(m ²)	단가 (원)	감면 율	임주율	지분율
		천안	914,579,249	= 491,382×	3,624	×52%	× 99.4%	× 100%
		월전1	133,547,932	= 99,060×	2,004	×84%	× 80%	× 100%
		월전2	9,089,140	= 46,292×	2,004	×75%	× 20%	× 65%
		대불	859,568,685	=1,601,62×	828	×67%	× 97%	× 100%
		오창	59,635,390	= 446,269×	2,688	× 6%	× 98%	× 83%
		구미	91,489,673	= 332,364×	1,944	×81%	× 56%	× 82%
		구미부품	23,927,513	= 246,341×	1,788	×11%	× 68%	× 75%
		인주	88,921,155	= 159,457×	1,812	×41%	× 100%	× 75%
		사천	1,247,088,049	= 495,865×	2,496	×100%	× 100%	× 90%
		달성	56,300,697	= 104,187×	2,388	×42%	× 72%	× 75%
		장안1	205,618,614	= 418,156×	3,036	×58%	× 70%	× 40%
		장안2	164,592,049	= 368,977×	3,636	×60%	× 51%	× 40%
		당동	206,645,272	= 239,459×	4,596	×57%	× 97%	× 34%
		지사	1,062,230,301	= 298,070×	4,956	×100%	× 80%	× 75%
		오성	144,835,489	=353,928×	3,876	×69%	× 38%	× 40%
		포항부품	135,150,561	= 264,934×	1,524	×66%	× 68%	× 75%
		익산부품	59,855,719	= 319,398×	1,236	×48%	× 42%	× 75%
		창원부품	70,929,360	= 71,368×	5,412	×48%	× 51%	× 75%
		어연	53,666,944	= 60,557×	4,200	×53%	× 100%	× 40%
		추팔	81,580,354	= 88,976×	3,372	×81%	× 84%	× 40%
		포승	71,474,265	= 95,773×	3,840	×49%	× 100%	× 40%
		현곡	286,934,340	= 380,102×	3,432	×65%	× 94%	× 36%
		미음	331,193,991	= 299,584×	5,100	×69%	× 42%	× 75%
		EEW	11,347,004	= 52,491×	1,023	×42%	× 100%	× 50%
		날코	143,249,993	= 29,668×	11,56	×84%	× 100%	× 50%
		천안5	522,481,400	= 336,604×	2,484	×100%	× 77%	× 70%
		문막	27,386,069	= 95,832×	2,988	×87%	× 40%	× 65%
		진천산수	32,973,315	= 108,398×	1,728	×29%	× 100%	× 60%
		송산2	73,706,150	= 134,023×	3,480	×36%	× 74%	× 60%
		국가식품	8,306,424	= 116,000×	1,548	×23%	× 34%	× 60%
		충주	11,002,7801	= 334,698×	1,920	×48%	× 60%	× 60%
		송산2-1	143,324,295	= 165,309×	3,480	×100%	× 32%	× 60%
		합계	7,431,657,207					
		○ 자유무역지역: 임대예상면적 × 예상단가 = 6,310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3,303 = 661,640m ² × 4,992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90 = (마감면) 61,059m ² × 1,284원 + (감면) 24,754m ² × 642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765 = 873,023m ² × 876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74 = 109,011m ² × 676.8원						
		- (울춘자유무역지역) 228 = 165,948.5m ² × 1,374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85 = 119,199.7m ² × 720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876 = 403,735m ² × 2,170원						
2020예산안	17,148,000	○ 외국인투자지역 : 예상임대면적 × 예상단가 = 8,968,556.5m ² × 1038.1원 = 9,310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 예상임대면적 × 예상단가 = 7,838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617,827m ² × 7,020원 = 4,337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 887,884m ² × 1,202원 = 1,067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873,022.6m ² × 915.7원 = 799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96,088.56m ² × 738원 = 70백만원						
		- 울춘자유무역지역 : 178,911.2m ² × 1,334원 = 239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371,084.4m ² × 765원 = 284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488,937m ² × 2,131원 = 1,042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6	10,023	10,023	10,023	13,005	12,556	125.2	96.5	449	-
'17	10,524	10,524	10,524	15,012	14,506	137.8	96.6	506	-
'18	13,483	13,483	13,483	18,092	17,221	127.7	95.2	871	-
'19	13,742	13,742	13,742	14,438	11,806	85.9	81.8	2,631	-
'20(안)	17,148	-	-	-	-	-	-	-	-

※ '19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9. 11월말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태권		이창룡
		044-203-5080		044-203-5086

(2) 건물대여료
51 - 512

< 회계명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건물대여료	3,356	3,147	3,147	4,562	4,562	1,415	44.9

가. 법적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
 -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하여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물류창고 및 청사·업무지원동 임대료

다. 2020년 세입 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9예산	3,14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역) 임대예상면적 × 예상단가 = 3,147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1,80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1호동 : $25,021\text{m}^2 \times 22,860\text{원} = 329$ * 표준공장2호동 : $16,185\text{m}^2 \times 22,860\text{원} = 213$ * 표준공장3호동 : $43,648.47\text{m}^2 \times 10,512\text{원} = 459$ * 표준공장8호동 : $18,553.84\text{m}^2 \times 22,860\text{원} = 227$ * 표준공장9호동 : $18,553.84\text{m}^2 \times 22,860\text{원} = 227$ * 공공 건물 : $15,923.68\text{m}^2 \times 22,140\text{원} = 352$ - 군산자유무역지역 : 51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 : $61,100\text{m}^2 \times 6,300\text{원} = 385$ * 청사,업무지원동 : $6,199 \times 20,446\text{원} = 126$ - 대불자유무역지역 : 29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A,D동 : $12,971\text{m}^2 \times 8,184\text{원} = 106$ * 공장B,C동 : $6,343.2\text{m}^2 \times 7,716\text{원} = 49$ * 공장E,F동 : $7,327\text{m}^2 \times 8,172\text{원} = 60$ * 청사동 : $481.54\text{m}^2 \times 40,560\text{원} = 20$ * 지원동 : $1,736.22\text{m}^2 \times 34,320\text{원} = 60$ - 동해자유무역지역 : 8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880\text{m}^2 \times 3,906\text{원} = 85$ - (울춘자유무역지역) 3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03\text{m}^2 \times 5,940\text{원} = 37$ - 김제자유무역지역 : 17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 A동 : $15,225\text{m}^2 \times 5,616\text{원} = 86$ * 표준공장 B동 : $10,745\text{m}^2 \times 5,616\text{원} = 60$ * 표준공장 C동 : $6,120\text{m}^2 \times 5,316\text{원} = 33$ - 울산자유무역지역 : 23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 $2057.23\text{m}^2 \times 25,980\text{원} = 53$ * 경공업동 : $21,488\text{m}^2 \times 6,001\text{원} = 129$ * 중공업동 : $6,406\text{m}^2 \times 8,217\text{원} = 53$
2020예산안	4,56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역) 예상임대면적 × 예상단가 - 마산자유무역지역 : $153,298.18\text{m}^2 \times 17,198\text{원} = 2,636\text{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 $71,507\text{m}^2 \times 9,122\text{원} = 652\text{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52,977\text{m}^2 \times 9,632\text{원} = 510\text{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34,862\text{m}^2 \times 6,617\text{원} = 231\text{백만원}$ - 울춘자유무역지역 $8,068\text{m}^2 \times 8,743\text{원} = 71\text{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20,210\text{m}^2 \times 7,905\text{원} = 160\text{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38,664\text{m}^2 \times 7,811\text{원} = 302\text{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6	3,565	3,565	3,565	3,101	2,547	71.4	82.1	554	-
'17	5,188	5,188	5,188	3,584	2,909	56.1	81.2	675	-
'18	3,807	3,807	3,807	4,025	3,356	88.2	83.4	669	-
'19	3,147	3,147	3,147	3,672	3,131	99.5	85.3	541	-
'20(안)	4,562	-	-	-	-	-	-	-	-

※ '19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9. 11월말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태권		이창룡
		044-203-5080		044-203-5086

(3) 기타재산수입
54 - 545

< 회계명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수입	14,574	16,779	16,779	38,593	38,593	21,847	130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 민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다. 2020년 세입 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9예산	16,779,000	<div><div>▪ 연도별 사업비(보조금, 출연금) 총액 및 이자수입액 (백만원, %)</div><table><tr><th>연도별</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r><tr><td>사업비</td><td>2,468,892</td><td>2,937,985</td><td>2,579,906</td><td>2,646,589</td></tr><tr><td>이자수입액</td><td>23,518</td><td>19,249</td><td>11,631</td><td>-</td></tr><tr><td>이자수익률</td><td>1%</td><td>0.78%</td><td>0.4%</td><td>-</td></tr></table></div> <div><div>▪ '18년 사업비 × 예상 이자수익율(최근 이자수익율 가중평균) = 2,646,589백만원 × 0.00634 = 16,779백만원</div></div>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2,468,892	2,937,985	2,579,906	2,646,589	이자수입액	23,518	19,249	11,631	-	이자수익률	1%	0.78%	0.4%	-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2,468,892	2,937,985	2,579,906	2,646,589																										
이자수입액	23,518	19,249	11,631	-																										
이자수익률	1%	0.78%	0.4%	-																										
2020예산안	38,593,000	<div><div>▪ 연도별 사업비(보조금, 출연금) 총액 및 이자수입액 (단위: 백만원, %)</div><table><tr><th>연도별</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r><tr><td>사업비</td><td>2,325,674</td><td>2,468,892</td><td>2,937,985</td><td>2,579,906</td><td>2,798,353</td><td>3,449,139</td></tr><tr><td>이 자 수 입액</td><td>39,325</td><td>23,518</td><td>19,249</td><td>11,631</td><td>14,574</td><td>-</td></tr><tr><td>이 자 수 입률</td><td>1.36%</td><td>1%</td><td>0.78%</td><td>0.4%</td><td>0.52%</td><td>-</td></tr></table></div> <div><div>▪ '19년 사업비 × 예상 이자수입율*(최근 이자수입율 가중 평균등) = 3,449,139백만원 × 0.01118 = 38,593백만원</div></div>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2,325,674	2,468,892	2,937,985	2,579,906	2,798,353	3,449,139	이 자 수 입액	39,325	23,518	19,249	11,631	14,574	-	이 자 수 입률	1.36%	1%	0.78%	0.4%	0.52%	-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2,325,674	2,468,892	2,937,985	2,579,906	2,798,353	3,449,139																								
이 자 수 입액	39,325	23,518	19,249	11,631	14,574	-																								
이 자 수 입률	1.36%	1%	0.78%	0.4%	0.52%	-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6	35,005	35,005	35,005	20,006	19,249	55.0	96.2	757	-
'17	36,775	36,775	36,775	12,029	11,631	31.6	96.6	398	-
'18	38,593	38,593	38,593	14,588	14,574	37.8	99.9	14	-
'19	16,779	16,779	16,779	15,558	15,115	90.1	97.2	443	-
'20(안)	38,593	-	-	-	-	-	-	-	-

※ '19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9. 11월말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태권		이창룡
		044-203-5080		044-203-5086

(4) 과징금
56 - 565

< 회계명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수입	1,062	455	455	1,251	1,251	796	175

가. 법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과징금)
 -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다. 2020년 세입 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9예산	455,000	▪ '15 ~ '17년 3개년 결산액 가중평균 = $(703 \times 0.2) + (609 \times 0.3) + (261 \times 0.5) = 455$ 백만원
2020예산안	1,251,000	▪ '15~'18년 수납액 가중평균 × 수납액 증가율 = 695백만원 × 1.8 = 1,251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6	600	600	600	5,813	609	101.5	10.5	5,203	-
'17	600	600	600	7,010	261	43.5	3.7	6,749	-
'18	1,251	1,251	1,251	7,722	1,062	84.9	13.8	6,659	-
'19	455	455	455	7,583	425	93.4	5.6	7,158	-
'20(안)	1,251	-	-	-	-	-	-	-	-

※ '19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9. 11월말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태권		이창룡
		044-203-5080		044-203-5086

(5)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회계명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149,070	124,919	124,919	154,190	154,190	29,991	24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 민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기타 반납금, 연체료 등

다. 2019년 세입 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예산	124,919,000	<div>▪ 연도별 사업비(보조금, 출연금) 총액 및 반환율 (백만원, %)</div> <table><tr><th>연도별</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r><tr><td>사업비</td><td>2,468,892</td><td>2,937,985</td><td>2,579,906</td><td>2,646,589</td></tr><tr><td>반환금</td><td>87,437*</td><td>127,708</td><td>142,263</td><td>-</td></tr><tr><td>반환율</td><td>3.74%</td><td>5.17%</td><td>4.84%</td><td>-</td></tr></table> <div>* 현재 산촉기금으로 이관된 기술료 수입이 '15년도에 103,993백만원 이 반영되어 '15년 반환금 191,430백만원에서 해당금액 제외</div> <div>▪ '18년 사업비 총액 × 예상반환율(최근 반환율 가중평균) = 2,646,589백만원 × 0.0472 = 124,919백만원</div>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2,468,892	2,937,985	2,579,906	2,646,589	반환금	87,437*	127,708	142,263	-	반환율	3.74%	5.17%	4.84%	-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2,468,892	2,937,985	2,579,906	2,646,589																						
반환금	87,437*	127,708	142,263	-																						
반환율	3.74%	5.17%	4.84%	-																						
2019예산안	154,190,000	<div>▪ 연도별 사업비(보조금, 출연금) 총액 및 이자수입액 (백만원, %)</div> <table><tr><th>연도별</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r><tr><td>사업비</td><td>2,468,892</td><td>2,937,985</td><td>2,579,906</td><td>2,798,353</td><td>3,449,139</td></tr><tr><td>반환액</td><td>87,437</td><td>127,708</td><td>142,263</td><td>127,522*</td><td>-</td></tr><tr><td>반환률</td><td>3.74%</td><td>5.17%</td><td>4.84%</td><td>4.55%</td><td>-</td></tr></table> <div>* 순기조정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수납 증가액(215억원) 제외</div> <div>▪ '19년 사업비 총액 × 예상반환율(최근 반환율 가중평균) = 3,449,139백만원 × 0.0447 = 154,190백만원</div>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2,468,892	2,937,985	2,579,906	2,798,353	3,449,139	반환액	87,437	127,708	142,263	127,522*	-	반환률	3.74%	5.17%	4.84%	4.55%	-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2,468,892	2,937,985	2,579,906	2,798,353	3,449,139																					
반환액	87,437	127,708	142,263	127,522*	-																					
반환률	3.74%	5.17%	4.84%	4.55%	-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6	110,342	110,342	110,342	128,459	127,708	115.7	99.4	751	-
'17	134,652	134,652	134,652	143,703	142,263	105.6	98.9	1,440	-
'18	137,062	137,062	137,062	150,207	149,070	108.8	99.2	1,137	-
'19	124,919	124,919	124,919	103,560	74,317	82.9	71.8	29,244	-
'20(안)	154,190	-	-	-	-	-	-	-	-

※ '19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9. 11월말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태권		이창룡
		044-203-5080		044-203-5086

1.

세 출

세출예산 총괄표(정책기획관)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결산	2019예산		2020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4,207	6,607	6,607	8,050	7,284	677	10.2
<일반회계>	4,207	6,607	6,607	8,050	7,284	677	10.2
산업통상자원 정책지원 (7133-301)	1,414	1,308	1,308	1,304	1,304	△4	△0.3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 시스템구축(정보화) (7131-501)	2,621	2,855	2,855	3,687	3,554	699	24.5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132-303)	172.5	750	750	1270	637	△113	△15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7142-317)	0	1,694	1,694	1,789	1,789	95	5.6

사 업 명 (1)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7133-301)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본부정책수립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재무팀	김태권 팀장	-	정재경
		044-203-5080	-	044-203-508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1,414	1,308	1,308	1,304	1,304	△4	△0.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414	1,574	1,343	191	39	1,308	1,308	1,499	1,464	13	22	1,304
·무기계약직 보수 등	25	25	25	0	0	34	34	34	33	0	1	32
·업무보고 준비 및 시 책홍보	308	317	317	0	0	591	591	591	591	0	0	583
·차량·통신·시설지원 등	127	142	133	0	9	127	127	127	121	0	6	126
·해외파견자 임차지원 등	247	247	246	0	3	287	287	287	287	0	0	295
·연구용역	510	646	433	191	20	72	72	263	235	13	15	72
·정책지원	24	24	17	0	7	24	24	24	24	0	0	24
·우수부서 포상 등	160	160	160	0	0	160	160	160	160	0	0	160
·산업통상자원정책지 원 간담회	13	13	13	0	0	13	13	13	13	0	0	12
○ 비목별 분류(합계)	1,414	1,574	1,343	191	39	1,308	1,308	1,499	1,464	13	22	1,304
· 상용임금(110-03)	23	23	23	0	0	29	29	29	29	0	0	27
· 일반수용비(210-01)	308	317	317	0	0	291	291	296	296	0	0	308
· 임차료(210-07)	304	304	300	0	4	304	304	304	304	0	0	353
· 유류비(210-08)	44	44	40	0	4	44	44	44	38	0	6	4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3	14	14	0	0	24	24	19	19	0	0	24
· 복리후생비(210-12)	0.4	0.4	0	0	0	1	1	1	0	0	1	0.4
· 국내여비(220-01)	114	127	127	0	0	114	114	123	123	0	0	114
· 국외업무여비(220-02)	46	33	33	0	0	46	46	37	37	0	0	46
· 사업추진비(240-01)	13	13	13	0	0	13	13	13	13	0	0	12
· 일반연구비(260-01)	510	646	434	191	20	372	372	563	535	13	15	346
· 포상금등(310-03)	24	24	17	0	7	24	24	24	24	0	0	24
· 고용부담금(320-09)	2.4	2.4	2.4	0	0	4	4	4	4	0	0	5
· 국제부담금(340-02)	1	1	0	0	1	41	41	41	41	0	0	0
· 시설비(420-03)	1	25	22	0	3	1	1	1	1	0	0	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통상자원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 각 실국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 특히, 타 부처에 비해 매우 부족한 기본경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가 불가피
 - 아울러, 세종시 이전 등에 따른 서울 출장 등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
 -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등을 위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도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발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등
- 대외무역법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등
- 에너지법 제1조, 제4조, 제12조, 제16조 등

② 추진경위

- 10~12회계연도 19억원 예산규모 유지
- 13회계연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대비 약 1억원 삭감
- 14회계연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2.3억원 삭감
- 15~18 회계연도 예산규모는 14회계연도 대비 비슷한 수준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산업통상자원 정책수립 지원사업비 1,304백만원 요구

① 무기계약직 보수 등 32백만원

■ 산출내역

- (상용임금 110-03) 무기계약직 상용임금 1명 × 12개월 × 2.25백만원 = 27백만원
- (복리후생비 210-12)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 1명 × 0.4백만원 = 0.4백만원
- (고용부담금 320-09) 퇴직금 1명 × 5백만원 = 5백만원

② 연두 업무보고, 정부업무평가, 주요시책 홍보 등을 위한 인쇄비 등 : 583백만원

■ 산출내역

- (일반수용비 210-01) 연두업무보고 등 5건 × 49.4백만원 = 247백만원
- (일반수용비 210-01) 부처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 등 3건 × 7백만원 = 21백만원
- (일반수용비 210-01) 주요시책 홍보 등 자료인쇄 2건 × 20백만원 = 40백만원
- (일반연구비 260-01) 디지털콘텐츠 홍보 1건 × 275백만원 = 275백만원 (일반연구비)

③ 차량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지원 등 126백만원

■ 산출내역

- (임차료 210-07) 장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차량임차 3대 × 18백만원 = 54백만원
- (임차료 210-07) 부내 행사차량 임차 8회 × 0.5 = 4백만원
- (유류비 210-08) 관용차량 유류지원 14대 × 3.1백만원 = 44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차량유지보수 14대 × 1백만원 = 14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통신시설유지보수비 10백만원
- (시설비 420-03) TF조직 등 긴급소요 칸막이 공사비 등 0.6백만원

④ 해외파견자 임차지원 등 295백만원

■ 산출내역

- (임차료 210-07) 국제기구 파견관 주택임차 지원 6명 × 평균 49.2백만원 = 295.2백만원

⑤ 연구용역비 72백만원

■ 산출내역

- (일반연구비 260-01) 산업통상자원부 기록물 관련 용역 2건 × 36백만원 = 72백만원

⑥ 정책지원 우수부서 포상 등 24백만원

■ 산출내역

- (포상금등 310-03) 우수부서 포상 10회 × 2.4백만원 = 24백만원

⑦ 부처간 또는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위한 여비 및 업추비 : 172백만원

■ 산출내역

- (국내여비 220-01) 근무지내 여비 7명 × 12개월 × 0.1백만원 = 8.4백만원
- (국내여비 220-01) 근무지외 여비 22명 × 12개월 × 0.4백만원 = 105.6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220-02) 국외업무여비 5회 × 9.2백만원 = 46백만원
- (사업추진비 240-01)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간담회 개최를 위한 업추비 10회 × 1.2백만원 = 1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산업정책 융합 연구 등 연구용역 수행 · 전화외국어 교육비 지급 등 직원 교육비 지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홍보 영상콘텐츠 기획·제작 용역 등 연구용역 수행 · 전화외국어 교육비 지급 등 직원 교육비 지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친절도 조사, 국가방호실태 연구 등 용역 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친절도 조사, 비전자문서 관련 연구 등 용역 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친절도 조사, 비전자문서 관련 연구 등 용역 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홍보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정책지원 강화
- 해외파견관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활동 및 외국정부와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요업무	수행 주체
추진방향 설정	전반적인 연간 추진방향 설정	각 실국
추진계획 수립	당해연도 연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각 실국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서 각 건별로 사업 수행	각 실국
소요 예산 요청	각 건별로 예산지출 요청	각 실국
예산 지출	각 개별 건별로 예산 지출	재무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1,414	1,414	1,414	1,414	1,414	
'19~'23		1,308	1,308	1,308	1,308	1,30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홍보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정책지원 강화 계속 추진
- 해외파견관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활동 및 외국정부와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1,580	1,580	85	-	-	-	1,665	1,584	100.3	95.1	46	36
2017	1,571	1,571	46	-	-	-	1,616	1,406	100.8	98.0	136	74
2018	1,414	1,414	136	-	-	-	1,574	1,561	110.3	99.1	-	13
2019	1,308	1,308	191	-	-	-	1,499	815	62.0	54.0	-	-

* 19.12월말 기준

2) 주요 결산사항

2016	- 전용 규모 : 없음 - 이월 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 불용 사유 : 없음
2017	- 전용 규모 : 없음 - 이월 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 불용 사유 : 없음
2018	- 전용 규모 : 없음 - 이월 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 불용 사유 : 없음
2019	- 전용 규모 : 없음 - 이월 사유 : 없음 - 불용 사유 :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7131-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5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19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관리담당관	신 우 찬	이경우 서기관	최 민 지
		044-203-5550	044-203-5554	044-203-555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업통상자원 행정 정보시스템구축	2,621	2,855	2,855	3,687	3,554	699	24.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646	2,715	2,690 [2,612]	-	25	2,855	2,855	2,855	2,734	-	48	3,554
· 정보시스템고도화	515	584	584 [515]	-	20	993	993	993	938	-	7	1,380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562	1,562	1,537 [1,528]	-	5	1264	1264	1264	1,221	-	32	1,255
· 정보보호체계구축	569	569	569	-	-	598	598	598	575	-	8	919
○ 비목별 분류(합계)	2,646	2,715	2,690 [2,612]	-	25	2,855	2,855	2,855	2,734	-	48	3,554
· 관리용역비(210-01)	1,292	1,361	1,336 [1,267]	-	25	1,324	1,324	1,324	1,262	-	40	1,324
· 사업추진비(240-01)	-	-	-	-	-	8	8	8	8	-	7	7
· 일반연구비(260-01)	408	408	408	-	-	690	690	690	682	-	-	840
· 사업출연금(350-02)	270	270	270 [261]	-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676	676	676	-	-	833	833	833	782	-	-	1,3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시스템고도화) 정보시스템(28종)의 중요도·시급성 등에 따른 단계별 기능 고도화를 통해 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및 효율성 제고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정보시스템(28종)의 유지관리를 통해 정책업무의 안정적 수행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 (정보보호체계구축) 보안장비 도입·유지관리, 보안정책 최적화를 통해 고도화·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30조, 제52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9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② 추진경위

- 'e-산자부 선언('00년도)
- 산자부 중장기정보화추진전략 수립('01)
- 산업자원 지식행정체제 확대 중장기정보화추진계획 수립('03)
- 산업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05)
- 산업자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정보전략계획 수립('06)
- 산업자원부 정보기술아키텍처적용 기본계획 수립('07)
- 지식경제부 정보화전략 수립('08)
-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12)
-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7)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부내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19)2,855→('20)3,554백만원 (699백만원)

① 정보시스템 고도화 : ('19) 993 → ('20) 1,380백만원 (387백만원)

정보시스템(28종)의 중요도·시급성 등에 따른 단계별 기능 고도화를 통해 행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효율성 제고

①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729백만원(구축비(추가))

가. 국회업무시스템 개편: 120백만원(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 (필요성) 국회업무시스템의 노후화('07년 구축, '14년 고도화)로 인한 업무 집중 시기에 성능 저하로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 (추진내용) 업무포털 및 업무앱과 연계·활용 가능한 시스템 개발, 통계 및 유사 답변자료 조회 등 편의성 강화, DB 최적화를 통한 성능 개선 등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193	519,203	1.28	0.88	1.0	0.94	1.03	109,282,903
합 계 (부가가치세 10% 포함)							120,211,193

나. 모바일 가상화 기반 업무앱 개발: 192백만원(구축비(추가))

- (필요성)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에 따라 제약 없는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모바일 전용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업부 업무망 행정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
- (추진내용) 모바일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업무포털, 업무연락방, 국회 업무시스템 콘텐츠 및 공통업무시스템(온나라 등) 연계·개발

* 업무앱 개발: 175백만원(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281	519,203	1.28	0.88	1.0	0.94	1.03	159,111,377
합 계 (부가가치세 10% 포함)							175,022,514

* 업무앱 서버 구축: 17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체대상

품명	수량	단가(단위: 원)	금액(단위: 원)
서버	2대	8,500,000	17,000,000

다. 대표 홈페이지 검색기능 고도화: 147백만원(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 (필요성) 대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단순 조회 기능을 인공지능 기반 검색 기술로 구현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 (추진내용) 본부/소속/산하기관 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 구현, 통합 검색 대화형 인터페이스 제공, 조직/직원/위치 정보 조회 기능 개선 등
- * 홈페이지 기능 개발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237	519,203	1.28	0.88	1.0	0.94	1.03	134,197,140
합 계 (부가가치세 10% 포함)							147,616,854

라. 메신저 재구축: 134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필요성) 메시지 및 파일 전송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업무용 메신저('15년 재구축)는 실시간 소통 및 협업 기능 부족
- (추진내용) 실시간 소통 및 협업 기능 보강(대화창 UI/UX 개선, SMS 연계 등), 교체 중인 Win 10에 완벽 호환되는 프로그램 구축, 기존 데이터 연계 등

품명	수량	단가(단위: 원)	금액(단위: 원)
메신저 프로그램	1식	134,000,000	134,000,000

마. 부내 전산장비 백업 시스템 구성: 136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필요성) 부내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전산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백업 시스템을 구성하여 장애 및 재난 등에 대비
- (추진내용) 서버에 백업 솔루션을 설치하여 장애 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 * 재난방지대책 수립,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19조 (재난방지)

품명	수량	단가(단위: 원)	금액(단위: 원)
백업 어플라이언스	1식	136,000,000	136,000,000
합 계			136,000,000

② 디지털 도서관 기능개선: 120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가. 학술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23백만원

- (필요성) 빠르게 증가하는 학술 자원(Web DB & E-Journal)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별도서관의 학술 자원 부족 극복 필요
- (추진내용) 실시간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학술 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부와 유관기관 소유 학술 자원에 대한 통합 검색 및 원문복사 관리

* 유사사례: KAIST 'BIC STAR lib'

품명	수량	단가(단위: 원)	금액(단위: 원)
정보검색소프트웨어	1	23,100,000	23,100,000
합 계			23,100,000

나. 전자문서 변환 시스템 기능개선: 97백만원

- (필요성) 디지털도서관 전자문서 변환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 비표준 웹 환경, 최신 OS 미 지원으로 서비스 질 저하
- (추진내용) 최신 OS 지원 전자문서 솔루션 도입으로 강화된 보안정책 반영, 표준 웹 환경 적용 등

* '08년 최초도입, '19년 1~3월 3건 장애 발생

품명	수량	단가(단위: 원)	금액(단위: 원)
전자문서 변환솔루션	1	97,000,000	97,000,000
합 계			97,000,000

③ 비표준 플러그인 제거: 66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필요성) 민원인 대상 정보서비스인 광업권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을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추진내용) 광업권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에 적용된 플러그인(위변조방지 S/W) 제거 및 웹 표준 기반 대체 SW 구매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의 완전 제거를 국정과제(8-5-7 불필요한 플러그인 제거 등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환경 구현)로 추진 중

품명	수량	단가(단위: 원)	금액(단위: 원)
위변조방지 S/W	1	66,000,000	66,000,000
합계			66,000,000

④ 정보화 협의체 운영: 7백만원(기타 운영지원, 240-01/업무추진비)

- (필요성) 산업부 본부 외 16개 소속기관 및 41개 공공기관 등 전자정부 서비스 주체가 다양하고 산업·무역·에너지 등 경제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빅데이터 수집, 발굴, 품질관리 등을 위한 산·학·민·관 협의체 운영 필요
- (추진내용)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간의 시스템 통합관리 및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화 협의체 구성·운영
- 산업부 정보시스템(16개 소속기관 포함) 및 41개 공공기관 시스템 통합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0.75백만원×8회), 산업부 및 산하공공기관 정보화 책임관 간담회(0.75백만원×2회)

⑤ 경제자유구역 대표 홈페이지 고도화: 458백만원(구축비(추가))

가. 투자정보 자동수집 시스템 구축: 205백만원(구축비(추가))

- (필요성) 7개 경제자유구역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투자정보를 대표 홈페이지 연계·통합하여 제공토록 개선 필요
- (추진내용)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의 데이터 표준화, 대표 홈페이지 자동수집 API 구축, 공통 데이터 모듈 및 연계기능 구현 등

* 자동수집 시스템을 위한 DB품질 개선 : 43백만원(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공정 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단위: 원) 십만원 미만 절사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 성	
분석	98,648	81	1.280	1.120	1.05	1.13	1.06	17,786,475
설계	124,609							17,752,297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20%, 직접경비포함)) × 1.1(VAT)								43,001,913

* 자동수집 API 구축 : 142백만원(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단위: 원) 십만원 미만 절사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 성	
분석	98,648	115	1.280	1.120	1.05	1.13	1.06	25,612,524
설계	124,609							25,563,307
구현	166,145							37,492,775
시험	129,801							29,291,280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20%, 직접경비포함)) × 1.1(VAT)								142,731,461

* 자동수집 API 용 HW 및 SW 구매: 20백만원 (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품명	수량	단가(단위: 원)	금액(단위: 원)
서버	2	10,000,000	20,000,000
합 계			20,000,000

나. 대표 홈페이지 기능개선: 253백만원(구축비(추가))

- (필요성)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노후화('07년 구축, '14년 고도화) 및 성능저하로 사용자 불편 및 효율적인 투자정보 홍보 어려움
- (추진내용) 7개 구역청 자동연계 적용을 위한 CMS 적용, 최근 소식 자동알림 및 산업부 디자인 표준 적용, 반응형 웹 적용 등

* 기획단 홈페이지 개편 및 CMS 구축: 213백만원(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단위: 원) 십만원 미만 절사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 성	
분석	98,648	173	1.280	1.120	1.05	1.13	1.06	38,240,921
설계	124,609							38,167,438
구현	166,145							55,978,796
시험	129,801							43,733,508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20%, 직접경비포함)) × 1.1(VAT)								213,106,001

* 기획단 홈페이지용 HW 및 SW 구매: 40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품명	수량	단가(단위: 원)	금액(단위: 원)
서버	1	10,000,000	10,000,000
스토리지	1	30,000,000	30,000,000
합 계			40,000,000

②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9) 1,264 → ('20) 1,255백만원 (△9백만원)

① H/W 유지보수: 139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 행정정보시스템(22종): 138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1백만원

구분	HW		
	도입가 (단위: 원)	요율	유지보수 비용 (단위: 원) (백만원 미만 절사)
2등급	685,200,000	7.3%	89,473,000
3등급	1,335,426,000	6.7%	50,020,000
합계	2,020,626,000	6.9%	139,493,000

② 상용 S/W 유지보수: 226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 행정정보시스템(22종): 209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1백만원, 원자재상시경보통제 시스템(1종): 2백만원, 광업정보시스템(1종): 14백만원

구분	HW		
	도입가 (단위: 원)	요율	유지보수 비용 (단위: 원) (백만원 미만 절사)
2등급	2,039,629,000	10.8%	220,265,000
3등급	60,000,000	9.6%	5,760,000
합계	2,099,629,000	10.7%	226,025,000

③ 개발 S/W 유지보수: 707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 행정정보시스템(22종): 533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15백만원, 원자재상시경보통제 시스템(1종): 22백만원, 광업정보시스템(1종): 109백만원, 비관세장벽이력관리시스템(1종): 6백만원, 무역구제업무시스템(1종): 17백만원

구분	HW		
	도입가 (단위: 원)	요율	유지보수 비용 (단위: 원) (백만원 미만 절사)
합계	7,243,570,000	9.8%	707,697,000

④ 위탁운영비 (27종): 113백만원(위탁운영, 210-15/관리용역비)

가. 정보화사업(시스템) 운영지원: 56백만원

- 사업·품질관리 및 의사결정, 정보시스템 및 통합정보 보호시스템 운영 지원 (기술자 1인)

* 산업부 대표 홈페이지, 16개 소속기관 홈페이지 및 각종 실물경제 지원시스템 등에 대한 업무지원·민원대응 소요가 많아 전문 인력(1명) 상주 필요

(단위: 원)

업무 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인력		0	0	12
노임단가		0	0	4,006,590
인건비		0	0	48,079,080
직접인건비 합계		48,079,080		
제경비	직접인건비×15%	7,211,862		
기술료	(인건비+제경비)×8%	4,423,275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5,971,422		
합 계		65,685,639		
할인율	14%	59,489,650		

나. 광업정보시스템 위탁운영: 57백만원

- 사용자 업무지원, 민원대응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기술자 1인)

* 광업정보시스템은 118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17년 온라인 민원발급건 수가 58,511건에 달하는 등 업무지원·민원대응 소요가 많아 전문 인력 상주 필요

(단위: 원)

업무 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인력		0	0	12
노임단가		0	0	4,006,590
인건비		0	0	48,079,080
직접인건비 합계		48,079,080		
제경비	직접인건비×15%	7,211,862		
기술료	(인건비+제경비)×8%	4,423,275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5,971,422		
합 계		65,685,639		
할인율	13%	57,146,506		

⑤ 기타 운영비 (1종): 70백만원(기타 운영지원, 210-15/관리용역비)

-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WACS) 데이터 및 분석 자료 구매

* 국제 원자재 시장의 산업 관련 주요 16개 품목별 원자재 지수 데이터 및 분석 자료를 전문 분석기관을 통하여 제공받음

산 출 기 초	금 액(단위: 원)
데이터 제공 (가격 chart, 동향 보고서, 품목별 상시 경보, 산업 원자재 지수 등)	70,000,000
합 계	70,000,000

③ 정보보호체계구축: ('19) 598 → ('20) 919백만원 (321백만원)

보안장비 도입·유지관리, 보안정책 최적화 등을 통해 고도화·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① 정보보호 프로그램 구입: 532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필요성) 바이러스 감염 위협대응 및 운영체제 최신패치 등 보안기능 유지,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추진내용) 부내 PC 및 정보시스템 서버 보호용 보안프로그램 구매
 - * 사용자 및 서버용 내·외부망 보안 프로그램 연간 라이선스 유지

품명	수량	단가	금액(단위: 원)
백신	2,000	29,439	58,878,000
내PC 지킴이	2,000	23,570	47,140,000
패치관리시스템(PMS)	2,000	29,484	58,968,000
윈도우 10 (보안 업데이트)	500	221,100	110,550,000
PC개인정보 검출 및 암호화	1	131,220,000	131,220,000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1	62,750,000	62,750,000
통합로그 관리 소프트웨어	1	63,244,000	63,244,000
합 계			532,750,000

② 보안나라시스템 구축 318백만원 (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필요성) 윈도우 7 운영체제 보안업데이트 종료('20.1월/ 32Bit 체계의 지원 종료)에 따라 보안나라시스템의 Windows Server OS, 상용 S/W 업그레이드 필요(64Bit 체계로 전환 필수)
- *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구매: 210백만원

품명	수량	단가(단위: 원)	금액(단위: 원)
SBC 인증서버	2	25,000,000	50,000,000
SBC APP	4	30,000,000	120,000,000
문서변환서버	1	20,000,000	20,000,000
백업서버	1	20,000,000	20,000,000
합 계			210,000,000

* 상용 S/W 구입: 108백만원

품명	수량	단가(단위: 원)	금액(단위: 원)
서버보안	8	3,000,000	24,000,000
인증서버 HA솔루션	2	10,000,000	20,000,000
웹서비스 관리툴	8	3,000,000	24,000,000
백업SW	1	28,000,000	28,000,000
SBC프린트 솔루션	4	3,000,000	12,000,000
합 계			108,000,000

③ 정보보안 수준강화: 69백만원(기타 운영지원, 210-15/관리용역비)

- (필요성) 지능화·고도화되는 해킹시도 및 보안위협성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시스템·웹서비스의 취약점 진단 및 컨설팅 추진, 부내 전직원 맞춤형 보안교육 실시 필요

· (취약점 진단 및 컨설팅) 최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해킹 시도가 급증함에 따라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91식의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등) 및 41개 웹서비스의 취약점 진단 및 주기적 컨설팅 필요

· (보안교육) 부내 쏘직원 보안의식 개선을 위한 보안교육 주기적 실시, 맞춤형 교육(교재 및 영상 제작), 해킹침해 실전훈련 등 실시

* 차관회의(17.12.2), 국무총리 지시사항(17.12.26) 등 공직사회 보안강화대책 지시

** '18년 산업부 정보시스템 및 정책담당 개인 대상 사이버해킹 시도(14건) 등

- (추진내용) 정보보안 컨설팅, 맞춤형 정보보안 교육 실시

품명	수량	단가(단위: 원)	금액(단위: 원)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정보보호 컨설팅	1식	40,000,000	40,000,000
정보보안 맞춤형 교재 및 영상 제작	1식	24,000,000	24,000,000
전직원 보안의식 활성화 교육 (소속기관 포함)	10회	450,000	4,500,000
합 계			68,500,0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보시스템 장애처리율 (단위: %)	목표	83.0	86.0	88.58	90	91	최근 3년간 실적을 비탕으로 상향조정 하여 설정	{장애등급별 허용시 간 내 장애처리건수 (A) / 전체 장애발 생건수(B)} x 100	정보시스템 SLA 실적
	실적	85.7	87.5	90.6	-	-			
	달성도	103.3	101.7	102.3	-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단위: %)	목표	83	81.58	81.64	73.35	73.35	최근 3년간 실적 추이 및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등락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국정원)	보고서/국정원
	실적	80.17	78.36	73.21	-	-			
	달성도	96.6	96.1	89.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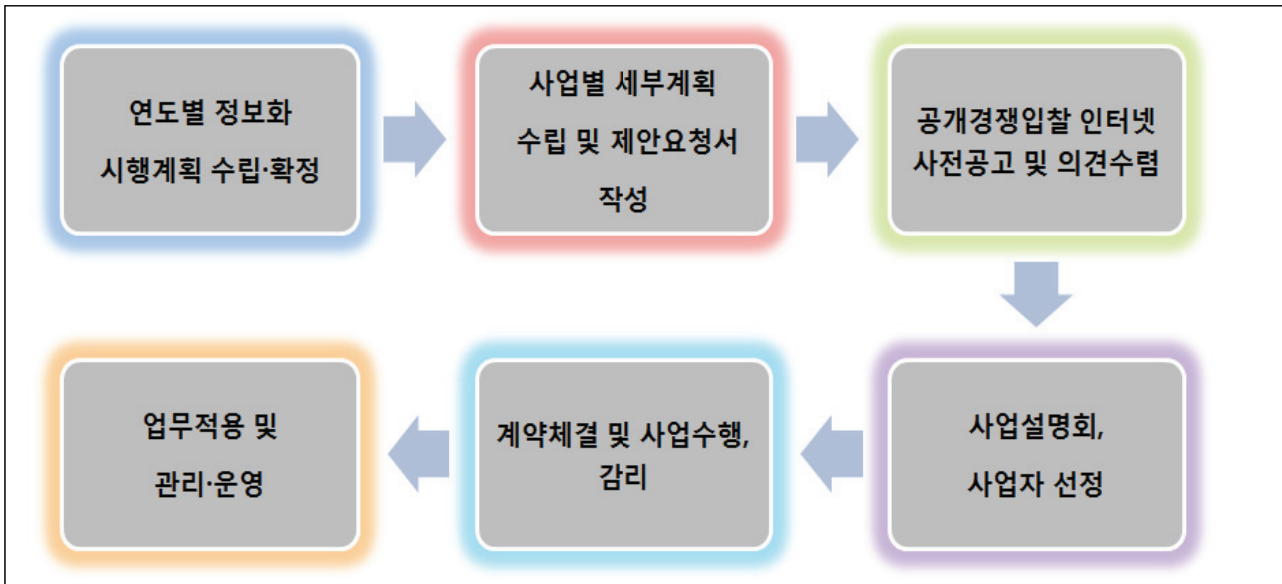
③ 향후('20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
- 정보보호체계 보안환경 등 인프라 강화로 사이버 침해사고 시 효과적인 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2,646	2,855	2,855	2,855	2,855	
'19~'23		2,855	3,554	3,554	3,544	3,55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결위) 법적근거 없는 재정집행통합관리시스템 사업추진방식 개선
-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9년부터 재정집행통합관리시스템의 사업추진방식을 개선(출연→직접수행) 추진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정책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홈페이지 등 안정적 운영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제고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평가시기	회계/기금	평가등급	비고
2016년도	일반	보통	-
2017년도	일반	보통	-
2018년도	일반	보통	-
2019년도	일반	보통	-

13) 부처 건의사항

- 산업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정책업무 지원, 대국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기 운용한 정보시스템의 단계별 고도화 필요 (총 28종 시스템)
- 나날이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안 대응체계 강화 필요 (방화벽 등 노후 H/W 교체 및 보안시스템 개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2,997	2,997	-	-	-	-	2,997	2,991	99.8	99.8	-	6
2017	3,005	3,005	-	-	-	-	3,005	2,896	96.4	96.4	69	40
2018	2,646	2,646	69	-	-	-	2,715	2,690	101.7	99.1	-	25
2019	2,855	2,855	-	-	-	-	2,855	794	27.8	27.8	-	4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280	280	280	280	-	280	280	-	-	100%
2017	281	281	281	281	-	281	281	-	-	100%
2018	270	270	270	270	-	270	261	-	-	96.7%
2019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2016	- 불용(6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2017	- 불용(40백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 이월(69백만원): 비관세장벽이력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사업(40백만원) 및 원자재상시경보 시스템(29백만원) 발주 지연 등에 따른 이월액
2018	- 불용(25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2019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3)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1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3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김영규	김진경	박환서
		044-203-5530	044-203-5535	044-203-556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172.5	750	750	1270	637	△113	△1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	254	265	172.5	77	15.5	750	750	827	685.89	130.05	11.06	637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93	93	87.3	-	5.7	124	124	124	123.82	-	0.18*	115
· 유관기관 역량강화	32	32	32	-	-	20	20	20	20	-	-	-
· 규제개혁 및 갈등 관리지원	129	140	53.2	77	9.8	128	128	205	205	-	-	96
· 공공데이터 이용활 성화	-	-	-	-	-	40	40	40	39.9	-	0.1	40
· 정책지원 연구	-	-	-	-	-	438	438	438	297.17	130.05	10.78	386
○ 비목별 분류(합계)	254	265	172.5	77	15.5	750	750	827	685.89	130.05	11.06	637
· 일반수용비(210-01)	89	67.5	66.2	-	1.3	99	99	99	99	-	-	68.6
· 임차료(210-07)	4	10.5	10.5	-	-	4	4	4	4	-	-	4
· 일반용역비(210-14)	-	15	15	-	-	56	56	56	55.9	-	0.1	86
· 국내여비(220-01)	5	5	1.5	-	3.5	5	5	5	4.873	-	0.127	4
· 국외여비(220-02)	14	14	13.3	-	0.7	14	14	14	13.941	-	0.059	14
· 사업추진비(240-01)	18	18	16.5	-	1.5	17	17	17	17	-	-	9.4
· 일반연구비(260-01)	110	121	35.5	77	8.5	543*	543*	479.17	297.17	130.05	10.78	440
· 포상금(310-03)	14	14	14	-	-	12	12	12	12	-	-	11

* 국내여비 불용액 : 59,030원 / 국외여비 불용액 : 127,000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내역사업명)
- (내역사업명)
- 동 사업의 목표, 목적 등을 상세히 기술할 것
-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 내역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
- 내역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대상·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할 것
- ex) 동 내역사업은 ~~를 위해 ~~를 대상으로 ~~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1) 변화관리능력개발(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회의 의결사항
 -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직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정책수립, 집행 등에 있어서의 제반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04. 9. 14 국무회의시 교육훈련예산의 확충을 결정
- 2)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규제개혁)**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신설·강화규제 도입 시 규제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혁신'은 기업인과의 신년 간담회 대통령 말씀 중 주요내용으로 포함

<행정규제기본법상 관련 조항>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9년 기업인과의 대화 내용>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 (‘19년 기업인과의 대화 중)

- **(갈등관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부 갈등 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중 관련 조항>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국무총리) 말씀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②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지원 할 수 있음

< 공공데이터 관련 대통령 및 국무총리 말씀 >

- ▶ (‘18.1.16, 제3차 국무회의 VIP 말씀) “개인정보 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 (국무총리 말씀)
 - ① “공공데이터의 공개 확대, 정확도 제고, 표준화 필요”(‘18.2.21),
 - ②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 필요”(‘18.2.26),
 - ③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18.3.12)

② 추진경위

1) 변화관리능력개발(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중소·중견기업, 지방경제, 서민 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기업도우미로서 산업부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직원 능력개발 사업으로 반영(‘05년)
- 행안부 정부혁신종합 추진계획(‘18.03.), 인사혁신처 근무혁신 종합대책(‘18.01)에 따라 산업부 내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변화관리 사업 시행 중

2)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규제개혁)**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98.3.1)되면서 규제 신설·강화시 자체규제심사가 법령 제·개정 절차상 필수 절차로 정착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일) 이후 '규제개혁신문고'가 설치되었으며, '16년부터 '규제비용총량제' 시행 → 산업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개혁 교육 등 실시
- **(갈등관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07.2.12)에 따라 산업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밀양송전선로 건설 등 대규모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갈등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산업부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갈등 영향분석서 작성 및 갈등관리심의 등을 추진

3)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13년부터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17년말 기준 736건)
- 한국인 인체치수, 전주번호, 유류정보, 해외시장 및 전시회정보 등을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개발* 등을 견인
- * 유류정보를 활용하여 78명의 일자리 창출 및 32건의 서비스 개발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3) '20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총액 637백만원

①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15백만원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혁신교육: 37백만원

▪ 자기계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6백만원

* 똑똑똑 MoTie 아카데미 16백만원 = 1.6백만원×10회

▪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 21백만원

* 정책역량 증진을 위한 자율적 학습조직 운영 10백만원 = 0.5백만원×20회

*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관련 간담회, 워크숍 등 지원 9백만원 = 0.9백만원×10회

*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지원 2백만원 = 0.2백만원×10회

○ 협업행정을 위한 소통촉진 프로그램: 49백만원

▪ 부내·외 크로스미팅 및 직급별 협의체 운영 : 6백만원

* 크로스미팅·직급별 협의체 0.2백만원 x 30팀 = 6백만원

▪ 공공기관·업종별 협단체 회의 및 정책자문위 운영 등 : 13백만원

* 회의장 임차료 및 회의준비(다과) 등 : 0.65백만원 × 20회

▪ 정책현장 방문프로그램 지원 : 30백만원

* 실·국별 정책현장 방문 지원 : 1.5백만원 × 20팀

○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 29백만원

▪ 분기별·올해의 우수부서 : 10백만원

* 포상금 : 10백만원 = 분기별 우수부서 (2백만원)× 4회 + 올해의 우수부서(2백만원)

▪ 올해의 산업통상자원인 : 1백만원

* 포상금 : 0.6백만원 = 0.3백만원 x 2명

* 상패제작 : 0.4백만원 = 0.2백만원 x 2명

▪ 국내·외 변화관리 모범 기관·기업 등 연수 : 18백만원

* 국내연수 : 0.4백만원 x 10명 = 4백만원

* 해외연수 : 1.4백만원 x 10명 = 14백만원

②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96백만원

○ 자체규제개혁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35백만원

▪ 규제개혁위원회 : 32백만원

* (회의) 12명×10회×0.25백만원= 30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준비 등) 0.2백만원×10회 = 2백만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3백만원**

* (대면회의) 10명×2회×1.25백만원 = 2.5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준비 등) 0.25백만원×2회 = 0.5백만원

○ **규제개혁 교육 및 갈등관리 교육 : 3백만원**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법안 전체교육 : 1백만원**

* 강사로 0.5백만원 x 2회 = 1백만원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브라운백 미팅 : 2백만원**

* 1백만원(강사로, 도시락) x 2회 = 2백만원

○ **규제개혁, 정부성과 등 대표사례 홍보물 제작 : 4백만원**

* 상하반기 2회× 2백만원 = 4백만원

○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연구용역 : 54백만원**

▪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 비용, 편익분석 : 27백만원**

* 15건x 건당 1.8백만원 = 27백만원

▪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방안 연구 : 27백만원**

* 조직 및 갈등관리 방안 연구 2개 분야 x 13.5백만원 = 27백만원

③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40백만원**

▪ **공공데이터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민관학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정책방향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세미나 : 20백만원**

* 협의회 구성·운영 16백만원 + 임차료, 강의로, 인쇄비 등 4백만원= 20백만원

▪ **공공데이터 활용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20백만원**

* 공모전 홈페이지 운영, 홍보, 시상식 개최 등 20백만원

④ **정책지원 연구 : 386백만원**

○ **정책홍보,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관련 용역비**

* 정책홍보, 재정사업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 관련 용역 등 8건 × 약 48.2백만원 = 386백만원

구 분	'19예산	'20예산 1차 검토결과
□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50	637(△113)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24	▪ 115(△9)
▪ 유관기관 역량강화	▪ 20	▪ 0(△20)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128	▪ 96(△32)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 40	▪ 40
▪ 정책지원 연구	▪ 438	▪ 386(△52)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변화관리 마일리지 획득자 수 (단위: 명)	목표	850	850	-	-	-	기재부 지침에 따라 '18년 성과관리 대상 제외	변화관리시스템 상에서 마일리지 획득한 직원 수	변화관리시스템 상에서 마일리지 현황 조회
	실적	662	851	-	-	-			
	달성도	75.2%	10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760명
2017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450명
2018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및 자율적 학습조직 실시(계속) : 약 1000명
2019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및 자율적 학습조직 실시(계속) : 약 630명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변화관리 교육 및 자율적 학습조직 실시 - 약 1,200명 참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254	241	234	229	227	
'19~'23		750	750	752	752	75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정처) 지적

- 변화관리 능력개발 사업의 국내여비 예산 조정 필요(2018)
- 연례적인 국외여비 조정 집행을 개선할 필요(국회 예정처)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외여비로 조정하지 않고 국내여비를 국내교육훈련에만 집행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책대상자와의 소통 및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중요시하는 업무분위기의 형성과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 도모
-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및 품질제고 사례 발굴,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혁신성장 기반 일자리 창출에 기여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380	380	49	-	-	-	429	254	59.2	66.8	-	175
2017	353	353	-	-	-	-	353	325	92.1	92.1	11	17
2018	254	254	11	±21.5	-	-	265	172.5	67.9	65	77	15.5
2019	750	750	77	±20	-	-	827	685.89	91.5	82.9	130.05	11.06

2) 주요 결산사항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 99백만원, 국조실의 산업부 소관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규제비용분석 대상 제외확대로 연구용역규모 축소 - 불용 : 42백만원, '16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사항이 없어 역량평가 실시 기관 및 대상 직위가 동일하여 신규과제 개발 수요 미발생에 따라 연구용역 예산 불용 - 조정 : 49백만원, 연구개발비(260-00)계정에 대한 지침이 바뀜에 따라 정책연구비(260-02)로 예산을 조정 - 조정 : 5백만원, 매년 발생해왔던 국외여비 비용부담을 위해 국내여비 조정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 : 11백만원, 연구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 - 전용 : 9백만원, 공공기관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용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 : 77백만원,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과 연구용역 완성도 증진을 위해 이월 - 조정 : 15백만원, 변화관리 강연 위탁용역 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조정 - 조정 : 6.5백만원, 국내 및 국외연수 차량 임차료 지원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로 조정 - 불용 : 15.5백만원, 용역 규모 축소 시행과 국내여비 예산 절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 20백만원, 정책현장방문 프로그램 용역지원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조정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정보화) (7142-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1	기획조정실		110	116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42	317
명칭	산업통상자원행정지원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18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보호담당관	여영섭 044-203-5590		고채린 044-203-5599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0	1,694	1,694	1,789	1,789	95	5.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65	565	0 [0]	559	6	1,694	1,694	2,253	2,230 [2,230]	-	23	1,789
· 시스템 고도화 구축	565	565	0	559	6	565	565	1,124	1,109	-	-	630
· 시스템 운영	0	0	0	0	0	1,129	1,129	1,129	1,121	-	-	1,159
○ 비목별 분류(합계)	565	565	0	559	6	1,694	1,694	2,253	2,230	-	23	1,789
·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10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	-	-	-	350	350	350	350	0	0	380
· 관리용역비(210-15)	-	-	-	-	-	779	779	779	759	0	20	769
· 자산취득비(430-01)	565	565	0	559	6	565	565	1,124	1,121	0	3	6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에너지·산업 등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협요소를 감시하고 침해시도에 대응하는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사업
- 사이버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신 보안관제 솔루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환경 보장을 위한 기존 운영시스템 성능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2**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3조(훈령 제102호)

② 추진경위

- '06. 5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의장:국가정보원장) 의결

기존의 국방, 금융, 행정, 통신, 안보분야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핵심분야(에너지, 교통, 교육, 보건, 외교)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결정

- '07. 9월 산업자원분야 사이버보안센터 설립 계획수립
- '07.12월 산업자원 사이버보안센터 운영규칙 제정(훈령 제128호)
- '08. 8월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및 센터 개소(28개 기관)
- '10. 1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8호)
- '10. 1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14개 기관)
- '11. 1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7개 기관)

- '12. 2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91호)
- '12. 6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3개 기관)
- '13. 6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미래부 이관(ETRI, 생기研, NIPA)
- '14.12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9호)
- '16. 8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102호)
- '16.12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3개 기관)
- '17.12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2개 기관)
- '18. 9월 :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2개 기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호담당관실
- 사업 수혜자 :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53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18)565 → ('19요구)1,789백만원

○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630백만원)

-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630백만원)
 - 도입 후 10년 이상 지나거나 제작사 기술지원이 종료(EOS)되어 유지보수가 어려운 노후설비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사이버안전서비스 운영 기반 확보

구분	교체대상(수량)	예산	도입년도	비고
프록시 서버	Proxy DELL R200 (13식)	195	도입: 2008.7 EOS: 2015.9	
백본	Cisco Catalyst 4507R (1식)	42	도입: 2008.7 EOS: 2013.4	
방화벽	SECUI NXG 200 (2식)	40	도입: 2008.7 EOS: 2013.12	
정보공유 시스템 서버	Dell Poweredge R210 II (1식)	30	도입: 2008.7 EOS: 2016.12	
위협관리 시스템	CX4-120 (스토리지 1식)	233	도입: 2010.11 EOS: 2016.12	
	Brocade BRC5100(SAN스위치 1식)	20	도입: 2010.11 EOS: 2018.4	
	TESS-DBMS DELL R710 (HW 1식)	70	도입: 2010.11 EOS: 2019.8	
	TESS-DBMS Oracle 10g (SW 1식))			
총계		630	<단위:백만원>	

○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1,159백만원)

- 사이버안전시스템 유지보수(769백만원)

구분	산출 내역	예산	비고
S/W 유지보수	3,650x11%	365	
H/W 유지보수	4392x9.2%	404	
총계		769	<단위:백만원>

- 유지보수 소모품 구매 (10백만원)
 - 유지보수 중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을 위한 수용비
- 보안 관제용 전용회선 임차비(380백만원)
 - 사이버안전센터와 회원기관간(현 53개) 보안관제 로그 수집 및 공격탐지 패턴 업데이트에 필요한 전용회선 임차비용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목표	97.2	97.6	98.0	98.1	98.2	'14년 신규지표로서, 최근 3개년간 평균 추이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사이버공격 탐지건수÷총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100	관계운영시스템(SCMS) 탐지 등록 건수 대비 조치결과 건수누계(오 탐, 정탐건수 집계)
	실적	97.3	97.8	98.1	-	-			
	달성도	100.1	100.2	100.1	-	-			
지표명 (단위:)	목표	98.5	99.0	99.3	99.4	99.5	'13년 신규지표로서, 최근 3개년간 실적을 분석하여 목표치 설정	((가동계획시간-서비스중단시간)÷가동계획시간) × 100	관계시스템별 장애 복구 집계 및 월별 서비스수준협약(SLA) 보고서
	실적	98.9	99.2	99.4	-	-			
	달성도	100.4	100.2	100.1	-	-			

※ 성과지표가 세부사업 단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단위사업 별로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단위 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해 작성

※ 성과지표가 여러개인 경우 모두 적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3,725건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 11개 기관, 44개 시설 ○ 정보보호교육(16회, 356명 수료) ○ 2015년도 에너지·산업분야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12.14) ○ 제어시스템 사이버공격 대응 실전훈련(5.23~27)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 1개 기관, 1개 시설 ○ 제4회 보안기술 경진대회 개최(11.3)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2,796건 ○ 사이버공격 자체 탐지를 개발 또는 최적화 적용 : 633건 ○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컨설팅(11개 기관 45 시설 완료) ○ 정보보호교육(20회, 896명 수료) ○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 (26기관 완료) ○ 제어시스템 사이버 공격·대응 훈련(10개 기관 41개 시설) ○ 정보시스템 사이버 공격·대응 훈련(1개 기관 2개 시설) ○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 41개 기관) ○ 2017 을지연습 사이버 공격·대응 훈련(25개 기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모의해킹 방법론 개발 ○ 제어시스템 보안진단 방법론 개정 및 위험수용 가이드 수립 ○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발 공격, 대선 前後 북한에 의한 사이버공격 가능성 고조 및 전 세계 랜섬웨어 확산 및 변종 출현에 따른 경보발령 대응(비상근무)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10주년 기념식(비전선포식) 및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 ○ 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회원기관 공유 ○ “신재생에너지 보안가이드라인” 수립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2,586건 ○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컨설팅(11개 기관, 48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투가능성 진단 병행 - 정보통신기반시설 위험수용 현장점검 및 적정성 검증 병행 ○ 제어시스템 BP(최적) 모델 수립 및 공개취약점 분석 ○ 신재생에너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 수립 및 현장실사(6개 기관) ○ 인터넷망·업무망 보안진단(11개 기관 완료) ○ 정보보호교육(12개 과정, 16회, 314명 수료) ○ 정보보안최고관리자(CISO)과정 운영(8~10기 교육과정 고려대와 협약체결) ○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25개 기관) ○ 웹취약점 상시점검 (27개 기관) ○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 21회) ○ 2018 을지연습 사이버공격 대응훈련(27개 기관) ○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감사(41/41개 기관) ○ 가상화폐 채굴관련 악성코드 및 스피어피싱(정교하게 제작된 맞춤형 공격) 증가에 따라 탐지패턴 개발·배포 및 빅데이터 기반 중요 탐지이벤트 선별 기능 운영
2019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위원·자문위원 간담회 시행(6.5) ○ FIRST(국제침해사고대응협의회) 가입 추진(현장실사 수검완료, 7.24) ○ 2019년도 “정보보안 분야 해외 컨퍼런스” 참관(8.5~14, 산업부 등 11개기관 22명) ○ 2019 을지태극연습 “사이버공격 대응훈련(Cyber Guard)” 시행(27개 기관) ○ 2019년 상반기 에너지공기업 사이버보안협의회 워크숍 개최(6.27~28, KPX) ○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부 자체 7회, 산하 공공기관 2회) ○ 정보보호교육(10개 과정, 10회, 233명 수료) ○ 회원기관 현장 방문교육 시행(8회) ○ 정보보안최고관리자(CISO)과정 운영(교육생 22명 선발 : 8.16, 교육시행 : 9.2~) ○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10개 기관)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1,371건(‘19 상반기) ○ 침해사고 현장 분석·대응 운영 (‘19 상반기 17건)

※ 시작연도는 사업 특상에 맞추어 조정

※ 사업 실적은 계량적으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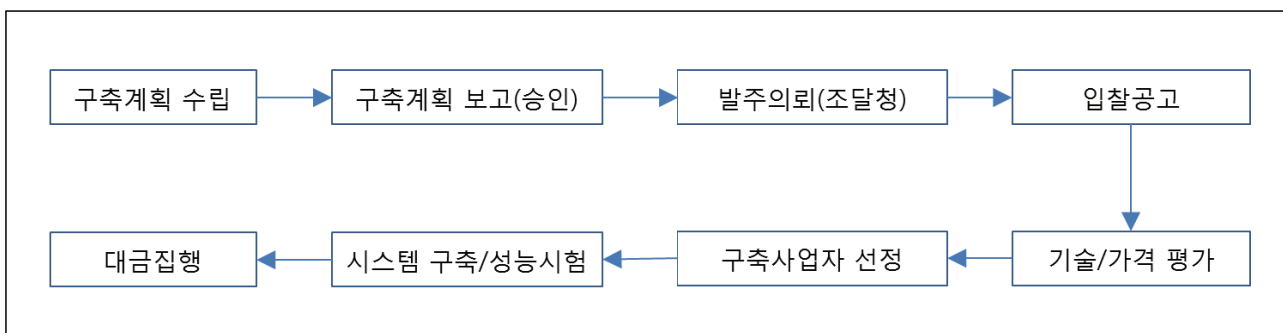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 한수원 원전자료 유출을 계기로 에너지를 비롯한 산업부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체제를 강화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09년 7.7DDoS, '10년 스텍스넷, '11년 3.4DDoS 및 금융 해킹사고, '12년 샤문, '13년 3.20 및 6.25 사이버테러, '14년 개인정보 유출대란 및 원전자료 유출사고, '17년 전 세계 랜섬웨어(wannacry 등) 확산 및 변종 출현, '18년 가상화폐 채굴관련 악성코드 감염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새로운 사이버위협이 지속증가 및 현실화
- 이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한 최신 보안솔루션을 발굴하는 등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추진하여 진화하는 해킹기법에 신속·정확하게 방어해 나갈 계획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565	1,694	2,500	2,500	2,500	
'19~'23		1,694	1,789	2,500	2,5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회 산자위 - '16년 결산검토보고서)

- (지적사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비 관련 규정 개정 및 적정수준의 국비 확보 노력 필요
- (조치결과) 산업부가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의 개정 완료('17.6월) 및 추가 정부예산 확보
- * '18년도 관리용역비 779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50백만원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사이버위협 지능화·고도화로 발전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현실화되고, 제어시스템 보안관제의 중복투자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주관으로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5.3)하였고, 산업부·국정원 및 한전KDN·한수원·발전5사·지역난방 등 8개 기관이 참여
- 연구개발 2년, 발전사 주관 현장실증 1년 등 총 3년간('19.6~'22.6), 30억원 규모로 공동연구를 추진중에 있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8년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70.2)
- 평가기간 : '18년도 사업결과

13) 부처 전의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531	531					531	524	98.7	98.7	0	7
2017	531	531					531	527	99.2	99.2	0	4
2018	565	565					565	0	0	0	559	6
2019	1,694	1,694	559				2,253	2,230	131.6	99.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6	- 불용: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차액(7백만원)
2017	- 불용: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차액(4백만원)
2018	- 이월: 사업기간 순연('18.12.11~'19.2.9)으로 사업금액 이월(559백만원) - 불용: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차액(4백만원)
2019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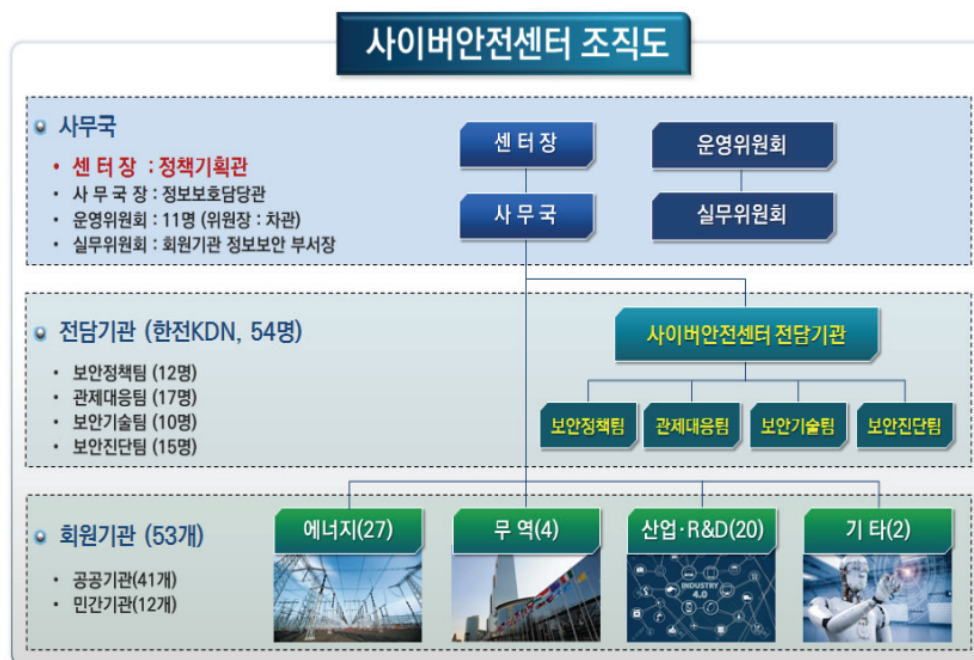
참고 2.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현황

참고1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현황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현황

- (명칭)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MOTIE-CSC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Cyber Security Center)
- (설립목적) 에너지·산업·무역 등 실물경제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기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안정 기여
- (기능) 53개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①365일 24시간 보안관제, ② 침해사고대응, ③취약점분석·평가 등 서비스 제공
 - 사이버공격 시도를 탐지하고 회원기관과 공조 대응(365*24)
 - 침해사고 조사 및 사이버공격 탐지규칙 개발·관제시스템 적용
 - 전력·원전·가스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 정보보안 전문 교육과정을 통한 실무능력·보안의식 강화
- (조직) 1국 4팀(사무국, 보안정책팀, 관제대응팀, 보안기술팀, 보안진단팀)



참고2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현황

□ 대상기관 : 총 53개 (공공기관 41, 비 공공기관 12)

분야	기관명	기관수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광해관리공단, 지역난방기술 ^(민간) , 전기공사협회 ^(민간) 한국에너지재단	27
무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민간)	4
산업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강원랜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생산성본부 ^(민간) , 한국표준협회 ^(민간) , 자동차부품연구원 ^(민간) , 전자부품연구원 ^(민간) , 한국광기술원 ^(민간)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민간)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민간) , 한국다이텍연구원 ^(민간)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민간) ,	20
기타	한일 병원,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2
합 계		53

무역위원회

세출예산 총괄표(무역조사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결산	2019예산		2020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1,303	1,734	1,734	1,657	1,657	△ 77	△ 4.4
<일반회계>	1,303	1,734	1,734	1,657	1,657	△ 77	△ 4.4
무역구제지원 (1233-301)	1,303	1,734	1,734	1,657	1,657	△ 77	△ 4.4

<div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0px;">사 업 명</div> <div style="font-size: 1.1em;">(1) 무역구제지원사업 (1233-301)</div>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110	113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무역및투자유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1
명칭	무역구제	무역구제지원	무역구제지원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김종주 과장	문인배 사무관	-
		044-203-5850	044-203-5855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무역구제지원	1,303	1,734	1,734	1,657	1,657	△77	△4.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314	1,314	1,303 [1,303]	-	11	1,734	1,734	1,734	1,718 [1,718]	-	16	1,657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강화	490	490	479 [450]	-	11	450	450	450	449 [449]	-	1	483
· 무역구제진흥	177	177	177 [177]	-	-	207	207	207	207 [207]	-	-	249
·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연구	300	300	300 [300]	-	-	730	730	730	715 [715]	-	15	535
· 전 세계 무역구제 기관과의 협력	347	347	347 [347]	-	-	347	347	347	347 [347]	-	-	390
○ 비목별 분류(합계)	1,314	1,314	1,303 [1,303]	-	11	1,734	1,734	1,734	1,718 [1,718]	-	16	1,657
· 일반수용비(210-01)	604	604	593.5 [593.5]	-	10.5	674	674	674	674 [674]	-	-	743.4
· 일반용역비(210-14)	190	190	190 [190]	-	-	190	190	190	190 [190]	-	-	240
· 국내여비(220-01)	21	21	21 [21]	-	-	21	21	21	21 [21]	-	-	27
· 국외여비(220-02)	107	107	106.5 [106.5]	-	0.5	107	107	107	106 [106]	-	1	100.3
·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12]	-	-	12	12	12	12 [12]	-	-	11.3
· 일반연구비(260-01)	300	300	300 [300]	-	-	730	730	730	715 [715]	-	15	535
· 민간경상보조(320-01)	80	80	80 [80]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 덤핑수입, 지적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응하여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조사→판정→제재)하고, 해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등 기업의 무역구제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

□ 사업내용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 국내산업 보호와 공정한 국제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덤핑, 지적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와 국내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심의·판정하기 위한 국내외 현지조사,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등) 자문료, 무역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
- (무역구제진흥)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진 및 무역구제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 무역구제 학술세미나, 대학(원)생 대상 논문발표대회/경연대회 개최, 무역구제지 발간(계간지), 무역구제제도 홍보 등을 위한 사업
-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 중소기업 반덤핑 신청 지원, 산업피해 예방을 위해 조사신청 이전단계에서 수입급증 또는 수입으로 국내산업 피해 우려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를 실시하고, 무역구제 제도/현안 연구 등을 통한 제도 선진화를 위한 사업
-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국가의 수입규제 대응 및 공정·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對韓 수입규제 주요국가와의 협력구축강화, WTO 무역구제 규범위원회·RCEP 등 무역구제분야 협상참여 등을 위한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제15조(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제25조(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등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등

② 추진경위

- '87년 무역위원회 설립(근거 : 대외무역법)
 - * 가방 및 핸드백 원산지 위반·상표권 침해 조사 (1987.7.31. 최초 사건)
- '89~'99년 무역구제 세미나 매년 개최(「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행사로 발전)
- '93년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권한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 '95년 반덤핑 및 보조금 제도 운용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덤핑·보조금 조사업무 관세청에서 이관)
- '99년 한·중 무역구제기관 간 MOU 체결
- '00년 제1회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및 제1회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개최
- '01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제정, 제1회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 '01년 무역구제 소식지 '무역구제' 창간
- '02년 산업경쟁력조사* 실시(자동차변속기 등 4개 품목)
 - * 미국 ITC의 개별산업 경쟁력조사 및 무역정책연구(美 관세법332조) 벤치마킹
- '03 제1회 한·EU 무역구제협의회 개최
- '05년 제1회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 '06년 무역구제포털시스템 구축
- '07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3개 업종단체)
 - * '19.7월, 19개 업종단체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확대
- '14~'15년 무역위원회-WTO 협력 양해각서 체결(「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WTO 후원)
- 제1회 한·미 무역구제기관간 기술협의회 개최
- '14년 무역위-관세청 간 업무협력 MOU 체결
- '18년 한-인도 무역구제협력 MOU 체결 및 제1차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 '19년 무역위-경찰청 간 업무협력 MOU 체결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2~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 사업 수혜자 : 국내 기업, 대학, 유관 협회 및 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덤핑수입,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 피해를 신속 구제**(조사→판정→구제)하고, 무역구제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 1,657백만원 요구

○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을 위한 덤핑수입,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중소기업의 무역구제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홍보, 對韓 수입규제가 많은 주요국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반영

○ 산출내역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 483백만원)**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피해를 신속하게 조사·판정·구제
 - * 조사활동(국내외 조사,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자문료 등) 293백만원, 무역위원회 운영 90백만원, 조사보고서 등 인쇄 100백만원
- **(무역구제진흥, 249백만원)** 중소·중견기업 등의 무역구제 활용 촉진, 대학(원)생, 일반국민의 무역구제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 조사제도 홍보 102백만원, 무역구제 학술세미나(연 2회) 26백만원, 대학(원)생 논문대회/경연대회 개최 71백만원, 무역구제지 발간(계간지) 50백만원
- **(산업경쟁력 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535백만원)** 조사신청 이전단계에서 수입급증 품목 분석 강화, 산업피해 예상품목 산업경쟁력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의 산업피해 예방 및 반덤핑 신청 지원 강화
 - * 품목별 산업경쟁력 조사 및 무역구제 제도/현안 연구 380백만원, 산업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155백만원
-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 390백만원)** 해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 *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40백만원, 양자/다자간 해외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1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증가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 피해의 신속 구제***, **해외국가의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대응** 등을 위해 지원 필요

* 무역구제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국내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 구제할 수 있는 WTO 체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구제수단

-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피소국인 반면, 세계 12위의 제소국으로 취약한 조사 인프라 선진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무역구제 활용을 촉진할 필요
 - * 반덤핑 피소국('19.11월) : ①중국(1,327건), ②한국(428), ③대만(302건), ④미국(290건)
 - * 對韓 해외 수입규제 현황('19.11월) : 29개국, 총 208건(조사중 40건)
- 중소기업, 지역 등은 여전히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지도가 낮은 수준으로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진**을 위해 **홍보예산 증액 필요**
 - 특히, 기술·산업발전 가속화에 따라 증가하는 지재산 침해 등 구제를 위한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기업구제를 위한 조사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 필요
- 개별 품목 중심의 단편적인 조사와 병행하여 산업·경제 전반 경쟁력 조사 등 **체계적·종합적인 조사 추진 필요**
 - 수입증가 품목의 심층 분석 및 기업제공으로 산업피해를 예방하고, 산업피해 우려품목 분석으로 산업피해 신청으로 연계되도록 체계적인 산업경쟁력 조사
- 해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확대를 통해 **해외국가의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규제에 대응 지원 필요**
 - 미국·중국·EU 등 주요국 무역구제기관과 양자 협력관계 강화 및 베트남·인도 등 신흥방정책 대상국가의 무역구제기관과 협력 확대로 우리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대응 지원 및 무역마찰 사전 방지
 - 2020년은 WTO 설립 25주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0주년으로 해외 무역구제기관의 초청국가 확대 등 포럼의 국제적 위상제고 및 자유·공정무역 확산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경쟁력조사 사업에 대한 만족도(%)	목표	70	71	72	72.2	72.5	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설정	업체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69.3	70.9	72.1	72.2	-			
	달성도	99.0	99.9	100.1	100.0	-			
홈페이지 무역구제 DB 만족도(%)	목표	75	75	75.4	75.7	76.0	최근 3년간의 실적 평균치를 고려하여 설정	홈페이지 이용자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74.8	75.1	75.5	75.7	-			
	달성도	99.7	100.1	100.1	100.0	-			
무역구제 지원(건수)	목표	42	44	46	47	48	최근 3년간의 무역구제 지원건수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반덤핑 및 불공정무역행위 현지조사, 상담 등 지원 업체수	출장내역 및 지원보고서 등
	실적	43	44	46	47	-			
	달성도	102.4	100.0	100.0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인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국산 합판 등 4건의 반덤핑 조사개시 및 미국·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 등 3건 최종판정 -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 등 12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5건 조사 진행 - 무역구제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최신 이슈를 분석하는 무역구제지를 발간하여 산학연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 -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상강화 및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5월, 미국, 중국, 인도, EU 등 18개국 300여명 참석) - 제16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1차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개최를 통한 양국 무역구제기관간(무역위원회-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협력채널 강화(6월) -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 등 5대 소비재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 추진(8월)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 등 7건의 반덤핑 조사개시 및 중국산 옅색인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등 5건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 - 지재권 침해, 원산지 위반 등 9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및 5건 최종판정 -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빈발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 추가 지정 (('16)13개 → ('17) 16개) -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7월, 미국, 중국, 인도, EU 등 13개국 330여명 참석) 및 참석한 미국, 중국, 인도 등 9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對韓 수입규제조치 관련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채널을 통한 무역구제 현안 논의 및 정보교류 등 상호 이해제고 · (양자)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7월), 한-베 FTA 무역구제협력회의(9월),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FTA 이행위(12월),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 및 FTA 이행위(12월) · (다자) WTO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규범협상 참석(4월, 10월), RCEP 무역구제협상 참석(4월, 11월) - 로봇, 전기차, OLED 제조장비 등 3개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 추진(8월)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중국·싱가포르·대만산 초산에틸 등 6건의 반덤핑 조사개시 및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 등 7건에 대해 반덤핑 여부를 판정(예비판정 1, 최종판정 6)하고 총 6건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 - 특허권, 원산지 위반 등 8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및 11건 최종판정 - 산업현장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 협·단체 2개(전자산업진흥회, 저작권보호원)를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총 19개 운영 중) - WTO, 미국, 중국 등 20개국 무역구제기관대표 참석 등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성공적 개최(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면담(13개국), 조사관 기술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입규제 애로 사항 전달기회로 활용 - 국제협력채널을 통한 해외 주요 무역구제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베 무역구제협력회의(3월, 9월),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9월), 한-중 무역구제 이행위 및 무역구제협력회의(11월), 한-EU 무역구제협력회의(12월) 개최 · WTO 무역구제 규범협상 참석(4월, 10월), RCEP 무역구제협상 참석(4월) -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촉진을 위해 제도홍보 등 무역구제 저변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지역별,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세관 실무자 대상 설명회, 심포지엄(11월) 등 총 30여회 개최 · (학생)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대회(11월) 및 경연대회(12월) 개최 · (전문가) 무역구제지 발간(3회 발간, 500여개 기업 등 관련기관 배포), 학술세미나 개최(6월, 11월) 등 - 협단체 수요조사를 통해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탄소섬유, 감압밸브 등 2개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 추진(8월)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중국산 글라신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등 6건의 반덤핑 조사개시 및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 등 7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 판정하고 총 5건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 -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 7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고, 10건에 대해 판정 -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5월, WTO, 중국, EU, 캐나다 등 13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미국, 인도 등 7개국의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등 300여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양자면담, 기관장간담회, 조사관 기술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전달 및 민간 전문가(변호사·회계사)에게 해외 조사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채널을 통한 무역구제 현안 논의 및 정보교류 등 상호 이해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 WTO, EU 무역구제기관장 면담(2월, 11월), 한-EU 무역구제협력회의(5월),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6월, 9월),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8월), 한-중 무역구제 이행위 및 무역구제협력회의(9월),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12월) · (다자) WTO 규범정례회의(4월, 11월), RCEP 무역구제분과 협상 참여(5월, 6월) 등 -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촉진을 위해 제도홍보 등 무역구제 저변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중앙회와 협력 홍보) “중소기업뉴스” 등을 활용하여 제도 이용기업 사례 소개, 전문가 기고 등(초산에틸 반덤핑조사 등 4회, 지면광고 2회, 인터넷 홍보 등) · (학생)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대회(11월) 및 경연대회(11월) 개최 · (전문가) 무역구제지 발간(4회 발간, 500여개 기업 등 관련기관 배포), 학술세미나 개최(6월, 11월), 불공정무역 심포지엄(12월) 등 - 협단체 수요조사를 통해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철강, 정밀 화학, 이차전지 등 3개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 추진(8월)
--	---

③ 향후(“20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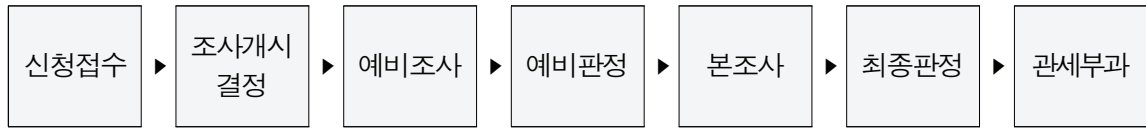
- 덤핑수입, 지적권 침해 등 해외기업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속·공정한 조사 및 실효적인 무역구제조치로 국내 산업피해의 구제 및 국내산업 보호
- 지역 중소기업 설명회, 업종별 간담회, 논문·경연대회, 심포지엄, 학술세미나 개최 등 무역구제 홍보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진 및 저변 확대
- WTO,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을 초청하는 및 미국, 중국, EU 등 해외 주요국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회의,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수입규제 애로 대응 및 자유·공정무역 확산
- 수입급증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조사’ 실시로 중소기업의 반덤핑 신청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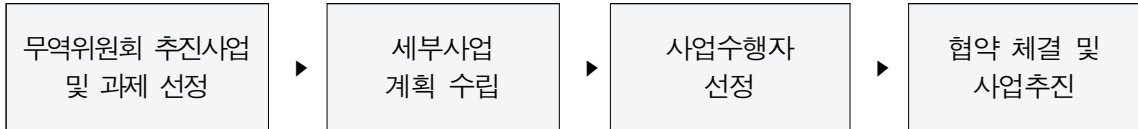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무역구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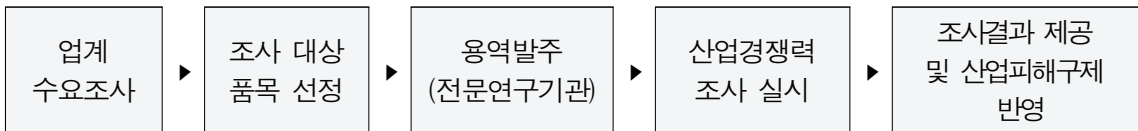


* 덤핑, 상계관세 위주로 작성

○ 무역구제 진흥



○ 산업경쟁력 조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1,314	2,814	2,814	2,814	2,814	
'19~'23		1,734	1,789	1,789	1,789	1,78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제도의 공정성·실효성 강화) 미국·EU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사기법을 고도화 하고, 새로운 무역구제 수요에 대응하여 조사관의 조사역량 및 전문성 강화 추진
-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진) 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진을 위해 지역별·대상별 제도 홍보·교육 강화 및 피해기업의 무역구제 기회 확대,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해외 무역구제기관과 협력 강화) 우리기업의 해외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위해 對韓 수입규제가 많은 국가의 무역구제기관과 협력채널 신규 구축·강화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글로벌 무역환경에 따른 덤핑수입·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산업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지속 확대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1,327	1,327	-	-	-	-	1,327	1,303	98.2	98.2	-	24
2017	1,234	1,234	-	-	-	-	1,234	1,207	97.8	97.8	-	27
2018	1,314	1,314	-	-	-	-	1,314	1,303	99.2	99.2	-	11
2019	1,734	1,734	-	-	-	-	1,734	600	34.6	34.6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80	80	80	80	-	80	80	-	-	100.0
2017	80	80	80	80	-	80	80	-	-	100.0
2018	80	80	80	80	-	80	80	-	-	100.0
2019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2016	- '예산절감 차원에서 24백만원 불용
2017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7백만원 불용
2018	- 집행잔액 11백만원 불용
2019	- 집행잔액 16백만원 불용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세출예산 총괄표(국가기술표준원)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결산	2019예산		2020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84,918	84,210	84,210	122,750	115,317	31,107	36.9
<일반회계>	84,918	84,210	84,210	107,800	100,367	16,157	19.2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2,066	2,227	2,227	3,025	2,614	387	17.4
국제표준활동 지원(3731-302)	4,448	2,105	2,105	1,915	1,915	△190	△9.0
개도국표준체계 보급지원(ODA) (3731-303)	1,275	1,020	1,020	1,634	1,559	539	52
한국인인체치수 조사보급(3731-304)	873	1,544	1,544	2,039	2,039	495	32.1
국제적합성평가 기반구축(3731-306)	2,309	2,551	2,551	4,572	3,088	537	21.5
국가인증제도 혁신기반구축 (3731-307)	1,100	1,045	1,045	1,274	1,024	△21	△2.0
법정계량선진 화기반구축 (3731-308)	1,229	1,185	1,185	1,103	1,103	△82	△6.9
국가표준활성 화(3731-309)	4,031	4,054	4,054	7,112	6,229	2,175	53.7
안전인증역량 강화(R&D) (3731-310)	6,425	7,459	7,459	7,086	7,027	△432	△5.8
국가표준기술 개발및보급(R&D) (3731-312)	28,824	30,530	30,530	47,878	47,878	17,348	56.8
표준안전기반 구축(R&D) (3731-314)	14,029	9,890	9,890	1,759	1,759	△8,131	△82.2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인증 기술개발(R&D) (3731-318)	-	-	-	5,900	4,260	4,260	순증
제품시장감시 역량강화(3736-303)	3,991	5,884	5,884	6,618	6,872	988	16.8

구분	2018결산	2019예산		2020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안전제도기반 조성(3736-304)	3,647	3,538	3,538	1,798	1,794	△1,744	△49.3
제품사고조사 및수입제품안전 관리(3736-306)	855	863	863	948	820	△43	△5.0
어린이제품안전 관리생태계조성 (3736-307)	990	990	990	1,360	990	0	0.0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3736-301)	4,087	4,288	4,288	6,106	4,942	654	15.3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구 축 (3736-302)	1,048	1,210	1,210	1,127	1,127	△83	△6.9
IT기반기술표 준정보화체계 구축(3736-304)	620	710	710	959	959	249	35.1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7134-301)	1,533	1,644	1,644	1,644	1,644	0	0.0
기술표준정책 (7134-302)	1,538	1,473	1,473	1,943	724	△749	△50.8
<전력산업 기반기금>	-	-	-	14,950	14,950	14,950	순증
이차전지화재 안전성검증센터 구축(R&D) (5806-317)	-	-	-	14,950	14,950	14,950	순증

사 업 명
(1)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신기술제품인증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박종섭	-	배소현
		043-870-5500	-	043-870-550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신기술제품인증	2,066	2,227	2,227	3,025	2,614	387	17.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066	2,066	2,066	-	-	2,227	2,227	2,227	2,225 [2,225]	-	2	2,614
· 신기술인증 등 지원	1,386	1,386	1,386	-	-	1,669	1,669	1,669	1,669 [1,667]	-	2	2,082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400	400	400	-	-	328	328	328	328 [328]	-	-	302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지원	250	250	250	-	-	200	200	200	200 [200]	-	-	200
○ 비목별 분류(합계)	2,066	2,066	2,066	-	-	2,227	2,227	2,227	2,225 [2,225]	-	2	2,614
· 일반수용비(210-01)	37	37	37	-	-	34	34	34	34 [34]	-	-	34.1
· 시험연구비(210-13)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2	2 [2]	-	-	1.9
· 일반연구비(260-01)	50	50	50	-	-	25	25	25	23 [23]	-	2	25
· 민간경상보조(320-01)	1,947	1,947	1,947	-	-	2,136	2,136	2,136	2,136 [2,136]	-	-	2,5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 최초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및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제품을 발굴·평가·인증하여 국내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신속한 시장진출 확보 및 판로지원 강화

NEP인증 (New Excellent Product)	국내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평가, NEP마크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
NET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국내최초 신기술 또는 대체기술을 평가하여 NET마크 부여하고 실용화를 지원
GR인증 (Good Recycled)	자원·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우수품질의 친환경 재활용 제조제품을 평가하여 GR마크를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국내 인증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아 시장출시가 곤란한 융합신제품에 대해,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필요한 인증을 부여하여 신속 시장출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제품(NEP)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신기술(NET)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재활용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산업융합촉진법 제3장(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② 추진경위

- '95. 5.10 : 제15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시행토록 결정
- '04.11.25 : 각부처의 유사기술 및 제품인증에 대한 정부인증제도 통폐합(5개 부처, 7개 신기술 인증 업무를 신기술·신제품 인증으로 통합 정비)
- '06.10.30 : NEP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 '07.10.29 : 공공구매제도 주관부처를 산자부에서 기술표준원으로 변경
- '08. 2.29 :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던 IT분야 신제품(NEP)인증 업무 및 과기부의 신기술(NET)인증 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11.10.6 :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 도입
- '16.2.17 :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신속 시장 진입지원체계로서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 구축 등 보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 산업분야 인증업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신제품(NEP)인증및구매 촉진등에관한운영요령 제37조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5, 제57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7조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 제36조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100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9조의2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신기술인증 등 지원 : **2,082백만원**

- NEP, NET, GR인증 : 2,021백만원 (320-01, 민간경상보조)

• 836건 × 3.85백만원 × 0.5 (2019년) → 1,050건 × 3.85백만원* × 0.5** (2020년)

* 1건당 평가비용(단가) : {1차평가(서류·대면) 10명 + 2차심사(현장) 4명 + 3차심사(종합) 4명(20명/5건)} × 0.20백만원(수당) + 0.25백만원(출장비 등)= 3.85백만원

** 예산 부족으로 1개의 위원회 당 2건 심사 진행

- 인증제도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 등 : 1.9백만원 (240-01, 사업추진비)

• 1식 × 2백만원 (2019년) → 1식 × 1.9백만원 (2020년)

- 연구용역비 : 25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1건 × 25백만원 (2019년 동일)

- 인증업무 관련 법률자문 등 : 34.1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1식 × 34백만원 (2019년) → 1식 × 34.1백만원 (2020년)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 **302백만원** (320-01, 민간경상보조)

- 의무구매 실적 및 인증기업 판매 실적 조사 : 68백만원

• 1식 × 68백만원 (2019년 동일)

- 공공구매 워크숍, 현장 방문 상담회 등 : 234백만원

• 1식 × 260백만원 (2019년) → 1식 × 234백만원 (2020년)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사후관리 등) : **30백만원** (210-13, 시험연구비)

- 시험검사 수수료 등 : 30백만원

• 22품목 × 1.35백만원 (2019년 동일)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지원 : **200백만원** (320-01, 민간경상보조)

- 제도운영(인증평가) 및 인증조사·분석 : 180백만원

• 인증조사·분석 162백만원 : 6건 × 27백만원 (2019년 동일)

• 인증기준 개발 18백만원 : 6건 × 3백만원 (2019년 동일)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홍보 : 20백만원

• 1식 × 20백만원 (2019년 동일)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구매품목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목표	67.0	69.0	70.5	71.0	71.5	인증제품 관련 수요자중심 정보 채널 다각화, 인증 제품의 신뢰성 유 지·제고를 위한 노 력을 지속하여 목 표치 상향 설정	공공기관 의무구 매 담당자 대상으 로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 A / B (A: 공공구매 만족도, B: 공공구매 만족도 조사 총점) x 100점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69.2	70.2	70.4	68.2	-			
	달성도	103.3%	101.7%	99.9%	96.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252건/인증 47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511건/인증 79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05건/인증 69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1회(122명) - 설명회 5회(1224명) - 구매상담회 3회(223명)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16년 사후관리 대상 건 64완료(NEP : 29건 , GR : 35건)
2017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295건/인증 41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441건/인증 83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91건/인증 85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1회(113명) - 설명회 5회(702명) - 구매상담회 3회(227명)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17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 61건 , GR : 46건)
2018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374건/인증 39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465건/인증 54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99건/인증 77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1회(84명) - 설명회 5회(698명) - 구매상담회 3회(199명)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18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GR : 76건)
2019	신기술인증 등 평가지원, 인증제품 판로확대 및 사후관리 진행 중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일자리창출

- 국내 기업이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기술 및 행정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

< 신기술(NET)인증 >

- 신기술 인증 취득을 위해 인증 취득 전·후 인적 투자를 실시한 중소기업은 각각 48.8%, 52.4%로, 신기술 인증 취득 기업의 약 50%에서 일자리가 창출
- 신기술 인증 취득 전/후 인적 투자 규모는 각각 4.0명, 4.3명으로 **총 8.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17.4)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0.89억당 1명 고용창출)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7.387억으로, 신기술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기업당 약 7.4억원이 지원된 것과 같은 효과**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17.10) 고용창출 효과(2.17억당 1명 고용창출)와 비교해 보면 **약 18.0억원의 효과**

< 신제품(NEP)인증 >

- 신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인증 취득 전·후 인적 투자를 실시한 중소기업은 각각 60.6%, 48.5%로, 신제품 인증 취득 기업의 약 55%에서 일자리가 창출
- 신제품 인증 취득 전/후 인적 투자 규모는 각각 2.9명, 2.6명으로 **총 5.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0.89억당 1명 고용창출)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4.895억으로, 신제품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기업당 약 4.9억원이 지원된 것과 같은 효과**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고용창출 효과(2.17억당 1명 고용창출)와 비교해 보면 **약 11.9억원의 효과**

※ 조사 대상/기간 : 신기술신제품 인증 취득기업 201개사 / '18.8.~'18.9.

□ 중소기업성장

- 2018년 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인증신제품(NEP)의 구매총액은 2,098억원에 달했으며,
 - 한 개 제품당 평균 구매액은 16.7억원으로 중소기업 신제품의 초기 판로개척에 기여하고 있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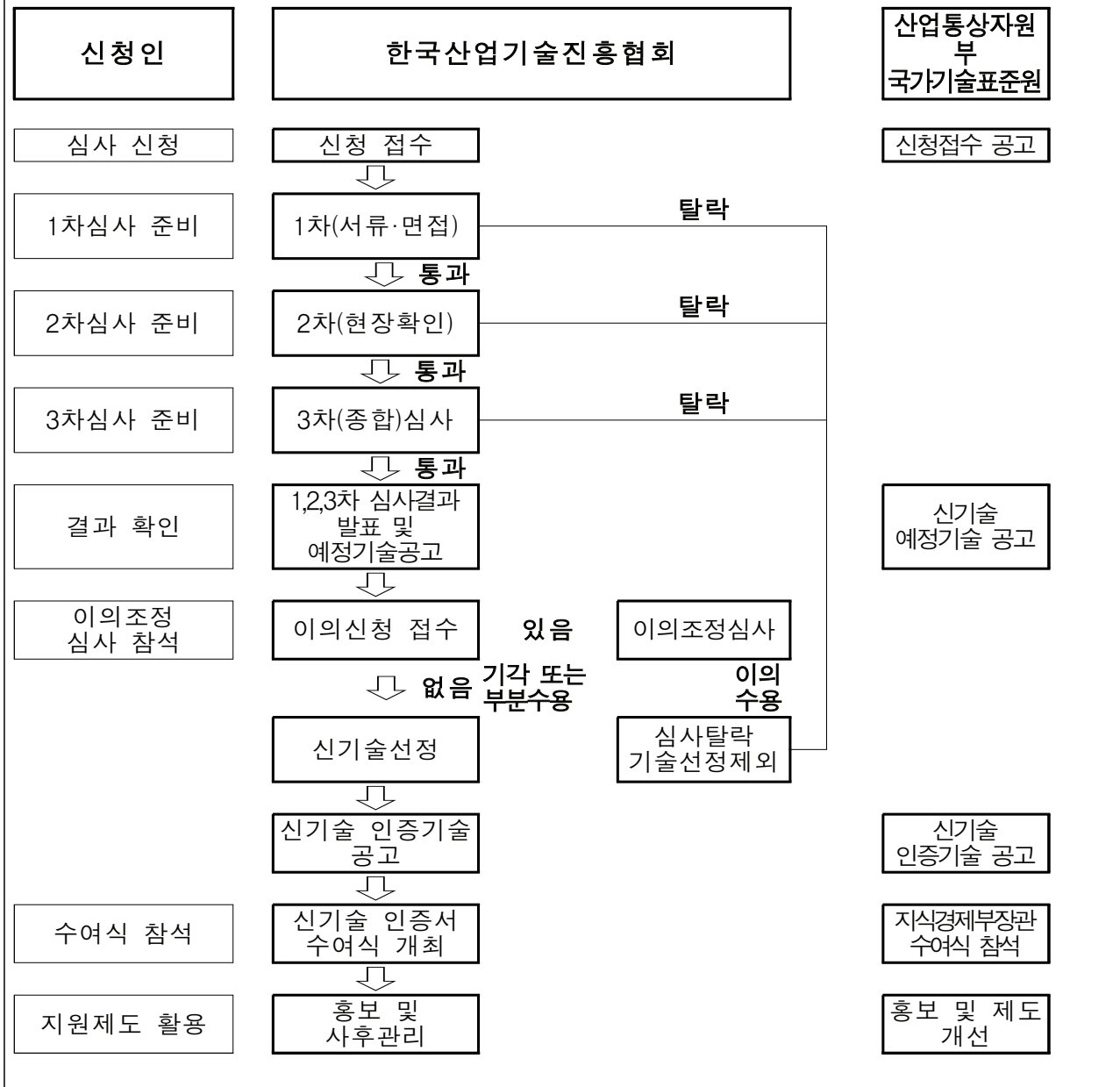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NEP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90일)

신 청	○ 신제품인증신청서 접수
인증 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실무평가위원회 개최(학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 15인 이내) - 신청제품의 신기술성 평가 - 제품평가 기준 작성 - 현장심사위원(3인이상) 선정
현장심사 제품심사	○ 신청업체 -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성 설명 - 평가위원 질의에 응답 ○ 현장심사위원 - 고유기술·제품 개발 여부의 현장 확인 - 실무평가위원회 결과의 사실 확인 - 안정된 품질 제품의 지속 생산 여부 판단(필요시 시료 채취 후 시험 의뢰) - 현장심사 평가표 작성
인터넷 예고	○ 신청업체 - 신청제품의 개발·생산·시험평가 현장 안내 - 현장심사위원 질의에 응답 ○ 국가기술표준원 - 신청제품의 신기술성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 수렴(30일간)
인증 심의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현장심사위원 등 관련 전문가 20인 이내) - 종합평가보고서 위주로 신청제품 평가
신제품인증	○ 신청업체 -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성 설명 - 평가위원 질의에 응답 ○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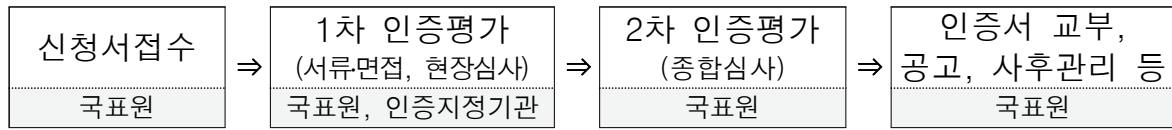
② NET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1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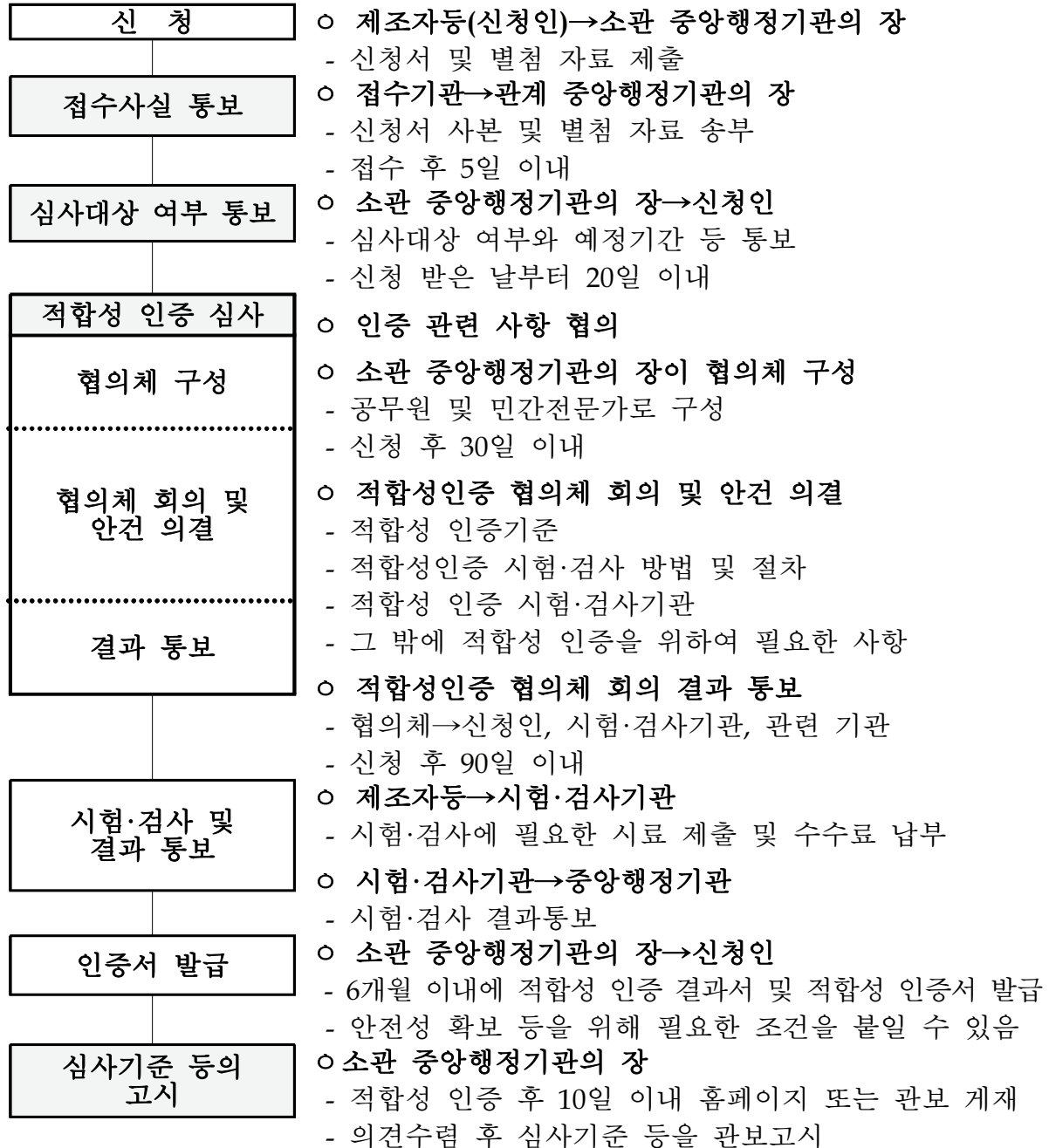
③ 인증제품 판로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8조



④ GR인증 집행절차 (소요기간 : 90일)



⑤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6개월)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나인 경우에 대한 절차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2,066	2,227	2,450	2,695	2,695	
'19~'23		2,227	3,049	3,049	3,081	3,0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보조사업 연장평가

- '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내역사업의 타당성·필요성 인정. 단, 현 국정기조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 필요
 - NEP인증과 NET인증의 경우 최근 3년 또는 최근 5년의 신청건수를 고려하여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책정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해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예산을 가능 범위 내 최대 지원을 제안

2) 재정사업 자율평가

- '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등급 “보통”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수출 우수기업 가산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등의 제도를 통하여 신제품의 세계 시장진출과 판로지원 기반 구축
- 최신 기술의 융합, 제품·서비스 융합 등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

□ 세부 추진계획

- 강소기업이 개발한 NET, NEP, GR,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품 등 우수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친환경 성장 구현 및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
 - 우수 제품 인증을 통해 인증 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
 - 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인증 지원제도 미활용 초기중소기업을 추가 발굴·인증 하여 우수 기술제품 사장화 방지
- 국내·외 신기술 트렌드 분석 및 신기술 인증제도의 정책 다변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 인증 연계 방안 마련
-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인증애로 발굴통로 다각화 및 적합성 인증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인증 관련 애로지원 강화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2013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확인·점검 결과(기재부)
 - 개발기술의 실용화(신기술제품인증) : 62점(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2,137	2,137	-	-	-	-	2,137	2,137	100	100	-	-
2017	2,223	2,223	-	-	-	-	2,223	2,223	100	100	-	-
2018	2,066	2,066	-	-	-	-	2,066	2,066	100	100	-	-
2019	2,227	2,227	-	-	-	-	2,227	2,225	99.9	99.9	-	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2,137	2,137	2,137	2,137	-	2,137	2,137	-	-	100
2017	2,104	2,104	2,104	2,104	-	2,104	2,104	-	-	100
2018	1,947	1,947	1,947	1,947	-	1,947	1,947	-	-	100
2019	2,136	2,136	2,136	2,136	-	2,136	2,136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6	- 이·전용 및 불용 없음
2017	- 이·전용 및 불용 없음
2018	- 이·전용 및 불용 없음
2019	- 불용 2백만원 :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 국제표준활동지원 (37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표준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국제표준협력과	한상미	반명진	
		043-870-5350	043-870-535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제표준활동지원	4,448	2,105	2,105	1,915	1,915	△190	△9.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458	4,458	4,448 (4,448)	-	10	2,105	2,105	2,105	2,093 (900)	-	12	1,915
· 국제표준화회의개최	368	368	366	-	2	705	705	655	653	-	2	515
· 국제표준화회의참가	400	400	396	-	4	400	400	450	449	-	1	400
·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100	100	96	-	4	100	100	100	91	-	9	100
· 국제 의장·간사 활동	750	750	750 (750)	-	-	900	900	900	900 (900)	-	-	900
· 2018 IEC 부산총회 개최	2,840	2,840	2,840 (2,840)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4,458	4,458	4,448 (4,448)	-	10	2,105	2,105	2,105	2,093 (900)	-	12	1,915
· 일용임금(110-03)	10	10	10	-	-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82	82	82	-	-	126	126	126	126	-	-	100
· 임차료(210-07)	210	210	210	-	-	503	503	453	453	-	-	357
· 국외업무여비(220-02)	400	400	396	-	4	400	400	450	449	-	1	400
· 사업추진비(240-01)	56	56	56	-	-	56	56	56	56	-	-	53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96	-	4	100	100	100	91	-	9	100
· 민간경상보조(320-01)	3,590	3,590	3,590 (3,590)	-	-	900	900	900	900 (900)	-	-	900
· 자산취득비(430-01)	10	10	8	-	2	20	20	20	18	-	2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리기술 및 제품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및 무역기술장벽(TBT)을 해소함으로써 세계시장 진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 선점 대응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대응 및 산하 기술위원회(TC/SC/WG) 회의 참가 등 국내 민간전문가 및 정부대표단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 (국제표준화회의의 국내 개최 지원) 우리기술의 우수성 홍보 및 제안된 국제표준안에 대해 회원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한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 ISO/IEC 기술위원회 총회 등 국제회의를 국내 유치하여 개최 지원
- (국제표준화회의의 참가 지원) 국제표준 제안, 기술위원회 임원수입, ISO/IEC 국제표준화 정책 및 기술동향 논의, 양자/다자간 표준화 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학연 민간전문가 및 정부대표단의 국제표준화회의의 등 참가 활동 지원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대응, 4차 산업혁명 대비한 국제표준화 전략방안 도출 등 국제표준 및 국제표준화 협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진행
- (국제의장·간사활동지원)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내 민간전문가들이 국제적 역량을 인정받아 임원수입(국제의장, 간사, 컨비너)을 받아 우리의 국제표준화 역량을 강화 및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임원수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국제표준화 참가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WTO/TBT 협정

- WTO TBT 2.6조, 5.5조 WTO 회원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 WTO TBT 11.1조, 11.6조 WTO 회원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② 추진경위

- '95년 WTO 출범에 따라,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세계시장 진출과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02년부터 국내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정책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
- ISO·IEC의 국제표준화는 회원국간 합의와 투표(1국 1투표권)로 진행되며, 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SC), 작업반(WG) 회의 각국 전문가가 참여와 논의를 거치는 장기간(3~5년)이 소요되어 국제표준의 제안 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 협력도 중요
- 기술혁신 속도 변화와 융복합화로 개발기술의 호환성, 상호운용성, 안정성 등이 담보되는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최근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 현 정부도 국제표준화의 중요성과 인식 확산을 위해 '19.4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19.6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등을 마련하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민간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

*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제표준·인증혁신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02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표준협회	100	산업표준화법 제31조 등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 지원 : 515백만원

- 17회×약 21백만원(평균 1회 개최 임차비용) = 357백만원
- 통역비, 자료인쇄 등 운영 : 17회×약 3.5백만원 = 59백만원
- 주요국 표준 기관(ASTM, ASME, DIN) 자료구입 : 41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 지원장비(동시통역시스템) 구축 : 5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시 업무협력비 : 53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및 주요 국가(기구) 표준협력강화 지원 : 400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 86명×약 3.5백만원 = 302백만원
-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표준협력 : 28명×약 3.5백만원 = 98백만원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100백만원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3건 × 약 33.3백만원 = 100백만원

○ 국제 의장·간사 활동 지원(민간보조) : 900백만원

-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 : 196명×약 4.2백만원×100% = 822백만원
- 전문간사 인건비 : 2.5백만원×2명×12월×100% = 60백만원
- 의장간사협의회 및 워크숍 운영 : 9백만원×2회×100% = 1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건수 (단위 : 건)	목표	125	160	120	128	128	예산 증감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목표설정	당해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건수	국표원 내부 통 계자료 및 국제 표준화기구 홈 페이지 자료
	실적	139	212	126	145	-			
	달성도	111.2	132.5	105.0	-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건수 (단위 : 건)	목표	27	20	17	28	21	예산 증감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목표설정	당해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건수	국표원 내부 통 계자료 및 국제 표준화기구 홈 페이지 자료
	실적	27	26	18	32	-			
	달성도	100	130	105.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70개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2.9%(551개), IEC 66.5%(135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9,491건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5개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4.7%(559개), IEC 68.1%(139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9,488건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1개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4.2%(558개), IEC 69.6%(142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5,615건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75개('19.12월)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5.0%(565개), IEC 68.6%(142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2,183건('19.12월)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 진출 및 선점을 위해 민간 주도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 ISO·IEC 기술위원회 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등) 진출 및 신기술 분야 국제표준 제안 확대를 표준강국을 향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확대

* '18년 12월 기준(206명) : 국제의장(18명), 간사(28명), 컨비너(60명)

- '18년 「IEC 부산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ISO 이사국('19.8) 진출로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위상 제고되고,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회원국간 국제표준화 협력 강화 활동 전개

* ISO·IEC 상임이사국('18.12 기준) :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6개국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 ① 국가기술표준원내 표준담당과를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 수요조사(전년 11월)
- ②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계획 확정 및 각과 통보(12월)
- ③ 연중 사업시행 및 사업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1월-12월)

【보조금 수행】

- ① 보조금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1월)
-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1월)
-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연중)
- ④ 사업집행결과 정산 및 분석·평가 (12월-익년 1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4,458	2,105	2,316	2,547	2,547	
'19~'23		19.15	29.31	29.31	29.31	29.3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 상임위 결산검토 보고서 지적사항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활동 결과보고서를 표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이나, 검색 기능 등 보완 및 하여 활용성 제고 필요('16년도 결산 상임위 검토보고서_17.8)
- 「국제표준종합정보시스템(i-standard.kr)」을 구축하여 기능 보완 완료

2) 자체평가 등

- 통합재정사업평가 : '18년 “우수” ('16년 미평가, '17년 보통)
- 보조사업운용평가 : '18년도 연장평가(3년 단위) “정상추진”
 - 대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화하려는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 필요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우리나라는 2015년 「ISO서울총회」, 2018년 「IEC 부산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여 국제표준화 역량을 인정받고 있음
 - 다만, 선진국에 비해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고 국제표준화 기구의 주요 정책위원회, 기술위원회 임원 진출도 저조하여 국제표준화 주도에 한계
-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포함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기업들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이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에서 국내 전문가 활동은 물론 임원 진출 확대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주도를 위한 신규 국제표준 제안 확대 추진
- 산업부는 제조 4강국 및 표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향후 ISO 이사국, IEC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우리의 국제표준화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

* 現 ISO/IEC 상임이사국(6개국) :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최근, 세계 각국은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국가나 기업이 세계시장을 지배한다는 인식 하에,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 중
 -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정보통신(ICT) 분야의 강점을 살려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도 국제표준화 주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
-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표준화 활동 연속성 확보와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및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선점 전략」 추진을 위해 동 사업 예산 확대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2,298	2,298	-	-	-	-	2,298	2,279	99.2	99.2	-	19
2017	2,105	2,105	-	-	-	-	2,105	2,063	98.0	98.0	-	42
2018	4,458	4,458	-	-	-	-	4,458	4,448	99.8	99.8	-	10
2019	2,105	2,105	-	-	-	-	2,105	2,093	99.4	99.4	-	1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2,298	2,298	2,279	750	-	750	750	-	-	100
2017	2,105	2,105	2,063	750	-	750	750	-	-	100
2018	4,458	4,458	4,448	3,590	-	3,590	3,590	-	-	100
2019	2,105	2,105	1,330	900		900	900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6	○ 불용액 19백만원(집행잔액) - 일반연구비(260-01) 계약에 의한 차액(7백만원), 임차비(210-07) 계약차액(7백만원), 일용임금(110-03) 잔액(4백만원) 등
2017	○ 불용액 42백만원(집행잔액)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38백만원), 사업추진비(240-01) 일괄 절감액(5% 3백만원) 등
2018	○ 불용액 10백만원(집행잔액)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4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계약에 의한 차액(4백만원) 등
2019	○ 불용액 12백만원(집행잔액)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1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계약 차액(9백만원), 자산취득비(430-01목) 잔액(2백만원) 등

라. 기타 추가자료

- <붙임 1>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제표준화 정책 수립 현황('19년)
- <붙임 2>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현 주소('18년 말 기준)
- <붙임 3> 국제표준화활동지원 사업개요 및 그간의 성과
- <붙임 4>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조직 현황

참고 1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제표준화 정책 수립 현황('19년)

□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19.4.3,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 (추진배경)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17 발표)과 연계하여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표준화 전략 마련

* '18.9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차관)를 구성(100여명)하여 3개월 여간 의견수렴, 연구·분석 등 실시

- (추진목표) '30년까지 ① 수소 선도기술 15건 이상을 국제표준 제안, ② 충전소부품, 연료전지 제품 등 30건을 KS인증 품목지정

- (추진전략) 국제표준, 국가표준, 표준경쟁력강화, 국제협력기반 구축

구분	국제 표준	국가표준	경쟁력강화	국제협력기반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빌리티건설기계 등 분야 제안 • 에너지(연료전지, 수소공급 등 분야)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소부품, 연료전지 KS인증 지정 • '23년까지 수소충전기 법정 계량기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전문가 참가·육성 • 업계 주도의 표준화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국제표준포럼 개최('19.6) • 수소기술 ISO 총회('20) 등 협력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 ('19.6.2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의결)

- (추진배경)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초연결, 신산업 스케일업, 신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추진

- (추진목표) '23년까지 ① 신성장 동력 중점분야*의 국제표준 300종 개발, ②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60명 진출

* 전기·자율차, 수소에너지,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드론·해양 구조물, 스마트시티·홈,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스마트 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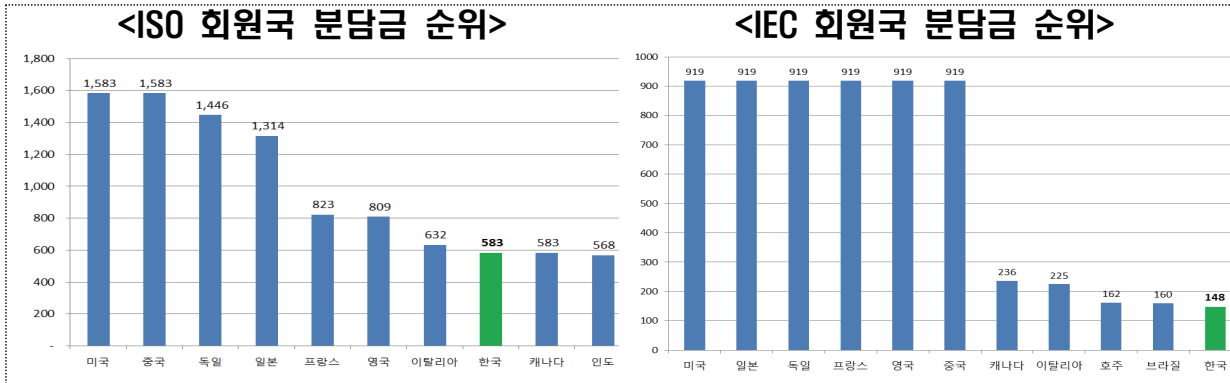
- (추진전략) 국제표준, 국가표준, 표준경쟁력강화, 국제협력기반 구축

구분	국제 표준 개발	추진체계 재구축	표준연계 강화	혁신기반 조성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및 서비스 표준 개발 • 데이터 및 5G 활용 표준 개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예산 및 표준정책 사전심의 • 표준기본계획 등 실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표준인프라 확산 • 다수인증품목 원스톱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연계 및 시험 장비산업 육성 • 기업대상 표준인력 양성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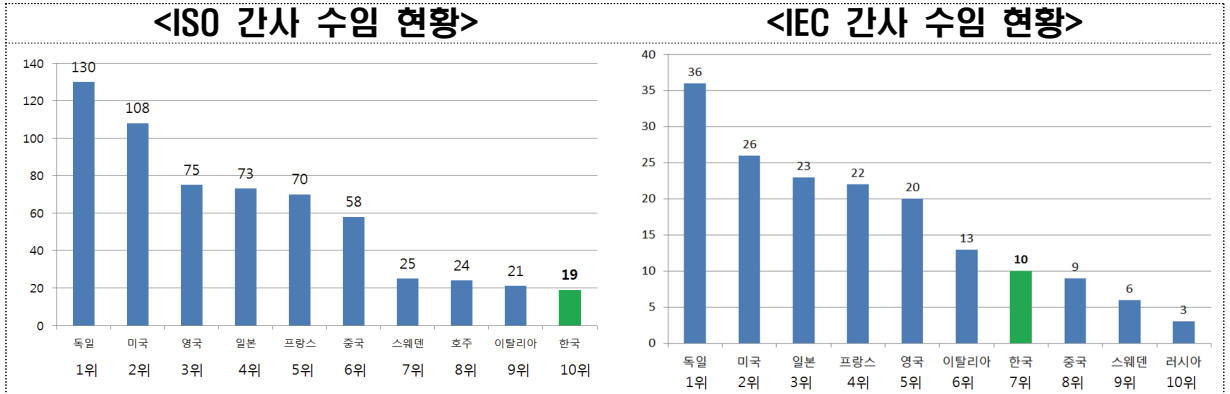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현 주소('18년 말 기준)

- (국가 순위) 우리나라는 양대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 평가에서 **ISO 8위, IEC 11위** ('18년 기준, 단위 CHF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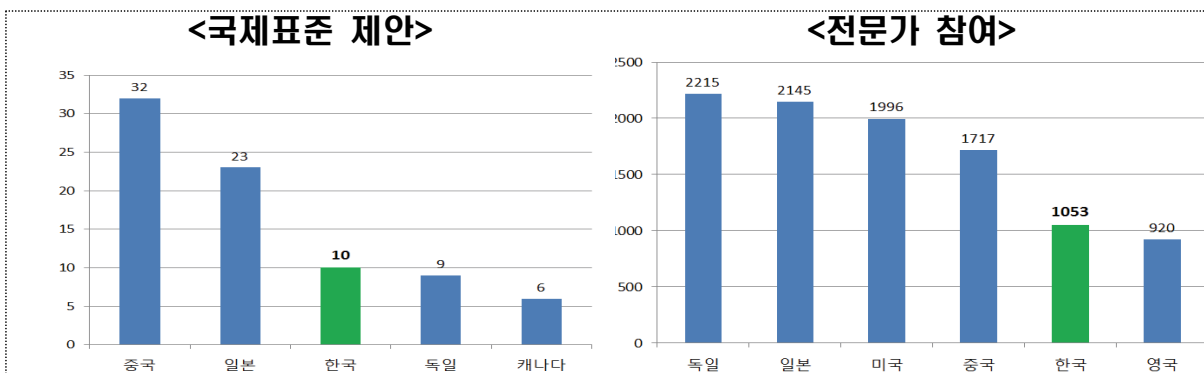


* <평가기준> (ISO) 분담금(60%)+간사수입(20%)+정회원률(20%) = 최종평가지수
(IEC) 인구, 국민총소득(GNI), 전력소비량으로 산출 = 분담금

- (간사국 수입) 실질적 국제표준화 활동 지표인 우리나라 국제 간사국 수입은 **ISO 10위, IEC 7위** ('18년 기준)



- (IEC 표준 제안 및 전문가 활동 참여) 최근 1년간('17.7~'18.6) NP(신규표준)제안 국가 **3위**, 전문가 참여 **5위**



참고 3

국제표준활동지원 사업개요 및 그간의 성과

- (사업경위 및 목적) WTO 체제 출범('95) 이후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02년부터 지원사업 추진

* WTO TBT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은 국제표준을 자국의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

- 우리 제품·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무역기술장벽 (TBT) 해소를 통해 세계 시장 진출 확대하는 한편,
-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화 대응 및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민간의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 (예산 현황) 국제표준 제안, 임원수입 및 표준화 협력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해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

- '19년 예산 2,105백만원 ⇒ '20년 예산 요구액 **2,931**백만원(전년비 39.2% 증)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시안(a)	요구(b)	증감(b-a)
□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	2,298	2,105	4,458	2,105	1,915	2,931	1,016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지원	836	555	368	705	515	711	196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지원	512	700	400	400	400	820	420
·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200	100	100	100	100	500	400
· 국제 의장·간사 활동 지원	750	750	750	900	900	900	0
· 2018 IEC부산 총회 개최	-	-	2,840		-	-	

- (그간의 성과) 양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세계 8위, IEC 세계 11위 달성

- ISO·IEC 산하 기술위원회(TC/SC) 954개 중 **698개**(73.2%)에 정회원 가입
- 임원수입 현황 ('18년말 누계) : **206명** (국제의장 18명, 간사 28명, 컨비너 160명)
- 국제표준제안 ('18년말 누계) : **994건** * '18년 81건(ISO 65건, IEC 16건)
- ISO·IEC 등록 국내 전문가 : **5,200여명** (ISO 4,000여명, IEC 1,200여명)

참고 4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조직 현황

기구별 현황

기구명	ISO (국제표준화기구)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설립연도	1947	1906	1865
담당분야	전기전자(IEC), 전파통신(ITU)을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	전기전자 기술 분야	전파통신 기술 분야
지위	비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회원국	162개국 (정회원 120 통신회원 39 구독회원 3)	171개국 (정회원 62 준회원 24 개도국회원 85)	193개 회원국 (약 80개 민간회원 학계전문가 100여명)
표준 수	21,991종	10,100종	5,707종
위원회 수	TC: 243개 SC: 505개 WG: 2,682개	TC: 104개 SC: 100개 WG: 568개	ITU-R, SG: 6개 ITU-T, SG: 11개 ITU-D, SG: 2개

국제표준화 필요성

세계시장 선점

무역 및 수출의존도가 높은 (GDP 대비 무역비율 104.2%)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을 통해 세계 시장 선점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무역기술장벽 대응

WTO/TBT 협정 제2조4항에 따라 수출 대상국은 국제표준을 자국 기술규정으로 채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기술의 표준 선점 실패 시 수출경쟁력 저하 불가피

환경규제 대응

우리나라 무역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은 각종 환경규제를 시행하여 우리 산업에 큰 부담, 따라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이러한 규제에 적기 대응하는 표준개발 필요

ISO/IEC 표준개발위원회 구조 및 의장 · 간사 · 컨비니 역할

TC (기술위원회)

SC (분과위원회)

WG (작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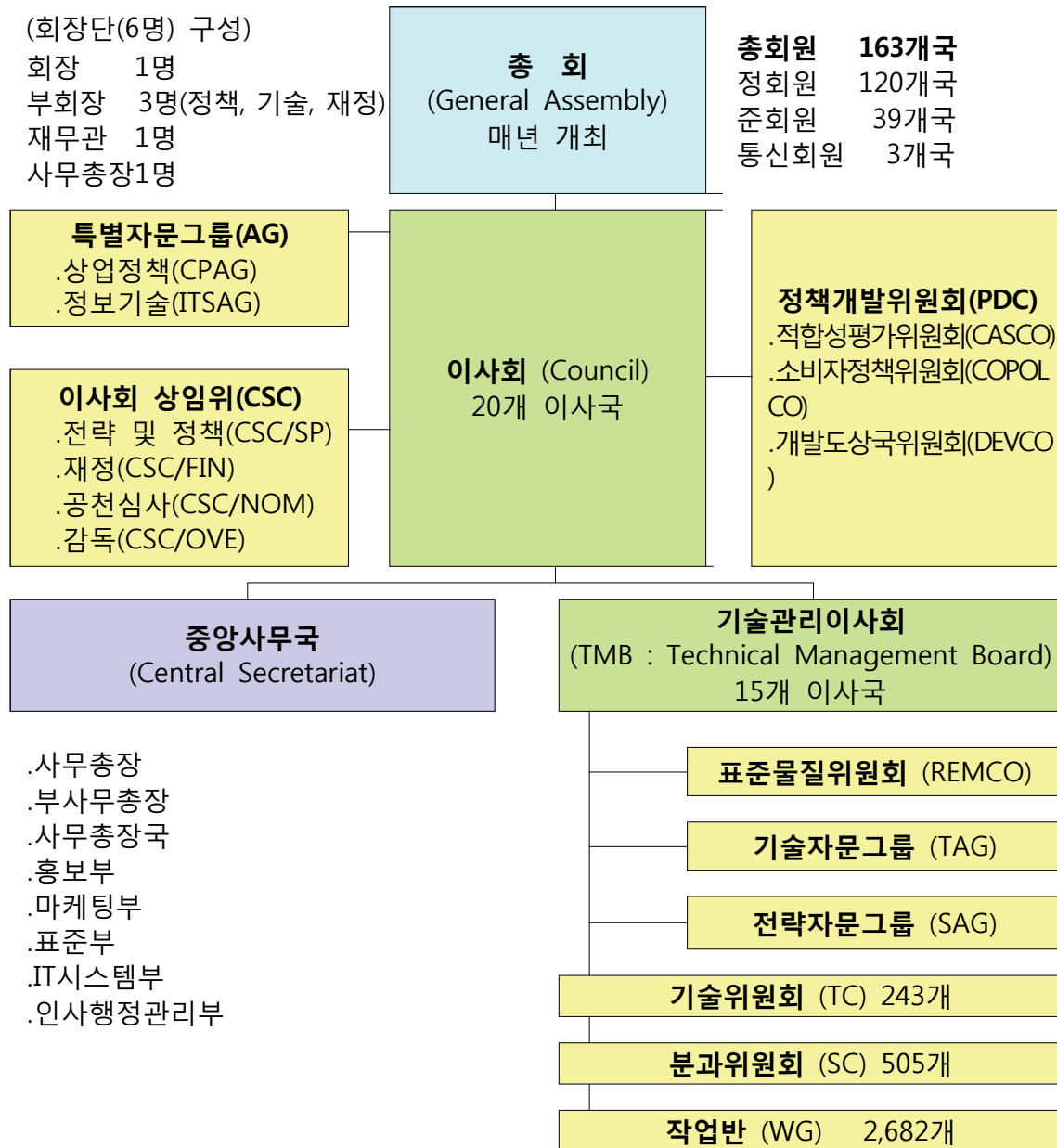
STRUCTURE

ISO/IEC는 기술 분야별로 TC를 설립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TC는 기술 분야를 세분화하여, 다수의 SC를 둘 수 있으며 표준안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기술 분야를 더욱 세분화 하여, 다수의 WG 운영 가능

OFFICERS

의장은 위원회 운영과 표준개발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간사는 위원회 내 개발하는 모든 표준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책임. 컨비니는 WG의 장으로서, 국제표준제안 및 개발을 주도하고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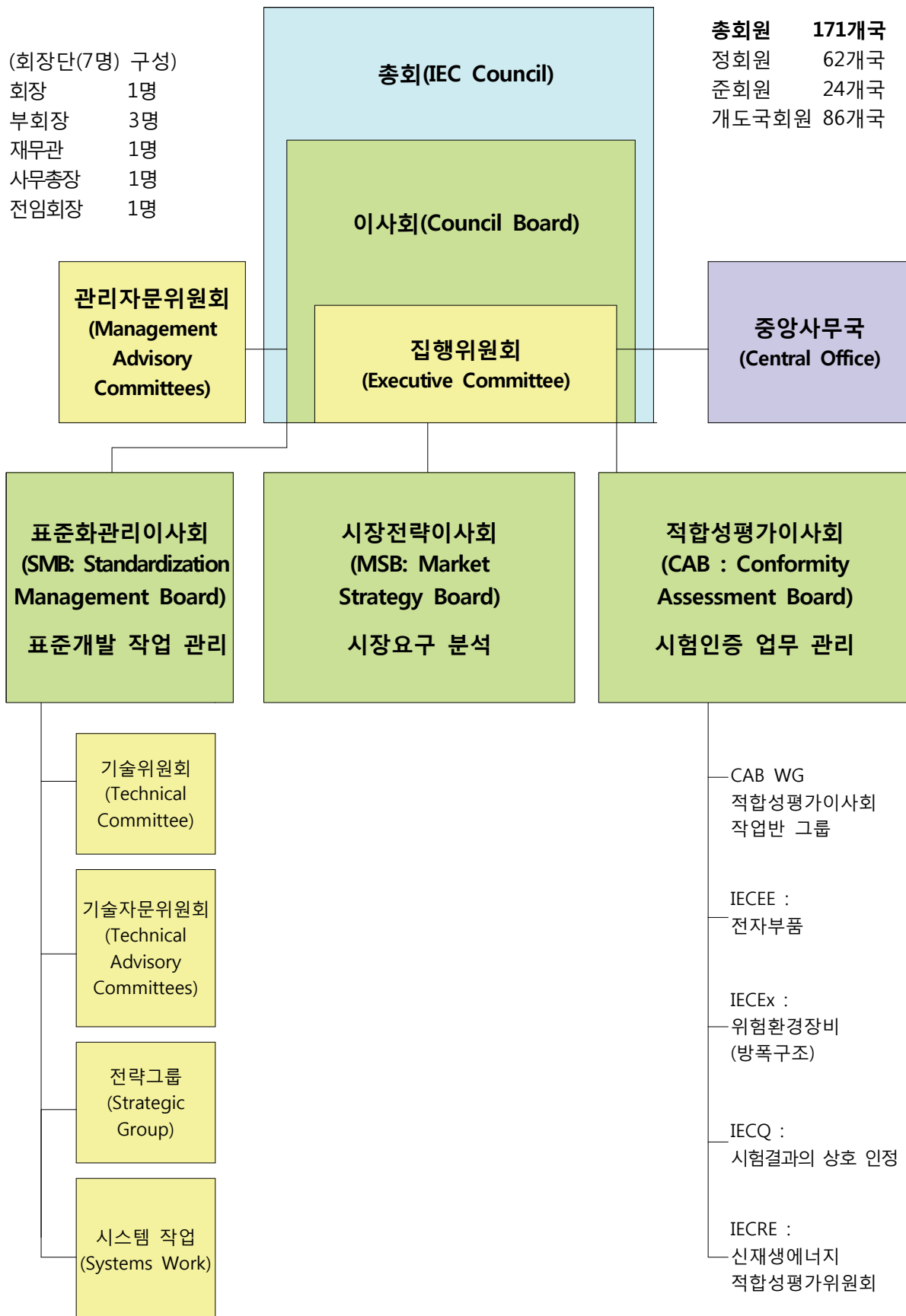
□ ISO 조직도



CASCO	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	(적합성평가위원회)
COPOLCO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소비자정책위원회)
DEVCO	Committee on Developing Country Matters	(개발도상국위원회)
REMCO	Committee on Reference Materials	(표준물질위원회)
TAG	Technical Advisory Group	(기술자문그룹)
SAG	Strategical Advisory Group	(전략자문그룹)

- ★ 국제 표준화기구 : 19개국 138명(10개 파트 26개 팀 정직원 138명)
- 사무국
 - 표준화 기술정책(7)
 - 적합성평가/소비자(3)
 - 개도국(1)
 - 교육/연구(1)
 - 재정/서비스(4)
 - 판매/통신/정보(4)
 - 전략계획/운영(1)
 - 인사(1)
 - 정보기술/전자서비스(1)

□ IEC 조직도



사 업 명 (3)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37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협력과	박재형	-	이종민
		043-870-5560	-	043-870-556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개도국표준체계보 급지원(ODA)	1,275	1,020	1,020	1,634	1,559	539	5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275	1,275	1,275	-	-	1,020	1,020	1,020	1,020 [1,020]	-	-	1,559
· 기술표준초청과정운영	295	295	295	-	-	-	-	-	-	-	-	-
· 표준체계전수협력	500	500	500	-	-	650	650	650	650 [650]	-	-	550
· 협력타당성조사	300	300	300	-	-	150	150	150	150 [150]	-	-	200
· 표준체계보급지원강화	180	180	180	-	-	220	220	220	220 [220]	-	-	-
· 마안마 섬유분야 국제 공인 시험센터 구축 지원	-	-	-	-	-	-	-	-	-	-	-	809
○ 비목별 분류(합계)	1,275	1,275	1,275	-	-	1,020	1,020	1,020	1,020 [1,020]	-	-	1,559
· 민간경상보조(320-01)	1,275	1,275	1,275	-	-	1,020	1,020	1,020	1,020 [1,020]	-	-	1,55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표준체계전수협력)

- 동 내역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자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표준, 인증제도, 법정계량 등의 표준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무상원조사업으로, 최근 급증하는 개도국의 기술규제를 완화 또는 사전대응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음

○ (협력타당성조사)

- 동 내역사업은 국내산업의 개도국 진출 수요와 수원국의 수요를 함께 만족시키는 무상원조사업의 발굴과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를 지원
- o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지원)
 - 동 내역사업은 국내 섬유기업이 다수 진출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미얀마의 섬유산업 발전과 현지 섬유기업의 시험·인증 애로해소를 위해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 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촉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WTO 출범 이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활동 강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2년부터 추진된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기적으로 개도국과 협력 사업을 진행
- 하지만 최근 개도국은 국가필수인프라의 표준인증체계의 부재로 불량제품 유통 등으로 인한 자국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무역활성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표준 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해외사업 확대 추진
 - * 우리 기업들도 개도국이 표준화, 적합성평가 등의 표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 직면
- 또한, 동 사업은 2010년 12월 21일 발표한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공익사업으로, '11년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승인되었고, 기재부의 요구의 따라 2012년부터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추진
 - * OECD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공여국이자,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 수입국으로써, 개도국에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체계를 보급하는 공적원조사업
- 2017년부터 국정과제 34번(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산업 발굴·육성)의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어 추진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공모 예정(2019년: 한국표준협회)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표준인증 관련 정부기관, 우리 수출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모	100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표준체계 전수협력** : 협력 대상국에 우리나라의 표준·인증체계(안) 전수를 위한 사업비 550백만원

▪ **미얀마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지원** : 150백만원

* 75백만원(2019년) → 150백만원(2020년)

* 섬유제품 수출입제도 개발 지원 51백만원: 수출입제도 개발 24백만원 + 자료조사, 설명회, 피드백을 위한 출장 12백만원(2회×2명×3백만) + 인력양성을 위한 초청프로그램 운영 15백만원(1회×5명×3백만)

* 섬유제품관련 표준개발 지원 33백만원: 표준개발 컨설팅을 위한 출장 18백만원(2회×3명×3백만) + 인력양성을 위한 초청프로그램 운영 15백만원(1회×5명×3백만)

* 수원국 만족도조사 및 사업 자체평가 실시: 15백만원

* 사업 운영비 51백만원(인건비, 행사지원 경비, 번역, 자문 회의비 등 직접사업비)

▪ **페루 법정계량 제도 및 제품안전제도 전수** : 150백만원

* 75백만원(2019년) → 150백만원(2020년)

* 전기전자제품 인증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55백만원: 인증제도 개선 컨설팅 및 현지 세미나를 위한 출장 30백만원(2회×3명×5백만) + 인력양성을 위한 초청프로그램 운영 25백만원(1회×5명×5백만)

* 국가표준시스템 역량강화 30백만원: 현지 세미나를 위한 출장 15백만원(1회×3명×5백만) + 인력양성을 위한 초청프로그램 운영 15백만원(1회×3명×5백만)

* 수원국 만족도조사 및 사업 자체평가 실시: 15백만원

* 사업 운영비 50백만원(인건비, 행사지원 경비, 번역, 자문 회의비 등 직접사업비)

▪ **키르기스스탄 섬유분야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제도 선진화 지원** : 100백만원

* 75백만원(2019년) → 100백만원(2020년)

* 섬유제품 시험·검사 역량강화 27백만원: 현지 세미나 등 인력양성을 위한 출장 18백만원(2회×3명×3백만) + 실무교육을 위한 초청프로그램 운영 9백만원(1회×3명×3백만)

* 섬유제품 제품안전제도 개선 27백만원: 현지 세미나 등 인력양성을 위한 출장 18백만원(2회×3명×3백만) + 실무교육을 위한 초청프로그램 운영 9백만원(1회×3명×3백만)

* 수원국 만족도조사 및 사업 자체평가 실시: 15백만원

* 사업 운영비 31백만원(인건비, 행사지원 경비, 번역, 자문 회의비 등 직접사업비)

▪ **에티오피아 섬유·가죽분야 표준·적합성평가 선진화 지원** : 150백만원

* 75백만원(2019년) → 150백만원(2020년)

* 섬유제품 시험·검사 역량강화 55백만원: 장비구축 컨설팅 및 시험·검사 교육 등 인력양성을 위한 출장 30백만원(2회×3명×5백만) + 실무교육을 위한 초청프로그램 운영 25백만원(1회×5명×5백만)

* 섬유제품 표준화 역량강화 30백만원: 현지 세미나 등 인력양성을 위한 출장 15백만원(1회×3명×5백만) + 실무교육을 위한 초청프로그램 운영 15백만원(1회×3명×5백만)

* 수원국 만족도조사 및 사업 자체평가 실시: 15백만원

* 사업 운영비 50백만원(인건비, 행사지원 경비, 번역, 자문 회의비 등 직접사업비)

- **협력타당성 조사** : 협력대상 국가의 표준·법정계량·시험인증시장 진출 세부 과제의 발굴·기획 및 협력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비 200백만원
 - **세부협력과제 기획 및 타당성조사** : 200백만원
 - *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라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과 다양한 분야의 표준·인증체계 등 기술규제 협력을 위한 과제 기획 및 타당성 조사
 - * 2개국 × 75백만원(2019년) → 3개 과제 × 66.7백만원(2020년)

-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지원** : 표준체계 전수협력 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미얀마 섬유 시험소를 국제공인기관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1차년도 사업비 809백만원
 - **국제공인시험능력 구축** : 188백만원
 - * 산출내역 : 현지실무교육 19.6백만원(4명×2주×1회×2.5백만) + 초청프로그램운영13.4백만원(12명×1주×1회×1.1백만) + 시스템 전산화 50백만원(연구개발비 40백만, 재료비 10백만) + 시험소 품질문서 개발 70백만원 + 장비 검·교정 20백만원 + 국제공인 자격 교육 15백만원
 - **시험장비** : 464백만원
 - * 산출내역 :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 또는 ICP 방출분광기 1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1대, 초순수 제조장치, pH 측정기, 후드 등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전처리 장치
 - **기술지원사무소 운영** : 24백만원
 - * 산출내역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14백만원(자료수집비 5백만, 전문가활용비 9백만) + 현지기업 기술지원 10백만원
 - **사업운영비** : 133백만원
 - * 산출내역 : 인건비 90백만원(4명×12개월×참여율) + 현지 사무소 인건비 23.1백만원 + 기관 운영비등 직접사업비 19.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대국 표준체계 제도도입 준비 및 완료 (단위: 건)	목표	5	6	7	7	7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연도 ODA시행 계획에 따른 협력 대상 국가 수를 감안하여 산출	ODA 협력국의 표준 제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제도 도입 건수	해당국 기관자료
	실적	5	6	-	-	-			
	달성도	100	100	-	-	-			
성과평가 종합점수 (단위: 점)	목표	-	-	-	11	11	종합점수가 '성공적' 등급으로 평가되는 11점을 기준	해당연도 성과분석 진행한 국가의 종합점수 평균	성과분석 및 수원국 만족도조사 보고서 등 「ODA 평가등급제 시행지침」 기준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 만족도 조사 양식 개발 및 시범적용('16.11-12) * 베트남, 미얀마 등 2개국 ▶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 및 사업성과를 공유·확산을 위해 동남아시아 대상 지역 협력포럼 시범개최('16.12.5-9, 국내전문가 및 협력대상 4개국 30여명 참석) ▶ (몽골) 에너지부 공무원 초청교육 실시('16.7.4-7.8, 13명), 에너지부 신재생에 너지센터 구축 지원을 위한 MoU 체결('16.12.1) ▶ (캄보디아) 섬유분야로의 협력 대상 및 분야 확대를 위한 섬유시장 조사 ('16.9.), 산업시험센터(ILCC) 담당자 초청 섬유 인증 세미나 개최('16.12.5-12.9) * (기존) 국립계량센터(계량분야) + (확대) 표준원(섬유분야) ▶ (방글라데시) 산업부 차관보 등 고위공무원 초청('16.11.9-17, 4명 참석), 국가표준역량진단 실시('16.11.26-12.1, 산업부, 표준원 공무원 참여), 법정계 량 및 제품안전 제도 선진화를 위한 표준인증 협력 타당성 조사 실시('16.3-12), 조사결과 공유를 위한 현지 기술 워크숍 개최('16.11.9-17, 표준원 공무원 20 여명 참석) ▶ (키르기스스탄) 섬유분야 한국형 표준·적합성 제도 전수를 위한 MoU 체결 ('16.6.10), 양국 간 표준 및 제품안전제도 공유를 위한 현지 공동 세미나 개최 ('16.10.12-13, 경제부 표준계량센터 공무원 25명 참석) ▶ (미얀마) 섬유 공동시험소 착공식 개최('16.11.19), 국가표준역량진단 실시 ('16.6.27-7.3, 과학기술부 연구혁신국 공무원 참여), 고위공무원 초청교육 실시(과 학기술부 연구혁신국장 등 5명('16.4.2-9.), 수출검사법(안) 마련 및 섬유제품 품 질관리 기술기준 제안('16.5-12), 한국 섬유분야 기술규정 관련 현지 기술 워크숍 개
------	--

	<p>최('16.11.6-11, 공업부 공무원 15여명 참석)</p> <p>▶ (파라과이) 계량 공동시험소 운영을 위한 MoU 개정·체결('16.12.5), 계량 공동시험소 개소식('16.12.6), 협력 성과 공유를 위한 현지 워크숍 개최('16.12.7, 국립계량기술표준원 공무원 20여명 참석)</p>
2017	<p>▶ 수원국 만족도 조사('17.10-12)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3개국</p> <p>▶ 개도국 표준·인증 발전 성숙도 지표(표준화, 인정/인증, 계량, 기술규제 분야) 개발</p> <p>▶ 주요 협력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제1회 동남아 지역 표준·협력포럼' 정식 개최('17. 11. 8, 국내 프로젝트 참여기관 및 전문가 및 협력대상 5개국 40명 참석)</p> <p>▶ (동남아 3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베트남 3국 주 협력기관 실무 공무원 초청('17.9.20-9.27, 6명)</p> <p>▶ (라오스) 라오스 표준인증체계 및 한국의 국가표준제도, 제품안전제도, 계량 측정제도 정보 공유를 위한 현지 공동 세미나 개최('17. 8. 28, 표준계량국 부국장 등 12명)</p> <p>▶ (베트남) 조작방지 주유기 이론(제도, 기술) 교육을 위한 현지 세미나 실시('17.7.27, 11.7, 표준품질총국 공무원 등 담당자 8명 참석)</p> <p>▶ (미얀마-건설) 한국의 건설자재 분야 표준체계 및 시험인증체계 소개를 위한 미얀마 건설부 소속 공무원 대상 초청교육 실시('17.9.18-22, 3명 참석)</p> <p>▶ (미얀마-섬유) 섬유 분야 품질관리 제도교육 세미나 개최(미얀마 공업부, 차관보, 국장 등 55명 참석, '17.7.25), 섬유제품 검사관련 실무급 대상 교육 세미나 개최(미얀마 공동시험소 총괄 책임자 등 49명 참석, '17.11.22)</p> <p>▶ (캄보디아-섬유) 섬유제품 품질 표시제도 및 관련 시험법 현지 세미나 개최(캄보디아 표준원 및 산업시험센터 실무급 공무원 65명 참석, '17.11.29), 섬유제품 품질관리체계 선진화 협력을 위한 MOU 체결('17.11.28)</p> <p>▶ (키르기스스탄) 제품안전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표원-경제부 간 MOU 체결('17.1.10, 경제부 차관 등 18명), 섬유분야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제도 전수를 위한 현지 세미나 개최(표준계량센터, 경제부 등 43명 참석, '17.8.9), 제품안전제도 선진화 지원을 위한 초청 교육 개최(표준계량센터 센터장 공무원 8명 참석, '17.7.10-7.15)</p> <p>▶ (ARSO) 아프리카지역의 국가표준인프라 수준 등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ARSO와의 공동연구 추진 및 성과공유 세미나 개최('17.11.28, ARSO 사무총장 등 10여명)를 통하여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아프리카 협력 재개를 위한 가나, 르완다, 잠비아, 카메룬 ARSO 회원 4개국('17.10.21-10.28, 6명 참석)</p>
2018	<p>▶ (미얀마-건설) 건설재료 표준 및 제도 수립을 위한 공동로드맵 구성(단기 1건, 중장기 1건), 미얀마 맞춤형 표준 제정 지원(기술자문회의 7회, 미얀마표준 제정을 위한 건설부 회의 4회, KS 제품표준 8종 및 인용표준 39종 현지화 지원), 표준 및 제도 전수를 위한 초청교육 실시)</p> <p>▶ (키르기스스탄-섬유)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제도 전수를 위한 현지 세미나 개최(표준계량센터, 경제부, 기업인 등 36명 참석, '18.6.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베트남과의 협력사업 증진 및 향후 우리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국표원-표준계량품질총국 간 MOU 갱신 및 '18년 Action Plan 합의('18.5.23, 표준계량품질총국 원장 등 4명), 계량기 정기검사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교육('18.6.13-6.19, STAMEQ 및 VMI 공무원 5명 참석) ▶ (에티오피아-섬유) 한국의 표준화·시험인증 및 계량측정 분야 전수를 위한 표준원 공무원 초청교육('18.3.3-3.8, 9명 참석) ▶ (페루)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관리제도 협력을 위한 국내 제도와의 차이점 등 분석, 페루 시험·인증기관 방문 및 한국의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소개 ▶ 주요 협력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동남아 지역 표준·협력포럼' 개최('18. 10. 23, 국내 프로젝트 참여기관 및 전문가 및 협력대상 5개국 40여명 참석)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라오스의 제품안전제도와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개발을 위하여 공동연구 2회 실시(한국, 5.28-6.4 / 라오스, 6.29-7.6) ▶ (미얀마-섬유) 미얀마 공업부 직원 대상 이화학 시험 및 섬유 완제품 검사 등 섬유분야 실무교육 1회 실시(미얀마, 4.1-4.5, 11명) ▶ (미얀마-건설자재) 레미콘 공장인증 제도 전수 및 기초 전자재 국제표준화 교육 1회 실시(미얀마, 6.24-6.29, 50여명) ▶ (페루)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관리제도 협력을 위해 제품별 에너지효율 및 소음에 대한 규격 등 전문가교육 2회 실시(페루, 4.4-4.11 / 8.12-8.16) ▶ (베트남-LED) 베트남 시험기관 대상 LED제품 신규 규제에 따른 유해물질 시험 및 분석 방법 교육 1회 실시(베트남, 6.16-6.18)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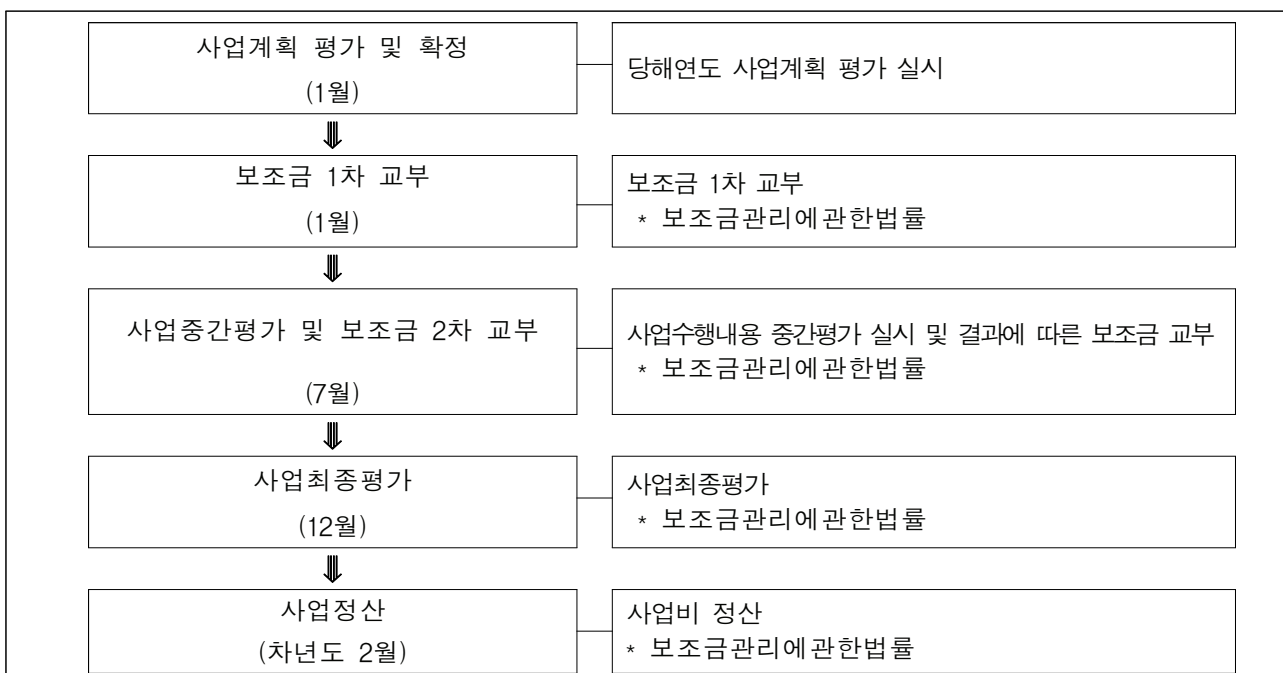
- ▶ 미얀마 섬유 공동시험소 기대효과
 - 현지 한국 섬유기업의 시험인증 관련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 *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수입하고 있는 섬유류 비중이 44%
 - * 시험성적서 인증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 한국 인증시험기관의 미얀마 진출
 - *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섬유 및 의류 시험인증시장 규모 735.4억원
- ▶ 아국 표준체계의 확산을 통한 사전 기술규제 대응 및 수출시장 확대 기대
 - 동남아, 중남미 등 표준 및 기술규제 공무원대상 초청교육과정 운영
 - *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표준·시험인증·계량 체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우리나라의 인증마크를 별도 시험인증 절차 없이 개도국이 수용하도록 추진
- ▶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아국의 거버넌스 강화

- 협력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국제표준 제안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제의장, 간사, 컨비너 진출확대 등을 통해, 표준강국으로 도약을 추진중
 - 우리나라는 동 사업의 국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 방향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ISO 이사국, ISO/TMB* 이사국, IEC 이사국, IEC/SMB* 이사국에 진출 추진
- * ISO/TMB(Technical Management Board), IEC/SMB(Standard Management Board) :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기술위원회 신설, 폐지, 통합 및 기술위원회 의장국·간사국 수임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1,275	1,000	1,000	1,000	1,000	
'19~'23		1,020	1,455	2,305	2,715	3,13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 2017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 (성과지표 보완필요) 수원국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계량화하여 성과지표에 반영할 경우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후속조치) 「ODA 평가등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수원국 만족도 설문조사 및 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평가한 최종 종합점수를 '19년 사업 성과지표에 추가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 한국형 제도 전수를 통해 개도국에 만들어지는 시험검사시장에 국내 시험기관의 진출하기 위해 제도전수를 통해 형성된 개도국과의 공감대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시험소, 시험검사 대행, 성적서 상호인정 등을 추진
 - * 개도국에 진출한 아국 기업이 수출시 외국에 의존하던 시험검사업무를 현지에서 실시하여 비용·시간을 절감,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 ▶ 지역별 표준화기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표준·인증체계를 전수하는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 * 협력 개도국이 속한 지역기구로 표준체계 협력을 확산(ARSO, ASEAN, Mercosur 등)
 - (1단계) 초청교육을 통해 우리의 표준·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2단계) 전문가방문을 통해 국가표준화능력 제고를 위한 기본적 컨설팅 제공
 - (3단계) 공동연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한 제도도입 지원 및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 ▶ 동 사업에서는 초청교육, 공동연구를 통한 제도컨설팅 등 표준·인증체계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 시험인증산업 진출을 위한 시험소 설립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KOICA 또는 EDCF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 특히 ODA 중점협력국 및 전략적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긴밀한 협력 사업 발굴을 확대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결과 : 예산감축 20% 편성 및 사업방식 변경
- 대책 : 1) '19년 예산 계획에 반영 (완료)
2) '19년 사업에 협력대상국 공무원 초청운영과정을 표준체계 전수협력 사업으로 축소·통합 (완료)
3) '20년 사업에 직접협력 사업 강화를 위해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지원' 내역사업 추가 (진행중)

13) 부처 건의사항

※ 동 사업에 지속적인 예산증액 필요

- 국가필수 인프라인 국가표준체계를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초청교육, 방문컨설팅, 정책협력포럼 등)은 개도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개도국으로부터 교육·협력사업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
 - 또한, 동 사업의 초청교육 등을 활용하여 개도국과 무역기술장벽(TBT)관련 대응시, 지렛대로 활용이 가능
- 동 사업은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개도국과의 협력확대를 위한 국가적 기술외교 업무
 - 특히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1국 1투표권 제도'로 인해,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하기 위해선 최대 우호국 확보가 관건
 - 이러한 개도국과의 표준체계 구축지원은 일회성 수익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국제협력 사업임
- ODA 중점협력대상 개도국 24개국을 포함하여 우리 전략 수출시장국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전개하여,
 -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화제도, 관련기술 및 인프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임
- 또한, 동 사업은 아세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국에서 급증하는 무역기술장벽을 사전에 제거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데 기여
- 한국의 新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의 FTA,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정책 이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FTA 체결 시 양국 간 TBT협정에 명시되는 기술규제 협력사항 등 실무이행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1,115	1,115	-	-	-	-	1,115	1,115	100	100	-	-
2017	1,200	1,200	-	-	-	-	1,200	1,200	100	100	-	-
2018	1,275	1,275	-	-	-	-	1,275	1,275	100	100	-	-
2019	1,020	1,020	-	-	-	-	1,020	1,02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1,115	1,115	1,115	1,115	-	1,115	1,115	-	-	100
2017	1,200	1,200	1,200	1,200	-	1,200	1,200	-	-	100
2018	1,275	1,275	1,275	1,275	-	1,275	1,275	-	-	100
2019	1,020	1,020	1,020	1,020	-	1,020	1,02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신규 내역사업 설명 자료

붙임1.

신규 내역사업 설명자료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시험센터 구축 지원]

- (규모) 1,700백만원 · (시기) '20년 ~ '22년 · (사업지역) 미얀마 양곤지역
- (주요내용) ① 섬유분야 시험장비 지원
② 국제공인 시험능력 구축(시스템 전산화, 품질문서 컨설팅, 인력양성)
③ 시험센터 내 기술지원 사무소 운영
- * 시험센터 건물은 미얀마측 제공(개발컨설팅 사업 기간 중 미얀마측에서 건물 완공)

□ 추진배경

- (배경)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전면 해제와 EU 및 미국의 GSP (일반특혜관세) 적용에 따라 미얀마가 섬유제품의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 중
 - * 미얀마 진출 섬유산업 기업 수가 3년간 약 2.5배 증가 : ('15년) 132개 → ('18년) 328개
- (필요성) 미얀마로의 우리기업 투자 증가*에 따른, 현지 진출 기업 지원 및 개도국의 미흡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미얀마 섬유 시험인증 시장 선점
 - * 우리의 미얀마 섬유산업 투자금액(전체 미얀마 투자 대비 비중) : ('16년) 14백만\$(3.7%) → ('18년) 28백만\$(13.1%)

□ 사업계획

- (1차년도)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서 갖추어야할 기초 시스템 구축 및 섬유 기술지원 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반 조사
 - (시스템 구축) 시험 실무능력 및 인증 시스템 교육, 품질문서 개발, 시스템의 전산화, 시험장비의 검교정
 - (기술지원 사무소) 산업현장에서 품질관련 애로사항 파악
- (2차년도) 국제공인 인정 요건 구비를 위한 시험장비 구축 등 시험 역량 강화 및 섬유 기술지원 사무소 운영 프로그램 개발
 - (시험역량 강화) 장비 구축을 통한 시험 및 분석 프로세스 수립, 자격

교육 실시, 비교 숙련도 시험 실시

- (기술지원 사무소)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지기업 컨설팅을 통한 품질관리 지원

○ **(3차년도) 국제공인 시험기관 지정 및 기술지원 사무소 운영**

- (국제공인 지정) 내부심사 및 보완,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 (기술지원 사무소)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 시설 구축

□ 기대성과

○ **(수원국) 미얀마의 국가 전략산업 중 유일한 제조업인 섬유분야에 국제규격에 대응 가능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

* 미얀마 10대 수출 품목 중 의류·섬유(2위)를 제외한 품목은 가스, 광물, 쌀 등 비제조 분야

○ **(한국) 글로벌 시험기관에 대항한 한국형 시험·인증 시스템의 미얀마 소비재 시험인증 시장 선점**

* 미얀마에 섬유를 포함한 소비재 시험소 부재

** 2017년 미얀마 섬유 분야 시험인증시장 규모는 1,400만\$이며, 미얀마 섬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향후 시험인증시장도 지속 확대 전망

*** 글로벌 시험인증 시장은 165조원('16년) 규모의 거대 시장

○ **(한국) 현지 진출한 국내 섬유기업 대상으로 원활한 시험, 검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검사 시료배송을 위한 비용 및 시간 절감**

- 현지의 섬유 시험인증기관 부재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시험 인증을 받기 위해 타국의 기관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현지 시험인증기관 설립을 통해 우리 기업의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타국 시험인증기관에 지불하던 비용의 수익화 가능

* 시험 1건 당 평균 운송 비용/시간: 4만원/48시간, 연간 시험건수 3,595건

* 향후에는 섬유분야 뿐만 아니라 소비재 제품에 대한 시험 서비스로 확장하여 미얀마 국민의 안전 및 보전에 기여

사 업 명
(4)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 (37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바이오화학 서비스표준과	김숙래	박해범	송경섭
		043-870-5390	043-870-5396	043-870-539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인인체치수 조사보급	873	1,544	1,544	2,039	2,039	495	32.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예산 안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89	889	873	-	16	1,544	1,544	1,544	1,519 (1,519)	-	25	2,039
· 인체치수측정사업	279	279	271	-	8	300	300	300	279 (279)	-	20.7	1,234
· 인체정보보급사업	610	610	602	-	8	424	424	424	420 (420)	-	4	300
· 인간빅데이터구축	-	-	-	-	-	820	820	820	820 (820)	-	0.3	505
○ 비목별 분류(합계)	889	889	873	-	16	1,544	1,544	1,544	1,519 (1,519)	-	25	2,039
· 시험연구비(210-13)	46	46	46	-	-	46	46	46	45 (45)	-	1.4	46.2
· 업무추진비(240-01)	3	3	3	-	-	3	3	3	3 (3)	-	-	2.8
· 일반연구비(260-01)	630	630	617	-	13	1,205	1,205	1,205	1,186 (1,186)	-	19.3	1,650
· 민간위탁사업(320-02)	210	210	207	-	3	210	210	210	206 (206)	-	4	300
· 자산취득비(430-01)	-	-	-	-	-	80	80	80	80 (80)	-	0.3	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체치수측정사업, 인체정보보급사업) 인체적합성이 우수한 제품과 생활에 필요한 인체치수, 인체형상, 인체활동 범위, 인지적 데이터 등을 조사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21세기 편안하고 쾌적한 대한민국을 위해 제품 기능 및 품질수준의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국제표준 제안 및 인체 정보가 반영된 KS 표준의 제정,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과 인간공학적 제품설계를 위한 활용 및 기술 개발 지원

- (인간빅데이터구축) 3차원 스캐너로 생성되는 개인의 디지털 인체정보를 통해 새로운 인간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글로벌시장 선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참조표준"이라 함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리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기술적 통계등을 말한다.

-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표준 참고자료를 제정·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기관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 및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 확인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통계법

-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계법시행령

-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법 제9조제1항 본문과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79년부터 : 의류치수 규격 마련을 위해서 '79년 처음으로 국민체위조사 실시한 이후 5~7년 주기로 4차례 측정 사업 수행

- '00년이후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격한 체형변화로 최신의 인체치수 정보와 3차원 인체형상 자료, 동적치수 정보 등 새롭고 다양한 인체치수 자료에 대한 산업계 요구 증가
- '03~'04년 : 전국 남녀(0~70세이상) 2만여명에 대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및 인체형상 측정 사업 실시 및 DB 구축
- '05~'09년 : ①한국인 인체정보 보급을 위한 홈페이지(sizekorea.kats.go.kr) 및 인체 표준정보실 개설과 관련 측정 정보 통계청으로부터 승인 통계로 지정
②장애인에 대한 인체치수 측정 등 과거 측정사업에서 측정하지 못한 분야를 측정사업 지속 추진 및 한국인 인체정보의 산업계 활용을 위한 보급 사업 지속 추진
- '10~'14년 :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과 동시에 유아부터 노인의 계층별 3D 인체형상 측정과 표준인체형상을 개발하여 보급
- '15~'18년 :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 및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동적 범위를 측정하였고, 인체치수정보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11종-안경, 스마트글라스, 머리범용, 학생용책걸상, 장애인 보조기기, 몸통범용, 안마의자, 기능성베개, 손범용, 욕실공간, 퍼스널모빌리티)을 개발·보급. 또한 3차원 인체정보를 활용한 휴먼 빅데이터 구축 전시회 및 포럼을 국회에서 개최('18.10.29, 국회의원 등 약 500명 참석)
*계층별 : 어린이(7~13세), 청소년(14~19세), 성인(20~39세), 중장년층(40~69세), 고령자(70~85세)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의류, 가구, IT서비스, 자동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인체관련제품 기업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인체치수 측정사업>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 1,234백만원
 - 측정 연구원 등 인건비 : 20명×7개월×3백만원=420백만원

- 측정경비 : 측정장비대여비(49백만원), 전산장비대여비(27백만원), 측정장소임차비(16백만원), 측정자교육비(8백만원), 재료비(10백만원), 여비(10백만원), 회의비(10백만원) = 130백만원

- 피측정자 사례비 : 11,400명×60,000원=684백만원

◆ 한국인의 인체치수변화를 5년 주기별로 대규모 조사·보급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주기 5년 도래*에 따라 그간의 전국민 체형변화 등을 조사하여 산·학·연에 최신 인체정보를 보급할 필요

* ('10) 6차조사→('15) 7차조사→('20) 8차 조사예정

○ 전국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자료*

* 최초승인년도 : 2005년, 승인번호 115019, 계속통계

- 통계법 제7조 등

※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2010년)

○ 한국인의 인체치수 133개 항목 조사(키, 앞은키, 가슴둘레 등)

- 조사기간 : 2015.5~2015.10

- 전국 5개 권역 : ①서울, ②경기·인천·강원, ③영남, ④호남, ⑤충청

- 측정표본수 : 16~69세 남녀 6,413명(남 3,192명, 여 3,221명)

- 조사결과 활용 : ①인체치수 활용 KS표준 제·개정, ②인간공학적 제품설계 기초자료, ③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체치수 자료제공 등

- 용역기관 : 서울대 산학협력단, 동서울대 산학협력단, 대구예술대 산학협력단

<인체정보 보급사업>

○ 사이즈코리아 센터 운영·관리 : 300백만원

- 운영인력 등 인건비 : 4명×9개월×4백만원=144백만원

- 운영경비 : 사이즈코리아홈페이지 및 전산장비유지관리(80백만원), 재료비(30백만원), 회의비(30백만원), 소모품비(10백만원), 장비대여비(6백만원) = 156백만원

◆ 사이즈코리아 센터 활성화를 통한 산업계 지원

사이즈코리아센터(구. 인체표준정보실)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정보 제공,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이즈코리아 홍보·교육·세미나 활동, 외국의 인체정보조사 및 정보교환, 인체치수 관련 대민업무*, 인체측정 및 데이터가공, 측정장비 무상대여, 체험존**운영

* 사이즈코리아센터 방문 : ('14)74건 → ('16)10건 → ('18)518건

** 스마트팩토리 체험(3D스캔을 통한 의류·장갑·신발 구매), 체지방 측정 체험, 수상작 관람 등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 3D스캐너로 생성된 개인의 디지털인체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 모델 및 서비스업을 조성하는 생태계 구축 : 505백만원

- 인건비 : 6명×7개월×4백만원=168백만원

- 개발경비 : 스캐닝존 구축 120백만원(3D스캐너 구입40, 운영환경·분석서비스 등 80), 체험존 구축 95백만원(운영환경·체험기기40, 가발·안경·장갑 기반 확대구축 55), 서비스용클라우드 102백만원, 홍보·회의비20백만원 = 337백만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시간 개인 인체정보측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주문생산, 상품 추천 등)를 제공하는 산업별 비즈니스체계* 구축 필요

◆ 두상 위주의 인체정보활용 맞춤형 비즈니스 구축 : 가발, 안경, 장갑

- 개발내용 : 고객맞춤형 주문제작 서비스 모델
 - 3D측정,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아바타생성, 가상서비스 연계
 - 주문 제작을 위한 치수 데이터 생성, 제조 연계(시범 운영) 가발추천(스타일, 사양 등, 시범 운영)
 - H/W(스캐너, 노트북 등), S/W(데이터관리, I/F)
 - 3차원 입체형상의 표준 데이터 플랫폼 개발 : 추천시스템 연동
- 개발형식 : 가발·안경·장갑 판매사, 제조사, S/W전문사, 총괄기관

◆ 부처협업사업

- (국방부 협업) 국방부 신병검사에 적용하여 맞춤형 군수품 지급에 활용
- (복지부 협업) 국민 정기검진시 종합병원과 협력하여 인체데이터 수집

(단위: 백만원)

구 분	'19예산	'20요구	증감	주요 변동내역
총 계	1,544	2,039	495	
① 인체치수측정사업	300	1,234	934	-
① 인체치수 측정사업	300	1,234	934	○ '20년 5년도래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를 위해 예산증액
② 인체정보보급사업	424	300	△124	-
① 활용가이드 개발 및 보급	214	-	△214	○ '20년 5년도래 국가승인통계조사를 위해 사업폐지
② 인체정보보급·확산	210	300	90	○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예산증액
③ 인간빅데이터구축	820	505	△315	
① 인간빅데이터구축	820	505	△315	○ '20년 국가승인통계자료 조사를 위해 예산 축소배정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국인인체정보 보급 건수 (단위: 건)	목표	4500	4950	5700	8,500	8,600	과거실적 및 증가추세 감안	Σ(보고서 다운로드수+ 인체정보 가공요청 건수)	국가기술표준원 내부통계 및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실적	5195	5677	8,411	6,680	-			
	달성도	115%	114%	147%	78.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동적측정 및 범보행 측정 · 한국인 인체치수 활용가이드(3종 : 머리분야, 학생용 책·결상, 휠체어)) 개발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377명) 동적측정 사업 · 한국인 인체치수 활용가이드(3종 : 몸체분야, 기능성 베개, 안마기) 개발 · 사이즈코리아 인체정보를 모바일에서 활용 가능한 앱 개발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령사회(2026년) 대비 고령자 인체근력 80개 항목 측정(406명) · 책자형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보급(손, 퍼스널모빌리티, 욕실공간) · 디지털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보급(11종-안경, 스마트글라스, 머리범용, 학생용책결상, 장애인 보조기기, 몸통범용, 안마의자, 기능성베개, 손범용, 욕실공간, 퍼스널모빌리티) · 3차원 인체정보를 활용한 휴먼 빅데이터 구축 전시회 및 포럼개최 (국회의원회관, '18.10.29~30, 국회 정성호·박정·김태년 의원 등 관람객 약500명 참석)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중심 시각 제품설계를 위해 '한국인 시각기능 측정 조사' 중 · 2020년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주기 5년 도래에 따라 전국민 체형조사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 중(2010년 6차조사 → 2015년 7차조사 → 2020년 8차 조사예정) · 인체정보 책자형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중(핸디형청소기, 캠핑용품, 다리 대상 제품) · 실시간 개인 인체정보측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구축을 위해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중(가발, 안경, 장갑)

③ 향후('20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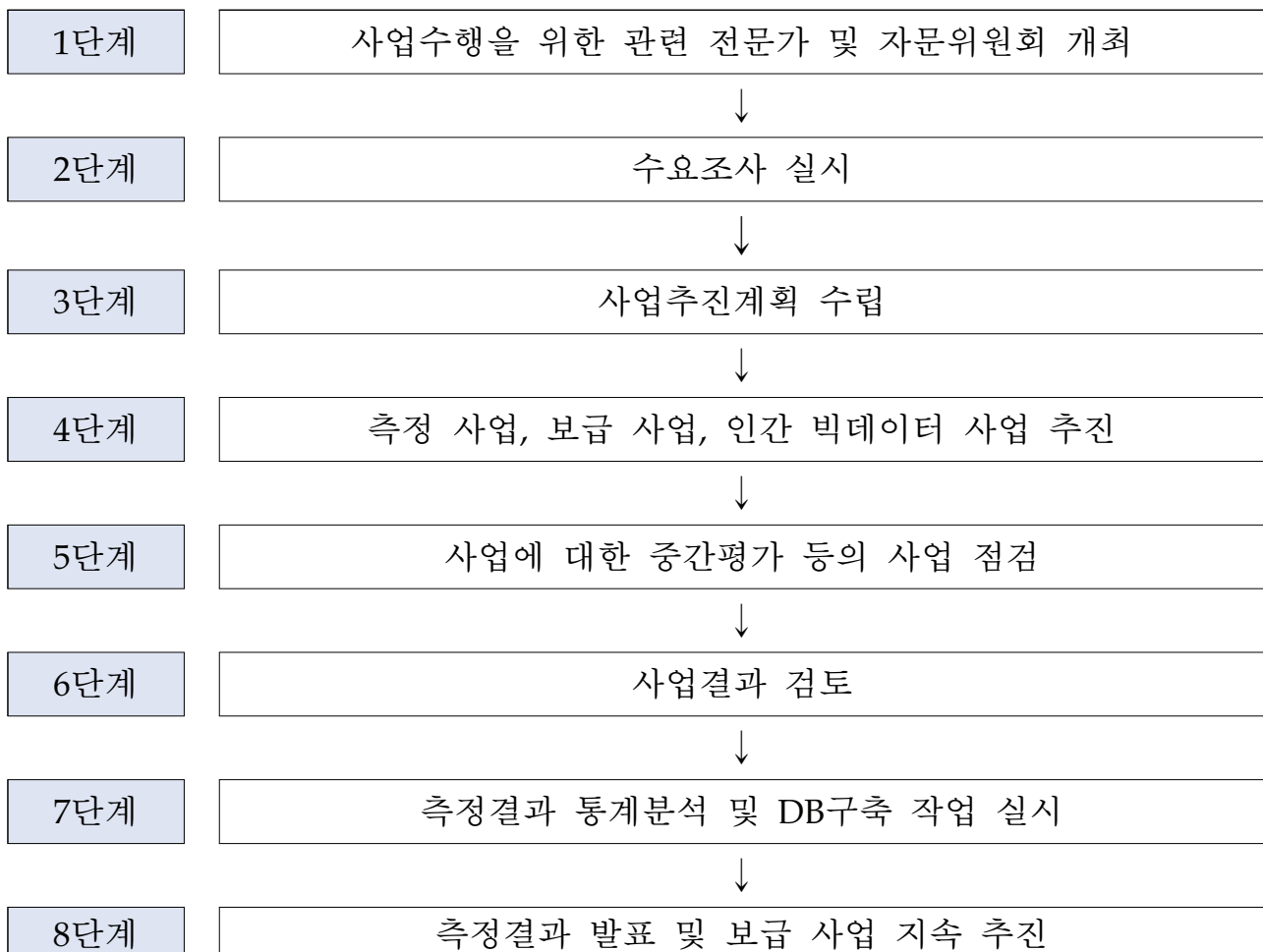
- 제품 설계에 필요한 인체치수정보 및 3차원 인체형상정보, 동적측정정보 등 종합적인 인체표준정보 DB 구축 및 주기적인 인체정보 업데이트 정보 제공
- 한국인 인체측정정보를 KS표준 제·개정에 이용하여 제품설계 등에 활용

-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매년 한국인인체관련 정보 보급 추진을 통하여 산업계가 인체 친화적 제품 생산 및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의류, 가구, 스마트폰, 자동차, 헬스케어, 유통산업 등 인체치수가 활용되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인체친화적 제품생산과 서비스 제공
- 3D스캐너로 생성되는 개인의 각종 디지털 인체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산업 창출
- 중소·중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제공으로 기술력·인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의 경쟁력 향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889	1,544	2,039	1,868	1,868	
'19~'23		1,544	1,698	2,344	2,34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측정사업

- 국제 기준에 상응하는 고품질의 한국인 최신 인체치수 및 산업계 인체형상정보 활용도 향상을 위한 기업 맞춤형 데이터제공 기반 구축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대한 측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사업 성장 도모
- 국가표준 및 산업규격의 설정을 위한 과학적 자료의 제공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미국, EU 등의 인체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수출 제품의 경쟁력 강화
- 2020년 5년 주기 제8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사업을 대규모 조사(11,400명 피측정자 예정)* 하여 최신 인체정보를 산·학·연에 보급

* 2010(6차 조사) → 2015(7차 조사) → 2020(8차 조사)

☐ 보급사업

- 인체치수정보 보급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산업체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정보 보급 및 활용기술 개발지원 활성화 추진
- Size-Korea DB 개선, 지속적인 기초 통계자료 제공으로 효율적인 DB 관리·운영 및 웹기반 User Interface 시스템을 개발
- 누구나 인체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DB 구축 및 관련 웹사이트 정비
- 측정된 인체정보를 이용하여 연령별 대표 체형, 특이 체형 정보 제공 및 관련된 규격에 최신 정보의 지속적 반영
- 미국, 유럽 등의 해외 인체치수정보를 확보·보급함으로써 현지인 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 산업군별 응용 통계 및 3차원 모형 제공 서비스 추진으로 연령, 성별에 따른 표준 인체 부위별 분석자료 및 3차원 모형 제공

- 산·학·연·관(軍 포함)의 인체표준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개인 인체정보를 3차원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각종 산업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 인간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맞춤 제품, 건강, 최적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등 인간 삶의 질 향상
- 3D스캐너로 생성된 디지털인체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신산업 창출 및 육성
- 초기 인간 빅데이터 사업은 민간에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국방부, 교육부 등 공공부문에서 추진 후, 민간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 조성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2020년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주기 5년 도래*에 따라 전국민 체형변화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필요
 - * 2010(6차 조사) → 2015(7차 조사) → 2020(8차 조사)
- 인간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1,095	1,095	-	-	-	-	1,095	1,042	95.2	95.2	-	53
2017	1,010	1,010	-	-	-	-	1,010	1,003	99.3	99.3	-	7
2018	889	889	-	-	-	-	889	873	98.2	98.2	-	16
2019	1,544	1,544	-	-	-	-	1,544	1,519	98.4	98.4	-	25

※ 이·전용 등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전부 포함하여 작성

2) 주요 결산사항

2016	- 조달 차액 및 집행잔액
2017	- 조달 차액 및 집행잔액
2018	- 조달 차액 및 집행잔액
2019	- 조달 차액 및 집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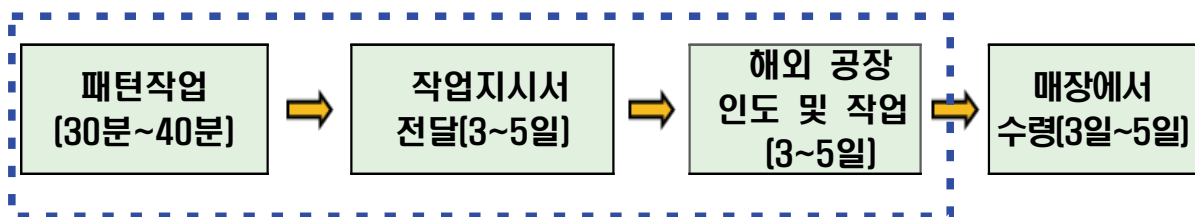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휴먼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예, 가발)

□ 기본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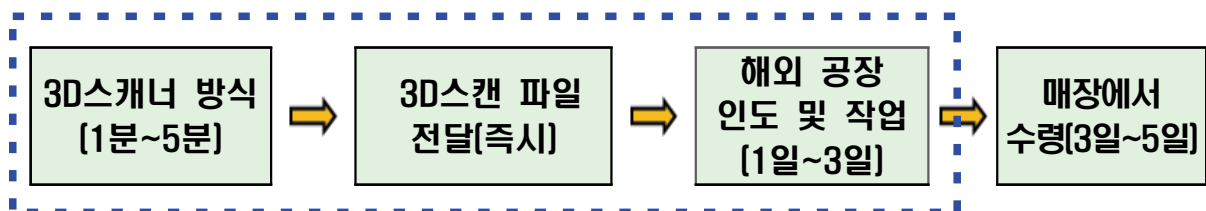
- (현행) 고객의 두상을 본 뜨는 패턴작업(30분), 작업지시서 등을 항공우편(3~5일)으로 해외공장에 보냄
- (문제점) ① 패턴작업시에 불가피한 오차 발생 ② 해외공장에서 발포제를 통해 두상형태 조각(작업의 고도화 필요 및 인건비 상승의 원인) ③ 작업지시서의 해외공장 왕복과정에서 많은 시간(약 7~10일) 소요



3D 스캔적용 前

□ 개선 프로세스

- (개선사항) ① 패턴작업의 불편함을 해소 ② 본래 해외공장에서 인도 후 발포제를 통해 두상의 형태를 조각하였지만, 3D스캔파일로 CNC선반 작업을 통해 정확하고 빠른 작업 가능



3D 스캔적용 後

□ 기대효과

- 생산 효율성 증대(20%) 와 납기일* 최대 7일 단축 가능
 - * 주문서 항공발송기간단축(3~7일), 항공택배비용 절감(약 10만원)
- 수요자의 편의성 제공 및 맞춤형 가발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
 - * 패턴제작의 지연 및 불편성 해소
- 가발사업 고급화에 따른 가발사업 인식 변화 및 관련 업계 활성화
- 두상 맞춤형 3D스캔으로 개개인의 두상 3D 데이터 축적

참고 2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현황

- ('79~'02년) '79년 정부주도로 "제1차 국민체위조사" 명칭으로 시작하여 5~6년 주기로 4차례 실시
 - * 측정데이터는 의류 · 신발 · 책상 · 의자 등 관련 한국산업규격에 활용
- ('03~'09년) '03년부터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Size Korea)”으로 명칭 변경하여 제5차 사업 실시
 - * 국가승인통계자료 : 통계법 제7조 등 '05년 통계청 승인(승인번호 115019)
 - * 직접치수측정 이외 3차원 인체형상측정 등 과학적 측정기법 도입
 - * 전국 남녀(0~70세이상) 2만여명에 대한 인체치수 및 3D인체형상 DB 구축
- ('10~'15년) 제6차(2010년) 및 제7차(2015년) 한국인인체치수조사 사업과 계층별 3D인체형상 및 3D표준인체형상 개발 사업실시
- ('16년~) 장애인에 대한 동적 범위측정하여 장애인 제품 및 시설설계 등 활용과 보행측정을 통한 패턴을 분석으로 동일인 검증에 활용

사업연도	표본수	연령층	측정항목
제1차 (1979)	16,000명	0-50세	117개
제2차 (1986)	21,000명	6-51세	80개
제3차 (1992)	9,000명	6-50세	84개
제4차 (1997)	13,000명	0-70세	120개
제5차 (2003)	14,200명	0-70세	125개
제6차 (2010)	14,016명	7-69세	139개
제7차 (2015)	6,413명	16-69세	133개

- * 계층별(5개) 3D인체형상 측정 및 표준형상 제작보급 : 성인(20~39세: '11년), 어린이(7-13세: '12년), 중장년층(40~69세: '13년), 청소년(14~19세: '14년), 고령자(69-85세: '15년)

<의료절감효과> 인체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국민의 근골격계 질환 진료비 절감효과는 연간 약1,525억원(4,550,890백만원×0.67×0.05) 추정 [2011년 (주)날리지웍스 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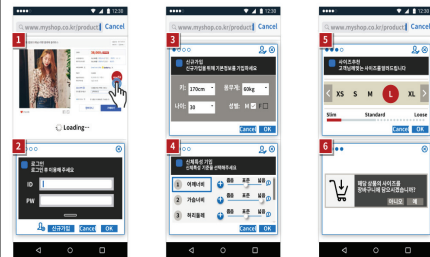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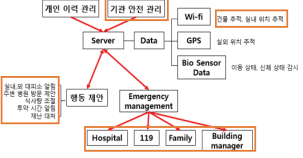
- 근골격계질환 관련 진료비 지출규모(2011) : 4,550,890백만원
- 인간공학적 설계적용을 통한 의료비 절감효과[미국의 작업안전위생국 자료(OSHA)] : 67%
- 인체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비 절감효과(관련전문가 추정치) : 5%

<산업적 효과> 인체치수 사업으로 100억을 투입할 경우[2011년 (주)날리지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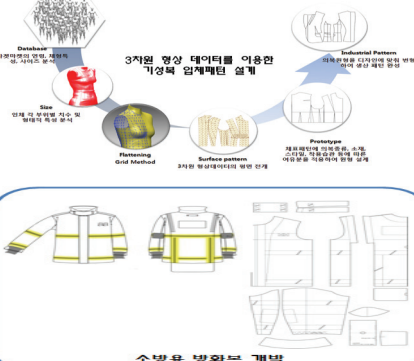
- 생산유발효과 : 158.3억, 부가가치 창출 : 108.7억원, 고용창출 : 36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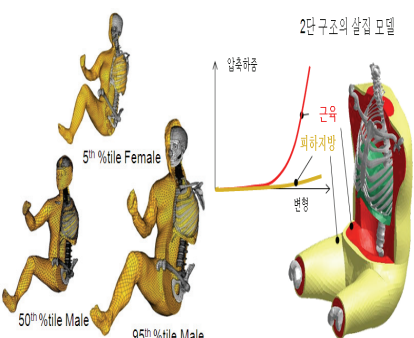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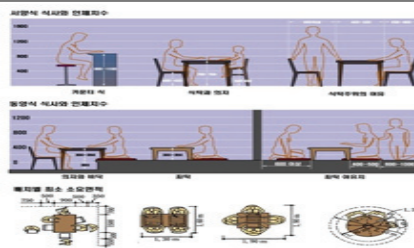
참고 3

한국인 인체치수데이터의 사업화 등의 활용사례

제목(사례명)	사업내용	사례 이미지
한국형 수동식 인공호흡기 개발	한국인 인체치수(안면부, 손과 손가락 치수)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형 수동식 인공 호흡기 개발	
한국인 체형 자전거	국민 자전거를 지향하는 뉴패러다임 자전거(한국인 체형과 색채정보 기반)	
개인 맞춤형 코디앱 개발	개인 맞춤형 뷰티 코디네이터(인체치수 체형을 고려한 운동 추천, 맞춤형 코디)	
인체치수 기반 의류사이즈 코디	my Fit (인체치수를 기반으로 한 의류 사이즈 추천 솔루션)	
인체치수 기반 체형관리	Shape Trainer(인체치수 분포도를 고려한 운동 목표 제안 및 관리 솔루션)	
인체치수 기반 헬스케어	1:1 Health Mate(인체치수를 고려한 운동 파트너 매칭을 통한 건강관리)	
인체치수 매칭 위험상황 알림	e-call 웨어러블 시스템 및 서비스(인체치수 분포, 웨어러블 기기와 위치 연계를 통한 위험상황 알림)	<p>- 세부 시스템 구조</p>  <p>기관 안전관리: 국가적 자원의 전쟁, 재난, 재해, 질병 정보 전파 목적 위치정보: 공공 WiFi, 건물 별 발달 WiFi 들의 IP주소 관리로부터 사용자 위치 예측 행동 제한: 사용자 주변 병원, 대피소 안내, 길 찾기, 개인 이력으로부터의 스케줄링 응급 상황 대비: 병원, 119, 경찰, 건물 관리자, 응급출동 서비스사 등에 긴급상황 발생시 출동 요청</p>

제목(사례명)	사업내용	사례 이미지
냉장고 활용사례	사용자들(어린이, 성인, 노인 등)의 근력을 고려하여 “이지도어”기능을 적용하고, 눈높이에 맞게 수납공간 배치	
자동차 운전자 팔의 이동범위 활용사례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화면위치를 선정하고, 최적의 조작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핸드 리치 존(Hand Reach Zone)을 고려하여 스위치 설계	
세탁기 인체치수 활용사례	주부들의 허리와 무릎의 충격을 완화하여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높이 설계	
휴대폰 손가락의 범위 활용사례	엄지손가락의 구조적 치수와 기능적 치수(3차원 동작범위)를 고려하여 한손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아이폰 UI 설계	<p>엄지손가락 도달 범위 비교</p> 
국민근로 복지공단 고령자제품 치수적용	<p>국민건강보험 복지용품 설계 및 제조 시 요구 인체측정항목</p> <p>- (적용품목) 자세변환용구, 침대, 휠체어, 간이변기, 배회감지기, 대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등</p> <p>* 누운 자세, 앉은 자세, 선 자세, 발 인체측정자료 사용 복지용품 설계 활용사례</p>	

제목(사례명)	사업내용	사례 이미지
자동배변기 치수적용	자동배변기 제조에 요구되는 인체 치수 항목을 제시하여 설계에 활용	
안경 개발	안경분야는 한국인인체치수를 적용한 청소년용 안경 2종 개발 및 출시 [* 2015년 11월 출시 후 6개월 간 약 1억원 매출(약1만개 판매)]	
스마트 글라스 시제품 개발	스마트글라스의 경우 한국인 인체 치수를 이용한 인체공학적 실험을 통한 적정 무게 도출을 통해 스마트 글라스 디자인 개발하여 제품 출시 * 스마트글라스 제품출시(CHEMI-ON)	
가구전문 업체의 주변공간과의 조화를 예측하는 시스템	가상공간을 이용한 가구제품과 인체형상과의 조화 등에 대한 예측 시스템 활용	
손스캔을 이용한 맞춤형 장갑제작	맞춤형 장갑 제작을 위한 인체 측정·제작·배송의 일원화 시스템 <div data-bbox="558 1332 989 1534"> <p>고객 측정방문 (핸드 스캐너) → 고객의 취향에 따라 옵션 선택 (가죽/아나일 /피팅성/스타일) → 제품 생산방 작업지시서 전송 (인터넷 연결 온라인) → 맞춤형 글프장갑 적용 → 고객 배송 (주문부터 배송완료까지 최대 7일 소요) → 작업지시서를 통한 맞춤형 글프장갑 제품 생산 (1:1 대응 시스템) → 맞춤형장갑 제품 불량시 무한 A/S</p> </div>	<p>맞춤 장갑 개발 / 적용분야</p> 
3차원 형상 데이터를 이용한 기성복 입체패턴 설계	3차원 형상 데이터를 평면전개하여 2차원적 체표패턴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인체를 분석. 인체의 동작에 따른 체표면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의복 패턴에 적용하여 동작시의 인체 변화를 반영한 의복 패턴 설계	

제목(사례명)	사업내용	사례 이미지
의류용 더미 개발	3D 인체형상을 이용한 의류용 더미 개발	
인터넷 쇼핑	유비쿼터스 시대의 인터넷 매장을 활용한 쇼핑사례 (모바일 폰으로 자신의 디지털아바타가 인터넷, 잡지 등의 의류등을 착용하여 구매)	
디지털 인체 모델을 활용한 시트 컴포트 적용	자동차 시트에 착좌 시 발생하는 기계적인응력 변형 등을 분석/피부, 피하지방, 골격근 등을 상세하게 모델링하여 높은 정밀도의 체압 분포 해석이 가능	
동작특성을 반영한 건축설계	동작 특성을 반영한 생활공간의 효율적 구성 및 편의성 향상 가능 ※ 특히 어린이 및 노인 대상 시설에 필요	
인체치수를 활용한 가구설계	인체치수를 활용하여 사람의 움직임에 최적화된 가구 설계	

사 업 명						
(5)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37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적합성평가과	임헌진	이도영	김도혜
		043-870-5490	043-870-5473	043-870-549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제적합성 평가기반구축	2,309	2,551	2,551	4,572	3,088	537	21.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309	2,309	2,309 (2,302.4)	-	6.6	2,551	2,551	2,551	2,551 (2,537.89)	-	13.11	3,088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02	802	802 (802)	-	-	802	802	802	802 (796.33)	-	5.67	762
· 국제동등성유지, 국제 상호인정기반구축	528	528	528 (521.6)	-	6.4	542	542	542	542 (541.63)	-	0.37	792
· 국제시험인증제도 기반구축	556	556	556 (555.8)	-	0.2	534	534	534	534 (526.93)	-	7.07	397
·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지원	423	423	423 (423)	-	-	673	673	673	673 (673)	-	-	1,137
○ 비목별 분류(합계)	2,309	2,309	2,309 (2,302.4)	-	6.6	2,551	2,551	2,551	2,551 (2,537.89)	-	13.11	3,088
· 일반수용비(210-01)	110	110	110 (109.9)	-	0.1	193	193	193	193 (192.73)	-	0.27	326.9
· 임차료(210-07)	20	20	20 (19.8)	-	0.2	20	20	20	20 (20)	-	-	42
· 재료비(210-11)	-	-	-	-	-	15	15	15	15 (15)	-	-	14
· 시험연구비(210-13)	15	15	15 (15)	-	-	-	-	-	-	-	-	-
· 국내여비(220-01)	10	10	10 (10)	-	-	8	8	8	8 (8)	-	-	8
· 국외업무여비(220-02)	58	58	58 (54.7)	-	3.3	38	38	38	38 (37.9)	-	0.1	79
· 사업추진비(240-01)	16	16	16 (16)	-	-	16	16	16	16 (16)	-	-	14.1
· 일반연구비(260-01)	1,290	1,290	1,290 (1,287)	-	3	1,193	1,193	1,193	1,193 (1,180.26)	-	12.74	1,091
· 민간경상보조(320-01)	440	440	440 (440)	-	-	418	418	418	418 (418)	-	-	397
· 사업출연금(350-02)	350	350	350 (350)	-	-	650	650	650	650 (650)	-	-	1,1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공인기관 시험결과의 국제상호인정협정(ILAC/APLAC-MRA) 체결 및 국제 동등성 확보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 지원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내 공인기관의 성적서가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되기 위해 공인기관의 시험능력 확보를 위한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국제동등성유지·국제상호인정기반구축)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MRA)* 확보 기반 구축
-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각국의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국제적으로 상호인정
- ** 지속적인 국제상호인정협정(MRA) 유지를 위해 해당지역기구로부터 4년 주기로 국제 동등성 평가 실시
- (국제 시험인증제도 기반구축) 공인시험·인증제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시험·검사, 제품인증 등 국가인정체계 지원 및 ISO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지원) 신산업 시험인증분야 발굴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국가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4.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그 유지·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 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9. 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 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조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자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4이전 : 국내기업들이 BSI(영국표준협회), 로이드 선급협회 등 외국계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0인증 획득
- '94이후 :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 법적 근거 마련 및 구축. 공업진흥청에서 ISO 9000인증 업무 수행
- '97.05. : ISO 9000인증 관련 업무 위탁(한국인정원, KAB)
- '00.09. :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01.01. : ISO 9000인증 관련 업무 완전 이양(한국인정원)
 - * 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도 권한만 법에 존치
- '02.03.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12. : 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 수립(장관 보고)
- '04.02. : “차세대성장동력 관련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시장 선점” 산자부 업무보고
- '04.04.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4.05. : 권역별 종합교정기관 육성대책 수립(장관 보고)
- '04.06. : 계량측정분야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07. : 국가측정표준의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12. : 제2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수립(장관 보고)
- '05.12.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인증기관의 “인증현황보고” 제도 도입('06.12월 시행)
- '07.12. : ISO 9001/14001 인증제도 관리업무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09.12. :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정 고시
- '10.04. : 국민권익위원회,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 권고
- '12.05. : 국가단일인정체제 구축방안 보고(장관 보고)
- '12.07. :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VIP 보고)
- '13.08. : 서비스산업 발전(국정과제 14)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13.7.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세부과제로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추진
- '14.01.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14.04. : '2015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
- '14.12. : '14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15.03. : '2015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15.07. : '15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16.02. : '2016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16. 7. : '16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17. 2. : '17년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17. 7. : '17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18.10. : '18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3개 과제 지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출연금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직접수행), (재)한국인정지원센터(민간경상보조),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출연금)
- 사업 수혜자 : KOLAS(시험, 교정, 검사, 메디컬, 숙련도), KAS(제품인증제도), ISO 인증 활용기업·소비자·정부·공공기관·연구소 등 제품성적서·기업인증서를 활용, 수출하는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한국인정지원센터	100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762백만원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숙련도시험을 위한 표준물질 구입 및 기술위원회 운영 등
(단위 : 백만원)

비 목	년도	금액	산출내역	내 용
일반수용비 (210-01)	'19	30	(10명×0.15백만원)×20회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 수당
	'20	28	(10명×0.143백만원)×20회	
재료비 (210-11)	'19	15	3백만원×5건	표준물질 구입
	'20	14	2.9백만원×5건	
국내여비 (220-01)	'19	7	0.19백만원×35회	숙련도시험 평가관련 여비
	'20	7	0.19백만원×35회	
일반연구비 (260-01)	'19	750	30백만원×25건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20	713	29백만원×25건	
합 계	'19	802		
	'20	762		

② 국제동등성유지, 국제상호인정기반구축 : 792백만원

- 국제동등성 유지를 위한 인정기구 운영, 국제동등성 평가 수검 대응 및 상호 인정협정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단위 : 백만원)

비 목	년도	금액	산출내역	내 용
일반수용비 (210-01)	'19	163	63 : (0.15백만원×10명)×42회	인정위원회(시험·교정·검사 등) 수당
			100 : 4백만원×25건	국제문서 번역 및 자료인쇄 등(운영기준, 국제지침서 등)
	'20	298.9	129 : (0.15백만원×10명×86회)	인정위원회(시험·교정·검사 등) 수당
			120.9 : 120.9백만원×1건	국제문서 번역(운영기준, 국제지침서 등), 법률자문 및 인정위원회 개최 지원 등
			40 : 1.33백만원×5명×6일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동시통역비
임차료 (210-07)	'19	10	10 : 10백만원×1회	국제동등성 평가수검대응, 평가사 교육 등
	'20	42	20 : 5백만원×4회	세계인정의 날 개최 및 평가사 교육 개최
			22 : 22백만원×1건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회의장 및 차량 등 임차
국외여비 (220-02)	'19	36	36 : 3백만원×2명×6건	IAF/ILAC, APLAC/PAC총회 등 국제 회의 참석

	'20	77	48 : 3백만원×2명×8건	IAF/ILAC, APLAC/PAC총회, 이사회 등 국제회의 참석
			29 : 5.8백만원×5명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평가반 여비
사업추진비 (240-01)	'19	-	-	-
	'20	14.1	(0.03백만원×17개기관) ×3개분야×9회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방안 협의
일반연구비 (260-01)	'19	333	30백만원×11건	적합성평가분야 국제표준 부합화 규정정비
	'20	360	30백만원×12건	국제동등성 유지 및 국제기구 개편에 따른 운영기준 정비
합 계	'19	542		
	'20	792		

③ 국제시험인증제도기반구축 : 397백만원

- ISO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및 시험·검사, 제품인증 등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 '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동 내역사업에 포함된 사업추진비, 일반연구비 및 임차료는 '국제동등성유지·국제상호인정기반구축'으로 이관

(단위 : 백만원)

비 목	년도	금액	산출내역	내 용
임차료 (210-07)	'19	10	5백만원×2회	국제인정동향 세미나 개최 등
	'20	-	-	-
사업추진비 (240-01)	'19	16	(0.03백만원×20개기관) ×3개분야×9회	시험·인증발전, 단일인정기구 구축, 부정 성적서·인증서 방지, 국제수검 등 협의
	'20	-	-	-
일반연구비 (260-01)	'19	90	30백만원×3건	적합성평가분야 제도개선 연구
	'20	-	-	-
민간경상보 조 (320-01)	'19	418	118백만원×1건	ISO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300백만원×1건	시험·검사, 제품인증, 경영시스템 등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20	397	112백만원×1건	ISO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285백만원×1건	시험·검사, 제품인증, 경영시스템 등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합 계	'19	534		
	'20	397		

④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지원 : 1,137백만원

- 유망 제품의 적합성평가 지원을 통한 인증서비스 개발 사업 및 경쟁력 강화 시책 마련

(단위 : 백만원)

비 목	년도	금액	산출내역	내 용
국내여비 (220-01)	'19	1	0.2백만원×5회	시험인증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20	1	0.2백만원×5회	시험인증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국외여비 (220-02)	'19	2	2백만원×1명×1회	시험인증서비스 수출지원 조사
	'20	2	2백만원×1명×1회	시험인증서비스 수출지원 조사
일반연구비 (260-01)	'19	20	20백만원×1건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
	'20	18	18백만원×1건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
일반출연금 (350-02)	'19	350	175백만원×2건	유망시험인증서비스 발굴 및 시범사업비
		300	6백만원×50명	시험인증산업 현황과약 및 기초인력확보
	'20	831	166.2백만원×5건	유망시험인증서비스 발굴 및 시범사업비
		285	5.7백만원×50명	시험인증산업 현황과약 및 기초인력확보
합 계	'19	673		
	'20	1,137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숙련도 프로그램 평균 이용 기업 수(개)	목표	30	40	40	40	40	최근 3년간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 건을 고려하여 산출	당해연도 총 숙련도 프로그램 참여기관 수/총 숙련도 프로 그램 운영 건수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통계 및 학술 연구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
	실적	36	43	43	-	-			
	달성도	120	107	107	-	-			
숙련도 프로그램 합격률(%)	목표	85	95	78	79	79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들의 만족 여부를 감안	[숙련도프로그램의 합격기관 수/숙련도 프로그램 참여기관 수]×100	숙련도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실적	94	76	87	-	-			
	달성도	110	80	111	-	-			
부실인증 처분율(%)	목표	75	80	100	100	100	최근 3년간 부실인증 최종확인 건수와 해당 부실 인증에 대한 국내외 시험 인증기관의 처분 건수를 감안하여 설정	부실인증 최종 확인 건에 대한 국내외 인증기관의 처분 건수 / 부 실 인 증 최종확인 건수×100	ISO 인증현황 보고 시스템(ICIS) 및 해당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
	실적	100	100	100	-	-			
	달성도	133	125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시험, 교정, 메디컬 등 시스템별 숙련도시험 등 31건 • KOL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2016년 APLAC-MRA 동등성평가 수검 및 시정조치를 위한 제도정비 등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메디컬분야(간염진단 등) 숙련도 시험 등 30건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 시험, 교정, 메디컬 등 시스템별 숙련도시험 등 31건 운영 • K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2018년 PAC-MLA 동등성평가 대응을 위한 KAS 품질문서 정비 및 영문화 등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의약품 중 보존제(벤조산) 함량 시험 등 25건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 메디컬분야(간염진단 등) 숙련도 시험 등 30건 운영 • K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KAS 운영요령 문서 5종 개정('18.2월, 12월) - 2018년 PAC-MLA 동등성평가 수검완료('18.5월) • 국제기구(ILAC)의 자격기준 강화에 따른 국내 공인시험·교정기관(800여개) 시스템 개편 준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단열재의 열전도율 숙련도시험 등 25건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시험, 교정, 메디컬 등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22건 운영 • KOLAS/K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KOLAS) 2020년 APLAC-MRA 동등성평가 대응을 위한 KOLAS 품질문서 정비 및 영문화 등 - (KAS) 2018년 PAC-MLA 동등성평가 수검 및 시정조치를 위한 제도정비 등 • 국제기구(ILAC)의 자격기준 강화에 따른 국내 공인시험·교정기관(800여개) 시스템 개편 추진

③ 향후('20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내 공인시험·교정기관의 전환평가를 통해 개정된 국제표준의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KOLAS 성적서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 국제기구(ILAC*)의 기준 강화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관리 개선을 통해 부실·부정 성적서 예방을 위한 신뢰성 검증 시스템 보완
 - * ILAC(국제시험소인정기구협력체,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무역기술장벽 제거를 위해 설립된 101개국 이 참여하는 국제 인정기구 협력체
- 메디컬, 소프트웨어 성능평가, 신재생에너지분야 등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新수요 분야의 국내 시험·교정·검사기관의 능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
- 국내 ISO 인증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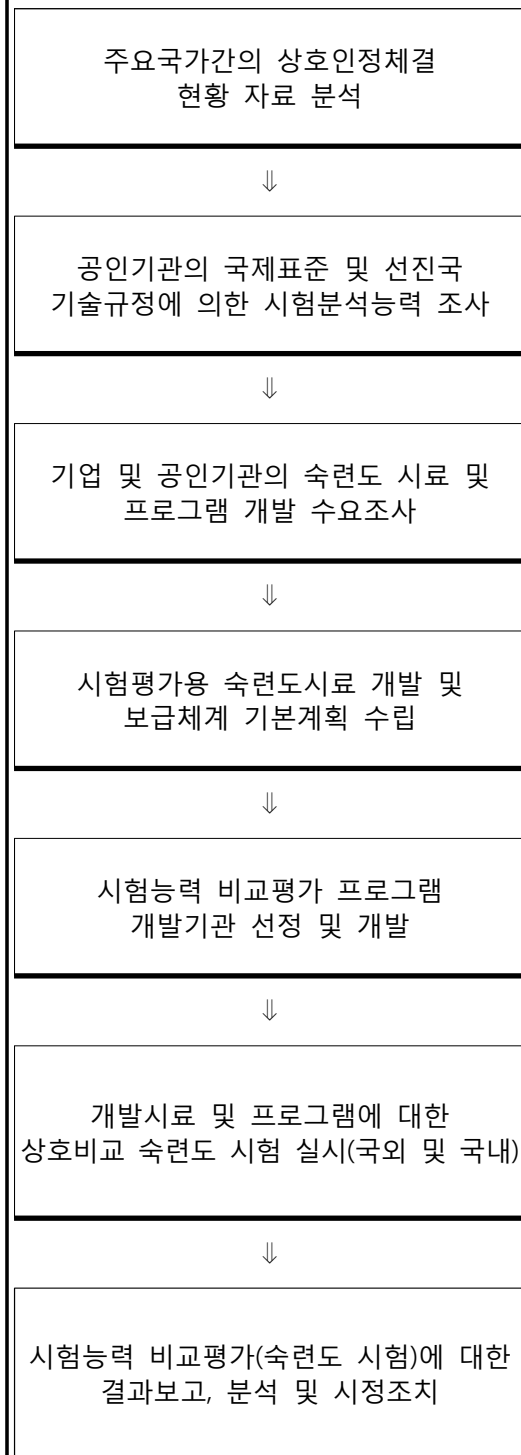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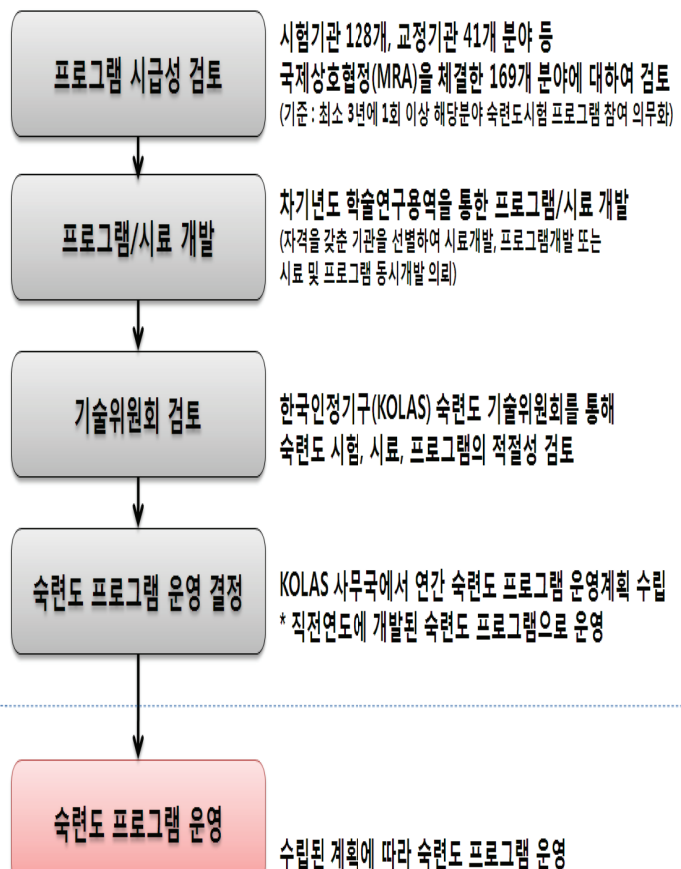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①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숙련도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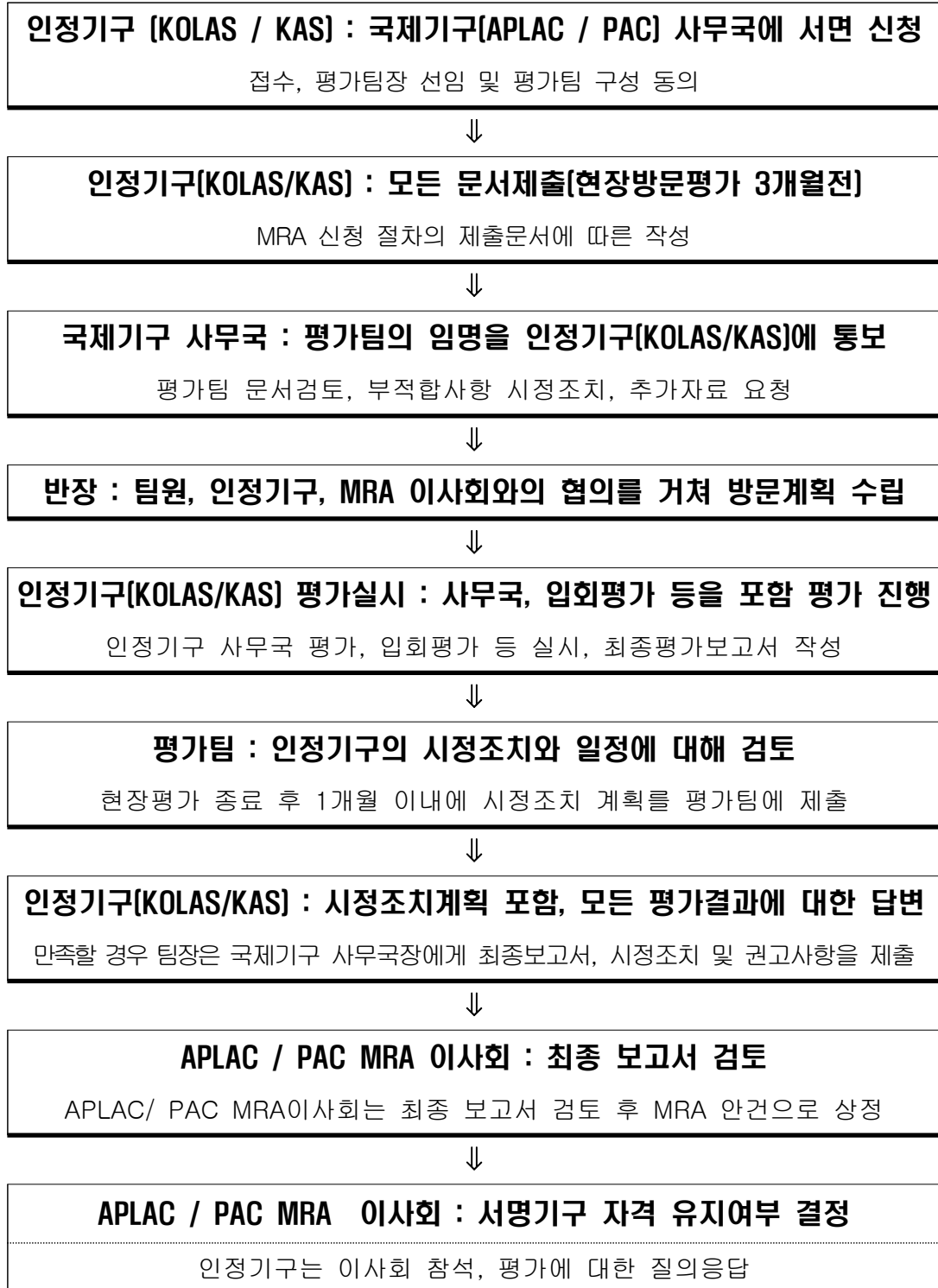


<KOLAS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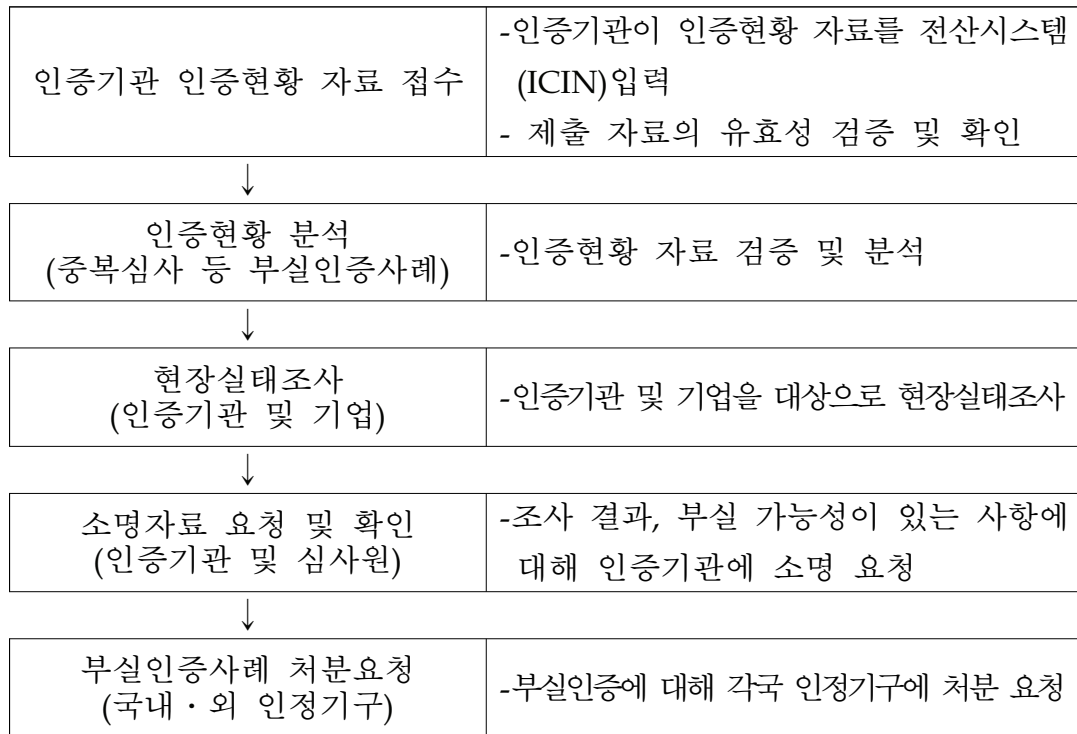
② 국제동등성 유지, 국제상호인정기반 구축

< 국제동등성 평가수검 (KOLAS, KAS)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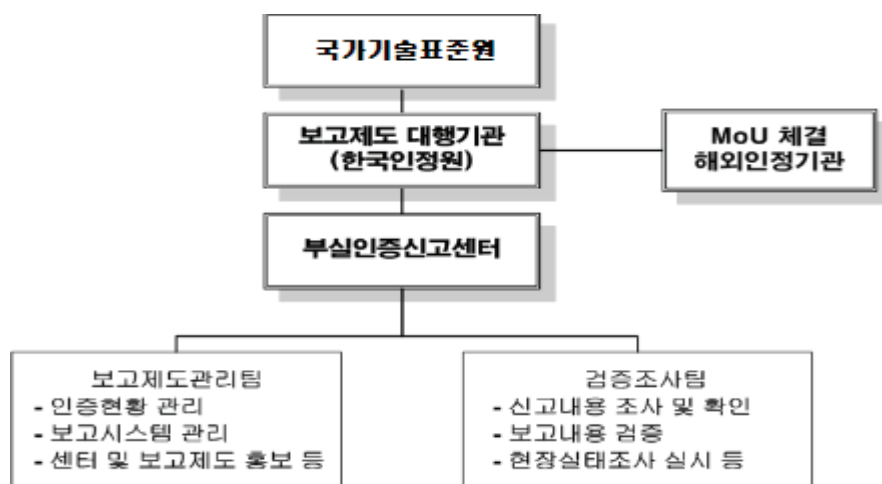


③ 국제시험인증제도 기반구축

< ISO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 절차 >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④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유망시험인증서비스산업화 지원절차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국가기술표준원	· 필요사업 수요조사, 사업기획, 당해연도 및 중기계획 등
사업계획 공고	전담기관	· 일간지,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과제명 등 공고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직접접수
평가, 심의	전담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선정 및 발표	전담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지원과제 최종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기술표준원, 전담기관	· 협약전 사전검토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수행 및 사업관리	전담기관, 주관기관	· 사업성과 평가 등
최종보고 및 정산 등	전담기관, 주관기관	·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시험인증산업 현황과약 및 기초인력확보 >

맞춤반 준비	협의체 구성		⇒	채용 절차 수립		⇒	기관별 채용 시스템 정비		⇒	산·학 MOU 체결										
	협의체 1월			협의체 2월			각 기관 3월			산·학 3월										
학생 채용 및 교육 운영(안)	수요조사 및 공고		↺	학교장 추천		↺	면접 및 선발		↺	맞춤반 교육		⇒	채용약정 체결		↺	입사		↺	모니터링	
	협의체 4월			각 학교 5월			각 기관 6월			간사기관 6~12월			각 기관 10월			각기관 차년 1 월			간사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2,309	2,551	2,806	3,087	3,087	
'19~'23		2,551	2,792	3,071	3,378	3,71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한국인정기구(국가기술표준원)의 숙련도시험대상 169개 분야 중 정책방향과 신수요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인정기구(KOLAS, KAS)의 국제동등성 평가 대응을 통해 주요수출국 101개국과 국제상호인정(MRA, MLA)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마련 등 인프라 구축
- 경영시스템인증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및 부실인증 사전 예방을 통한 인증의 신뢰성을 제고
- 시험·검사, 제품인증 등 국가인정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인증제도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험·인증분야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
- 신수요 분야 시험·인증기업 개발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적기에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도국 시험인증서비스 산업 진출 육성

□ 세부 추진계획

- 900여개 KOLAS 공인기관의 능력을 국제수준 유지를 위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인정기구(KOLAS, KAS)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활동을 확대하며 지속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기구에서 영향력 확대 추진
- 개정된 국제표준에 따른 운영규정 및 추가기술지침 개정 추진
- KOLAS, KAS 등 국제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내 인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신수요 시험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시험인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산업화 지원
- 개도국 적합성평가 제도와 서비스 산업 동반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82.2점) : 보조사업의 사업방식 변경(세부사업화)을 통한 추진 필요
- 2018년 산업위(예산) 지적사항 : 시험인증산업 현황과악 및 기초인력확보 사업의 경우, 면접 이후 인원 선발과 기업 입사 사이의 기간이 짧아 실습 교육의 한계가 있어 교육기간 확대, 프로그램 개선 등 필요
- (조치사항) 교육 및 취업연계 기간을 10개월로 설정하여 교육기간을 수요기업의 요청에 맞춰 자율시행, 수시 취업기회 제공 등 프로그램 개선 시행('19년도)

13) 부처 건의사항

- 공인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실·부정성적서 방지 등 공인기관 대상 특별사후 관리 실시 확대 필요
- 글로벌 新수요 확대 및 글로벌 시험인증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망 시험인증 분야의 역량강화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2,266	2,266	-	-	-	-	2,266	2,252	99.4	99.4	-	14
2017	2,311	2,311	-	-	-	-	2,311	2,301	99.6	99.6	-	10
2018	2,309	2,309	-	-	-	-	2,309	2,302.4	99.7	99.7	-	6.6
2019	2,551	2,551	-	-	-	-	2,551	2,537.9	99.5	99.5	-	13.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790	790	790	790	-	790	790	-	-	100
2017	790	790	790	790	-	790	790	-	-	100
2018	790	790	790	790	-	790	790	-	-	100
2019	1,068	1,068	1,068	1,068	-	1,068	1,068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6	- 집행잔액 0.14억원(업무용역 수행후 정산에 따른 불용)
2017	- 집행잔액 0.10억원(업무용역 수행후 정산에 따른 불용)
2018	- 집행잔액 0.06억원(연구용역 계약 차액 및 정산잔액, 수용비·국외여비 등 집행잔액)
2019	- 집행잔액 0.13억원(연구용역 정산잔액 및 수용비·국외여비 등 집행잔액)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1. KOLAS 인정제도 개요

참고2. KOLAS 국제동등성 평가 개요

참고3.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참고 1

「KOLAS 인정제도」 개요

1. 국내적합성평가체제

- (한국인정기구, KOLAS) '92년 설립되어 약 870여개 시험기관을 인정하고 있으며, '96년부터 ILAC 內 한국 대표기관으로 활동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인정 대상에 따라 3개의 인정기구가 운영 중이며, 각 인정기구별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상호동등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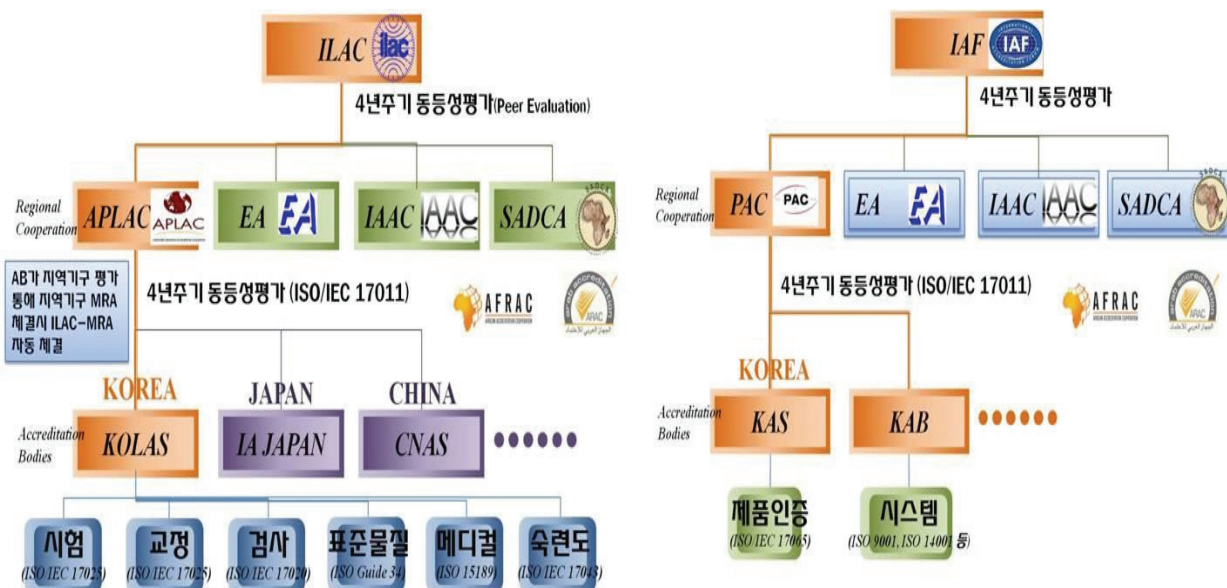
- 한국인정기구(KOLAS) : 시험·교정·검사·숙련도시험 등 기관 인정
- 한국제품인정기구(KAS) : 제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품 인증기관 인정
- 한국인정지원센터(KAB) : 품질·환경 등 경영시스템인증기관 인정

구분	KOLAS	KAS	KAB
인정마크			
설립년도	'92.12월	'01.7월	'95.9월
인정대상	시험기관, 교정기관 등	제품인증기관	경영체제인증기관
수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지원센터
인정수	870개 기관	19개 기관	QMS : 52개 / EMS : 46개
국제기구	ILAC/APLAC	IAF/PAC	IAF/PAC

*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 한국제품인정기구, KAB(Korea Accreditation Board) : 한국인정지원센터

2. 국제적합성평가체제

- (ILAC,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 세계 인정기구 협력체로, 각국 공인 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타국에서 추가·중복 시험 없이 상호 수용될 수 있도록 국가 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MRA) 운영
 - (ILAC-MRA 가입현황) 103개국 100개 인정기구('19.6월 기준)
 - (ILAC-MRA 효과) 동일한 국제표준 채택을 통한 상호인정 활동으로, 인정기구의 자격 및 인정업무 일치화
 - MRA 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는 타 인정기구에 의해 인정받은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를 인정해야 함
 - 공인기관 성적서 상호인정으로 기업의 중복시험, 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켜 국제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제거
 - (ILAC-MRA 자격유지) 해당지역기구(APLAC)로부터 4년주기 동등성 평가를 통해 인정기구 자격요건(ISO/IEC 17011) 적격성여부 확인
 - 한국인정기구(KOLAS)는 '20년 5월말 동등성평가 수검 예정



1. 배경 및 현황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각국의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국제적으로 상호인정
 - * 상호인정(ILAC-MRA) 자격획득 및 유지를 위해, 해당지역기구(APLAC, EA 등)를 통해 인정기구요건(ISO/IEC17011) 만족여부 평가(동등성평가)를 실시
-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 시험·교정기관 성적서의 국제상호인정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정(ILAC-MRA)을 체결('00년)
 - 지속적인 국제 상호인정협정 유지를 위해 아·태지역기구(APLAC)으로부터 4년 주기로 수검 실시, '20년 6월 평가 예정
- 한국인정기구의 ILAC(APLAC)-MRA 추진 경과
 - (MRA 평가 이력) 최초로 시험('98년) 및 교정('00년) MRA 체결 후 동등성평가 3회 수검('04년, '08년, '00년)

2. '20년 MRA 추진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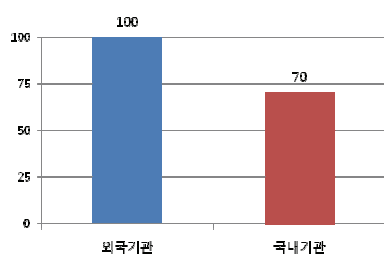
- MRA 평가준비 내용
 - KOLAS의 품질문서(매뉴얼 43종, 절차서 17종, 운영기준 51종)에 대해 개정된 ISO/IEC 17025 : 2017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주요 이행실적 점검·보완 실시
- '20년 평가 일정(안) : 국제평가사 5명 내외로 구성, 사무국 문서서면심사('20.2~5월), 사무국 현장평가('20.6월)로 진행 예정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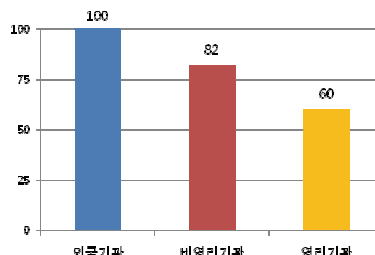
- 글로벌 新수요 확대 및 해외 시험인증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역량강화
 - 유망 시험인증서비스산업화,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확보

2. 지원 확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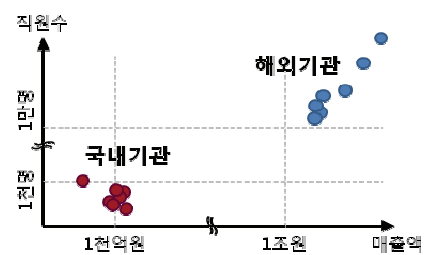
- 시험·인증 서비스 산업은 FTA, 기술규제 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으로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필요
- 상위 5대 시험인증기관도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대비 역량이 82%에 불과하고, 중소 시험인증기관은 60% 수준에 불과



< 신뢰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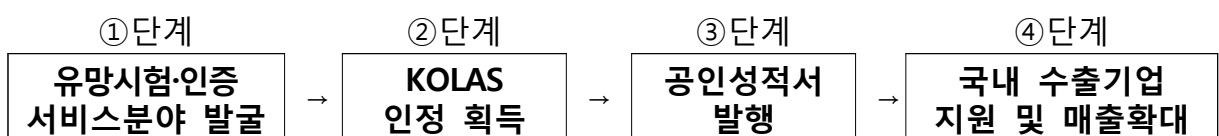
< 경쟁력 >



< 시험기관 매출, 직원수 비교 >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4.1월) 후속조치에 따라 '14년부터 지원중. 수요대비 지원내용이 매우 미약한 상황
- '18년까지 지원과제 지원기간 1년, 평균 지원예산 1.5억원 내외
⇒ 단계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원규모 및 기간 확대 추진

* (현재) 지원기간(1년)/1.5억원 이내 → (개선) 지원기간(2년이상)/3억원 이내



사 업 명						
(6)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37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박종섭	-	배소현
		043-870-5500	-	043-870-550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인증제도혁신 기반구축	1,100	1,045	1,045	1,274	1,024	△ 21	△ 2.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100	1,100	1,100	-	-	1,045	1,045	1,045	1,045 [1,045]	-	-	1,024
· 인증산업발전 포럼	11	11	11	-	-	7	7	7	7 [7]	-	-	7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69	69	69	-	-	59	59	59	59 [59]	-	-	40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1381콜센터 운영·개선	1,000	1,000	1,000	-	-	959	959	959	959 [959]	-	-	957
○ 비목별 분류(합계)	1,100	1,100	1,100	-	-	1,045	1,045	1,045	1,045 [1,045]	-	-	1,024
· 일반수용비(210-01)	169	169	169	-	-	141	141	141	133.5 [133.5]	-	-	120
· 임차료(210-07)	5	5	5	-	-	5	5	5	5 [5]	-	-	5
· 국내여비(220-01)	5	5	5	-	-	4	4	4	4 [4]	-	-	4
· 국외업무여비(220-02)	3	3	3	-	-	3	3	3	3 [3]	-	-	3
· 사업추진비(240-01)	18	18	18	-	-	15	15	15	15 [15]	-	-	15
·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	-	20	20	20	27.5 [27.5]	-	-	20
· 민간경상보조(320-01)	880	880	880	-	-	857	857	857	857 [857]	-	-	8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기업이 제품 시장출시하거나 또는 수출 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개선 필요
-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인증제도 구축과 효율화를 통해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국가통합인증마크체제의 확산 발전을 위해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품 인증마크를 통합하고 KC마크를 국가 대표인증마크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인증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6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② 추진경위

- '04.10. 국정감사 : 인증제도 난립에 따른 통합 필요성 제기
- '05.5.~'06.5. : 「인증제도 혁신 T/F팀」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 12차에 걸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개최 (산업자원부)
 - * 국내 인증업체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500여 기업)

< 「국가표준·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주요내용 >

- ① 부처별 인증업무를 종합·조정할 총괄관리 체계 구축
- ② 국가통합인증마크 및 모듈방식 인증제도 검토
- ③ 인증기관의 시설·인력 강화 및 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
- ④ 국제적 인정기구 육성 및 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 규격간 통일화

- '09.4.1.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공포(KC마크 도입 등 규정)
- '09.7.1. : 산업부 소관 9개 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도입
- '10.6.30.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고시

- * 복수의무인증제품에 대한 시험성적 상호인정 및 일괄신청제 도입
- '11.1.1. : 산업부 등 5개부처 13개 법정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전면시행
- '13.8.7. : “수출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활성화 계획” 장관님 보고시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 1380 FTA 콜센터와 같은 138Y 계열의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13.10.28. :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추진 계획” 장관님 보고 시 4자리 특수번호 및 운영기관을 확정

<추진방안 확정결과>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특수번호 : 1381

- * 산업부 무역실, 중기청,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시험연구원 등 협업 확인

- '14.1.27. :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기본계획을 수립

- 사용번호 : 1381 • 서비스시간 : 8:00~19:00, 주5일
- 관리주체 : 국가기술표준원(“인증·표준 정보제공 콜센터”설치)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조 직 : 12명 [국표원 1명(총괄), KTR(운영실무,상담) 11명]
- 제공정보 :
 - 인증 : 350여개의 해외인증(110여개국) 및 300여개 국내인증
 - 표준 : 43천여종 국가표준 & 국제표준(ISO, IEC, ITU 등)

- '14.3.19. : KATS - KTR “1381”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협약 체결
- '14.3.20. : VIP지시 '정부 콜센터 홍보 강화' 지시
- '14.3.26. : “1381” 인증표준콜센터 개통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00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업무 협약서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7백만원**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 (210-07, 임차료)
 - 1회 × 5백만원 (2019년 동일)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2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1회 × 2백만원 (2019년 동일)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40백만원**
 - KC마크 활성화 등 국가인증제도 운영 : 18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2개매체 × 18.5백만원 (2019년) → 1개매체 × 18백만원 (2020년)
 - 국내·외 인증제도 실태조사(여비) : 7백만원 (220-01,02 여비)
 - 국내여비 1식 x 4백만원, 국외여비 1식 x 3백만원 (2019년 동일)
 - 인증제도 혁신 관련 회의(범 부처 실무자협의회 등) : 15백만원 (240-01 사업추진비)
 - 1식 x 15백만원 (2019년 동일)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0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1개과제 x 20백만원 (2019년 동일)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957백만원**
 - 콜센터 인건비 보조 : 680백만원 (320-01, 민간경상보조)
 - 17명 × 40백만원(3.33백만원x12개월) (2019년 동일)
 - 콜센터 대면상담 전문가 수당 : 45백만원 (320-01, 민간경상보조)
 - 180회 × 0.25백만원 (2019년 동일)
 - 콜센터 유지보수 : 90백만원 (320-01, 민간경상보조)
 - 12개월 × 7.5백만원 (2019년 동일)
 - 콜센터 상담원 재교육 : 12백만원 (320-01, 민간경상보조)
 - 6회 × 2백만원 (2019년 동일)
 - DB시스템통합 : 30백만원 (320-01, 민간경상보조)
 - 30백만원 × 1회
 -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100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6건 × 17백만원 (2019년) → 4건 × 25백만원 (2020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381콜센터 콜상담건 (단위: 건)	목표	신규	58,625	62,896	66,040	68,021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연간 목표 3% 상향	콜센터 온·오프라 인 상담 건수 합 계	1381콜센터 통계
	실적	신규	68,556	57,268	-	-			
	달성도	신규	116.9	9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①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연중 진행) - 신문·대형마트 등 대내·외 홍보 추진 ② 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운영 및 개선 추진 - 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對기업 인지도 개선과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연중) ※라디오, 케이블TV 등 기업대상의 홍보 추진 - 증가하고 있는 인증표준 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인력 증원: 13명 ⇒ 15명 - 개인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시스템 구축 추진
2017	①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 브로셔 제작, 신문, 케이블TV, SRT열차 내 영상광고 등 ② 전문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원 보강(전문상담 인원 9인 ⇒ 11인)
2018	① 1381 인증표준 콜센터, KC마크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 - 웹포스터/라디오 광고/카드 뉴스 제작 - 라디오 광고, 유관기관 배너 광고, 지하철 스크린 광고 등 - 1381 홈페이지 구축(~'18.9.) ② 1381 대면상담 추진('18.3.~), 인터넷 상담('18.11~)
2019	① 1381 인증표준 콜센터, KC마크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 - 홍보 애니메이션, 인터넷 배너, 포스터, 브로셔 제작 - 라디오 광고, 지하철 스크린,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 등 - 1381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19.6.) ② 1381 전문가상담 활성화, 인터넷 및 모바일 상담 확대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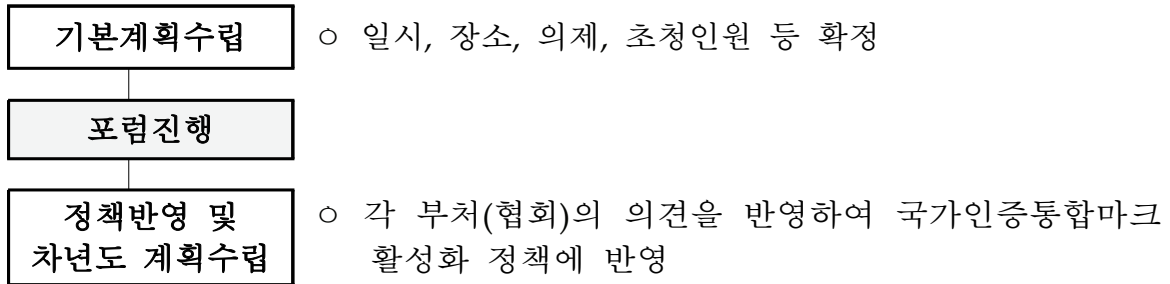
- 인증제도 중복 개선으로 기업부담 경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중복시험 상호인정 및 인증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인증관련 부담 경감
-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의 대표 브랜드화 및 신뢰성 향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 소비자가 KC마크 하나만 확인하고 안전, 보건, 환경,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
 - KC마크 대국민 인지도 향상 기대(80%이상, '19년)
- 1381 콜센터 운영 및 개선을 통한 기업의 인증 취득 편의 및 부담 경감
 - '18년말 기준 누적 상담건수 248,482건(210건/일)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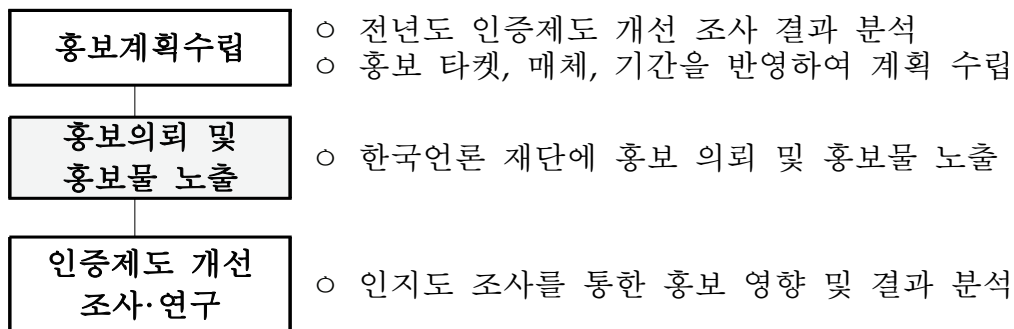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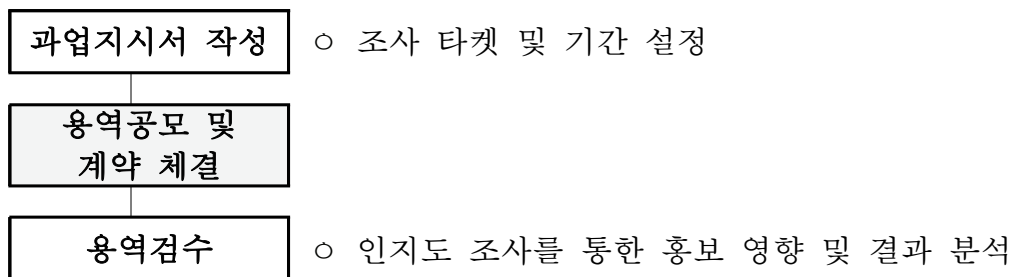
① 국가인증제도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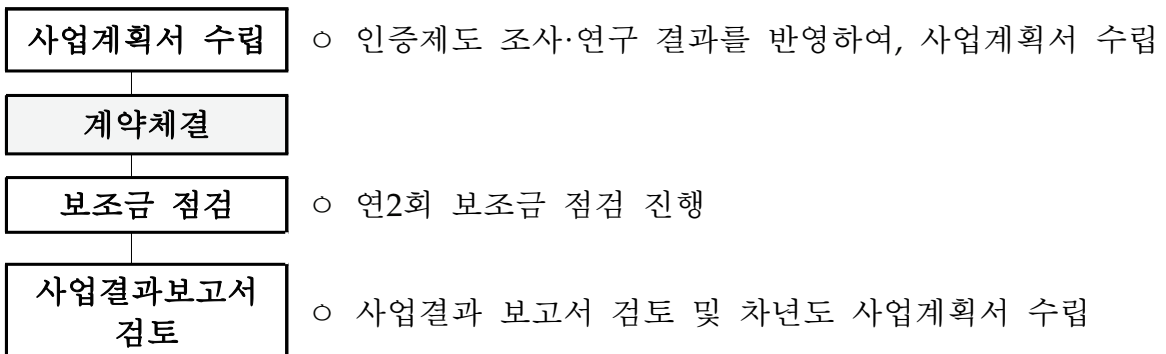
②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③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④ 1381 콜센터 운영·개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1,100	1,045	1,150	1,264	1,264	
'19~'23		1,045	1,181	1,261	1,284	1,28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KC마크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대표 브랜드화 추진(계속)
 - KS마크 동등 수준의 대국민 인지도 향상 추진(KS마크 : 86.6%, KC마크 : 79.1%, '18년기준)
-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수출 및 국내기업의 제품 시장출시 관련한 인증표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1381 콜센터의 기업 인지도 개선과 콜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
 - 1381콜센터는 해외 및 국내 인증·표준 분야의 문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인증 관련되어 복잡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에게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대면 상담
 - 온라인 상담 신청 및 자료조사 후 콜백 등 서비스 강화
 - 지속적인 홍보로 기업의 1381 콜센터 접근도 향상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2013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확인·점검 결과(기재부)
 -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 65점(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1,197	1,197	-	-	-	-	1,197	1,195	99.8	99.8	-	2
2017	1,200	1,200	-	±10	-	-	1,200	1,198	99.8	99.8	-	2
2018	1,100	1,100	-	±7	-	-	1,100	1,100	100	100	-	-
2019	1,045	1,045	-	±7.5	-	-	1,045	1,045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840	840	840	840	-	840	840	-	-	100
2017	880	880	880	880	-	880	880	-	-	100
2018	880	880	880	880	-	880	880	-	-	100
2019	857	857	857	857	-	857	857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6	- 불용 : 일반수용비 1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백만원 불용
2017	- 전용 : KC마크 인지도 조사 수행을 위해 일반연구비 부족분 10백만원을 일반수용비(홍보비)에서 전용
2018	- 전용 : KC마크 인지도 조사 수행을 위해 일반연구비 부족분 7백만원을 일반수용비(홍보비)에서 전용
2019	- 전용 : KC마크 인지도 조사 수행을 위해 일반연구비 부족분 7.5백만원을 일반수용비(홍보비)에서 전용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7)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3731-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8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계량측정제도과	임완빈	김종윤	-
		043-870-5510	043-870-5551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	1,221	1,185	1,185	1,103	1,103	△ 82	△ 6.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229	1,229	1,221	-	8	1,185	1,185	1,185	1,175	-	10	1,103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679	679	679	-	0	657	657	657	651	-	6	616.6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144	144	144	-	0	126	126	126	126	-	-	116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175	175	175	-	5	135	135	135	132	-	3	125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231	231	231	-	3	267	267	267	266	-	1	245.4
○ 비목별 분류(합계)	1,229	1,229	1,221	-	8	1,185	1,185	1,185	1,175	-	10	1,103
· 일반수용비(210-01)	128	128	114	-	1	114	114	114	108	-	-	17.4
· 시험연구비(210-13)	187	187	199	-	1	223	223	223	229	-	-	213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80
· 관리용역비(210-15)	110	110	105	-	5	80	80	80	77.4	-	2.6	80
· 국내여비(220-01)	20	20	19	-	1	20	20	20	19	-	1	15
· 국외업무여비(220-02)	19	19	19	-	0	19	19	19	17	-	2	19
· 사업추진비(240-01)	6	6	6	-	0	6	6	6	6	-	-	5.6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100	-	0	90	90	90	85.6	-	4.4	90
· 민간경상보조(320-01)	659	659	659	-	0	633	633	633	633	-	-	5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선진 법정계량 체계확립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정책 및 기술기준 개발, 국제 법정계량기구 대응, 소비자 감시원 제도 및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운영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법정단위 사용 확산을 위해 법정단위 홍보 및 대중매체 모니터링 추진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계량 관련 정보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량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법정계량기 및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 차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

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계량에 관한 법률』은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여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1961년)
 - * 면적의 단위에 대하여 평(坪)단위는 1983년부터 사용을 금지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05)에 따라 법정단위 정착을 추진
 - '07년 7월부터 “평”, “돈”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사전 홍보 부족 및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홍보·제도(경고) 위주로 추진
 - '10.6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게 「과태료 부과」를 병행 추진
- “계량제도 선진화 종합계획” 수립(장관/'12.16) : '12년부터 현장 중심의 홍보·제도와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불법제품 단속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법정계량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정계량선진화 추진
-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추진 및 시행('15.1.1)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 ~
- 사업규모 : '19년까지 기투입액(88.672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계량기 사용 전국민 및 관련 기업, 유관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계량측정협회	100	계량에관한법률 제65조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단위:백만원)

□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1,103
①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616.6
▪ 정책·기술기준·표준·지침 개발	90
- 연구 및 조사 용역 (일반연구비)	90 3.6건x25백만원(2019년)→3.6건x25백만원(2020년)
▪ 지자체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	112
- 교재 제작, 강사료, 임차료, 워크숍 개최 등 (민간경상보조)	112 20회x5.6백만원(2019년)→20회x5.6백만원(2020년)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제도 운영	90
- 신고센터 운영비, 조사단 활동비 및 신고포상금 등 (민간경상보조)	90 50건x204백만원(2019년)→37.5건x2.4백만원(2020년)
▪ 소비자감시원 운영	300
- 감시원 수당, 교육,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300 177건x1.75백만원(2019년)→171.5명x1.75백만원(2020년)
▪ 국제법정계량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	24.6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기구포럼(APLMPF), 일본 및 중국간 양자 협력 등 (국외업무여비)	19 6회x3.17백만원(2019년)→6회x3.17백만원(2020년)
- 국제기구 대응 등 간담회 개최 (사업추진비)	5.6 4회x0.15백만원x10명(2019년)→4회x0.15백만원x10명(2020년)

②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116
▪ ‘평(坪)’, ‘돈’ 등 非법정단위 근절 및 ‘m ² ’, ‘g’ 등의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80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배포, SNS소통채널운영 및 공 - 모전 개최 등 (일반용역비)	80 6건x15백만원(2019년)→5.3건x15백만원(2020년)
▪ 대중매체 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및 사용 촉진	36
- 언론사 광고 비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및 계도 (민간경상보조)	30 20개사x1.5백만원(2019년)→20개사x1.5백만원(2020년)
- 언론사·소비자 등 협·단체 법정단위 확산 현장협의체 운영 (민간경상보조)	6 4회x0.15백만원x10명(2019년)→4회x0.15백만원x10명(2020년)
③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125
▪ 계량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 (관리용역비)	80 1식x80백만원(2019년)→1식x80백만원(2020년)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민간경상보조)	45 4,230건x1.3천원(2019년)→34,700건x1.3천원(2020년)
④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245.4
▪ 형식승인계량기 시판품조사	177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시험연구비)	177 35종x1.78백만원x3개(2019년)→33.2종x1.78백만원x3개(2020년)
▪ 사용중인 검정계량기 오차검사	32.4
- 전문가 수당 (일반수용비)	17.4 4개 권역x0.15백만원x4명x10일(2019년)→4개 권역x0.15백만원x4명x7.25일(2020년)
- 출장비 (국내여비)	15 4개 권역x0.125백만원x4명x10일(2019년)→4개 권역x0.125백만원x4명x7.25일(2020년)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36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시험연구비)	36 500품목x0.024백만원x3개(2019년)→500품목x0.024백만원x3개(2020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계량정보시스템 일평균 이용건수(건)	목표	3,518	4,116	4,527	5,722	5,894	'18년 자체 데이터 전환으로 인한 이용 건 수 증가와 안정화 된 이용패턴을 감안 하여 전년목표(5,722건) 대비 3% 증가인 5,894 건으로 설정	계량정보시스템 일평균이용건수 = 년 이용건수/365	계량정보 시스템홈페이지 (www.metrology.kr)
	실적	3,560	4,353	5,722	7,475	-			
	달성도	101%	106%	126%	130.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비자동차용의 형식승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등 10개과제 수행 ☐ 제도·홍보관련 • 법정단위 캐릭터 개발 4건 • 법정단위 블로그 및 페이스북 구축·운영 • 법정단위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 제작·배포(15건) • 법정단위 디지털 배너(14건), 포스터(2건), 모바일 리플릿(3건) 제작·홍보 • 법정단위 홍보를 위한 포스터, UCC 공모전 개최(접수 323건, 시상 24건) ☐ 사후관리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가스미터 12종, 적산열량계 4종, 수도미터 5종) • 정량표시상품 소비자피해 예방 위한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27종 496품목) • 계량기 오차검사 실시 (LPG미터 262건) ☐ 기타 • 국제계량기술회의 및 대외협력회의 참여(6회) • 전국계량공무원 교육 (6회, 264명)
2017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IT 융복합 전력량계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발 등 8개과제 수행 ☐ 제도·홍보관련 •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140%팬 증가, '16년 1,462명→'17년 3,523명) • 법정단위 SNS 광고 30회 • 법정단위 홍보를 위한 포스터, UCC 공모전 개최 2건, 참여 이벤트 4건 • 법정단위 오프라인 광고 2건(아파트미디어보드, 버스 등) ☐ 사후관리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전력량계 17종 85대) • 정량표시상품 소비자피해 예방 위한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27종 513품목) • 계량기 오차검사 실시 (LPG미터 262건) ☐ 기타 • 국제계량기술회의 및 대외협력회의 참여(5회) • 전국계량공무원, 소비자감시원, 사업자 등 교육 (578명)

2018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전기자동차 충전기관 관련 제도 제·개정 추진(3건), 법정계량기 기술기준 개정(4건) 등 ☐ 법정단위 제도·홍보관련 • SNS 광고 39회(페이스북 23건, GDN 16건) • 홍보를 위한 포스터, UCC 공모전 개최 2건, 참여 이벤트 4건 • 오프라인 광고 6건(버스 1건, 포스터 2건, 홍보물품 3건) ☐ 사후관리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접수/처리 : 50/55건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전력량계 40건) • 정량표시상품 소비자피해 예방 위한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27종 500품목) • 계량기 실태조사(오차검사)실시 (전국 LPG미터 245건) ☐ 기타 • 국제계량기술회의 및 대외협력회의 참여(4회) • 전국계량공무원, 소비자감시원, 사업자 등 교육 (865명)
2019	

③ 향후('20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법정계량의 선진화 기반마련
 - 국제무역, 상거래 및 측정의 기본인 법정계량에 대한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법정계량제도의 선진화 기반 마련
- 법정단위 사용 정착률 향상을 통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국제교역 촉진
 - 법정단위의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언론·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률 향상을 통해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국제교역 촉진
 - * '평' 사용 대신 법정단위 "m²"의 사용 정착률(%) 향상 : ('09) 69.0% → ('18) 85.6%
- 불법·불량계량기의 유통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손실방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1,445	1,445	1,445	1,445	1,445	
'19~'23		1,229	1,445	1,445	1,44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법정계량제도 운영

- 전세계 나라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값을 결정하는 체계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법정계량기 거래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485조원*의 약 45% ('14년 기준 668조원*)를 차지할 정도로 모든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반산업으로 지속적인 사업 운영 필요
- * 세부내역 : 주유기 62.2조, 전력량계 44.4조, 가스미터 21.2조, LPG미터 6.9조, 수도미터 3.4조, 적산 열량계 3.0조, 비자동저울 527.4조

□ 계량체계의 디지털 전환 대응

- (추진내용) 계량법제도의 관리 범위 확대* 검토, 다양한 장치들간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상호운용성 표준·지침 마련 및 국제기준 대응 등 추진
- (관리 범위 검토) (현재) 계량기기의 계량데이터 생성시 오차(정확도) 관리 → (향후) 계량데이터 생성부터 교류·활용까지 데이터신뢰성(유효성) 관리
- (Top-down식 대응)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위한 조사를 분석 실시하여, 규제와 산업진흥 방향을 적극적으로 발굴
- (Bottom-up식 대응) 복잡하고 변화속도가 빠른 기술·산업 환경에서는 정부의 발빠른 대응력이 미흡하므로,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적시적소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
- (국제시장 창출 기반 마련) 스마트미터링분야의 국제기준 대응 및 주요국간의 협력을 추진하여,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 여건 마련

□ 불법·불량 계량기 사후관리 대응체계 강화

- 시판품 조사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판품 조사 부적합 계량기의 철저한 재조사 및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현장조사단 운영을 확대

□ 비법정단위사용 거래관행 변화를 위해 국가주도의 국민 인식전환을 지속 추진

- (추진내용) 정책 인지도 확대하고, 고의성일 경우만 단속을 추진했던 '인치', '파운드' 등 국제적인 비법정단위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홍보 및 단속 정책을 추진

□ 계량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 (추진내용)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을 활용하여 240여개 시도공무원, 2,400여개 계량사업자 및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조전환
- * HW·SW 구매·유지 비용 절감, 데이터 입력·관리·활용의 용이성과 높은 데이터 접근성 등으로 향상된 업무효율이 가능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단위사업명: 신산업표준개발)
 - '18년도 : 우수
 - '16년도 : 보통
- 보조사업 평가결과
 - '18년 : 지속지원(사업방식변경)
 - 보조사업의 '법정단위 모니터링 및 사용 촉진' 내역사업 중 '저울 수입업자 사업장 방문'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비자감시원 운영' 내역사업으로 통합하여, 내역사업 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

13) 부처 건의사항

- 4차산업혁명 촉발로 계량기기의 계량데이터 생성 정확성과 함께 계량데이터의 유통·활용되는 디지털플랫폼의 관리를 위한 계량법제도 확대 및 지속적 지원 필요
 - 신뢰성 있는 계량데이터를 통해 에너지 거래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민간 자율적인 계량품질관리 유도하고, 차세대 계량플랫폼에 대한 국제시장 선점 지원 필요
 - * 정확한 계량데이터의 공유·확산을 위한 신뢰성은 에너지전환의 기본요소
- 생활용 계량기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확대·강화 필요
 - * 불법 불량신고센터의 접수·현장조사 건수가 매년 150% 이상씩 증가세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1,445	1,445					1,445	1,405 (1,405)	97.2	97.2	29	11
2017	1,332	1,332	29	-	-		1,361	1,345 (1,345)	101.0	98.8		16
2018	1,229	1,229		±13			1,229	1,221 (1,221)	99.3	99.3		8
2019	1,185	1,185					1,185	1,175 (822)	99.2	99.2		1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707	707	707	707	-	707	707	-	-	100
2017	619	619	619	619	-	619	619	-	-	100
2018	659	659	659	659	-	659	659	-	-	100
2019	633	633	633	633	-	633	633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6	- 이월 사유 : 수입물품 세관장 확인 시스템 개발사업의 과업범위 확대 및 관세청 DB 연계 강화를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29백만원) - 불용 사유 :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11백만원)
2017	- 불용 사유 :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16백만원)
2018	- 불용 사유 :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8백만원)
2019	- 불용 사유 :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10백만원)

라. 기타 추가자료

- ① 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요약, ③ 계량·측정 관련 통계, ④ 법정단위 사용 정착 현황, ⑤ 계량정보시스템 현황, ⑥ 소비자 감시원 운영 현황, ⑦ 국제법정계량분야 대응현황

참고 1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 세부계획



추진 과제

1. 법정계량제도 혁신기반 마련	2. 선제적 시장관리·사후감독 강화
1-1 2020 계량제도 혁신계획 수립	2-1 가스미터 사후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1-2 법정계량기 검정제도 개선 추진	2-2 불법저울 유통·사용 근절 대책 마련
1-3 계량증명업 신뢰도 제고 추진	2-3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시스템 운영
1-4 IT 활용으로 정책 투명성·공개성 제고	2-4 포장상품 정량표시 관리 강화
1-5 제도적 미비점 보원을 위한 법령 개정	2-5 계량업무 지정기관 사후관리 실시
3. 유연하고 개방적인 계량관리	4. 계량산업 선순환 발전 견인
3-1 국민 참여형 법정단위 정책 전개	4-1 차세대 계량측정 기술향상 지원
3-2 소비자감시원 활동의 내실화	4-2 계량사업자 역량제고 및 유대강화
3-3 계량사업자 자율관리의 저변확대	4-3 스마트미터링 본격 대응
3-4 지자체와 협업 활성화	4-4 친환경 차량용 충전기 산업 지원
3-5 국제협력 강화 및 대응체제 확립	4-5 "계량측정의날" 정부포상 및 행사 개최

참고 2

『계량에 관한 법률』 요약

- 계량은 경제활동의 근간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모든 나라에서 법제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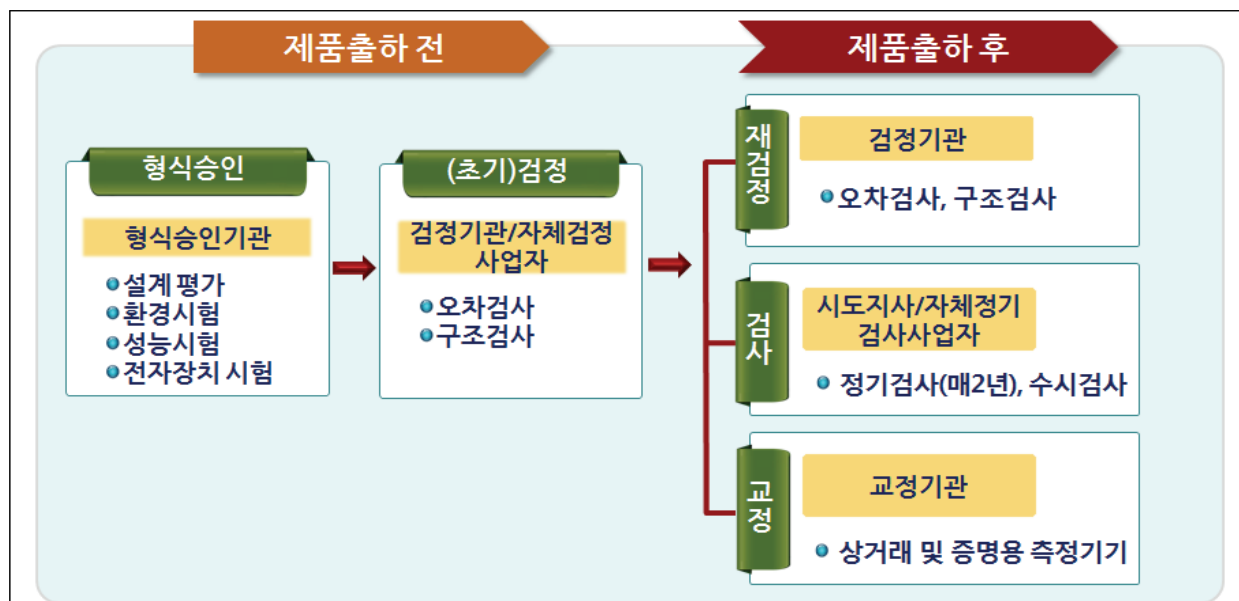
< 계량에 관한 법률 구성 >

- ① (법정단위) 상거래 기본수단으로 7개 기본단위* 등의 법정단위를 규정하고, 상거래 및 증명에서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

* m(길이), kg(질량), s(시간), K(온도), mol(물질량), A(전류), cd(광도)

- ② (법정계량기)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값의 오차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법으로 정하여, 사전관리(형식승인·검정) 및 사후관리(재검정·정기검사) 의무화





< 법정계량기 관리 체계 >

- 법정계량기 관리정보 생산 추이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형식승인	1,744	971	899	823	1,018	1,382	1,701	1,189
검정 및 재검정	8,747,018	7,992,329	8,506,213	10,595,317	8,930,745	11,326,712	12,230,520	10,154,810
저울								
정기검사(2년 주기)	-	308,498	-	293,753	-	295,017	300	253,588
수시검사	72,567	52,056	46,230	45,201	881	7	0	0
합계	8,821,329	8,353,854	8,553,342	10,935,094	8,932,644	11,590,026	12,232,521	10,409,587

③ (정량표시상품) 포장 개봉없이 실제량 확인이 어려운 상품을 법으로 정하여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

* 곡류, 과자류, 육류, 유제품, 음료 및 주류,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27종



참고 3

계량·측정 통계

□ 법정계량에 의한 상거래 현황

○ '16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약 33.2%가 법정계량기로 거래

(단위: 조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국내 총생산(GDP)	1,377조	1,429조	1,486조	1,564조	1,730조
법정계량기 거래	696조	684조	668조	654조	575조
비율	50.5%	47.9%	45%	41.8%	33.2%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 한국계량측정협회

□ 계량기 추정보급대수(검정, 재검정 건수 등으로 추정한 보급대수)

주유기	요소수 미터	LGP 미터	냉매 탱크	오일 미터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적산 열량계	전력량계	저울 (10t이상)
177,045	3,600	12,329	1,244	3,021	15,700,000	16,190,323	1,700,000	248,008	309,779	321,621

□ 계량산업 관련 업체 현황('16년 기준, 건수, %)

구분	총 계	제조업체	수리업체	증명업체	수입업자	자체 수리자	자체검정 사업자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
업체수	2,484	312	551	1,551	39	8	4	19
(비율)	100%	12.6%	22.2%	62.4%	1.6%	0.3%	0.2%	0.8%

□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현황 ('17년 기준, 건수, %)

구분	총 계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자체검정
건수	12,620,488	1,697	12,048,429	182,091	388,271
(비율)	100%	0.1 %	95.4%	1.4 %	3.1 %

참고 4

법정단위 사용 정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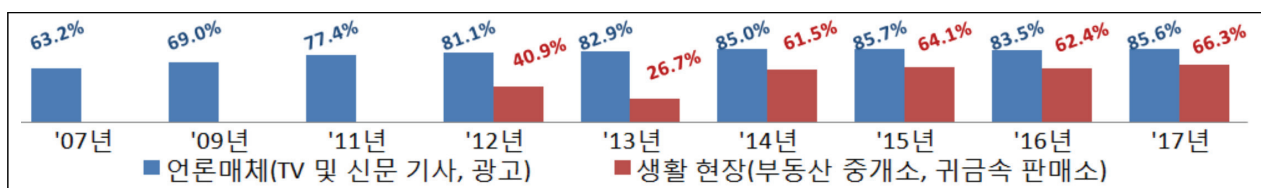
□ 추진 배경 및 경과

- (배 경) 비법정단위 사용은 거래습관이 원인으로 개인에게 당장의 불편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나, 국가경제활동의 기본수단에 혼란을 야기하므로 국가주도의 국민 인식전환 정책이 필요
- (경 과) 우리나라는 1961년에 계량법을 제정하여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단위로 채택하고, 非법정단위의 사용을 금지
 - * 국제단위계 : 미터법이 현대화 된 것으로 m, kg 등이 기본 단위

1961	1964	1983	2007	2010	2013	2017
계량법 제정 (국제단위사용)	미터법 시행 (‘평’ 사용 인정)	‘평’ 사용 금지 (국제단위사용)	홍보·계도 본격화 (평→㎡ 전환 우선)	과태료 부과 (일간지 광고)	과태료 대상 확대 (인터넷, 현수막, 부동산 업소 광고)	IT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디지털 매체 기사 광고)
▶ (‘07년) 일제 잔재인 ‘평(坪)·돈’ 단위 사용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인치, 야드, 파운드 등의 단위는 계도 중심으로 추진 ▶ (‘09년)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법령, 지자체 조례 등 제도 정비 ▶ (‘16년) 미래 경제주체인 어린이 및 10·20대를 겨냥한 SNS 기반 홍보 전개						

□ 법정단위(㎡) 정착 현황

- (현 황) 언론매체의 법정단위(넓이, ㎡) 사용률은 80%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생활주변 현장은 60%대로 법정단위 사용의 정착이 저조



* 조사대상 : TV(KBS, MBC, SBS, mbn, YTN),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15개사

- (대국민조사) ‘08년 대비 ‘18년 대국민 법정단위 사용 의무 인식도가 저하(80.6%→72.8%), 정책인지 경로는 대중매체·인터넷 순으로 조사
 - 또한, 주택 거래의 “평”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의류, 전자제품의 인치(inch)도 계도 필요성 제기
 - * 국내 거주 만14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2,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8.18.~8.31.)

참고 5

계량정보시스템 현황

- (배경) 전국 지자체 및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계량기 시험·검사·단속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계량업무 처리의 체계화

* 2개의 형식승인, 1개의 검정기관,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등에서 계량 관련 정보가 전자·비전자문서 형태로 연간 약 900만건 이상 발생

Before	Af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체계화 계량업무처리 ·이해관계자들간의 정보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체계화 및 계량기의 생애주기 관리체계* 마련 ·이해관계자들간 정보 공유

* “최초시험(형식승인) → 검정 → 정기검사(재검정) → 폐기”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



< 계량정보시스템 개념도 >

- (법정계량기 관리) 계량정보시스템(www.metrology.kr)을 통해 승인 및 검정·재검정 등 시험 진행상황과 최종승인 여부 등 계량기 이력정보의 관리 및 공유

* 시스템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 '15(3,528)→'16(3,560)→'17(4,353건)→'18(5,722건)

- (수입계량기 관리) 법률로 규정된 수입계량기 형식승인·검정 여부가 통관 단계에서 관리되도록 계량정보시스템과 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을 연계
- (사전알림) 계량기 사용자에게 재검정·정기검사 일정 알림을 제공

참고 5

계량소비자감시원 제도 운영 현황

□ 소비자감시원 운영 현황

- 소비자에 의한 계량분야 시장감시 강화를 위하여 '15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를 계량감시원으로 위촉하고 감시활동을 지원

* ('15년) 2개 단체/5개 지역/60명 → ('16년) 3개 단체/15개 지역/150명 → ('17년) 7개 단체/15개 지역/159명 → ('18년) 6개 단체/20개 지역/184명



주요업무

- ① 비법정단위 사용여부 확인
- ②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 ③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 ④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 지원

감시계획

- ① 부동산중개사무소 비법정단위 사용 감시
- ② 전통/수산물/약재 시장 저울 사용 감시
- ③ 합동특별점검 업무 보조 등

□ '19년 소비자감시원 운영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 운영 등 계량기 자율관리 확대에 따라 민간 자발적인 사후관리체계의 감시활동 강화

- 소비자감시원 인력 확대

- 광역도시중심에서 위성도시로 활동지역을 확대(5개 단체 20개 지역 190명)

- 소비자감시원 주요 활동

- 정기검사 수검 확인 및 추석 특별점검 지원
- 주유소 내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재검정 수검 확인
- 비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실시(단위 및 모니터링 대상 확대)
 - * 단위 확대(넓이 → 넓이, 길이, 무게), 모니터링 대상 확대(오프라인→온·오프라인)

- 소비자감시원 교육 강화 및 시스템 개선

- 소비자감시원의 감시역량을 높이고, 감시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5개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
- 감시활동 효율성과 감시사후관리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 툴 개선

참고 6

법정계량관련 국제 대응 현황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étrologie Légale)

- (설립목적) 계량기의 국제적 통일로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 1955년 24개국이 참가한 프랑스 파리에서 OIML 협약 체결
 - ※ OIML 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회원국 현황('17년 기준)
 - 정회원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62개국, 준회원국은 필리핀, 이란, 북한, 우크라이나 등 66개국
 - 우리나라는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1978년 가입
- (주요활동)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통일을 위한 법·제도·기술관련 국제기준 제정 및 국제상호인정제도 운영
 - 상거래, 안전, 보건 및 환경 분야에서 소비자 등 일반국민의 보호를 위한 법정계량제도 규제 및 개발도상국의 법정계량기관을 지원 등

□ 아·태 법정계량 포럼(APLMF, Asia-Pacific Legal Metrology Forum)

- (설립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가의 정부 간 회의로,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조화로 기술장벽 해소 및 국제교역 촉진을 위해 1994년 설립
- 회원국 현황('17년 기준)
 - 정회원국: 20개국(한국, 호주,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 준회원국: 6개국(부르나이,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라오스)
- (주요활동) 아·태 지역 내의 법정계량기관들 사이의 상호 신뢰 유지 및 개발 / 법정계량분야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 및 행정 장벽 제거 등

□ 한·일 계량협력위원회

- **(배 경)** 1975년 양국의 계량측정분야 상호 기술협력을 위해 「한·일 계량계측표준협력위원회」를 구축, 이후 2016년 법정계량중심의 「한·일 법정계량협력위원회」로 전환하여 개최
- **(추진경위)** 한·일과학기술장관회담에서 위원회 설립 합의('75.8월) / (韓) 공진청 국립공업시험원—(日)공업기술원 계량연구소간 회의('76~'00) / (韓)산업부 기술표준원—(日)계량표준종합센터간 회의('01~현재)
- **(주요활동)** 상설 대화기구로 계량협력위원회를 구축하여, 계량 및 기술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계량 기술 및 법규 등 양국 관심사항 논의
* 개최방식 : 매년 하반기 짝수년은 우리나라 홀수년은 일본에서 개최

□ 한·중 계량협력위원회

- **(배 경)**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 양국 간 계량기 교역 증대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등 법정계량분야의 협력 채널 필요에 따라, 2016년 한중법정계량협력 양해각서 체결
- **(추진경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간 한·중 계량협력 양해각서 체결하고, 제1회 한중 법정계량협력위원회 회의 개최('16.3월) / (韓)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中)시장관리감독총국(SAMR)간 회의('18~현재)
- **(주요활동)** 계량 및 기술 정보교환 및 R&D 공동 수행, 국제 및 지역별 기구에서의 상호협력 등을 도모
* 개최방식 : 매년 상반기 홀수년은 우리나라 짝수년은 중국에서 개최

사 업 명
(8) 국가표준활성화 (3731-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9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가표준활성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오광해	-	전설 연구사
		043-870-5340	-	043-870-534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표준활성화	4,031	4,054	4,054	7,112	6,229	2,175	53.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058	4,058	4,031 [1,897]	-	27	4,054	4,054	4,054	4,047 [1,694]	-	7	6,229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1,101	1,101	1,076	-	25	1,070	1,070	1,070	1,063	-	7	1,015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1,797	1,797	1,797	-	-	1,594	1,594	1,594	1,594	-	-	2,952
· 표준화실태조사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	-	95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500	500	500	-	-	750	750	750	750	-	-	713
· 표준이행확산 기반구축	30	30	30	-	-	30	30	30	30	-	-	29
· 청소년표준올림피아드	80	80	80	-	-	70	70	70	70	-	-	67
· 표준화 교육	150	150	149	-	1	140	140	140	140	-	-	133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	-	-	-	-	-	-	-	-	-	-	940
· 국가표준화혁신 생태계조성	300	300	299	-	1	300	300	300	300	-	-	285
○ 비목별 분류(합계)	4,058	4,058	4,031 [1,897]	-	27	4,054	4,054	4,054	4,047 [1,694]	-	7	6,229
· 일반수용비(210-01)	140	140	140	-	-	110	110	88	88	-	-	126
· 시험연구비(210-13)	876	876	876	-	-	1,117	1,117	1,117	1,117	-	-	1,061
· 일반용역비(210-14)	210	210	209	-	1	200	200	222	222	-	-	191
· 국내여비(220-01)	17	17	17	-	-	16	16	19	19	-	-	15
· 국외업무여비(220-02)	9	9	8	-	1	8	8	5	5	-	-	7
· 사업추진비(240-01)	39	39	39	-	-	39	39	39	39	-	-	35
· 일반연구비(260-01)	600	600	576	-	24	600	600	600	593	-	7	1,070
· 사업출연금(350-02)	1,897	1,897	1,897	-	-	1,694	1,694	1,694	1,694	-	-	3,047
·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	42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270	270	269	-	1	270	270	270	270	-	-	2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WTO·FTA에 따른 국제표준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가 간 상호협력 확대 등을 위한 국제표준 수준의 국가표준 개발·정비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광범위한 산업 환경 변화에 적기 적응하기 위해 국가표준화체계, 단체표준화체계의 신속한 혁신을 통하여 기업 및 소비자 신수요에 적기 대응
- 초·중·고 표준화 교육,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 및 세계 표준의 날 기념 유공 포상 등을 통한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표준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표준화 정책 개발, 전략분야 표준화 로드맵 등 표준 정책 연구(학술연구용역), 국가표준(KS) 검토·심의 등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국가표준의 개발·정비 등의 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및 운영(표준안 개발)
- **(표준화 실태조사)** 「산업표준화법」 개정(시행 '15.7월)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 표준화 전략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사업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라 KS인증 제품에 대해 매년 불시 점검을 실시, 불량 KS인증 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세계 표준의 날」을 기념하여 표준화 활동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포상을 통한 노고 치하 및 대국민 표준 인식 제고
- **(청소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국내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준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표준에 대한 인식제고 도모
- **(표준화 교육)**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생활 속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미래 국제표준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시범학교, 방문교육, 교사연수)
-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 4차 산업혁명 관련 표준 선도국 및 국제기구와의 표준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포럼을 우리나라 주도로 발족,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의 국내정책패널 운영을 통한 표준 선점 기반 마련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한 제품에 목적이 다른 다수 법정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및 창구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127조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 평가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산업표준화법
 -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5조의2(출연금), 제6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협의), 제15조(제품의 인증), 제20조(시판품조사 등),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제30조의2(실태조사), 제31조(보조금)
- WTO/TBT협정 제2조 제4항(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기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② 추진경위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 국가표준제도기반구축(국가표준 종합정비체계의 확립, 국가표준체계 혁신, 국가표준화 활동기반 강화), 적극적인 국가표준선진화 활동 전개(성문표준 세계화, 전략적 표준화, 국제표준 활동강화) 등을 수립
- 2006.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중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
 - *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국가표준·기술기준 제정시스템 혁신,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 도입), 민간 표준활성화(민간표준화 역량 육성, 생산자 표준제정 촉진, 표준인력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 2007.5. 산업표준화법 개정(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민간의 표준 참여확대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2007.6.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7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08.7.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8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09.6.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0.6.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 신성장 원천기술 표준개발 확대, 원천기술 국제표준 선점, R&D-표준화 연계 활성화 등
 - *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 기업 친화적 인증제도 개선, 사용자 편의형 표준지원, 측정표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선도 등
 - *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 선진형 표준체계 구현, 민간 표준참여 향상, 표준관련 부처협업 등
- 2011.4.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2.3.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2.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 : 부처별 인증 중복해소, 기간·비용단축, 규제 합리화 등
 - * 국가표준·인증체계 개선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개편, 기술기준과 표준과의 조화 및 중복성 사전검토, 기업수요 중심의 KS인증제도 개선 등
 - * 중장기 글로벌 표준강국 발전 방안 : 원천기술 표준·인증 확보, 표준·인증외교 강화 등
- 2013.6.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4.3.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5.5.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6.4.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제조기반 서비스산업 표준화 추진,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등
 - * 기업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 기업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체계 강화, 산업의 측정표준 품질 선진화 등
 - *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 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안전한 생활 표준화 강화 등
 - *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 민간표준 활동강화, 전문인력 양성,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등
- 2017.4.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7.12. 『유망 신산업(12대 분야) 표준화 로드맵』 수립
- 2018.5.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8.9.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의 개선과제로 발표
 - * 기업애로 해소 :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부담 완화(LED 조명 제품 관련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한 원스톱 창구(국가기술표준원 내) 마련 및 유사·동일시험항목의 절차 비용 면제
- 2019.5.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9.3.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9.4.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2019.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 수립 : 혁신성장 분야 국제·국가표준 개발 및 표준화 기반 조성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사업기간,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산·학·연 및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표준협회	100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산업표준화법 제5의2, 제30조의2, 제31조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20년도 현재 확정 : 6,229 백만원 >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19) 1,070백만원 → ('20) 1,015백만원

- 국가표준화체계 운영 개선을 위한 법령·제도 연구, 기술적·사회적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핵심·선도 산업 분야 표준화 전략 수립
- 표준안 심의, 부처별 표준 중복성 검토 등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산출내역

- 국내여비 : ('19) 160회 × 10만원 = 16백만원 → ('20) 160회 × 9.5만원 = 15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 ('19) 2회 × 4백만원 = 8백만원 → ('20) 2회 × 3.5백만원 = 7백만원
- 일반수용비(인쇄비, 발표수당, 회의비 등)
: ('19) 1식×40백만원 = 40백만원 → ('20) 1식×40백만원 = 40백만원
- 시험연구비(기술·전문위원회 수당)
: ('19) 204회×15만원×12명 = 367백만원 → ('20) 204회×14만원×12명 = 348백만원
- 사업추진비 : ('19) 1식×39백만원 = 39백만원 → ('20) 1식×35백만원 = 35백만원
- 일반연구비(학술연구용역)
: ('19) 40과제 × 15백만원 = 600백만원 → ('20) 38과제 × 15백만원 = 570백만원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2,952백만원(사업출연금)

- 산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신속히 발굴·반영하기 위해 국가표준 개발·관리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민간주도형 국가표준화생태계 운영('07~)

▪ 산출내역 :

('19) 1,594백만원 = 고유표준 개발(20종 × 20백만원) + 국제표준 부합화(120종 × 1백만원) + 국가표준 정비(확인·개정·폐지 825종 × 0.75백만원) + 기관별 TC/SC 대응(455백만원 = 65개 기관 × 7백만원)
→ ('20) 2,952백만원 = 고유표준 개발(45종 × 20백만원) + 국제표준 부합화(230종 × 1백만원) + 국가표준 정비(확인·개정·폐지 1,820종 × 0.75백만원) + 기관별 TC/SC 대응(325백만원 = 65개 기관 × 5백만원) + 대표기관 운영비(130백만원)

○ 표준화 실태조사 : 95백만원(사업출연금)

- 「산업표준화법」 개정(시행 '15.7월)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 산업분야별 국내 기업의 표준화 및 인증제품의 활용 실태 등을 조사

▪ 산출내역 : ('19) 1식 × 100백만원 = 100만원 → ('20) 1식 × 95백만원 = 95백만원

○ **KS제품 시판품조사 : 713백만원**(시험연구비)

- 불량 KS제품 시중유통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KS인증제품 중 품질취약 품목을 중점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표시제거,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 수행(제품구매/현장채취 → 공인시험기관 의뢰 → 행정조치)
- 산출내역 : ('19) 500개 업체 × 1회 × 1.50백만원 = 750백만원
→ ('20) 500개 업체 × 1회 × 1.43백만원 = 713백만원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 29백만원**(일반용역비)

- 세계 표준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및 표준화 활동 유공자 포상(행사 대행업체 용역계약)
- 산출내역 : ('19) 운영비 20백만원 + 인쇄비 10백만원 = 30백만원
→ ('20) 운영비 20백만원 + 인쇄비 9백만원 = 29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 67백만원**(일반용역비)

- 국내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준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인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표준에 대한 인식제고
- 표준화 교육 주도국으로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국제대회로 개최('14~)하고 있음
- 양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IEC에서 표준 관련 국제회의 시 대표적인 표준교육 우수사례로 소개될 정도
- 산출내역 : ('19) 과제개발, 홍보, 심사 등(34백만원) + 대회진행 통역(5백만원) + 문화교류 활동(10백만원) + 임차료(20백만원) + 국내여비(1백만원) = 70백만원
→ ('20) 과제개발, 홍보, 심사 등(34백만원) + 대회진행 통역(5백만원) + 문화교류 활동(7백만원) + 임차료(20백만원) + 국내여비(1백만원) = 67백만원

○ **표준화 교육 : 133백만원**(일반수용비 38백만원 + 일반용역비 95백만원)

-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생활 속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미래 국제·국가표준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표준교육 시범학교 : 지정학교에서 1년간 다양한 활동(포스터 그리기, 표준 신문만들기 등)을 통해 표준에 대한 교육
 - 찾아가는 표준교육 : 표준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1시간동안 표준과 관련된 강의를 제공(1학교당 100여명내외 교육 실시)

- 산출내역

- 시범학교 지정운영 : ('19) 4개교×100명×10만원 = 40백만원
→ ('20) 4개교×100명×9.5만원 = 38백만원
- 찾아가는 표준교육 : ('19) 50개교×100명×1만원 = 50백만원
→ ('20) 50개교×100명×0.95만원 = 48백만원
- 교사연수·교재개발 등 : ('19) 1식×50백만원 → ('20) 1식×47백만원

-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 조성 : 285백만원(민간위탁사업비 257백만원, 일반수용비 28백만원)

- 4차 산업혁명 대응 표준화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표준포럼 발족 및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민·관·지자체 합동 국내정책패널 구성·운영
- 진행해온 스마트시티 분야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기 보유하고 있는 분야인 수소, 바이오,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
- 산출내역 : ('19) 국제표준포럼·국내정책패널 개최 1식 x 270백만원 + 인쇄비·회의비 등 30백만원 = 300백만원 → ('20) 국제표준포럼·국내정책패널 개최 1식 x 257백만원 + 인쇄비·회의비 등 28백만원 = 285백만원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 ('20 신규) 940백만원

(일반수용비 20백만원, 일반연구비 5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420백만원)

- 하나의 제품에 목적이 다른 다양한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함과 부담(시간·비용 등)을 완화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
-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정부는 제품인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II)”의 개선과제로 발표('18.09.27.)
- 기업불만도 및 인증수요가 높은 8대 전문산업분야*에서 50개 품목을 5년간 발굴하고, 원스톱처리 창구를 통한 지원 추진
- * 기계, 전기전자, 금속, 건설, 식품, 환경화학, 섬유, 정보(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증분야)
- ** 사례) LED조명 제품, 밸브류, 배관류 등 수도기자재,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 김, 다시마 등 식품류 등

- 산출내역

- 조사·분석 및 처리방안 마련(일반연구비) : 5개 품목 × 100만원 = 500백만원
- 창구운영(민간경상보조) : 5개 품목 × 54백만원 = 270백만원
- 프로세스 종합설계(민간경상보조) : 1건 × 150백만원 = 150백만원
- 설명회 개최 등(일반수용비) : 4회 × 5백만원 = 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산업·신수요분야의 국가표준개발율 (단위: %)	목표	65	70	75	75	75	국제표준화 동향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화 우선 순위, 예산 등을 감안하여 신산업· 신수요 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율 목표치 설정	Σ 신 산업 · 신 수요분야 국가 표준 개발수 / Σ 국 가 표 준 개발수*100	국 가 기 술 표 준 원 내부 통계 자료, 홈페이지
	실적	66	73	75	76	-			
	달성도	100	104	100	1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16.6월말 KS 20,52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개정 고시(3,667종) : 제정 170종, 개정 1,510종, 확인 1,689종, 폐지 298종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개발협력기관 58개 기관 지정 : KS 20,521종 중 15,198종(74%) 관리 이양 ○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시장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재산 및 신체 위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KS인증제품의 품질 확보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확대 추진 ○ 표준올림픽아드 국제대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예선을 거치고 우리나라의 본선에 참여하도록 안내 - 일본, 페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르완다 등 5개국 참가 예정 -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대회로 도약 준비 ○ 찾아가는 표준교육 대상학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2개 시·도 1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17.12.31. 기준 KS 20,307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개정 고시(5,404종) : 제정 339종, 개정 1,406종, 확인 3,478종, 폐지 181종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개발협력기관 56개 기관 지정 : KS 20,307종 중 15,313종(75%) 관리 이양 ○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시장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재산 및 신체 위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KS인증제품의 품질 확보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확대 추진 ○ 표준올림픽아드 국제대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예선을 거치고 우리나라의 본선에 참여하도록 안내 -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대회로 도약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표준교육 대상학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2개 시·도 1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 ○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 개최(‘17.11.22, 국회 헌정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이 만들어 갈 더 똑똑한 스마트시티, 독일 인더스트리 4.0을 성공으로 이끄는 표준화 전략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표준의 역할을 논의하는 장 마련 (주최 : 국회 김태년 국회의원실,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참석 : 정세균 국회의장, 김태년 의원, 산업부 차관, 국가기술표준원장, ISO 차기회장, IEC 사무총장, 독일 인더스트리 4.0 표준화위원회 이사,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등 300여명)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유효 KS 20,507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 441종, 개정 1,392종, 확인 2,733종, 폐지 216종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개발협력기관 62개 기관(분야) 지정 : KS 20,396종 중 15,301종(75%) 관리 이양 ○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시장사후관리 강화(299건 조사, 부적합 111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재산 및 신체 위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KS인증제품의 품질 확보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 표준올림픽아드 국제대회 실시(‘18.8.8~10, 용인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예선을 거치고 우리나라의 본선에 참여하도록 안내 (국내·외 10개국 중·고등학생 48팀(140명) 및 지도교사, 심사위원 등 총 200명 참석) -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대회로 도약 준비 ○ 스마트시티 아시아지역 포럼 개최(‘18.6.20.~21,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지역에 맞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표준화 공조 및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협력의 장 마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9개국 180여명 참석) - 동 포럼을 계기로, 향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공동대응 및 지역표준을 통한 아시아 교역활성화를 위한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 유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유효 KS 20,59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 103종, 개정 167종, 확인 92종, 폐지 17종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개발협력기관 63개 기관(분야) 지정 ○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시장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재산 및 신체 위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KS인증제품의 품질 확보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확대 추진 ○ 표준올림픽아드 국제대회 실시(‘19.7.23.~25., 용인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예선을 거치고 우리나라의 본선에 참여하도록 안내 (국내·외 10개국 중·고등학생 49팀(140명) 및 지도교사, 심사위원 등 총 200명 참석) -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대회로 도약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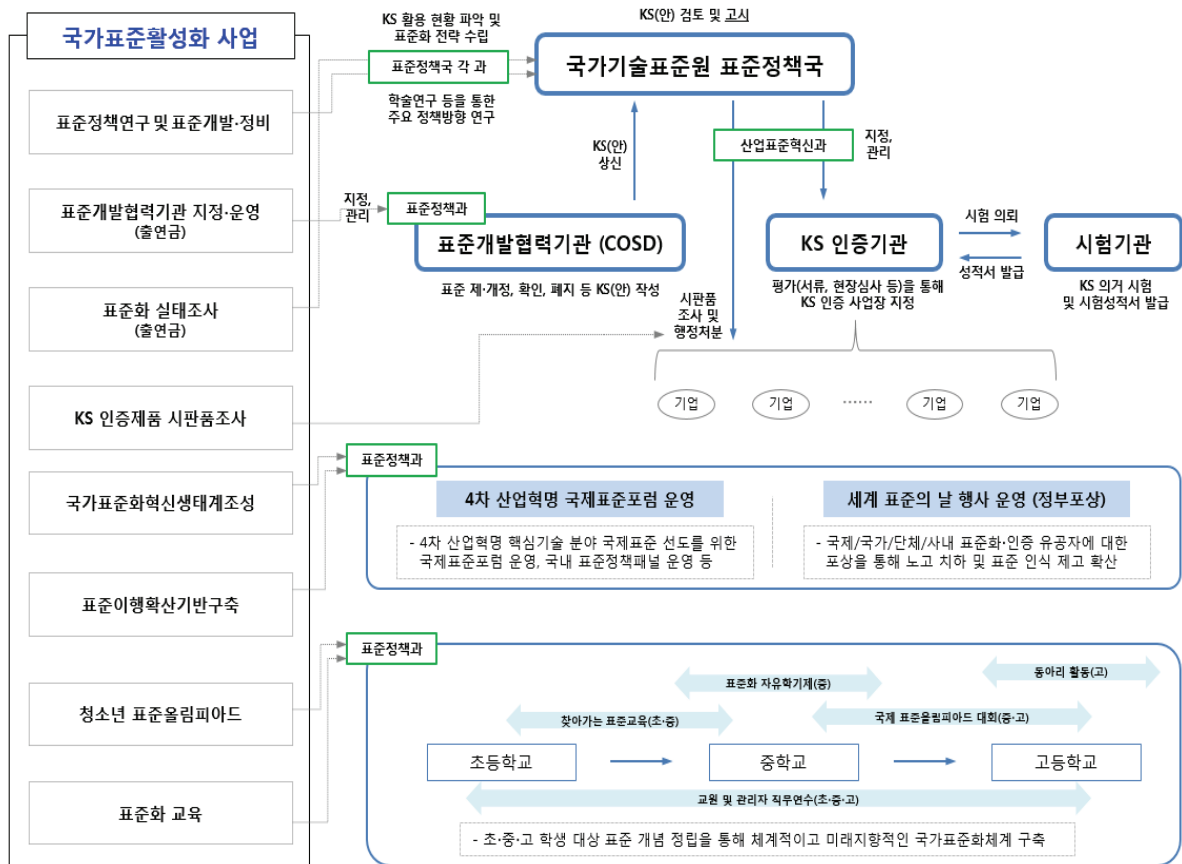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국제표준 추세 및 산업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국가표준 개발·정비 지속 추진
 - * 국가표준 개발·정비(개정, 폐지 및 확인) 건수 : ('16) 3,667종 → ('17) 3,700종 → ('18) 4,782종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운영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급속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 및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 * 국가표준관리 민간이양 확대 : ('16) 74% → ('17) 76% → ('18) 76%
- 청소년표준올림피아드대회를 전 세계 청소년(10개국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 행사로 정착
- 국제표준포럼 개최 및 국내 표준정책패널 운영을 통해 ①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의 수출을 위한 국제표준화 주도 기반 마련, ②아시아 지역표준화기구 설립 주도, ③향후 기술 간 호환성 확보 및 중복투자 방지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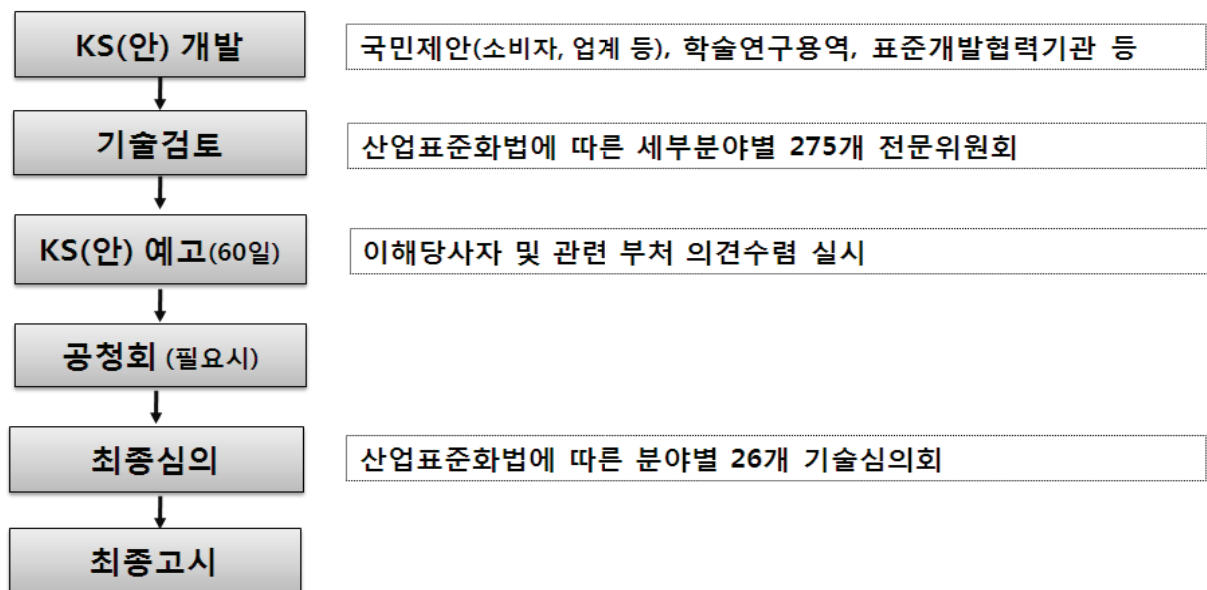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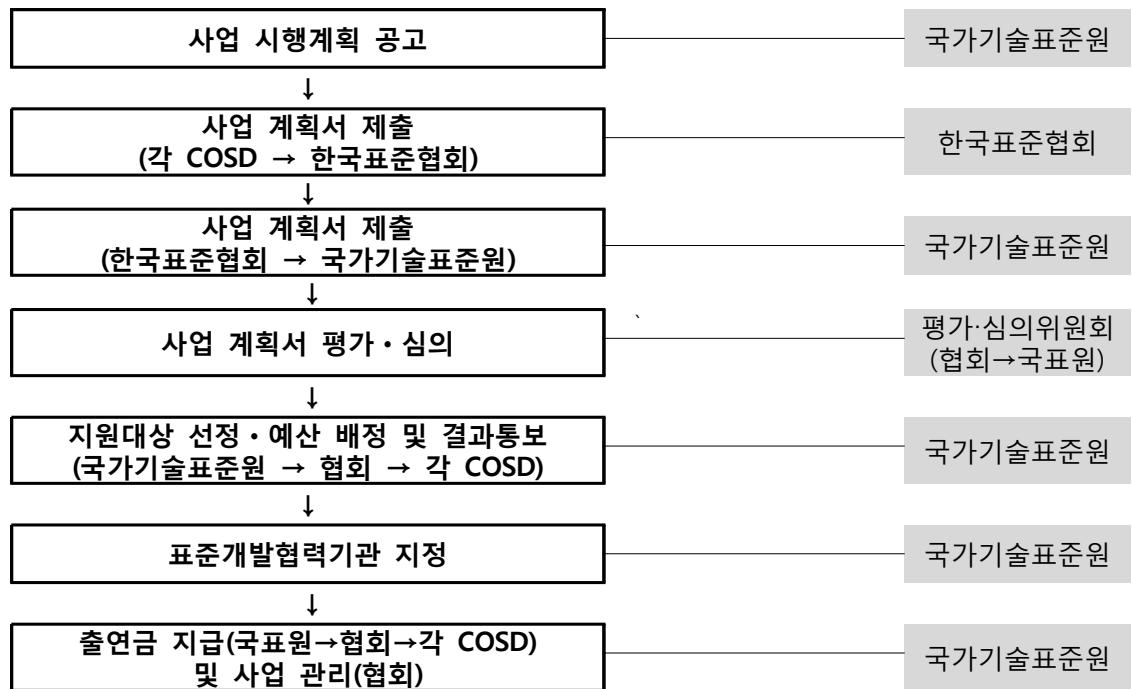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표준 제·개정 절차> (산업표준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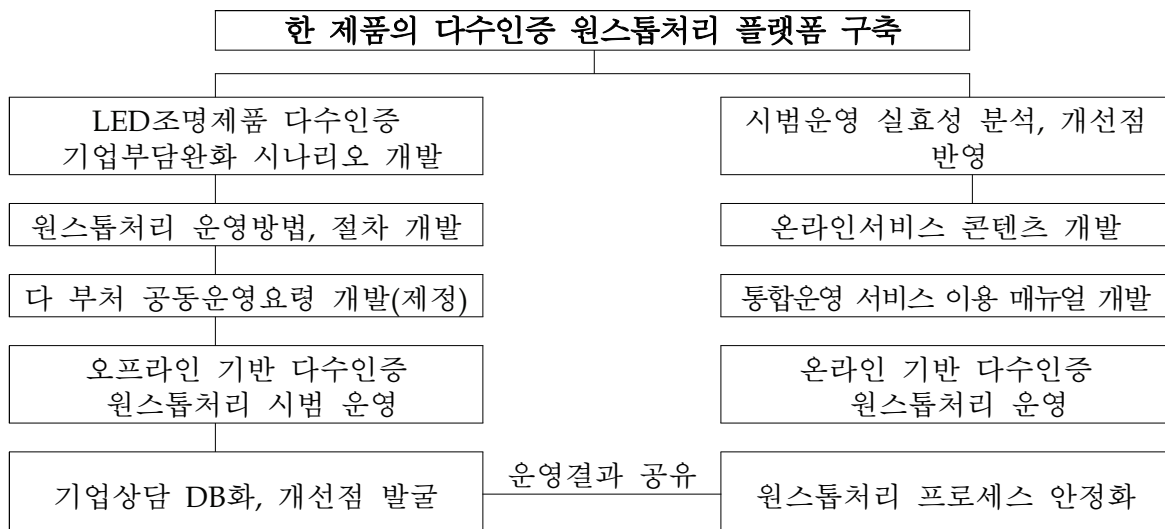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추진체계>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 운영요령)



< 세계 표준의 날 행사, 표준올림피아드 및 표준화 교육 추진체계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표준의 날 행사)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포상자 선정 ▶ 기념식 기획 ▶ 기념식 개최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과제 개발 ▶ 대회 홍보 ▶ 예선대회 개최(온라인) ▶ 본선대회 개최(합숙) ▶ 결과 시상
표준화교육	연구학교 지정 ▶ 교사 W/S ▶ 연구학교 운영 ▶ 중간평가 실시 ▶ 운영보고회 개최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체계 >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4,058	4,054	4,459	4,905	4,905	
'19~'23		4,054	7,112	6,342	6,542	6,74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6년 국회('15년 결산 상임위)

- (지적사항) 연구개발 과제의 연도말 집행을 지양하여 이월 방지 필요
 - (답변) 시급한 사회적 이슈제기에 대한 정책 마련 및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는 조기 공고 및 과제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비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 '18년 국회('18년 결산 산중위)

- (지적사항) 사업의 목적에 맞는 표준화교육 직무연수 운영 필요
 - (답변) 표준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원 대상 직무연수 및 기능함양 교육을 교육 취지에 맞도록 다 회에 걸쳐 실시하겠음

○ '18년 국회('19년 예산편성 산중위, 예결위)

- (조배숙 의원 질의) “LED조명 제품, 다양한 인증으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원스톱처리창구 구축·운영에 7억원(신규) 세부사업 반영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18년 통합 재정사업 일반재정 분야 자체평가 결과 결과 : 우수 ('18. 4월, 산업부 자체 평가위원회, 74개 사업 중 14개 사업(~20%) 우수)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본 사업으로 진행해오던 국가표준 관련 업무를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운영 예산의 대폭 증가에 적극 부응하고자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KS) 개발에 집중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국가표준화체계 구축
- '23년까지(누적) 신산업 분야 고유표준 300종 개발 목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COSD 예산	1,594 백만원	2,952 백만원	3,515 백만원	4,005 백만원	4,330 백만원
표준 개발	고유 20종 (부합화 120종)	고유 45종 (부합화 230종)	고유 65종 (부합화 260종)	고유 80종 (부합화 300종)	고유 90종 (부합화 350종)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4,287	4,287	25	-	-	-	4,312	4,283	99.9	99.3	-	29
2017	3,919	3,919	-	±8	-	-	3,919	3,892	99.3	99.3	-	27
2018	4,058	4,058	-	-	-	-	4,058	4,031	99.3	99.3	-	27
2019	4,054	4,054	-	±25	-	-	4,054	4,047	99.8	99.8	-	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1,911	1,911	1,911	1,911	-	1,911	1,911	-	-	100
2017	1,872	1,872	1,872	1,872	-	1,872	1,872	-	-	100
2018	1,897	1,897	1,897	1,897	-	1,897	1,897	-	-	100
2019	1,694	1,694	1,694	1,694	-	1,694	1,694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6	-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된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사업에 대하여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변경 하였으며,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29백만원 불용
2017	- 수용비성 경비 부족으로 인해 일반용역비(210-14) 8백만원을 시험연구비(210-13)로 전용하였으며,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27백만원 불용
2018	- 일반연구비(학술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7백만원 불용
2019	- 일반수용비(210-01) 22백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로 전용(용역비 충당) - 국외업무여비(220-02) 3백만원을 국내여비(220-01)로 전용(국내여비 부족) - 일반연구비(학술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7백만원 불용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국가표준활성화 사업과 국정과제 간 연관성 [34-6,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

- (배경) 선진국들은 이미 표준을 시장선점의 도구로 인식하고, 핵심 기술의 신시장 선점을 위해 민·관, 국가 간 협력* 강화 중
 - 현재 신산업 분야 표준화는 기술의 융복합화 특성에 따라 「先 시스템·플랫폼 표준화 → 後 제품·부품 표준화」의 하향식 표준방식*
 - * (예) 자율주행차 : (先) 교통시스템 - 위성정보시스템 표준 → (後) 자동차 부품표준
 - * (美·獨·日) 신기술 분야 플랫폼 표준화전략으로 시장창출 선도
- (필요성)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술·제품의 판매 및 수출이 가능하려면, **성능과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도구인 '인증'과, 그 기준인 '표준'이 필수**
 - (예시) 수소산업 관련 표준화 미비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 국내 A 업체가 실내운용 지게차용 배터리를 연료전지로 대체하여 납품하려 하였으나, 관련업체(수요처, 보험사 등)에서 안전담보를 위해 KS인증을 요구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상태
 - 지게차 등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선도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표준) 미비로 판매가 지연
 - 기술발전·시장변화 속도에 적기 대응하고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국가표준화체계 운영이 필요
 - KS 개발 및 제·개정, 시판품 조사를 통한 인증제품 품질 유지, 신산업 분야 국가·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및 협력 강화,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등 국가표준화체계 운영 관련 유일 예산

참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20.] 주요 내용

비 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제표준화 선점을 통한
세계 4강 표준 주도국 도약

목

『국제표준 300·60』 프로젝트 추진

표

['23까지] 국제표준 300종 개발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60명 확보

표준화 추진 전략

1 혁신성장 산업 표준 개발

- ① 국제표준 핵심분야 중점 개발·제안
- ② 초연결, 스케일업, 안전성 심층기반 표준 개발

2 산업정책과 표준 연계 강화

- ③ 산업정책 연계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 ④ 정부·민간 R&D 표준 연계

3 표준화 혁신기반 조성

- ⑤ 표준정책 거버넌스 강화
- ⑥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확대
- ⑦ 기업의 표준화 활동 지원
- ⑧ 4차 산업혁명 표준 전문인력 양성
- ⑨ 표준특허 활성화

세 부 추 진 과 제

참고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주요 내용 : 국가표준 개발 확대

1.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9.3.)

□ 10대 표준화 분야 국가표준 300종 개발 추진

비전·목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기술강국으로 도약

▶ 주력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17)8.5% → (’23)12%	▶ 신산업 1위 대비 기술수준 (’17)80% → (’23)84%
▶ GDP대비 기업R&D투자 비중 (’17)3.6% → (’23)4.3%	▶ 산업체 연구개발인력 비중 (’17)9.4% → (’23)12%
▶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율 (’17)38% → (’23)43%	

추진전략

1.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성 강화

① 시장 변화에 대응한 R&D 투자전략 수립
② 데이터 기반의 분야별 투자 규모 및 가이드라인 선정

2. 산업혁신 선도(leading innovation) 기술개발 체계 구축

③ 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 도입
④ Plus R&D를 통한 기술개발 시간 단축·성과 극대화
⑤ 융합 기획 및 목표 중심 성과관리체계 추진

3. 국가혁신체계를 고도화하는 산업기술 기반 구축

⑥ 데이터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의 신산업 창출 환경 조성
⑦ 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

4. R&D 성과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⑧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체계 구축
⑨ 권역별 특화된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
⑩ 신기술의 시장출시 촉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추진

- 수립 배경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이끌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수립
- 기본 방향

① 투자 전략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배분
② R&D 체계 :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
③ 산업기술 인프라 :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④ 성과 창출형 생태계 :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 표준화 전략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기 대응하는 전략적 표준화를 위해 10대 표준화 분야를 선정하여 국제표준 300종, 국가표준 300종 개발 추진(~’23)
 - 기업의 국제표준 역량 강화 및 표준인력 양성, R&D 과제에 표준 특허 연계 시스템 구축, 국제표준화 기구 내 리더십 확보 등 병행

2.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경제관계장관회의, '19.3.)

□ (추진목표) '30년까지 충전소부품, 연료전지 제품 등 30건을 KS인증 품목으로 지정

- '21년까지 국제표준 중 KS로 채택되지 않은 국제표준 18종을 KS로 채택하고, 기업의 활용을 통해 제품 국산화를 촉진
- '30년까지 충전소부품(밸브 등), 연료전지 제품(가정용, 지게차용 등) 30건을 KS인증 품목 지정, 상호운용성 실증을 통해 제품의 성능·안전 확보

1. 제도 개요

- (의의) 국가표준의 개발·정비 등의 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제도 도입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및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 국가표준 개발·관리를 민간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장의 표준화 수요를 적시 반영하고, 정부는 관련 정책 수립에 집중

<해외 유사 제도>

[미국] 표준개발기관(SDO, Standard Developing Organization) 246개(ANSI 인정)

[일본] 특정표준화기관(CSB, Competent Standardization Body) 3개(JISC 인정)

- (지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 업무규정, 위원회 구성 능력 등을 갖춘 기관 지정

- 지정된 COSD는 국가표준 개발·정비를 위한 산업표준개발사업 수행

*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년 평가를 통해 연단위로 사업지원

2. 추진 경과

- 「국가표준행정체계개편방안」에 근거하여 COSD 제도 도입('08년)

- 분야별 7개 협의체 중심의 운영체제로 개편('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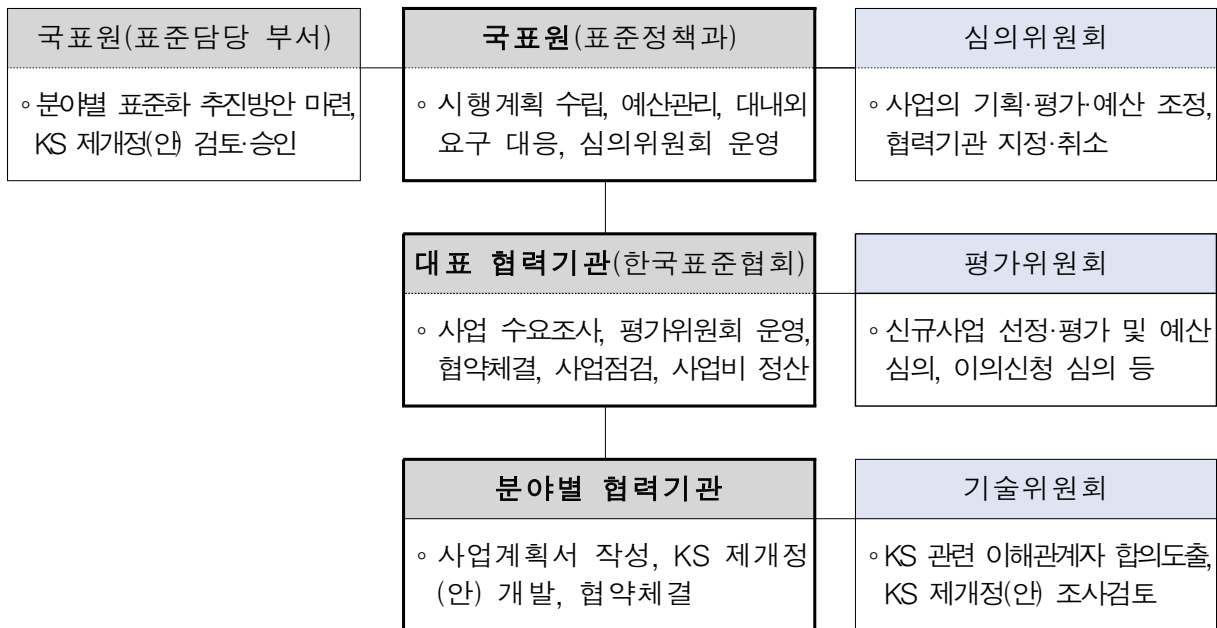
- COSD에 출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산업표준화법」 개정('15.1.28.)

- COSD 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18년)

3. 추진 체계

- 정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 COSD를 지정하며, 1개의 대표기관(한국표준협회)을 포함한 다수의 COSD로 구성되어 있음
- COSD는 국가표준의 원안 작성 및 기술적 검토를 담당하며, 대표기관은 COSD 기관과의 협약 체결, 사업계획 평가 등의 역할 수행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운영 프로세스 >



□ 검토 배경

○ 하나의 제품에 목적이 다른 다수인증을 취득해야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통한 기업 지원

- LED조명 제품의 경우, 강제인증 3종, 임의인증 4종 등 총 7종*의 상이한 인증 취득으로 기업경영에 부담

* **강제인증 3종**(KC안전, KC전자파, 효율등급), **임의인증 4종**(KS, 고효율, 녹색, 환경표시)

*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의 개선과제로 발표 (‘18.09.27.)

□ 인증 현황

<한 제품에 다수의 법정인증이 있는 사례>

구 분	LED조명 (등기구, 램프 등)	무정전 전원 장치	수도기자재 (수도꼭지, 밸브)	가전제품 (공기청정기, 냉장고, 세탁기 등)	식 품 (김, 다시마, 된장, 고추장 등)
인증수	7종	5종	3종	6종	5종

비고) LED조명 제품 ‘18.10월 기준 1기업 평균 23.2건 인증(예, 환경표지 29.6건, 고효율 26.7건)

○ LED조명기업의 경우,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비중*이 84%로 높고, 제품특성 상 모델 수가 많고 인증수요가 높음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체 분포 현황) 10인 이상 업체 수⁽¹⁾ / 10인 이하 포함 전체 업체 수⁽²⁾
= 910 / 5,697 = **16.0 %** (1): 15년도 경제총조사, (2): ‘16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

□ 문제점

○ 7종(‘KS, 고효율, 환경, 녹색’ 임의인증 4종 및 ‘KC안전, KC전자파, 효율등급’ 강제인증 3종) 인증제도 간 상호 의사소통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인증시험 중복*문제 발생

○ 다수 인증의 상이한 요구사항 및 절차로 인해 LED 조명기업의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빈번한 민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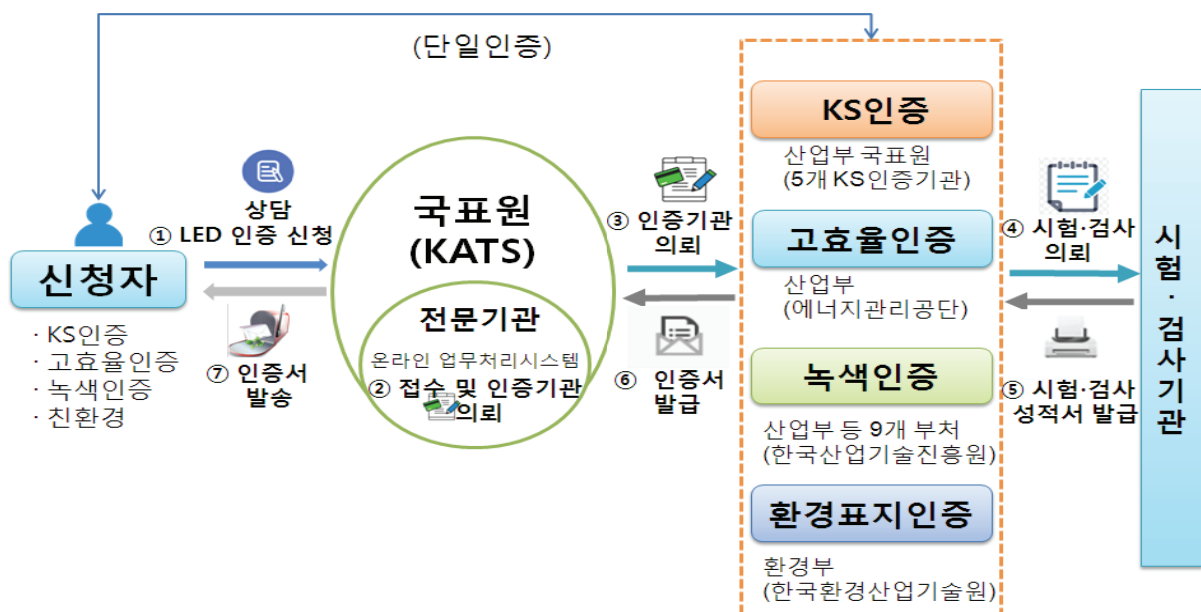
* 개별 기업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서로 다른 인증 간 면제조건, 절차 등 지원 정책 미흡

□ 개선 방안

- 한 제품의 다수 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추진

한 제품의 다수인증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개념

< LED조명제품 예시, 다수 법정임의인증의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개념 >



< 국가공인시험기관 등 >

한국조명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협회 등

< 단일창구인 전문기관 주요역할 >

- ① 품목 중심의 인증제도 분석 관련부처 합동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 인증처리 공동운영 요령 마련,
- ② 전문기관 통한 유사·중복 항목 조사·분석,
- ③ 온/오프라인 처리시스템 구축,
- ④ 유사·중복 시험항목 면제 상담·처리, 협의체 운영
- ⑤ 인증서 발급,
- ⑥ 설명회 등

전동 킥보드 운행기준 만들어 육성 LED, 기술표준원서 ‘원스톱 인증’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정부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운행기준을 마련해 새로운 교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혁신성장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애로 해소, 소상공인 지원, 진입·입지규제 개선 등 총 31개 해결 방안을 담았다.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은 2016년 6만대에서 지난해 7만5000대로 증가했다. 하지만 안전·도로 운행기준 등이 없어 제조·

음식·제과점간 복합매장 요건 완화 댄스스포츠 무도장도 학원 등록

대여 등 관련 산업 성장이 막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주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업체 역시 납품처에 따라 각기 다른 6개의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증 하나당 40만~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여 주겠다는 의도다.

기업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기차지하철 등 철도 교각에 광고물 표시를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옥상 간판이나 벽면을 이용한 간판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기업애로 해소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주행기준 마련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제품 인증 간소화
소상공인 지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간 복합매장 허용 요건 완화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 허용 기준 합리화
진입·입지규제 개선
△댄스스포츠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 가능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기준 완화

에 대한 표시 제한은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공업지역 공장 옥상 간판에는 자사 광고만 가능하다. 또 벽면 간판은 3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간 복합매장 허용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벽 등으로 공간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시 칸막이나 선으로 구분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인근 제과점끼리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도 합리화한다. 지금은 거리가 가까워도 관할구역(시·군·구)이 다르면 함께 사용하지 못한다. 앞으로 구역이 달라도 거리가 5km 이내면 허용할 방침이다.

댄스스포츠 무도장은 학원법상 시설·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한다. 레저용 선박 대여업을 하려면 선박을 갖고 있거나 3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계약기간을 줄여 소규모 자본으로도 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안

전동킥보드 안전·주행 기준 마련
제각각 LED조명 인증도 일원화

전동킥보드 등 전기에너지로 구동하는 1~2인용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주행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기관이 참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제품·주행 기준을 마련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동휠이나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초소형 전기차, 전동휠체어 등을 아우르는 1인용 저속 이동수단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각종 규제가 관련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도 덜어 준다. 여러 명의 사업자가 동일한 영역에서 운영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음식점 등을 독립된 건물이나 층으로 구분하는 대신 구획이나 선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래연습장에 밝기 조절 장치 등 특수조명기구를 설치(정소년실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규제가 모호하거나 서로 달라 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해소한다. 어린이용 제품에서 불임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물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대한 서로 다른 인증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일원화한다. 철도 교각에 광고물 표시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옥외 광고물에 대한 설치 규제도 완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특정 활동(㉠) 비자 발급 대상에는 해양플랜트 분야 특수설비 기술자 직종을 추가해 비자 허용 분야를 확대한다.

세종 황비용 기자 stylist@seoul.co.kr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

소상공인 지원
• 음식점·제과점 등 복합매장 요건 완화: 벽·층으로 분리→선·임시칸막이 구분 허용
• 가까운 제과점 간 조리장 공동사용 기준 완화: 관할구역 내→관할구역 내 또는 5km 이내
• 포장·배달 전문점도 휴게음식점 신고 허용: 자가품질검사비용 연 48만원 부담 완화
기업 애로 해소
•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주행 기준 마련
• LED 조명 6개 인증제도 원스톱 창구 마련
• 철도 교각에 광고물 표시 허용
• 옥외 광고물에 타사 광고도 허용

※ 2018.09.27.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의 개선과제로 발표(기업애로 해소 :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부담 완화)
- LED 조명 제품 관련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한 원스톱 창구(국가기술표준원 내) 마련 및 유사·동일시험항목의 절차 비용 면제

1. 청소년 국제표준올림픽아드

□ 사업 개요

- (의의)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표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
- (경과) '06년부터 200~300여명이 학생이 참가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14년부터는 해외학생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격상
 - * 12년간 총 4,000여명의 학생 및 지도교사가 참여하여 표준에 대한 인식 확산

□ 성과 및 지원 필요성

◇ '06년 국내대회로 시작하여 '14년부터는 중국·일본·싱가포르·인니 등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격상되었으며, 양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등에서 표준 관련 국제회의 시 대표적인 표준교육 우수사례로 소개
 * ISO, IEC 및 NIST(美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도 후원 및 고위급 파견 등 행사지원 예정

- '06년 국내대회로 시작하여 '14년 대회부터 일본, 인니 등 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대회가 되었으며, '18년에는 일본, 싱가포르 등 11개국 참가
 - 국제표준화기구(IEC, IEC 등)에서 심사참여 및 특별상(IEC 사무총장상)을 수여하는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격상
 - * ISO, IEC 사무총장 축하동영상 및 ISO 아태 지역소장이 심사참여
- 세계 유일의 표준경진대회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IEC, ISO 등 국제표준화회의 때마다 우수 사례로 소개
 - 페루, 인니,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여 표준 올림픽아드 시작('14~)
- 청소년들에게 표준화를 보급·확산하고 미래 융복합 산업(4차 산업혁명)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표준인재를 양성하는 토대 역할
 - 일상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표준에 대한 청소년 관심제고 기여

2. 표준화 교육

□ 사업 개요

- (의의)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생활 속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미래 국제표준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경과) '08년부터 매년 평균 6,000여명의 학생에 대하여 '찾아가는 표준교육', '표준화 연구학교' 등의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18년부터는 자유학기 시범학교를 추진

□ 성과 및 지원 필요성

- (찾아가는 표준교육)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본 교육에 대한 교육대상 확대시행 요구가 높아 '18년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 추진
- (표준화 연구학교) 학생 및 교사들이 1년간 생활 속 표준화 활동을 통해 표준 인식 및 창의성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에 대한 표준 교육 요청이 크게 확산 중
 - * 표준에 대한 관심도(52.8→95.5), 이해도(53→91.2), 효과 인식(56.1→94.1)등 표준화 교육을 통해 표준화에 관한 효과적인 인식 제고효과를 '17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
- (직무연수) 교원 및 관리자에게 연간 총 5회의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표준 인식 확산 및 표준 교육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연수의 확대시행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

사 업 명
(9) 안전인증역량강화(R&D) (3731-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10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안전인증역량강화(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	이귀현	-	조춘강 연구사
		043-870-5410	-	043-870-541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안전인증역량강 화(R&D)	6,425	7,459	7,459	7,086	7,027	△432	△5.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 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425	6,425	6,425 [6,425]	-	-	7,459	7,459	7,459	7,459 [7,459]	-	-	7,027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4,025	4,025	4,025 [4,025]	-	-	4,994	4,994	4,994	4,994 [4,994]	-	-	4,621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1,500	1,500	1,500 [1,500]	-	-	1,500	1,500	1,500	1,500 [1,500]	-	-	1,500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700	700	700 [700]	-	-	735	735	735	735 [735]	-	-	735
· 기획평가관리비	200	200	200 [200]	-	-	230	230	230	230 [230]	-	-	171
○ 비목별 분류(합계)	6,425	6,425	6,425 [6,425]	-	-	7,459	7,459	7,459	7,459 [7,459]	-	-	7,027
·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360-04)	160	160	160 [160]	-	-	160	160	160	160 [160]	-	-	16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6,265	6,265	6,265 [6,265]	-	-	7,299	7,299	7,299	7,299 [7,299]	-	-	6,8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후생증진을 위해 제품안전기준 및 차세대 계량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개선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안전취약 위해제품과 융복합제품의 안전기준 연구와 위해 제품 효율적 차단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한 소비자 제품안전 강화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IT융복합 기술활용을 통한 계량·측정기기 성능향상 및 불법

- 조작 방지로 4차산업, 에너지 신산업 대응과 국민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국민 안전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혁신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기반 확충 및 화학사고 예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및 제18조(제품안전 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전기용품 및 생활제품 안전관리법 제38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추진경위

- '08.3월 :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장관보고)
- '08.12월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09.4월 : 지원대상과제 선정 및 사업비지원
- '10.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공포
- '11.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7.6월 : '18년 일몰에 따른 신규사업 재기획
- '17.11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① 법령상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추진경위

- '12.2월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추진
- '15.1월 : 계량법 전부개정을 통한 '계량산업 육성' 지원근거 마련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 '17.6월 : '18년 일몰에 따른 신규사업 재기획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①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4조)
- 화학물질관리법(제36조, 제41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② 추진경위

- '11.4월 :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공식보고
- '12.9월 : 구미 불산사고 등 화학안전사고 다수 발생
- '12.12월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총리실) 발표
- '13.5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13.6월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 공포
- '13.7월 :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부처합동) 발표
- '14.4월 ~ '18.3월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기반구축사업 수행(1~4차년도)
- '17.6월 : '18년 일몰에 따른 신규사업 재기획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 ~ '20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내기업, 연구소 및 협·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7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내기업, 연구소 및 협·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4,621백만원 ('19년 대비 △373백만원)

- (기술개발) 융·복합제품 안전기준 적기마련 및 어린이 안전취약·사고다발 제품 및 기술진보 제품의 안전기준 업그레이드 등 연구

- (융복합제품) IoT 연결 또는 AI 작동 스마트 제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 안전성 평가
- (어린이제품) 위해유형별 모듈형 안전기준 개발
- (기술진보) 노트 7은 국내·외 7개국에서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배터리 발화사고 발생

- (기반조성)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비관리제품 및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위해제품 효율적 차단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기업 자율적 제품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연구

- (비관리제품) 대형 유통매장(오프라인)의 취급 상품 43만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관리제품이 41만건(95%), 비관리제품이 2만건(5%)
- (위해성평가) EU는 장난감의 안전관리대상 중금속을 확대(8종→19종, '19.2. 시행)
-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제품안전관리 체계 개선

▪ 산출내역

- 신규 : 4,621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단/상	24개	193백만원	12/12	4,621백만원

○ 차세대계량기술개발사업 : 1,500백만원 요구 ('19년 대비 -백만원)

- (기술개발) IT 융·복합 계량기술 고도화(스마트미터링), 에너지신산업(태양광 발전, 친환경 차량 등) 확산을 위한 차세대 계량기술 개발 및 관련 핵심소재·부품 개발 등에 관한 연구
- (기반조성) IT 융·복합 계량기술 및 차세대 계량기술 평가·인증을 위한 시험·검사방법, 신뢰성 평가기반 조성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 산출내역

- 신규 : 1,500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단/상	10개	150백만원	12/12	1,500백만원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735백만원 요구 ('19년 대비 -백만원)

- (시험·평가기반확충)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시험·평가 기반확충을 위한 시설·장비·운영체계 구축, 기술·노하우보급 및 저변확대
- (솔루션보급·기술지원) 화학물질 영세공급망 단위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관리현황, 관련 법령·안전 진단 및 전주기관리 시스템 보급·기술지원

▪ 산출내역

- 계속 : 735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종료	1개	735백만원	12/12	735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171백만원 요구 ('19년 대비 △5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소비자제품 안전기준(안) 개발 건수	목표	-	-	5	7	9	매년 30% 상향하는 목표치를 설정함	소비자제품 안전 기준(안) 개발 건수	동 사업으로 지원한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 (소비자제품 안전기준(안) 개발 문서)
	실적	-	-	5	12	-			
	달성도	-	-	100	-	-			
차세대계량기술 형식승인(안) 신청율	목표	-	-	30	33	37	'18년 30%를 목표 치로 설정하고, 매 년 10% 상향하는 목표치를 설정함	(형식승인 신청건수 /기술개발 종료과 제수)×100	동 사업으로 지원한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 (형식승인(안) 신청서)
	실적	-	-	30	40	-			
	달성도	-	-	100	-	-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국제인증(GLP) 획득율	목표	-	-	100	100	100	GLP인증 신청수 대비 100% 획득 하는 것을 목표 치로 설정함	(당해연도 GLP인 증 획득수 /전년 도 GLP 인증 대 상 기반구축 시험 항목수) * 100	동 사업으로 지원한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 (GLP 인증서)
	실적	-	-	100	100	-			
	달성도	-	-	100	-	-			
안전기준(안) 및 형식승인(안) 채택율	목표	-	-	30	30	30	안전기준(안) 및 형식승인 신청에 대한 소요시간 등 을 감안하여, 채 택률 30%의 성과 목표를 설정함	(안전기준 및 형식 승인 채택건수/안 전기준 및 형식승 인 신청건수) * 100	안전기준(안)에 대한 제·개정 문서(국가기술표 준원), 형식승인 확인서(국가기술 표준원))
	실적	-	-	30	30 (추정)	-			
	달성도	-	-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자율적 위해인자 확인관리를 위한 어린이제품위해성 평가툴 개발 등 기반조성 과제 지원 : 15건 - 유아동용 완구류의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 분석방법 개발 등 기술개발 과제 지원 : 12건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충전기 계량관리를 위한 중량식검사기반 구축 등 차세대계량기술개발 과제 지원 : 11건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평법 GLP 시험·평가 인증지원 및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 시스템 보급, 활용을 위한 기반확충 등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 확충 과제 지원 : 1건
------	--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제품 위험수준 평가방법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 기반조성 과제 지원 : 11건 -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기준(안) 개발 등 기술개발 과제 지원 : 12건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충전기 검교정 성능향상을 위한 질량계측 기반의 계량측정장치 기술 개발 등 차세대계량기술개발 과제 지원 : 10건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평법 GLP 시험·평가 인증지원 및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 시스템 보급, 활용을 위한 기반확충 등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 확충 과제 지원 : 1건
------	--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등의 안전기준*을 전수조사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정비(新융복합제품의 안전요건 반영)하고 신제품에 대한 기준 적기 개발
 - * 안전기준 현황(18.12월 기준, 808종) : 전기용품 696종 / 공산품 77종 / 어린이 35종
- (사각지대 해소) 시중 유통 중인 소비자제품에 대한 위해 가능성 및 안전 확보 방안 연구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 연구 등을 통하여 위해제품의 효율적 차단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 (불법계량기 조작방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정계량기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 사우나 도시가스 계량기(가스미터) 불법조작('15.7), 주유기 불법조작('16.5)
- (계량기술 고도화) 스마트미터링 기술 등과 같은 융복합 법정계량기술 고도화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에 따른 계량분야 R&D지원 확대
 - * (산업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상향 조정
⇒ RPS(%) : '18년) 4.5→5.0, '19년) 5.0→6.0, '20년) 6.0→7.0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국내 미비 화학물질 유해성을 시험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구축 및 국제공인 GLP* 인증 획득 지원

* Good Laboratory Practice, 시험 신뢰성 보증을 위한 OECD 국제공인 인증

- (화학물질 전주기관리 기술 개발) 국내 최초로 5대* 화학법령 대응 화학물질안전
관리·법령이행 기술개발 및 중소영세기업 보급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
관리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사업계획 수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수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최종점검·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차세대계량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수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최종점검·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사업계획 수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수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최종점검·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3,684	3,538	1,977	1,977	1,977	
'19~'23		3,538	1,944	1,944	1,944	1,94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①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향후추진 방향
 - 융복합 신제품 및 기술진보 제품의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다변화되는 유통체계를 반영한 제품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특히,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 생산 역량을 강화토록 제품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
- 향후추진 계획
 - 기업이 사전에 안전성을 검증 후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시험·검사방법 등)의 개발·보급함과 안전취약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병행
 - 기술진보 제품 및 융복합 제품의 안전기준 정비
 -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프로그램 개발

② 차세대계량기술개발

- 향후추진 방향
 -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IT 융복합 응용기술 개발 및 신수요 장비의 대응을 통하여 무역수지 적자 증가 추세인 계량·측정산업을 고도화하고 대외경쟁력을 제고
 - 계량·측정기의 성능향상 및 IT 융복합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불법·불량 계량기의 유통방지를 통한 국민의 손실방지
- 추진계획
 - 선진국 대비 뒤져 있는 계량·측정기 검·교정기술 및 장비 개발과 성능·유효성 평가 방법 개발 등을 통해 제품의 융합형 성장환경을 조성·확산

③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향후추진 방향

- 국내 기반이 미비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평가 운영체계 조기 구축 및 중소기업 사업장 내 화학물질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 확보
 -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비용 절감, 민간 시험기관 역량 강화 및 육성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화학물질 모니터링·진단·처방 체계 선진화

○ 향후추진 계획

- 국내 기반 미비 유해성 시험항목에 대한 시설·장비, 시험평가운영체계 등 구축 지원, 시험기관의 양적 저변확대를 위해 민간중소기업 사업 공동 참여 및 시험분석 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운영체계 습득 유도
- 중소영세기업 대상 화학물질 전주기관리 기술 보급·확산 및 실증화·고도화 실시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

평가시기	회계/기금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평가점수	평가등급	비고
2018년도	일반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안전인증역량강화 등)	86.1	우수	

13) 부처 건의사항

- 국민생활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갤럭시 노트7 리콜 등으로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제품의 융복합화로 인한 위해제품 노출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점, 주유소 계량기 불법조작, 신종유해물질 대응 등 현안 문제 해결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예산 지속 지원 필요**

*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	-	-	-	-	-	-	-	-	-	-	-
2017	-	-	-	-	-	-	-	-	-	-	-	-
2018	6,425	6,425	-	-	-	-	6,425	6,425	100	100	-	-
2019	7,459	7,459	-	-	-	-	7,459	7,459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	-	-	-	-	-	-	-	-	-
2017	-	-	-	-	-	-	-	-	-	-
2018	6,425	6,425	6,425	6,425	-	6,425	6,425	-	0	100
2019	7,459	7,459	7,459	7,459	-	7,459	7,459	-	0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10)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3731-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1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오광해	김태완	
		043-870-5340	043-870-534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28,824	30,530	30,530	47,878	47,878	17,348	56.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8,824	28,824	28,824 [28,824]	-	-	30,530	30,530	30,530	30,530 [30,530]	-	-	47,878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4,514	24,514	24,514 [24,514]	-	-	26,260	26,260	26,260	26,260 [26,260]	-	-	30,462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3,250	3,250	3,250 [3,250]	-	-	3,126	3,126	3,126	3,126 [3,126]	-	-	3,626
· 상용표준물질개발· 보급	-	-	- [-]	-	-	-	-	-	- [-]	-	-	12,000
· 기획평가관리비	1,060	1,060	1,060 [1,060]	-	-	1,144	1,144	1,144	1,144 [1,144]	-	-	1,790
○ 비목별 분류(합계)	28,824	28,824	28,824 [28,824]	-	-	30,530	30,530	30,530	30,530 [30,530]	-	-	47,878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28,824	28,824	28,824 [28,824]	-	-	30,530	30,530	30,530	30,530 [30,530]	-	-	47,8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4차 산업혁명 관련 융복합기술의 신뢰성제고 및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해 해당 기술의 국제표준개발·제안 및 표준화기반조성 추진 지원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신 데이터산업 창출 및 기술개발 비용·기간 단축을 위해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환경정보 등 참조표준데이터의 개발·보급 추진 지원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개발시 품질·정확도 확인 및 개발소재의 측정방법·측정장비 교정 등을 위한 '표준물질' 개발·보급 추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96년 :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제27조) 제정으로 표준개발 지원근거 마련
- '00년 : 30억원 예산지원으로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시작
- '07년 :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과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합
- '09년11월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수립
- '09년 5월 : 녹색성장위원회(지경부)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 '10년 6월 : 지식경제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19년 6월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발표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참조표준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6년 : 「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참조표준개발계획 반영·개발 추진
- '06년 8월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 '06년 8월 :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 및 참조표준 평가·보급
- '11년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 지원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06년~'16년 : 27개 데이터센터 지정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09.4월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표준물질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9.6월 : 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ISO/REMCO) 총회 개최
- '19.8월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년 ~ '24년(일몰관리혁신)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 매칭)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참조표준센터,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 대학, 연구소, 표준물질생산기관 등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주요내용)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과학기술자문회의, '19.3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 선점 전략(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월) 등에 따라 에너지(수소)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10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전략적 표준화 추진

- (산출근거) ('19) 26,260백만원 → ('20) 30,462백만원 (4,202백만원)

- (신규과제) 9,120백만원 [(단/상) 1개×1,000백만×12/12=1,000백만원 + (다/상) 53개×120백만×9/12 + 4개×700백만×9/12 + 6개×278백만×9/12 = 8,120백만원]
- (계속과제) 21,342백만원 [(기일치) 101개×142.2백만×12/12=14,358백만원 + (종료) 9개×148.3백만×5/12=556백만원 + (종료) 7개×114.3백만×6/12=400백만원 + (종료) 42개×143.5백만×12/12=6,028백만원]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주요내용)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요 핵심어젠다('18.11.23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제3차 국가참조표준중장기로드맵('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라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신재생에너지 환경정보 등 참조표준의 개발·보급 추진

- (산출근거) ('19) 3,126백만원 → ('20) 3,626백만원 (500백만원)

- 신규과제 3,626백만원 [(단/상) 1개×2,126백만×12/12=2,126백만원 + 6개×250백만원×12/12=1,500백만원]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신규)

-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19.8.5 산업부) 등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에 대한 상용표준물질의 개발·보급 추진

- (산출근거) ('20) 12,000백만원 (12,000백만원)

- 신규과제 12,000백만원 [(다/상) 40개×300백만×12/12=12,000]

○ 기획평가관리비

- (주요내용) 사업 추진계획 수립, 수요조사 및 신규 사업 공고·설명회 개최, 신규·중간·최종평가 및 관리, 사업성과 분석 등
- (산출근거) ('19) 1,144백만원 → ('20) 1,790백만원 (64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 제안건수(건)	목표	44	45	46	47	48	1개 과제 평균 정부 출연금 6억원을 기준 으로 당해연도 정부 출연금 총액을 나누어 성과목표를 설정	지원과제로 국제 표준화기구(공적, 사실상)에 제안한 국제표준안 건수의 합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 제안 여부 확인
	실적	44	50	53	48*				
	달성도	100	111.1	115.2	102.1				
신규 국제표준(안) 채택건수(건)	목표	28	29	30	31	32	국제표준안 제안건수 대비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국제표준안 채택률을 64% 수준 으로 설정하여 목표치 산출	국제표준화기구(공적, 사실상) 신규 국제 표준안 채택 건수의 합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추진 승인 여부 확인
	실적	36	46	47	40*				
	달성도	129	158.6	156.7	129.0				
표준안 개발 건수(건)	목표	70					투입 예산 및 지원 과제수를 고려하여 표준안 개발 목표를 산출	지원과제에 대한 표준안 개발 건수의 합	사업수행기관 보고서 또는 성과분석 보고서
	실적	79							
	달성도	113							

* '19년도 성과는 예상실적으로 최종 실적치는 변동될 수 있음 ('20년 1월 성과조사 실시)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참조표준DB 활용도(%)	목표	18	18	17	16	16	참조표준센터 DB 접속건수를 종합적 으로 평가	(당해접속건수-3년 평균접속건수)/3년 평균접속건수×100	국가참조표준센터 홈페이지
	실적	26.5	38.3	33.1	30.6*				
	달성도	147	212.8	194.7	191.3				
참조표준 DB 활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목표	-	76	78	80	82	'20년 최종목표가 만족(82점)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 상향	참조표준 DB 실제 사용자(수요자)를 대상으로 리커트5점 척도로 조사	제3자 기관을 통한 DB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적	-	77.4	78.3	80.1*				
	달성도	-	101.8	100.4	100.1				

* '19년도 성과는 예상실적으로 최종 실적치는 변동될 수 있음 ('20년 1월 성과조사 실시)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표준물질개발	목표	-	-	-	-	75	표준물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각 생산표준물질 완성도의 합)/지원 표준물질의 수×100 *완성도 상용표준물질생산완료 0.7 균질도 10% 이내 달성 0.8 6개월 안정성 확보 달성 0.9 특성값 및 불확도 산출 완료 1.0	사업수행기관 보고서 및 상용 표준물질 실물 확인
	실적	-	-	-	-				
	달성도	-	-	-	-				
표준물질보급	목표	-	-	-	-	40	표준물질 보급이 가능한 단계로 산업현장에 사용가능여부 를 평가	표준물질 인정완료 수 /지원 표준물질의 수×100	한국인정기구의 인정취득
	실적	-	-	-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016	○ 계속과제 : MPEG Type-1 표준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 67개 ○ 신규과제 : 웨어러블 기기용 센서 및 기기의 내환경 표준화 개발 등 71개
2017	○ 계속과제 :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 확산 기반구축사업 등 101개 ○ 신규과제 : 스키마 기반 비주얼 감성표현 시스템 표준 개발 등 43개
2018	○ 계속과제 : 자율주행차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자동차-ITS-ICT 융합 표준화 기반 조성 등 108개 ○ 신규과제 :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국제표준 개발 등 66개
2019	○ 계속과제 : 실감형 디스플레이 표준화 기반 조성 등 143개 ○ 신규과제 : 전도성 섬유 기반 웨어러블 압력 스트레인 네트워크 센서 국제표준 개발 등 55개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3개 신규지정 및 28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 활용패키지 개발·보급(1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비만지수, 한국인 경동맥 두께 참조표준 활용패키지 등 개발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5개 신규지정 및 27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 활용패키지 개발·보급(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소재 미세조직 데이터북, 뇌MR영상 참조표준 활용 패키지 등 개발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3개 신규지정 및 31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 활용패키지 개발·보급(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에너지손실 데이터북, 플라즈마 공정별 가스데이터 패키지 개발 등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3개 신규지정 및 34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 활용패키지 개발·보급(1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건강지수, 한국인 관절가동범위, 대한민국 중력가속도 등 개발

③ 향후('20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 간사 등 임원수입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및 국제표준분야에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국가공인 참조표준데이터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의 R&D 중복연구 및 개발에 따른 경제적 손실방지를 통한 국가 R&D 효율성 증대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신뢰성 있는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제품·기술개발 및 공정 혁신에 기여
- 참조표준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신산업 창출 기대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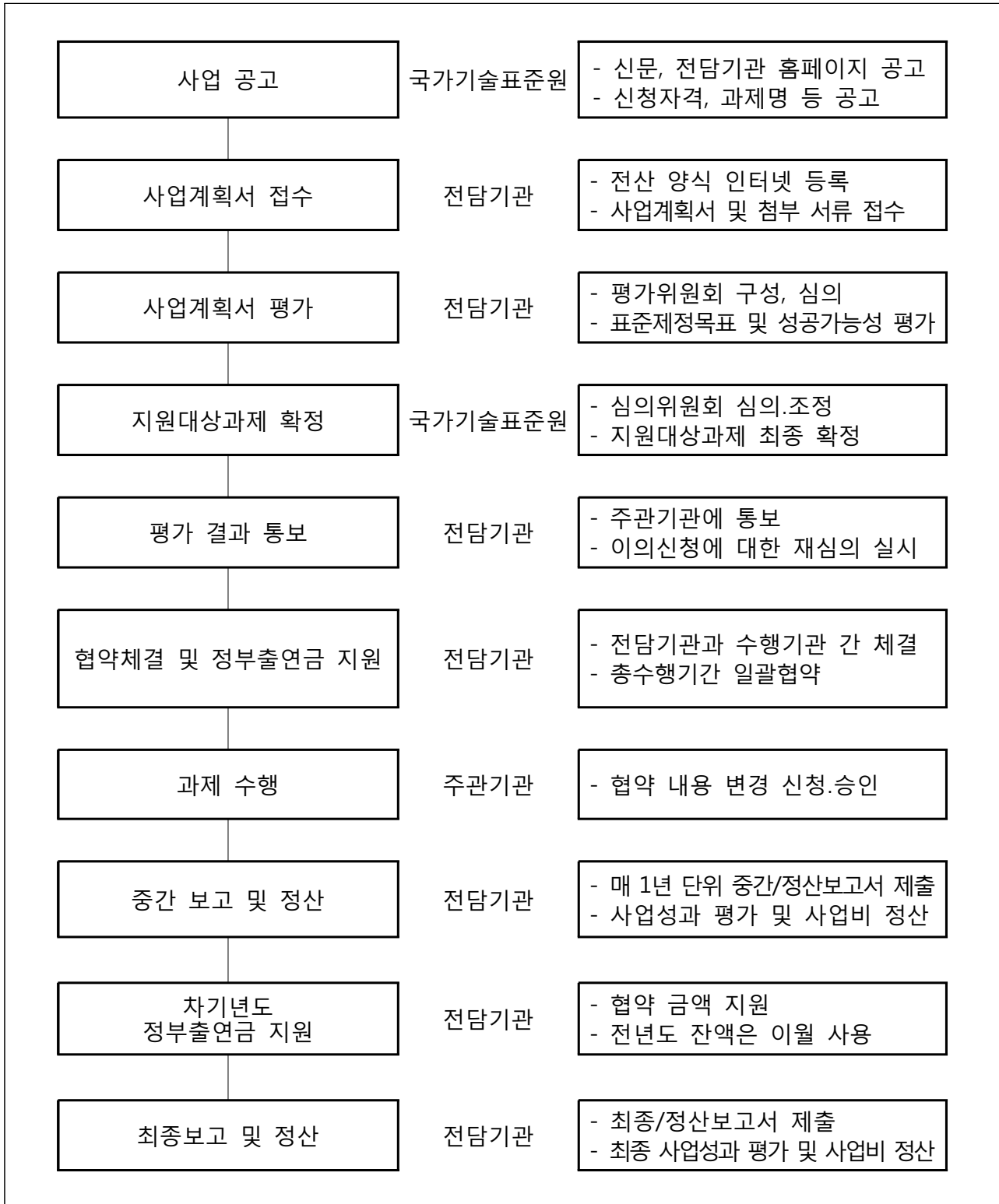
- 상용표준물질 개발을 통한 국내산업의 측정 정밀도를 유지·향상을 국제동등성 확보
- 다양한 상용표준물질 개발을 통해 해외표준물질 수입 의존도 감소
- 산업계의 니즈 파악을 통한 중장기적 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체계 수립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표준물질 활용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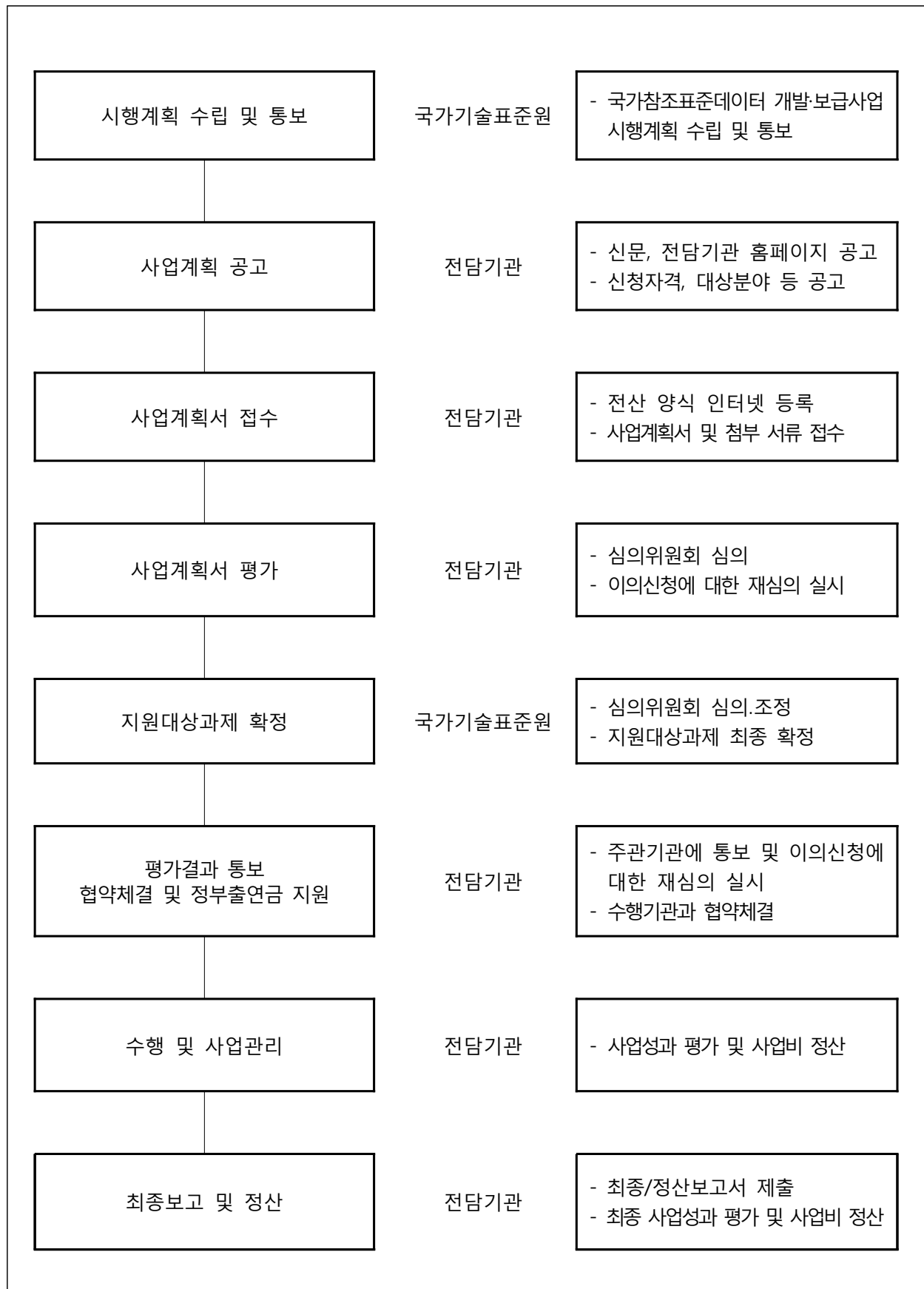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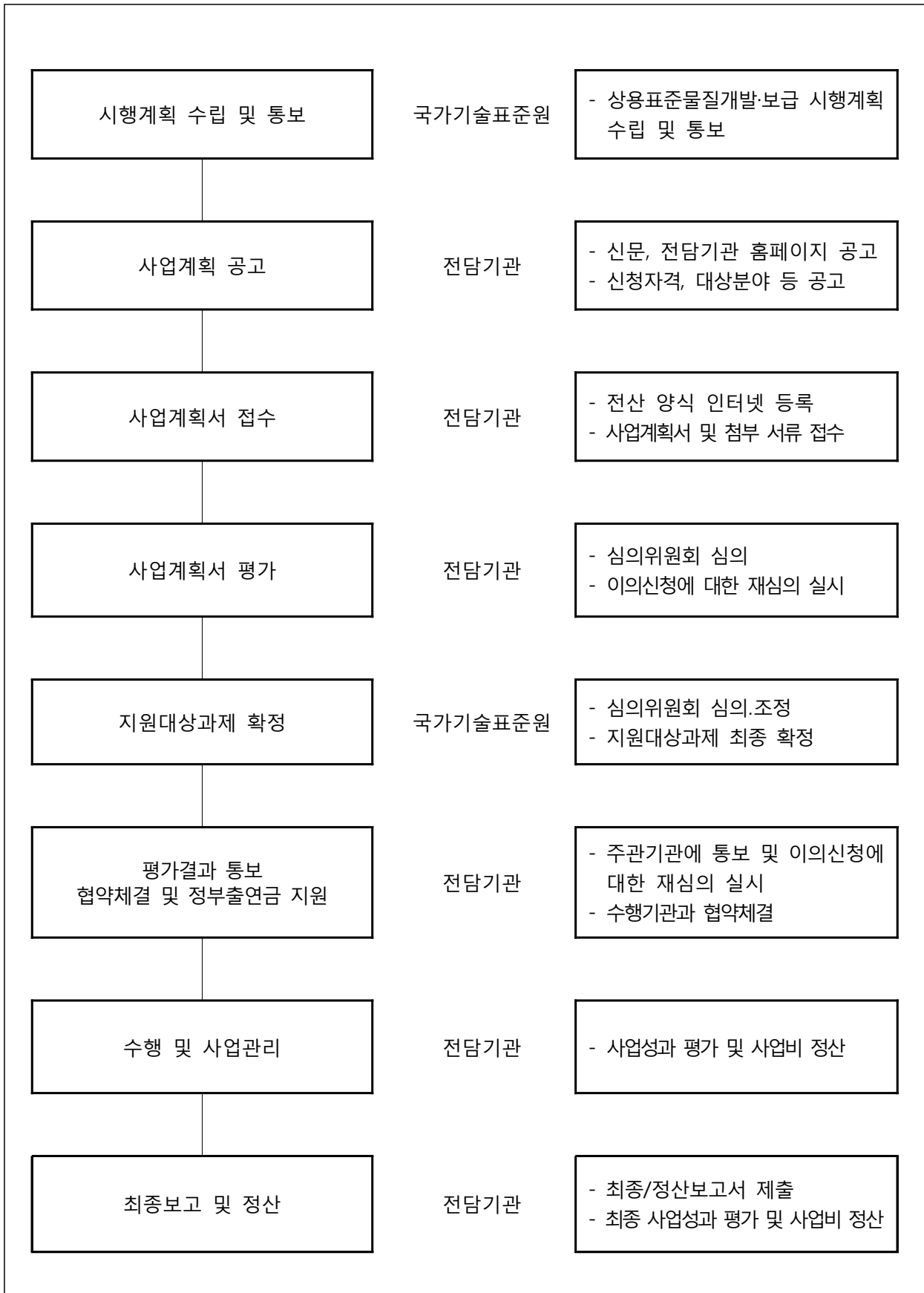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28,824	30,530	47,878	466.94	449.31	
'19~'23		30,530	47,878	466.94	449.31	413.4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정처) '17년 예산결산보고서

- (지적내용) '17년 6개 과제에 대해 기재부 'R&D 사업 과제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기간이 길게 설정되었으므로 철저한 연차평가 등 관리가 필요
- (조치사항) 연차평가결과 '중단과제 발생에 따른 잔여예산 집행과정에서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당과제에 대해서는 연차평가를 엄격히 적용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향후추진 방향
 - FTA 체계 하에서 국가간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의 표준·기술 규정에 국제표준 수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략적 도구로서의 미래유망산업분야의 표준 발굴
 - 우리 기술 선도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표준화기반조성 추진
 -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중소·중견 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확대로 국제적 강소기업 육성
- 세부추진 계획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및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20)에 따라 전략적 표준화 추진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향후추진 방향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데이터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운영하여 신뢰성 있는 국가참조표준데이터 제정 및 보급
- 세부추진 계획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필수 기반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③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 향후추진 방향

- 국외 의존도가 높은 표준물질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산업계 보급 및 해외수출을 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물질등록센터에 등록

○ 세부추진 계획

- 국가측정대표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간의 상호 협력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에서부터 평가 및 소급성 확보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상위평가 결과('18) : 우수

13) 부처 건의사항

- WTO/TBT 협정에 따라,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적인 기술기준 제정을 금지하고 국제표준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 개척에 국제표준이 필수 요소로 작용
 - 국제표준에 반영되지 못한 제품/기술은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여 퇴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 신산업 제품/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센서, 빅데이터 처리 등 수많은 요소가 필요하고, 표준은 데이터 형식, 공유방식 등의 인터페이스 룰을 제공하여 데이터 활용 촉진을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임
- 표준화 추진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 확보,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 표준은 즉각적 이익을 계량화 할 수 없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 투자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30,096	30,096	-	-	-	-	30,096	30,096	100	100	-	-
2017	29,962	29,962	-	-	-	-	29,962	29,962	100	100	-	-
2018	28,824	28,824	-	-	-	-	28,824	28,824	100	100	-	-
2019	30,530	30,530	-	-	-	-	30,530	30,53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30,096	30,096	30,096	30,096	-	30,096	30,096	-	-	100
2017	29,962	29,962	29,962	29,962	-	29,962	29,962	-	-	100
2018	28,824	28,824	28,824	28,824	-	28,824	28,824	-	-	100
2019	30,530	30,530	30,530	30,530	-	30,530	30,530	-	-	100

라. 기타 추가자료

1.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표준화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지원대상	기업/대학/연구소/업종별 단체/시험인증기관 등
지원조건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추진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4조,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 사업내용(지원내용)

-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주요 산업분야별 표준기반 R&D 기획연구 등
 - **(표준화연구개발)** 연구개발을 통해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CDV)등록까지 가능한 과제(2억원 이내/년, 1~4년)
 -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이끌기 위한 표준 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이 필요한 과제(4억원 이내/년, 1~3년)

□ 기대효과·성과

- 기대효과
 - **(글로벌시장 선점)** 4차 산업혁명 및 지속가능사회 실현 관련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
 - **(국제사회 위상 강화)** 국제표준화기구 의장, 간사 등 수임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및 위상 강화

○ 주요 개발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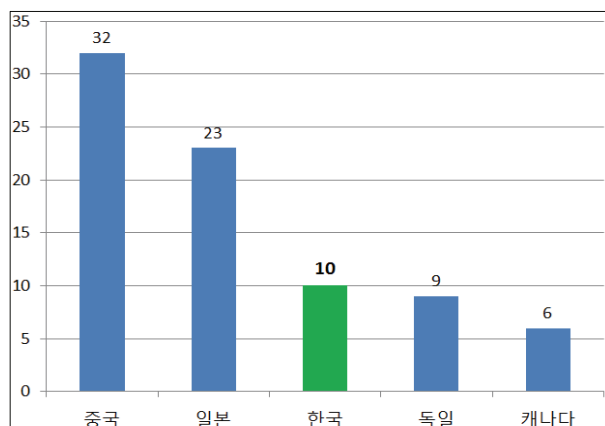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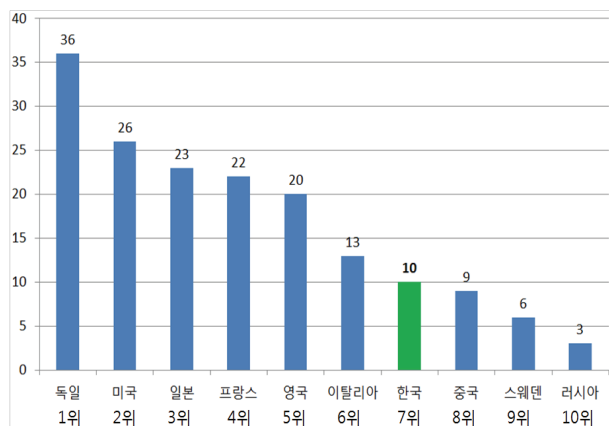
-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영향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 * (국제표준 선점 대표사례) 로봇 청소기의 경우 우리나라 청소환경 및 제품특성을 반영한 성능평가방법을 국제표준화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견인{세계시장 점유율 '11년: 14% (0.8억불) → '15년: 19%(2.2억불)}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하여 추진된 국제표준화 성공사례 >

관련 표준	표준 기여 효과	표준 기여도(%)	연간 경제가치 (추정기간)
고강도 철근(SD600)	생산확대, 신규 수출, 건축비 절감	5.7	672억원 ('15~'19)
파인세라믹스	생산확대, 수출확대, 무역수지 개선	11.8	2,952억원 ('15~'20)
건축용 창유리 필름	관련 시장 확대, 관련 장비 수출, 냉방에너지 소비량 감소	4.6	170억원 ('16~'25)
선체보호 도장(PSPC) 기준	IMO규제 사전대응, PSPC 비용절감	5.0	1,381억원 ('13~'17)
평판디스플레이 측정방법	OLED 세계시장점유 확대	1.8	886억원 ('10~'13)
BLU 광원성능 및 안전요구	부품(CCFL)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및 가격인하	5.1	1,089억원 ('11~'16)

* 출처: 국내외 표준동향조사를 통한 국가표준기술 경쟁력 향상방안 도출(산업연구원, '16.8월)

- *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표준화 주도)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IEC TC 신설 및 간사국 수임('17.2.8)
- * (국제표준화기구 영향력 확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 제안 순위 3위, 간사수임 7위('18년 IEC 통계)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가별 국제표준 제안 및 간사수임 순위 >

2.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가참조표준의 체계적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기술개발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국가참조표준센터(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조건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추진근거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제27조

□ 사업내용(지원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참조표준 데이터(빅데이터) 개발·보급 지원
 -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참조 표준화하여 기초연구자료 확충을 통해 국가 산업·기술 기반 마련
 - (참조표준 보급) 참조표준을 제품·연구에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가공하여 제공하고, 활용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 (참조표준 DB 구축·운영) 신뢰성 있는 과학·기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기 위해 개별 데이터센터를 지정하고, 측정장비·시험방법 등을 검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된 데이터의 신뢰도 제고

□ 기대효과·성과

- 기대효과
 - (미래성장동력 창출) 신뢰성 있는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은 세계 선도형 제품·기술개발 및 공정 혁신에 기여
 - (신산업 창출) 산업간 융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 신산업 창출 기대
 - (중복투자 방지) 중복 연구·개발 방지를 통한 R&D 생산성 증대
 - (삶의 질 향상) 한국인 고유특성이 반영된 의료분야 참조표준을 진단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용 절감 및 삶의 질 향상

○ 주요 개발성과

①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DB 구축

- 동국대병원, KAIST, 표준과학연구원 등 34개 데이터센터를 지정하고 4만 8천여건 참조표준을 개발

(단위 : 건, 누적)

분 야	'14년 이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재료	4,794	88	86	128	148	5,244
물리	669	69	32	45	68	883
화공	1,802	3,700	3,585	3,537	0	12,624
생명과학	221	0	1	1	0	223
기계	76	0	30	22	0	128
보건의료	7,526	369	2,127	2,337	2,325	14,684
농림수산	0	40	0	0	0	40
에너지 자원	6,400	21	21	42	146	6,630
환경	25	26	78	115	78	322
항공우주천문해양	6,260	0	288	0	1,020	7,568
합 계	21,527	4,328	5,976	6,244	2,783	48,346

② 고품질 데이터를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 및 新 데이터산업 창출

구분	참조표준	내 용
기술개발·공정개선	내열구조강의 인장물성	- “K연구원”은 노후 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및 손상 예방을 위한 진단·예측에 활용
	냉매류의 기본물성	- “H사”는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공장 설계에 활용
	반도체 에칭 공정용 가스	- “S전자”는 반도체 장비 설계 및 신규 공정개발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
가공데이터의 판매	강판의 동적 물성	- 자동차 강판의 고속인장물성 데이터를 자동차 충돌시험 및 시뮬레이터 등에 활용 - 유료회원제를 통한 데이터 국외 유출 방지
	인체 치수	- “K연구원”은 가구설계, 의자설계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참조표준데이터를 재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보급 확산
신제품의 사업화	플라즈마 발생가스	- “K테크”는 반도체 공정 설계용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해 플라즈마 물성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53개 업체·연구소에서 사용 중에 있음
	한국인 목부위 동맥 두께	- “(주)R시스템”은 초음파장비에 한국인 경동맥 내막 중막의 혈관두께 참조표준을 탑재하여 심뇌혈관질환 진단장비 개발에 활용
	뇌MR 영상	- “(주)JLK-Inspection”은 뇌MR 영상 참조표준 기반 인공지능 의료진단기기 개발 성공 (식약처 3등급 허가)

3.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 사업개요

사업목적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개발시 품질·정확도 확인 및 개발 소재의 측정방법·측정장비 교정 등 기반 마련
지원대상	기업/대학/연구소/표준물질생산기관 등
지원조건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추진근거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제27조

□ 사업내용(지원내용)

- (상용표준물질 개발) 시제품 제작, 균질성·안전성평가 등을 통한 인증 평가를 실시하여 상용표준물질을 개발
 - * 표준물질 : 개발된 소재를 분석(성분 등) 하는 ‘분석기기 및 분석방법’의 교정 및 개발된 소재의 완성도를 평가·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기준물질
- (상용표준물질 활용·보급) 개발된 상용표준물질의 활용·보급이 가능하도록 평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표준물질등록센터 등록

□ 기대효과·예상성과

- 기대효과
 - 상용표준물질 개발을 통한 국내산업의 측정 정밀도를 유지·향상을 국제 동등성 확보 및 해외표준물질 수입 의존도 감소
 -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 예상성과
 - (상용표준물질의 생산기반 확충) 소급성의 확보체계를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상용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이 가능
 - (국제표준 체계확립) 상용표준물질의 생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균질성·안정성 확보 및 표준물질 생산절차서 개발

사 업 명
(11) 표준안전기반구축(R&D) (3731-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1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표준안전기반구축(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박종섭	라정인	
		043-870-5500	043-870-550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표준안전기반구축	14,029	9,890	9,890	1,759	1,759	△8,131	△82.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4,029	14,029	14,029 [14,029]	-	-	9,890	9,890	9,890	9,890 [9,890]			1,759
·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12,673	12,673	12,673 [12,673]	-	-	9,485	9,485	9,485	9,485 [9,485]			1,660
· 제품안전품질혁신 기반구축	800	800	800 [800]	-	-	-	-	-	-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	-	-	-	-	-	-	-			
· 중소기업화학물질 안전관리기반구축	-	-	-	-	-	-	-	-	-			
· 기획평가관리비	556	556	556 [556]	-	-	405	405	405	405 [405]			99
○ 비목별 분류(합계)	14,029	14,029	14,029	-	-	9,890	9,890	9,890	9,890 [9,890]			1,759
· 장비시스템구축비 (360-04)	11,128	11,128	11,128 [11,128]	-	-	9,485	9,485	9,485	9,485 [9,485]			1,660
· 연구활동비 등 (360-05)	2,901	2,901	2,901 [2,901]	-	-	405	405	405	405 [405]			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① (사업목적)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유지,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역량 확보 등을 통한 무역상 기술장벽(TBT) 극복 및 수출지원
- ② (사업내용) 무역상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확대토록 국내 시험인증 기관의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구축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8조(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추진경위

- '00.9월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02.3월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4월 : 「MRA사업」 1차년도 추진
- '04.4월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7.2월 : 「시험분석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07.11월 :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수립」 제24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10.9월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 '12.3월 : 「FTA시대 국가 R&D전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 '14.1월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18 (일몰확정)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시험인증기관, 연구소 등
- 사업 수혜자 : 중소·중견·대기업 및 수출 시험성적서 발급요청 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험인증기관 및 연구소 등	75%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1,660백만원 요구 ('19년 대비 △7,825백만원)

- 무역상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국제상호인정 협정 체결유지·확대토록 조선·선박분야 시험인증 기관의 국제수준의 시험장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가 장비 구축 사업비 1,660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계속 : 1,660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계속(기일치)	1개	1,660백만원	12/12	1,66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99백만원 요구 ('19년 대비 △306백만원)

- 사업 운영을 위한 기획·평가·관리

구 분	'19예산	'20요구	연구개발 단계	주관기관
□ 표준안전기반구축	9,890 백만원	1,759 백만원	-	-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9,485 백만원	1,660백만원	기타	시험·인증 비영리기관
▪ 기평비	405 백만원	99백만원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시험능력 향상도(%)	목표	85	88	92	94	96	선진국 시험능력수준을 100으로 설정하고 국내시험기관의 시험능력수준을 평가하되, 신수요 확보분야는 관련 평가장비 가격이 이전에 비하여 고임에 따라 예산 규모에 비해 성과 증가율이 둔화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험측정항목, 국제 시험능력, KOLAS 성적서 발행건수를 종합적으로 평가	사업수행 시험연구기관 보고서
	실적	86.6	90.6	94.9	-	-			
	달성도	102	103.5	103.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LAS 인정규격수 : 1355건 ○ MoU 건수(해외) : 45건 ○ 기술수준향상도(비교숙련도 실시 건수) : 99건 ○ 홍보활동 건수(브로셔, 학회, 기타 홍보 건수) : 220건 ○ 기존시장 확대 기여도(수출관련 성적서 발행 건수) : 94,186건 ○ 애로기술 지원 건수 : 342건 ○ 초정밀장비 구축 건수 : 7건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LAS 인정규격수 : 800건 ○ MoU 건수(해외) : 30건 ○ 기술수준향상도(비교숙련도 실시 건수) : 100건 ○ 홍보활동 건수(브로셔, 학회, 기타 홍보 건수) : 220건 ○ 기존시장 확대 기여도(수출관련 성적서 발행 건수) : 95,000건 ○ 애로기술 지원 건수 : 410건 ○ 초정밀장비 구축 건수 : 8건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LAS 인정규격수 : 225건 ○ MoU 건수(해외) : 23건 ○ 기술수준향상도(비교숙련도 실시 건수) : 100건 ○ 홍보활동 건수(브로셔, 학회, 기타 홍보 건수) : 138건 ○ 기존시장 확대 기여도(수출관련 성적서 발행 건수) : 61,700건 ○ 애로기술 지원 건수 : 664건 ○ 초정밀장비 구축 건수 : 13건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LAS 인정규격수 : 635건 ○ Mou 건수(해외) : 12건 ○ 기술수준향상도(비교숙련도 실시 건수) : 108건 ○ 홍보활동 건수(브로셔, 학회, 기타 홍보 건수) : 109건 ○ 기존시장 확대 기여도(수출관련 성적서 발행 건수) : 109,013건 ○ 애로기술 지원 건수 : 516건 ○ 초정밀장비 구축 건수 : 13건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중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전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부담 경감

- (비용) 국내 시험평가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은 해외 소재 시험기관 대비 평균 27% 수준
 - * 例) 인공관절(의료기기) 인증비용 : 해외기관 2~3억원, 국내 3~5천만원 (83% 절감)
- (시간) 해외 기관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필요한 왕복 소요시간, 서류 시간, 행정절차 처리시간 대폭감소*
 - * 성적서 발급 소요 기간 : (평균) 해외 125.7일 → 국내 39.4일
- (기술) 외국기관에 시험 의뢰시 발생할 수 있는 시험과정에서의 **新기술유출**(회로도 및 부품 등의 세부정보) **발생위험***을 차단
 - * 사례 : 업계 관계자 “해외 시험기관에 시험인증을 의뢰해놓고 왔는데, 해외 전시회에 나가보면 똑같은 제품과 디자인이 유통되고 있다” <해럴드 경제>

❖ 제도시행 이후 '15년까지 수출비용 총 1.34조원 절감(산업연구원 용역 결과)

< 비용·시간 절감 例 >

제 품	해 외	국 내
멀티에어컨디셔너	5,000만원, 6개월	1,000만원, 1개월
송풍기	2,000만원, 6개월 ⇨	500만원, 1개월
고무발포보온재(판넬)	300만원, 2개월	100만원, 15일
디지털 도어록	2,000만원, 2개월	300만원,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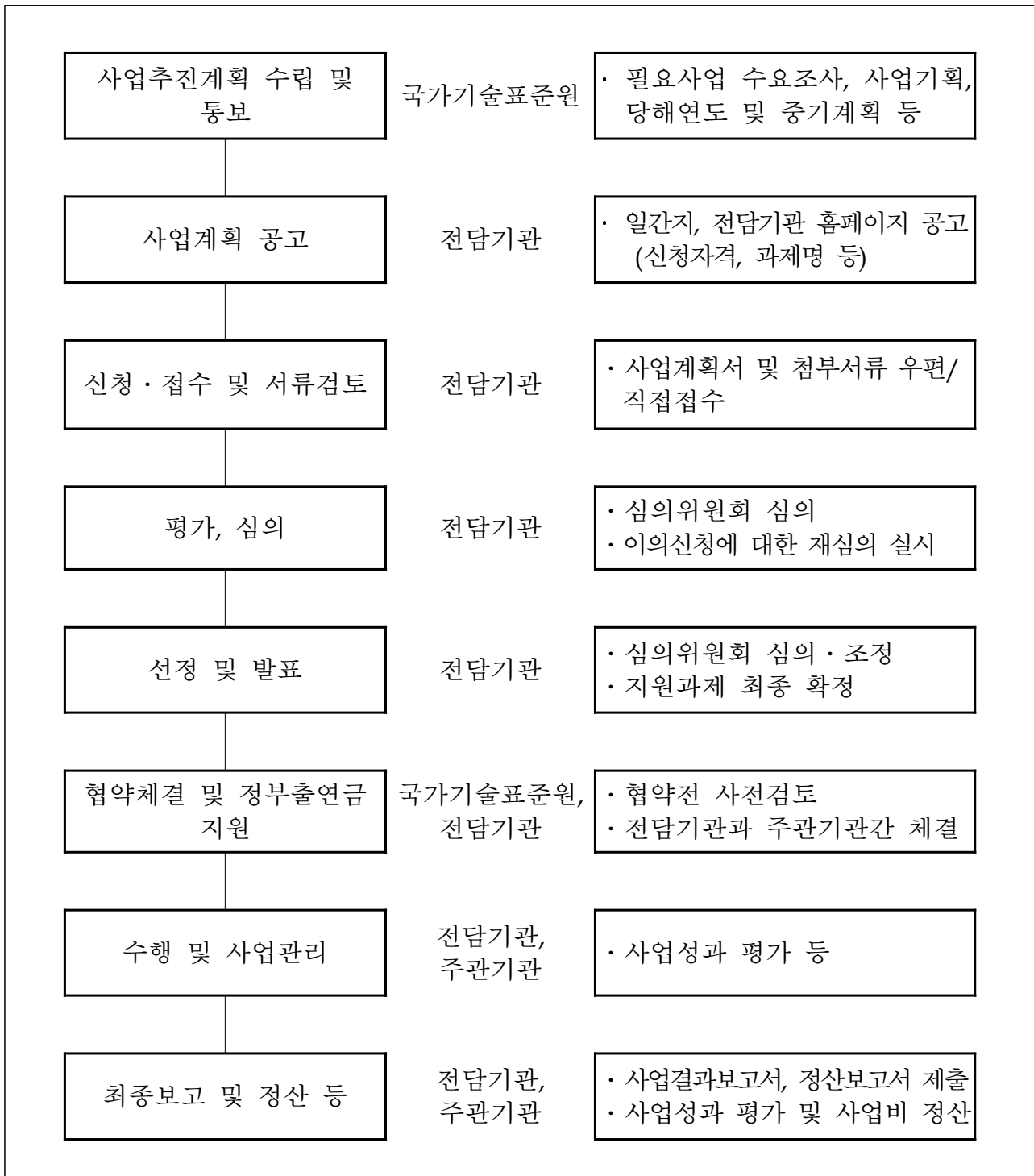
○ 국내 시험평가기관의 국제적 수준의 시험 역량 확충

- **후발주자**로서 선진국과의 격차(2017년 기준 90.6%수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
 - * 국내 시험기관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고가 장비 자체적 구입에 한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14,619	13,315	2,009	-	-	
'19~'23		11,984	1,743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보통('18.05)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추진 방향
 - 기술무역장벽(TBT)을 극복하기 위한 활용도가 높은 신수요 장비구축 지속 지원
 - 수출기업지원을 위한 국내에서 시험 불가능한 ISO, IEC 등 국제 규격에 대한 시험능력 확보를 위한 신수요 첨단장비구축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 * 신수요 산업분야 : 그린카, 바이오/의료, 원전기자재, 융합부품/소재, 건축물안전, 반도체 조명
 - 국내 기업과 시험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시험 장비를 개발·적용함으로써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발급에 따른 홍보 및 수입 장비 대체를 기대
- 향후추진 계획
 - 각 주관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며 구입 예상 장비의 공익성 및 활용도가 높은 장비를 지원
 - 각 주관기관의 자체예산 투자실적을 감안 지원비 인센티브 부여
 - 국제협력을 통한 시험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선진시험기관과의 MOU체결 확대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8년도 중간평가(상위평가) 결과 : 적절('18.06)
 - 제품안전기술 제품화 실적 등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
 - 사업성과 질적 우수성 제고 측면에서 대표사례 제시 등을 통한 구체적인 분석 및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22,089	22,089	-	-	-	-	22,089	22,089	100	100	-	-
2017	24,166	24,166	-	-	-	-	24,166	24,166	100	100	-	-
2018	14,029	14,029	-	-	-	-	14,029	14,029	100	100	-	-
2019	9,890	9,890	-	-	-	-	9,890	9,89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22,089	22,089	22,089	22,089	-	22,089	22,089	22,089	100	100
2017	24,166	24,166	24,166	24,166	-	24,166	24,166	24,166	100	100
2018	14,029	14,029	14,029	14,029	-	14,029	14,029	14,029	100	100
2019	9,890	9,890	9,890	9,890	-	9,890	9,890	9,890	100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2)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R&D) (3731-31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코드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18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박종섭	라정인	-
		043-870-5500	043-870-5502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	-	-	5,900	4,260	순증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4,260
· 규제샌드박스 기술 기준개발	-	-	-	-	-	-	-	-	-	-	-	2,175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 연구지원	-	-	-	-	-	-	-	-	-	-	-	1,998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	-	-	-	-	-	-	-	-	-	-	(1,200)
- 융합신제품 개선 연구지원	-	-	-	-	-	-	-	-	-	-	-	(720)
- 개발기준 제도화 지원	-	-	-	-	-	-	-	-	-	-	-	(78)
· 기획평가관리비	-	-	-	-	-	-	-	-	-	-	-	87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4,260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	-	-	-	-	-	-	-	-	-	-	4,2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규제 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개선 연구 지원을 통해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신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 산업융합촉진법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 산업융합촉진법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② 추진경위

- ('11.4) 산업융합촉진법 공포
- ('11.10)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시행)
- ('11.12)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
- ('12.8)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제 4-1-2)
- ('17.7)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국정-34, 복합·혁신-2)
- ('18.1)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확정(VIP 주제)
- ('18.3) 규제혁신 5법 국회 발의(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 ('18.10) 산업융합촉진법 개정(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 ('18.12)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역점추진과제 2-3-2)
- ('19.4)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정책과제 2)
- ('19.4) 규제샌드박스 100일 성과점검 및 개선방안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95억원(국고 295억원)
- 사업기간 : '20 ~ '24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 수혜자 : 기업,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대학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수행기관 유형별 달리 적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7, 2019.8.8.)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 장관은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인증기술개발 : 4,173백만원 요구(신규)

-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 개발(과제) : 규제샌드박스 허가 품목을 대상으로 관련 기준 제·개정을 위한 기술기준 개발 → 2,175백만원 요구

*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 개발 : 15개 과제 x 145백만원 = 2,175백만원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과제) : ①적합성인증 인증기준 개발, ②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중소기업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연구 지원 및 ③신규 개발기준의 제도화 지원 → 1,998백만원 요구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 : 1식 x 1,998백만원 = 1,998백만원

└ 적합성인증 신청품목 인증기준 개발·검증 : 15개 품목x80백만원=1,200백만원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연구 : 12개 품목x60백만원=720백만원

└ 신규 개발기준의 제도화 지원 : 1식x78백만원=78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87백만원 요구(신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단위사업의 성과 :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3731)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 국제표준화기구 승인 신규 국제표준안 건수(R&D)(종)	목표	신규	신규	30	31	-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사업으로 국제표준화 기구(공적, 사실상)에 제안하여 신규 국제 표준안으로 채택된 건수의 합	전담기관 성과입력 시스템 등제 자료
	실적	신규	신규	49	-	-			
	달성도	-	-	163.3	-	-			
(2) 국제표준화회의의 참가 건수(건)	목표	125	155	120	128	-	-	ΣB (B : 국제표준화회의의 참가건수)	국표원 내부 통계 자료 및 국제표준화 기구 홈페이지 자료
	실적	139	212	126	-	-			
	달성도	111.2	136.8	105	-	-			
(3) 국가표준개발 신산업·신수요 분야 비중(%)	목표	65	70	75	75	-	-	국가표준개발 신산업· 신수요 분야 비중= $\frac{\Sigma \text{신산업} \cdot \text{신수요 분야}}{\Sigma \text{국가표준 개발수}} \times 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통계자료, 홈페이지
	실적	66	73	75	-	-			
	달성도	101	104	100	-	-			
(4) 국제상호인정 확보 건수(R&D)(건)	목표	신규	신규	12	12	-	-	당해연도 국제상호 인정(MRA) 취득건수	MRA 사업으로 지원한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 (MRA 양해각서 증빙 자료)
	실적	신규	신규	12	-	-			
	달성도	-	-	100	-	-			
(5) 차세대계량기술 개발과제 제품화성공률(R&D) (%)	목표	신규	신규	30	32	-	-	(형식승인 신청건수 /전년도 기술개발 종료과제수) $\times 100$	차세대계량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원한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 (성과분석 통계자료 또는 분석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30	-	-			
	달성도	-	-	10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20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없음

③ 향후('20년도 이후) 기대효과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의 기술·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 개선 지원을 통한 기업의 융합신제품 개발 환경 조성 및 국가 산업 융합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융합신제품에 적합한 기술·인증기준의 신속한 마련을 통해 기업의 인증 취득 시간과 비용 절감하여 시장경쟁력 확보하고 관련 법·제도 불확실성 해소하여 수출 진입장벽 완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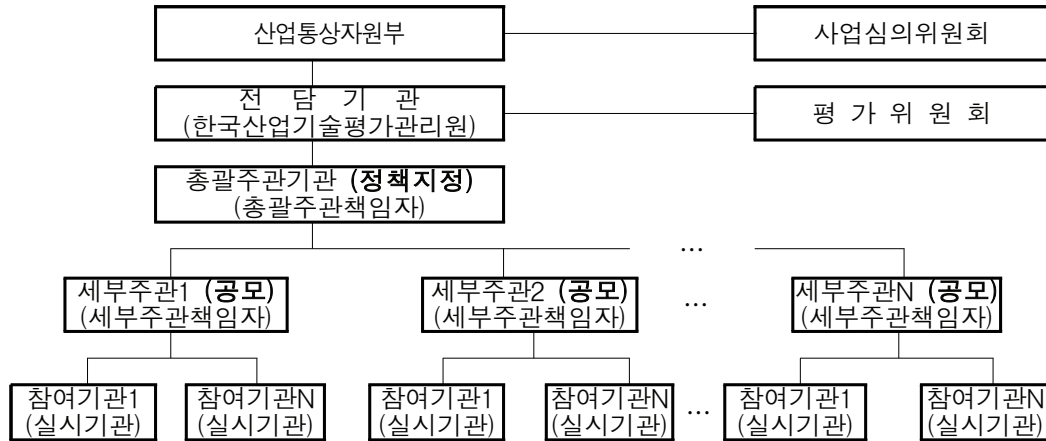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대상사업이 아님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추진체계 (병렬형 과제)



○ 추진절차(공모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	-	-	-	-	
'19~'23		-	5,900	5,900	5,900	5,9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0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규제 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제도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인증기준 개발 및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연구지원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규제 샌드박스와 적합성인증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❶기술·인증기준 연구개발 및 ❷제품개선 연구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규제 샌드박스) 일정기간 규제면제 후,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수 → 기준 정비를 하기 위한 기술기준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
 - (적합성인증) 전문가협의체에서 인증기준을 신속히 의결할 수 있으나, 인증기준 연구개발 자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20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2017												
2018												
201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2017										
2018										
2019										

2) 주요 결산사항

2016	
2017	
2018	
2019	

라. 기타 추가자료

* 참고자료 별도 첨부

1.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규제 샌드박스(산업부·과기부, '19), 적합성인증제도(산업부, '14) 운영 중

* 목적: 융합신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 규제애로 해소. (단, 적합성인증은 제품만 해당)

○ (규제 샌드박스) '先규제면제, 後정식허가'를 지원하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

- (개요)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
- (효력) 유효기간(2+2) 내 규제 적용 없이 실증, 사업화 가능, 부처는 법령정비 착수
- (특징) 유효기간 만료 시, 규제특례는 종료, 임시허가는 법령 미정비 시 계속 연장

○ (적합성인증) 새로운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

- (개요) 전문가협의체가 새로운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제품을 인증
- (효력) 알맞은 기준이 없어 받지 못했던 기존인증(KS, KC등)을 받은 것과 동등
- (특징) 마련한 인증기준을 별도로 고시 → 기존 인증기준을 제·개정하지 않음

□ (필요성) 규제 샌드박스과 적합성인증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①인증기준 연구개발 및 ②제품개선 연구지원이 필수

○ (규제 샌드박스) 일정기간 규제면제 후, 관련 법령과 기준 정비가 필수 → 기준 정비를 하기 위한 인증기준 연구개발이 필수

○ (적합성인증) 전문가협의체에서 인증기준을 신속히 의결할 수 있으나, 인증기준 연구개발 자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

* 적합성인증 제도운영(보조금) 예산에서 회의 참석 전문가수당만 편성

〈기존 인증기준 개발 사업들의 한계 존재〉

- Q.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인증기준 제·개정 예산들로 대응이 가능한지?
- A. 기존의 예산들은 다년도 계획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형성이 된 업계의 수요를 대상으로 하여 융합신제품 즉시 대응 불가 → 본 사업은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시장진입 적시성(규제 샌드박스, 적합성인증신청)에 따라 즉시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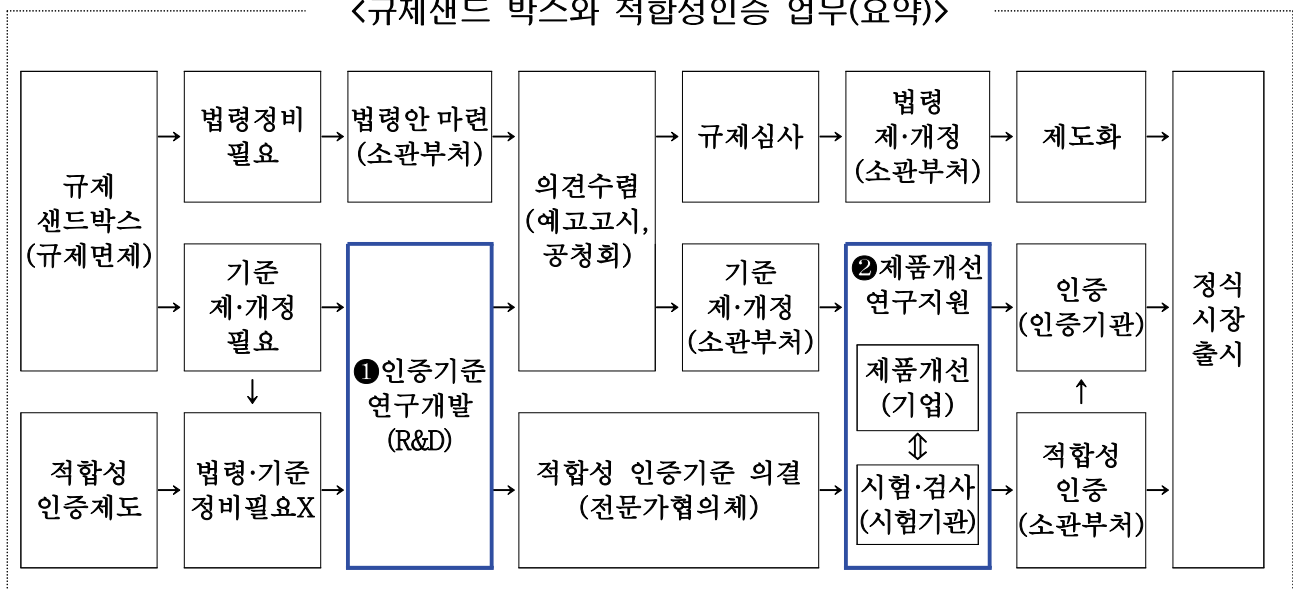
- (공통사항) 새롭게 제안된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제품 개선이 필요 → 기업의 제품개선 R&D에 대한 지원이 필요*

* 국가의 행위(새로운 인증기준 개발)로 인한 기업의 부담(제품개선) 발생하기 때문

** 적합성 인증 신청 42건 중 7건이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획득 실패

※ (사례) D社 적합성 인증제도 신청('16.9) → 협의체가 마련한 인증기준으로 시험·검사를 하였으나 통과하지 못함('17.1) ⇐ 내부 역량 부족으로 제품개선에 1년 이상 소요

〈규제샌드 박스와 적합성인증 업무(요약)〉



2. 사업내용

- (사업목표) 규제 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 제품개선 연구 지원으로 융합신제품의 규제 애로 해소

- (세부내용)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와 적합성인증제도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개발, 기업의 제품 성능·안전성 제품개선연구 지원

-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 개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 허가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기간 중 기준 제·개정을 위한 기술기준 개발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 ①적합성인증제도 신청품목 대상 인증기준개발, ②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규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연구지원 및 ③신규 개발기준의 제도화 지원

- ① **(적합성인증기준 개발)**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신청 품목을 대상으로 ‘협의체’에서 의결 가능한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 방법을 검증·개발 연구
- ② **(제품개선 연구)** 새롭게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제도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대상 품목의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연구
- ③ **(제도화 지원)** 연구개발을 통해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안)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품목 관련 근거 법령정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의

□ **(차별성)** 본 사업은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 인증신청 대상 품목만을 지원하며, 인증비용을 지원, 인증 관련 인프라를 구축, 인증 신뢰성 검증 등에 그치는 他사업과 달리 **인증기준을 설계·개발(R&D)함**

3. 기대효과

- **(사회·경제적 측면)** 융합신제품에 적합한 기술·인증기준의 신속한 마련을 통해 기업의 인증 취득 시간과 비용 절감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법·제도 불확실성 해소
 - **(융합신제품 시장출시 지연 해소)** 4차 산업혁명 등 시장변화 대응 융합 신제품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개발을 통한 국내 시험·인증 기술력 위상 강화 및 시장 출시 지연 해결
 - **(융합신제품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던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업 활성화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유도
- **(과학·기술적 측면)**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의 기술·인증 기준 개발 및 제품 개선 지원을 통한 기업의 융합신제품 개발 환경 조성 및 국가 산업융합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시장경쟁력 확보)** 융합신제품에 적합한 기술·인증기준 및 시험 평가 항목 도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하여 시장경쟁력 확보
 - **(중소·중견기업 산업 융합 역량 강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보유하고 있으나,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개선 R&D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역량 강화

붙임 1

융합 신제품 규제 샌드박스 개요

□ 추진 배경

- AICBM 등을 활용,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新제품·서비스 창출
→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 가속화 필요

□ 주요 내용

-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③임시허가 제도

구분	실증·테스트 목적 (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시장출시 목적 (구역·규모 제한 정도 낮거나 없음)
규제 모호	① 규제 신속확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 사업자 신청 → 산업부 장관 → 관계부처 30일 내 회신 	
법령 공백 · 적용 부적합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 배제 (2년 이내, 1회 연장가능) ○ 사업자 → 산업부 장관 →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민관합동) 결정 	③ 임시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출시를 위해 2년 이내 임시허가 부여(1회 연장, 법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간주) ○ 사업자 → 산업부 장관 → 규제특례심의위원회(민관합동) 결정
금지·불허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 규제특례심의위원회(민관합동, 산업부 장관 위원장)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저해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임시허가 허용 여부를 심의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 민관합동으로 규제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 심의·조정

- 사업자는 규제특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가입, 관계부처는 필요시 즉시 관련법령 정비에 착수

붙임 2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개요

□ 적합성 인증 제도 개요

○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는 융합 신제품을 대상으로 적시 시장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융합 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기존 법령에 따른 각종 규정*으로 인해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Fast-Track(6개월 내)으로 적합성 인증**을 통해 시장 출시 애로해결

* 허가, 승인, 인증, 검증, 인가 등

** 근거법령 : 산업융합촉진법 제3장(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신청품목의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 방법**을 마련하여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며, 향후 유사 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 제정의 발판 마련



< 적합성 인증제도 절차 >

사 업 명
(13)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37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1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시장관리과	조현훈	하영선	-
		043-870-5420	043-870-5422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제품시장감시 역량강화	3,991	5,884	5,884	11,923	6,872	988	16.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025	4,025	3,991	0	34	5,884	5,884	5,884	5,864	0	20	6,872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2,769	2,769	2,769	0	0	3,006	3,006	3,006	3,006	0	0	3,006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리콜제품이행 점검	756	756	756	0	0	1,110	1,110	1,110	1,110	0	0	1,283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등	380	380	346	0	34	380	380	380	360	0	20	380
·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구축 및 확산	120	120	120	0	0	120	120	120	120	0	0	120
·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	-	-	-	-	923	923	923	923	-	-	1453
· 위해도평가	-	-	-	-	-	345	345	345	345	-	-	630
○ 비목별 분류(합계)	4,025	4,025	3,991	0	34	5,884	5,884	5,884	5,864	0	20	6,872
· 시험연구비(210-13)	2,743	2,743	2,743	0	0	2,980	2,980	2,980	2,980	0	0	2,982
· 일반용역비(210-14)	380	380	346	0	34	380	380	380	360	0	20	380
· 사업추진비(240-01)	26	26	26	0	0	26	26	26	26	0	0	24
· 민간경상보조(320-01)	876	876	876	0	0	2,498	2,498	2,498	2,498	0	0	3,4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성조사) 시중 유통 중인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적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등의 조치 실시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리콜이행점검) KC미인증, 도용 등 각종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현장조사 후 형사고발 및 리콜제품 수거 현황 등 이행점검
- (제품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으로 안전감시원이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 대해 리콜제품 등 유통여부 모니터링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한 제품(리콜제품)으로 확인되는 즉시 전국 유통매장에 제품바코드, 모델명 등을 통보하여 미회수된 리콜제품 판매 원천차단
-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구축) 전안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어 사전인증·KC마크 표시 등 의무가 전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위해도 평가) 소관부처 및 안전기준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관리품목 및 신소재 제품의 위해도 평가를 통한 안전성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 제9조(안전성조사 등)
 -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제19조(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5조(안전인증 등)
 -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10조(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등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제6조(안전성조사)
- 제9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 제10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명령)
- 제17조(안전인증 등)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제25조(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② 추진경위

- '03. 5월 대통령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어린이 안전사고 경감 지시
- '04. 4월 감사원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지적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 1월 공산품안전망구축사업(세부사업) 시작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 '06.12월 공산품안전관리종합 5개년계획 수립
- '08. 5월 대통령 대국민담화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도 모든 조치강구”
- '08. 9월 대통령 “성인용보다 어린이용을 빨리 조치하여 유통을 중단해야함”
- '09.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09.1.1)
- '09.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10.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 본 사업 추진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 '11. 3월 제1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4. 1월 제2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6. 5월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 기본계획 수립
- '16.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17. 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17.1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기준준수대상 신설)
- '18. 3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지속지원)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대한상공회의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대한상공회의소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등 (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3,006백만원

-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등의 행정조치

- 산출내역

- 시료구입비 : 642백만원(6,424건×0.1백만원)
- 시험수수료 : 2,249백만원(6,424건×0.35백만원)
- 일반수용비 : 69백만원
- 국내여비 : 22백만원
- 사업추진비 : 24백만원

②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 1,283백만원

- 국민신문고, 사이버 불법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조사(KC미인증, KC도용 등) 및 리콜제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 사고 예방

- 산출내역

- 인건비 : 930백만원(31명×30백만원×100%)
- 출장비 : 353백만원(228회×31명×0.05백만원×100%)

③ 제품안전모니터링 감시단 구성·운영 등 : 380백만원('19년과 동일)

- 소비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안전감시원(안전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하여 불법·불량제품 및 리콜제품의 시중유통여부 감시·차단

- 산출내역

- 제품안전감시원 관리 : 80백만원(4개 분야*×20백만원)
*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안전품질표시 제품
- 사이버쇼핑몰 감시* : 40백만원(1개 분야×40백만원)
* 사이버감시원이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의 제품을 모니터링
- 제품안전감시원 수당 : 260백만원(186명×28일×0.05백만원)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 120백만원('19년과 동일)

-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한 제품(리콜제품)으로 확인되는 즉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전국 유통매장에 제품바코드, 모델명 등을 통보하여 판매차단

- 산출내역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 80백만원(80백만원×100%)
- 연계클라이언트 유지보수 : 30백만원(30백만원×100%)
- 시스템확산 용역관리, 간담회 등 사업운영비 : 10백만원(10백만원×100%)

⑤ 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 구축 : 1,453백만원

- 전안법 개정('18.7.1)에 따라 신설되어 사전인증의무 등이 전혀 없는 관리제도 (안전기준준수대상)에 대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 산출내역

- 인건비 : 400백만원(10명×40백만원×100%)
- 출장비 : 114백만원(10명×0.05백만원×228회)
- 시료구입비 : 439백만원(4,386제품×0.1백만원)
- 시험장비비 : 500백만원(10대×50백만원)

⑥ 위해도평가 : 630백만원

- 소관부처 및 안전기준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관리품목 및 융복합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성 확보

- 산출내역

- 시험수수료 : 540백만원(1.8백만원×20품목×15모델)
- 시료구입비 : 30백만원(0.1백만원×20품목×15모델)
- 인건비 등 : 60백만원(30백만원×2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 (하향지표)	목표	16	15	15	15	15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조치(개선조치 포함) 건수를 고려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률 = 부적합건수 / 안전성조사 건수 × 100	안전성조사 결과 보고서(내부자료)
	실적	14.1	14.9	15.0	-	-			
	달성도	113.5	100.6	100	-	-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 운용점포수(개)	목표	75,000	80,000	95,000	102,000	115,000	중소유통매장 보급추진에 따른 증가세 둔화 고려	Σ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설치 점포	내부자료 (운용매장으로 부터 확인)
	실적	77,836	92,048	100,932	-	-			
	달성도	103.8	115.1	106.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4,915개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실시하여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조사 제품 : '14년(4,533개) → '15년(4,864개) → '16년(4,915개) -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 위해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하여 위해 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콜조치 제품 : '14년(463개) → '15년(420개) → '16년(355개)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제품안전협회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4,212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그 중 1,286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고발(541), 지자체 통보(384), 판매금지요청(312), 인증기관통보 등(49)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105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하여 4,149 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76,832건 모니터링 실시 - G마켓, 11번가 등 45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20,018건을 모니터링하고, 2,772건에 대해 판매중지 또는 내용수정 조치
2017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4,800개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실시하여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조사 제품 : '15년(4,864개) → '16년(4,915개) → '17년(4,800개) -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 위해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하여 위해 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콜조치 제품 : '15년(420개) → '16년(355개) → '17년(286개)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제품안전협회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4,290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그 중 1,813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526), 지자체 통보(489), 판매금지요청(731), 인증기관통보 등(67)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오프라인 81,437건 모니터링 실시 - G마켓, 11번가 등 45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23,770건을 모니터링하고, 7,684건에 대해 시정 권고 <p>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16.12 유통물류과로부터 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92,048개 매장에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16년(77,836개) → ‘17년(92,048개)
2018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4,873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제품안전협회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3,820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그 중 1,483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421), 지자체 통보(372), 판매금지요청(637), 인증기관통보 등(23)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124,617건 모니터링 실시 -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제품 모니터링 인력을 확대(‘17년 90명 → ‘18년 120명) <p>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100,932개 매장에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17년(92,048개) → ‘18년(100,932개)
2019.6월 기준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5,233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19.11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5,248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그 중 2,477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 107,087건 모니터링 실시(‘19.11) <p>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173,723개 매장에 시스템 설치(‘19.11)

③ 향후('20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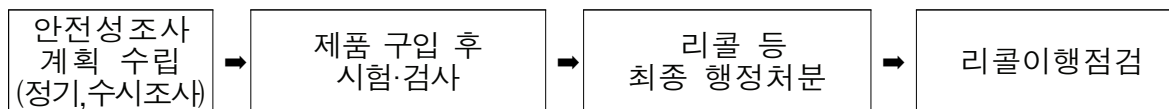
- **안전성조사를** 통해 위해제품을 적발하고, 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안전성조사 실시*
 - *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15년부터 10개품목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분기별로 집중 반복조사
 - 안전취약 계층인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지속 시행
 -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즉시 안전성조사를 수행하여 소비자의 위해우려 조기 불식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18.9.21)에 따른 사후관리 기능 확대**
 -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리콜이행점검의 실효성 제고
 - 사전규제가 전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18.7.1 신설)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
 -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관리품목을 발굴하여 그 위해도에 따라 안전기준을 마련
- **제품안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불법·불량제품 유통감시 체계' 구축
 - 소비자단체, 온라인쇼핑몰 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리콜제품 유통 차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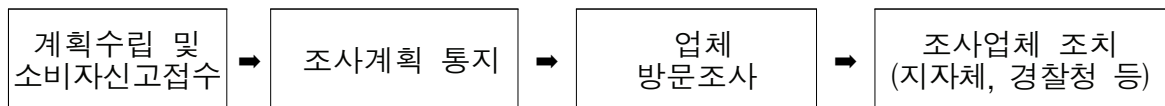
①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등)



- (계획 수립) 연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조사품목, 조사시기 등)
- (시험·검사) 무작위로 선정된 시판품을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적합 여부 조사
- (행정처분)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
 - 최초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및 재시험 등 신청 기회 부여 후 최종 행정처분
- (이행점검) 리콜이행 점검 후 후속조치 실시(고발, 보완명령 등)

②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이행점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 등)

가. 불법·불량제품 단속



- (신고접수) 주로 국민신문고, 협회직접신고 등을 통해 민원 접수
- (계획통지) 조상대상업체에 조사계획 통지
 - 필요에 따라, 통지없이 불시 방문조사
- (방문조사) 신고건에 대해 실제 불법·불량제품 여부 확인
 - 확인서 및 증빙서류 확보
- (조사업체 조치) 불법제품 확인 시 고발 및 행정조치

③ 안전모니터링 구성 운영 등

구 분	운영주체	기능 및 역할
주 관	국가기술표준원	· 시장감시 정책·지침 마련 ·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주체 선정 등
운 영	소비자단체 (분야별 모니터링단체)	· 운영위원회 운영(제품안전감시원 포함) · 제품안전감시원 교육·관리 등
시장감시	모니터링요원	·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보고 ·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판매중지, 시정권고 등

* 제품안전관리가 취약한 문방구,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KC 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을 집중 단속

○ (체계) 위촉된 제품안전감시원이 전국 오프라인 판매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품시장 감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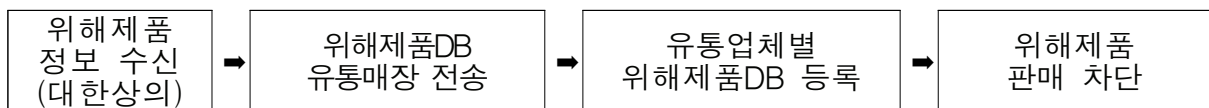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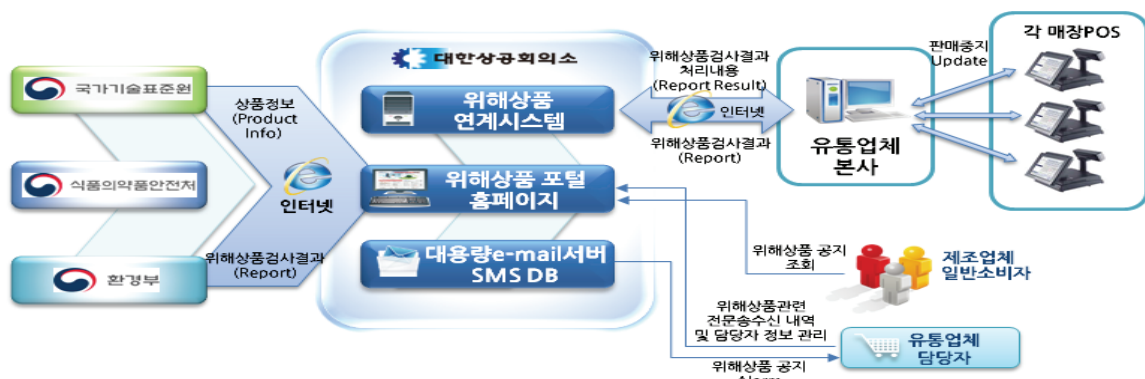
○ (모니터링대상) 불법제품(KC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미비 등) 및 리콜제품

- 불법제품은 제품안전협회에 통보·확인 후 형사고발 조치/시·도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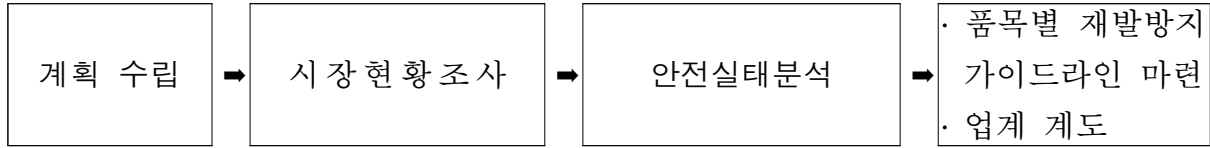
* 온라인의 경우, 모니터링단체에서 직접 자율시정권고(제품정보 수정, 삭제 등)

- 리콜제품은 리콜이행점검팀에 인계하여, 조사 실시 후 보완명령 등 실시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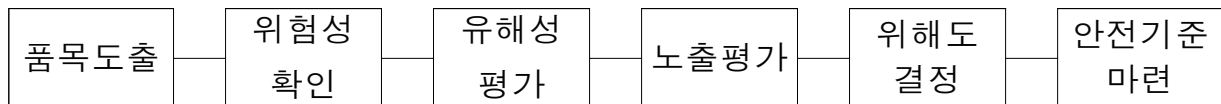


⑤ 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 구축



- (계획수립) 안전기준준수대상 22개 품목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 (시장현황조사) 품목별 제품 유통현황, 사업체 현황 등 시장현황 파악
- (안전실태분석) 품목별 업체규모별 안전기준 준수율, 부적합 부위 등 실태분석
- (후속조치) 분석결과에 따라 품목별로 부적합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자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⑥ 위해도 평가



- (품목도출) 시중 유통제품을 모니터링하여 비관리제품 및 신종 유해물질 함유 신제품 출시 등 현황 분석 및 대상 품목 도출
- (위험성확인) 국내외 관련 표준, 사업자가 제출한 제품정보, 사고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험발생 가능성(확률)을 산정하여 위험성 확인
- (유해성평가) 위험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해요소의 함유량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표준에 따라 제품시험 실시
- (노출평가) 유해물질의 노출대상, 노출정도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인체 유해성 등을 평가
- (위해도결정) 위험성확인, 유해성평가 및 노출평가 결과를 근거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위해도 및 이에 따른 향후조치 사항 결정
- (안전기준 마련) 위해도평가 결과를 반영한 품목별 안전기준(안) 마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4,025	5,884	4,025	4,025	4,025	
'19~'23		5,884	6,472	7,120	7,120	7,12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산사업의 효율을 위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사업(본부 유통물류과)을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의 내역사업으로 통합운영 필요('16.1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리콜이행점검반 신설(신규 4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출장비 지원을 위해 목간전용(시험연구비→민간경상보조)이 아닌 자체 세목간 조정(시험연구비→일반용역비)은 비목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음('16.7, 국회 예정처)
 - 리콜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리콜제품 회수대책 촉구(16년 국정감사)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부실한 리콜이행점검으로 인한 리콜제품 시중유통사례 지적('15.9.20, KBS9시 뉴스)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사업을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결정('16.12, 국회 본회의) 및 현재('17.1~) 내역사업으로 운영 중
 - 협회의 리콜이행점검반 출범에 따른 예산지원을 위해 당초 기재부와 목간전용에 대해 협의('16.2)하였으나, 기재부는 리콜이행점검반의 한시적인 TF특성을 들어 '16년에는 세목 간 조정을 하여 운영 후 필요성이 있을 경우 '17년도 예산작업 시 민간경상보조로 신청할 것을 권고
 - '16년 운영결과, 효율적 리콜이행점검으로 소비자, 사업자의 피해가 감소함에 따라 '17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반영함(156백만원)
 - 리콜제품 유통차단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점포를 지속 확대 중이며('16년 77,836개 → '17년 92,048개),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통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실시 중('16년 96,850건 → '17년 105,207건)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사후 안전성조사 및 리콜이행점검 등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소비자에게는 위대한 제품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
 - * (해외동향) 美, 日, EU 등은 안전기준(기술기준)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활용하는 사후규제 확대 추세
- 리콜조치에 대한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 제품을 사업자가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유도
-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통해 형사고발,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로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를 보호
- 소비자단체의 제품안전감시단을 통해 제품안전관리가 취약한 문방구나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KC마크 미부착, KC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을 단속하여 불법제품 및 리콜제품의 시중유통을 방지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을 통해 위해상품으로 판정시 제품의 바코드, 인증번호 등을 통해 시중유통제품 차단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7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 보통

평가시기	회계/기금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평가점수	평가등급	비고
2017년	일반	제품시장감시역량 강화	-	보통	

○ '19년 보조사업평가 결과 : 정상추진(92.2/100)

- 사전규제완화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후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사후관리의 핵심은 부적합제품을 리콜하고 불법제품을 단속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시장으로부터 퇴출하여 국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는 것임

평가시기	회계/기금	보조사업명	평가결과
2019년	보조금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정상추진

13) 부처 전의사항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사업의 '20년 정부예산안은 재정여건 상 '19년과 동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 다만, KC미인증제품 사고 빈발, 정부 관리소홀에 대한 외부지적, 리콜제품 회수율 저조 등에 대한 국민·언론 등의 우려가 지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단속·점검인력 규모 등의 한계로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적시에 해소하기가 어려운 상황
- ⇒ KC미인증 등 불법제품에 대한 선제적 단속, 리콜명령 불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단속인력 확충 등의 예산 증액이 필요

< 참고 : 지적 상황 등 >

▶ (사고발생)

- 전동킥보드류 : 최근 4년 화재 사고 총 36건 중 KC미인증 제품이 34건

▶ (언론보도)

- KC미인증 불법마사지기 유통 사실 지적('18.11)
-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 미인증제품 사용 사실 지적 등('19.5)

▶ (소비자원 지적)

- 어린이제품 핑거페인트류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원인물질 검출 보도('17.10)
-

▶ (국회 지적)

- ('18.10, 김성한 의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액체괴물(완구) 제품이 리콜조치 이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 가능. 엄정한 조치 요구
- ('18.10, 이철규 의원) 리콜조치된 아동용품의 회수율을 제고 필요
- ('18.10, 백재현 의원)
 - 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요망
 - ② 리콜 명령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하여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

- 또한,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수행하던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보다 엄정한 수행을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18.9.21,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하였으며,
- 제품안전관리업무의 객관성·공정성 담보를 위해 기존 협회 회비, 자체 수입 등을 정부재정으로 대체 지원(기존 협회 지원 예산대비 1,639백만원 증액이 불가피)
- 다만 관리원은 법개정에 따른 업무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초기 정착기임을 고려하여 종전 협회와 동등 수준의 규모로 운영 중
- 이에 따라, 리콜건수 및 소비자사고 지속증가*에도 불구하고 설립 첫 해인 '19년은 인력규모를 늘리기보다는 기관정착에 주력한만큼,
 - * 리콜건수 : ('17) 285 → ('18) 321, 전기용품 사고건수 : ('15) 7,965 → ('18) 10,309
- 각종 불법·위해제품 유통이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규모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3,749	3,749	-	±142	-	-	3,749	3,743	99.8	99.8	-	6
2017	4,025	4,632	-	-	-	607	4,632	4,625	99.8	99.8	-	7
2018	4,025	4,025	-	-	-	-	4,025	3,991	99.2	99.2	-	34
2019	5,884	5,884	-	-	-	-	5,884	5,864	99.7	99.7	-	2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600	600	600	600	-	600	600	-	-	100
2017	876	876	876	876	-	876	876	-	-	100
2018	876	876	876	876	-	876	876	-	-	100
2019	2,498	2,498	2,498	2,498	-	2,498	2,498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간 조정(210-13→210-14) : 리콜이행점검 강화 방안('16.1)에 따라 한국제품안전협회에 리콜이행점검반 신설(신규 4명 충원)을 위해 목간전용(210-13→320-01)이 아닌 자체 세목간 조정함(목간전용에 대해 기재부와 사전협의 하였으나 기재부는 자체전용 권고) - 집행잔액 6백만원 불용(위탁사업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성조사 확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607백만원 편성('17.7) : 사회적 안전이슈 대응을 위한 수시조사 확대(휴대용선풍기 발화사고에 따른 이차전지제품, 전동킥보드), 안전취약제품 관리강화를 위한 기획조사 실시(가전제품, 냉·난방기구, 레저용품, 완구 등) - 집행잔액 7백만원 불용(위탁사업비5백만원, 사업추진비 2백만원)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잔액 34백만원 불용(조달청 입찰계약 잔액에 따른 불용)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잔액 20백만원 불용(조달청 입찰계약 잔액에 따른 불용)

사 업 명
(14)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안전제도기반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	이귀현	-	조춘강 연구사
		043-870-5410	-	043-870-541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안전제도기반조성	3,647	3,538	3,538	1,798	1,794	△1,744	△49.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647	3,647	3,538	-	37	3,538	3,538	3,538	3,535 (3,535)	-	3	1,794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750	750	737	-	13	700	700	700	698 (698)	-	2	700
· 제품안전 보급 확 산 및 국제협력	1,044	1,044	1,032	-	12	1,006	1,006	1,006	1005 (1005)	-	1	1,002
· 제품안전정책·정 보안내시스템 운영	150	150	138	-	12	92	92	92	82 (82)	-	-	92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	1,740	1,740	1,740	-	-	1,740	1,740	1,740	1,740 (1,740)	-	-	-
○ 비목별 분류(합계)	3,647	3,647	3,538	-	37	3,538	3,538	3,538	3,535 (3,535)	-	3	1,794
· 일반수용비(210-01)	377	377	369	-	8	366	366	366	366 (366)	-	0.2	367
· 임차료(210-07)	46	46	42	-	4	41	41	41	41 (41)	-	-	41
· 재료비(210-11)	30	30	30	-	-	30	30	30	30 (30)	-	0.5	30
· 관리용역비(210-15)	150	150	138	-	12	92	92	92	92 (92)	-	-	92
· 국내여비(220-01)	24	24	24	-	-	22	22	22	22 (22)	-	-	22
· 국 외 업 무 여 비 (220-02)	37	37	37	-	-	37	37	37	37 (37)	-	0.3	37
· 사업추진비(260-01)	20	20	20	-	-	20	20	20	20 (20)	-	-	19
· 일반연구비(260-01)	750	750	737	-	13	700	700	700	698 (698)	-	2	70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510	510	510	-	-	490	490	490	490 (490)	-	-	486
·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1,740	1,740	1,740	-	-	1,740	1,740	1,740	1,740 (1,74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제품 출시 등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안전정책 및 안전기준 개발·보급, 대국민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한 제품안전 문화 확산
- 제품안전 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을 통해 시장상황 변화(제품의 다양화, 융·복합화)에 맞는 신속한 안전기준 제정 및 정책의 개발을 통한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 추진
- 제품안전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제도 참여 촉진 및 자발리콜 분위기 조성 등 제품안전관리문화 확산·정착
- 제품안전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제도 참여 촉진 및 자발리콜 분위기 조성 등 제품안전관리문화 확산·정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4.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5.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작성·관리
8. 제품사고조사분석 및 위해도평가
9. 기업 및 단계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② 추진경위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06.12.23.)
- '07.12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7.12.21)
- '10. 1월 전기용품 “제조자시험결과인정제도” 시행
- '10. 2월 “제품안전기본법” 제정(2.4)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2.5)
- '11. 3월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3.21)
- '14. 2월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2.27)
- '14. 6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정(6.3)
- '15. 6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6.4)
- '16.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정(1.27)
- '16. 3월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공고
- '17. 3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7. 12월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12.1)
- '18. 3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3.20)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00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의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700백만원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안전기준 정비) : 700백만원 (14종×50백만원)
- * ('19) 700백만원 (14종×50백만원)

○ 제품안전 보급 확산 및 국제협력: 1,002백만원 ('19) 1,006백만원

- 제품안전 교육·홍보 등(민간보조) : 486백만원 ('19) 490백만원
 - * 제품안전 중요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제작/지상파·지하철 등 홍보 : 260백만원
 - * 리콜기업, 제조·유통업체, 일반 소비자·사업자 등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 : 90백만원
(교육내용 : 리콜제도 매뉴얼, 품목별 안전기준, 불법·불량제품 식별요령 및 신고방법 등)
 - * 제품안전분야 연구개발, 안전사고 감소 및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단체) 포상 : 36백만원
(제품안전의 날 포상규모(총50점) : 훈장1, 포장1, 대표1, 국표3, 장표24, 원표20점)
 - * 소비자, 기업, 지자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포럼 및 협의체 운영 : 100백만원
- 제품안전 관련 문화 확산 및 국제기구 협력 등 : 516백만원 ('19) 516백만원
 - * 제품안전 관련 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 제작 및 회의 개최 등 : 437백만원
 - * 제품안전 국제기구(ICPSC, OECD, ICPHSO 등) 참석 등 협력 : 79백만원
 - ※ 일반수용비 367백만원, 임차료 41백만원, 재료비 30백만원, 국내외여비 59백만원 등

○ 제품안전 관련 대국민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 운영 : 92백만원

('18) 92백만원

- 제품안전정보제공 및 안전기준전산화 유지보수 : 92백만원
- * 제품사고, 리콜, 인증 정보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수집 및 안전기준 개정 이력 관리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제품안전정보 이용자수(단위:명)	목표	20,000	22,000	22,000	24,000	24,000	최근 3년간 평균 점 속자수와 외부환경 변화 반영	제품안전포털 일평균방문자수 =년 방문자수/365	제품안전포털 통계확인 (ksafetykorea.kr)
	실적	20,374	25,463	35,397	38,376	-			
	달성도	102%	116%	161%	15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p>①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선도학교 교육 : 220명 실시 - 제조·유통업체, 소비자 등 제품안전교육 : 1,377명 실시 - 소비자단체 학부모대상 강사양성 교육 : 42명 - 어린이 교육교재 및 영상제작·활용 : 각 5편 ○ “2016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및 제품안전 홍보(약 400명 참석)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지상파TV 및 온라인 채널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TV광고, 지하철광고, 블로그 기자단 운영 등 정책 홍보 -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 운영관리(연중)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정책 포럼 홈페이지’ 오픈 (‘16.3월) - 포럼운영위원회, 총회, 분과회의 개최 ○ 국제협력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 (2월, 11월) - ISO/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 총회 및 워크숍 참석(11월) - CPSC(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 벤치마킹(12월) - 국제전기기기 인증관리위원회 국제협력(2월, 5월, 9월, 11월) 등 <p>②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를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방안 연구” 등 21개 과제 수행을 통해 관련 제도 정비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포털 집중홍보에 따른 접속자수 대폭 증가 <p>* 1일 접속자 수 : '14년) 2,388명 → '15년) 15,788명 → '16년) 20,374명</p>
2017	<p>①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유통업체, 소비자 등 제품안전교육 : 1,403명 실시 - 소비자단체 학부모대상 강사양성 교육 : 99명 ○ “2017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실시(약 400명 참석)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및 라디오, 온라인 광고(12월0, 지상파담회 개최(4월, 11월) - 카드뉴스(12월), 제품안전사고사례 영상제작배포 등 정책홍보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제도분과 및 기술분과위원회 운영(제도8회, 기술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위원회 및 통합분과위원회(6월) - 제품안전혁신포럼 총회 개최(11월) <p>○ 국제협력활동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의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 (2월, 11월) - 일본 경산성 및 NITE(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사고조사 벤치마킹(3월) - 제14, 15차 OECD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정례회의(4월, 11월) <p>②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리콜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23개 과제 수행을 통해 관련 제도 정비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포털 집중홍보에 따른 접속자수 대폭 증가 <p>* 1일 접속자 수 : '15년) 15,788명 → '16년) 20,374명 → '17) 25,463명</p>
2018	<p>①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p>○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유통업체, 소비자 등 제품안전교육 : 1,430명 <p>○ “2018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실시(약 400명 참석) <p>○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TV 광고(11월), 온라인 광고(5월), 지상좌담회 개최(5월) - 카드뉴스(12월), 제품안전사고사례 영상제작배포 등 정책홍보 <p>○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제도분과 및 기술분과위원회 수시운영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위원회 및 통합분과위원회(6월) - 제품안전혁신포럼 총회 개최(11월) <p>○ 국제협력활동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의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 (2월, 11월) - OECD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정례회의(4월, 11월) <p>②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리콜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20여개 과제를 통해 관련 제도 정비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포털 집중홍보에 따른 접속자수 대폭 증가 <p>* 1일 접속자 수 : '16년) 20,374명 → '17) 25,463명 → '18년) 35,398명</p>
2019	<p>①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p>○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유통업체, 소비자 등 제품안전교육 : 1,620명 <p>○ “2018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실시(약 400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광고(8~12월), 온라인 광고(6월) - 카드뉴스(12월), 제품안전사고사례 영상제작배포 등 정책홍보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제도분과 및 기술분과위원회 수시운영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위원회 및 통합분과위원회(6월) - 제품안전혁신포럼 총회 개최(11월) ○ 국제협력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 (2월, 11월) - OECD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정례회의(4월, 11월) <p>②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유통 비관리 제품 조사·분석” 등 23개 과제를 통해 관련 제도 정비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도 향상에 따른 접속자 <p>* 1일 접속자 수 : '16년) 20,374명 → '17) 25,463명 → '18년) 35,398명</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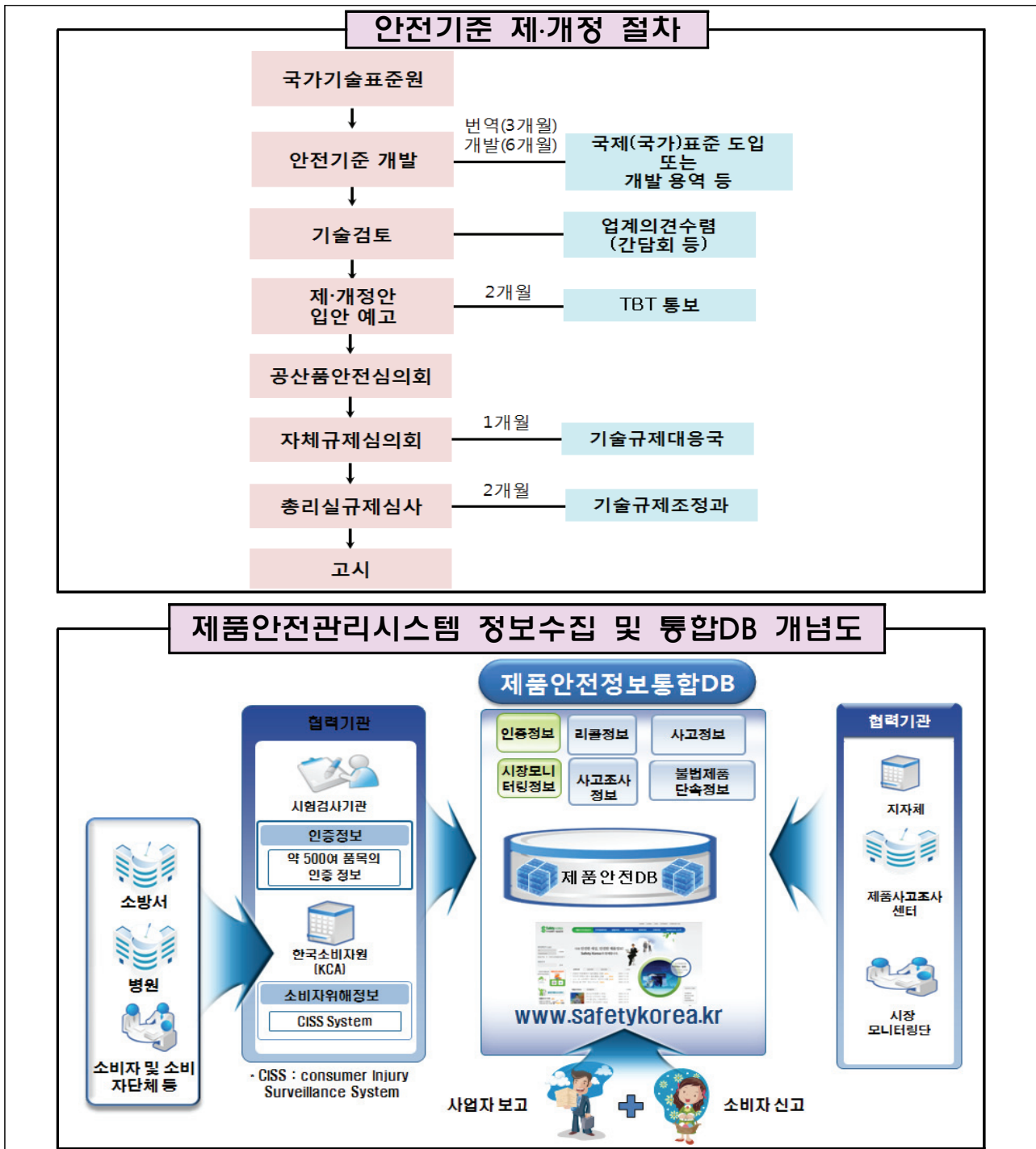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안전관리제도의 교육 및 국제협력 확대
 - 제품안전관리제도의 교육·홍보 확대를 통한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제도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
-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 시장환경의 변화(제품의 다양화, 융복합화 등)에 따른 신속한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제품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확보
- 제품안전관리문화 확산·정착
 - 제품안전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련 제도 교육·홍보를 통한 소비자 및 생산자의 안전의식 고취로 제품사고 예방 및 확산 방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3,684	3,538	1,977	1,977	1,977	
'19~'23		3,538	1,944	1,944	1,944	1,94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산업위 지적사항)

- 민간경상보조로 수행하는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방법전파” 내역사업의 성격이 연구개발비와 유사하여 예산과목, 지원 및 추진방식 변경 필요
- 이에, '16년 예산 요청시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방법전파”사업의 예산 과목 및 수행방식을 변경

* (예산과목 변경) 민간경상보조(320-01) → 연구개발비(260-00)
(수행방식 변경) 1개기관 지정 → 공개입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목표) 국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제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선진형 안전관리제도 구축
- (추진방향) 제품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내·외 환경에 맞는 정책개발을 통하여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반영하고, 홍보,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한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 추진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

평가지기	회계/기금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평가점수	평가등급	비고
2017년도	일반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안전제도기반조성 등)	-	보통	
2018년도	일반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안전제도기반조성 등)	67.8	보통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감축

평가지기	회계/기금	보조사업명	평가결과	비고
2016년도	보조금	제품안전교육 및 홍보 등	감축	'17년도 예산에 반영완료

13) 부처 건의사항

-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한 리콜 등 강력한 안전관리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용품의 위해성분 검출, 전기제품으로 인한 화재·감전사고 등 **제품으로 인한 안전위해 사례가 매년 20,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 예산 지원 필요**

* 위해사례 접수건수 : '16년) 22,028건 → '17년) 26,227건 → '18년) 24,013건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1,977	1,977	-	±35	-	-	1,977	1,946	98.4	98.4	-	31
2017	1,899	1,899	-	-	-	-	1,899	1,862	98.0	98.0	-	37
2018	3,684	3,684	-	-	-	-	3,684	3,651	99.1	99.1	-	33
2019	3,538	3,538	-	-	-	-	3,538	3,535	99.9	99.9	-	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700	700	700	700	-	700	700	-	0	100
2017	540	540	540	540	-	540	540	-	0	100
2018	2,250	2,250	2,250	2,250	-	2,250	2,250	-	0	100
2019	2,230	2,230	2,230	2,230	-	2,230	2,230	-	0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6	31백만원 불용 * 집행잔액(일반연구비 15백만원, 운영비 등 16백만원) 35백만원 전용 *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 운영비 內 재료비(35백만원)를 일반수용비로 조정
2017	37백만원 불용 * 집행잔액(일반연구비 7백만원, 관리용역비 8백만원, 운영비 등 22백만원)
2018	33백만원 불용 : 집행잔액
2019	3백만원 불용 : 집행잔액 (일반연구비 1.5백만원, 재료비 0.5백만원, 수용비 0.2백만원, 국외여비 0.3백만원)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15)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 (3732 - 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4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 고도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	김성복	서명수	
		043-870-5430	043-870-543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885	863	863	948	820	△43	△5.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900	900	885 [885]	-	15	863	863	863	852 [852]	-	-	820
· 사고조사제도이행	220	220	223 [223]	-	9	180	180	180	178 [178]	-	-	171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 · 분석·보급	254	254	237 [237]	-	6	236	236	236	228 [228]	-	-	224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426	426	425 [425]	-	-	447	447	447	446 [446]	-	-	425
○ 비목별 분류(합계)	900	900	885 [885]	-	15	863	863	863	852 [852]	-	-	820
· 일반수용비(210-01)	35	35	26 [26]	-	5	31	31	31	31 [31]	-	-	29.2
· 시험연구비(210-13)	60	60	72 [72]	-	-	60	60	60	60 [60]	-	-	57
· 관리용역비(210-15)	641	641	632 [632]	-	1	648	648	648	639 [639]	-	-	-
· 사업추진비(240-01)	4	4	4 [4]	-	-	4	4	4	4 [4]	-	-	3.8
· 일반연구비(260-01)	160	160	151 [151]	-	9	120	120	120	118 [118]	-	-	114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	-	-	-	-	-	6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어린이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에 대한 사고조사제도를 이행(사고조사 후 결함 제품 리콜)하고 소비자 위해 정보 수집·분석·보급 및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제품사고에 대해, 사고조사를 통한 리콜 등 사고조사제도 이행
 -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제품은 제10조, 11조에 따른 제품 수거 등의 행정조치
-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소비자, 기업 등에 제공하는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수행
 - * 인증정보, 소비자위해정보, 안전성조사결과정보 등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 관세청과 협업으로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적발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안전관리제도 이행
 - *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14.8.21)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 이행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한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이행

② 추진경위

- ‘14.2.26 “제2차 제품안전종합계획” 발표, ‘14. 3.5 “제품안전정보센터” 개소
- ‘14.8.21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 ‘14.9.15 “수입제품 안전관리” 시범사업 실시 (인천본부세관 협업사무소 설치)
- ‘15.3.25 “수입제품 안전관리” 본사업 실시 (4개 세관 확대 : 인천본부, 인천공항, 부산, 평택)
- ‘15.5.18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제9조의3 신설: 수입제품 안전성조사 근거마련)
- ‘15.9.23 “행자부-관세청-국표원-환경부-식약처간 정부3.0 협업검사체계” 협약식
- ‘16.1.27 “4개 세관 협업사무소” 상시운영(평택세관 파견 인원 고정배치)
- ‘17. 1월 “세관협업사무소 파견인원” 증원(4→5명)
- ‘19. 7월 “세관협업사무소 파견인원” 증원(5→6명, 인천본부, 인천공항, 인천신항, 부산, 평택)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171백만원)

- 사고접수 제품 결함여부 조사 등 : 57백만원
 - 1) 시험비 : 27백만원=54건*40만원(시험수수료) + 54건*10만원(재료비)
 - 2) 출장비 : 20백만원=100건*2명*10만원
 - 3) 조사자 등 수당 : 10백만원 = 17건*4명*15만원* 조사범위 : 어린이제품, 공산품 및 전기제품을 포함하여 타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모든 생활 가정용제품
- 사고다발제품 등에 대한 원인분석·평가 이행(정기조사) : 114백만원
 - 1) 사고다발 제품, 안전취약 제품 등에 대한 평가·분석 : 38백만원 * 3개 제품

< '19년도 : 180백만원 >

- 사고접수 제품 결함여부 조사 등 : 60백만원

- 1) 시험비 : 30백만원=60건*40만원(시험수수료) + 60건*10만원(재료비)
- 2) 출장비 : 20백만원=100건*2명*10만원
- 3) 조사자 등 수당 : 10백만원 = 17건*4명*15만원

- 사고다발제품 등에 대한 원인분석·평가 이행(정기조사) : 120백만원

- 1) 사고다발 제품, 안전취약 제품 등에 대한 평가·분석 : 40백만원 * 3개 제품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224백만원)

- 정보수집 및 사고상담 콜센터(☎1600-1384) 운영·홍보비: 81백만원
 - 1) 콜센터운영 : 48백만원 = 4백만원*12월
 - 2)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 33백만원
 - 사고조사건의 홍보 등 : 29.2백만원 = 7.3백만원*4건
 -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의 : 3.8백만원 = 23.8만원*16회

- 사고정보, 리콜정보, 위해정보, 제품안전제도 등 제품안전정보 보급 : 74백만원

* 각종 분석정보를 소비자단체, 지자체, 연구소, 기업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급(약 1,300부 배포)하여 소비자 제품안전강화와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 제고를 유도

1) 계간SafetyKorea발간·보급 : 74백만=18.5백만*4회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 : 69백만원

* 해외 리콜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제품 국내 유통업체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자발적 리콜 등의 조치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주의·환기하는 서비스

1) 제품안전 경보서비스 : 69백만원 = 69백만*1건

< '19년도 : 236백만원 >

- 정보수집 및 사고상담 콜센터(☎1600-1384) 운영·홍보비: 85백만원

1) 콜센터운영 : 50백만원 = 4백2십만*12월

2)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 35백만원

▪ 사고조사건의 홍보 등 : 31백만원 = 7.75백만원*4건

▪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 : 4백만원 = 25만원*16회

- 리콜정보, 위해정보, 제품안전제도 등 제품안전정보 보급 : 78백만원

1) 계간SafetyKorea발간·보급 : 78백만=19.5백만*4회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 : 73백만원

1) 제품안전 경보서비스 : 73백만원 = 73백만*1건

○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425백만원)

- 인증대상 제품 인증 여부 실물확인 및 안전성조사(제품시험) 수행

1) 시험·평가비 : 122백만원=256건*40만원(시험수수료) + 256건*8만원(운송비)

2) 인건비 : 272백만원=17.2만원*22일*12개월*6명

3) 통관단계 협업조사시스템 운영 : 31백만원=31백만원*1건

< '19년도 : 447백만원 >

- 인증대상 제품 인증 여부 실물확인 및 안전성조사(제품시험) 수행

1) 시험·평가비 : 128백만원=256건*40만원(시험수수료) + 256건*10만원(운송비)

2) 인건비 : 286백만원=18만원*22일*12개월*6명

3) 통관단계 협업조사시스템 운영 : 33백만원=33백만원*1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안전취약 제품 심층조사 결과 조치 건수 (단위: 건)	목표	5	6	6	7	7	화재 등 사고다발제품, 어린이 제품 등 안전취약제품의 위해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치 설정	사고다발 제품 등 안전취약제품의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보완요청 등 조치 건수	결과보고서 및 내부자료
	실적	5	6	6	-	-			
	달성도	100	100	100	-	-			
통관단계 수입 제품 안전성조 사 건수 (단위: 건)	목표	신규	신규	3000	3200	3300	국민생활 개선 신제품 출시, 국가가 교역확대 등으로 소비자 사용제품 중 수입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치 설정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제품의 선별조사 건수	결과보고서 및 내부자료
	실적	-	-	3846	-	-			
	달성도	-	-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96건 접수, 30건 개선조치 - 2016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 수행 (5개 품목)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제품안전동향(연중), 계간 Safetykorea (연4회) 보급, 제품사고조사 사례집(1회) 발간 - 지하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제품안전포털(Safetykorea.kr) 홍보(연중)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실적 : 총 2,859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899건 적발(적발률 31.4%)
2017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77건 접수 30건 개선조치('17년) - 2017년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 수행(2개 품목) 및 행정조치(6건)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역 미디어필러 제품안전정보센터 홍보(10.17~11.27)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4회) - “제품사고이야기 WHY” (사고조사 사례집)발간 발간 (1회)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실적 : 총 4,358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324건 적발(적발률 30.3%)
2018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83건 접수, 8건 개선조치('18년) - 2018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 수행(2개 품목) 및 행정조치(6건)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역 SRT 맞이방 제품안전정보센터 홍보(11.14~12.13)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4회) - “제품사고이야기 WHY” (사고조사 사례집)발간 발간 (1회)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18년 협업사업 실시 : 총 3,846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951건 적발
2019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46건 접수, 3건 개선조치('19.6월)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제품안전동향(연중), 계간 Safetykorea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 발간) 보급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11월까지 누계 실적 : 총 4,359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108건 적발(25.4%)

③ 향후('20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고 다발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 및 소비자에 제공함으로써 동일사고 재발을 방지(제품사고조사:70건 이상)
- 각종 사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안전기준 및 표준 등에 반영토록 추진하여 제품안전제도의 효율성 제고 기대(행정조치:7건 이상)
-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적발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강화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선별·조사 : 3,300건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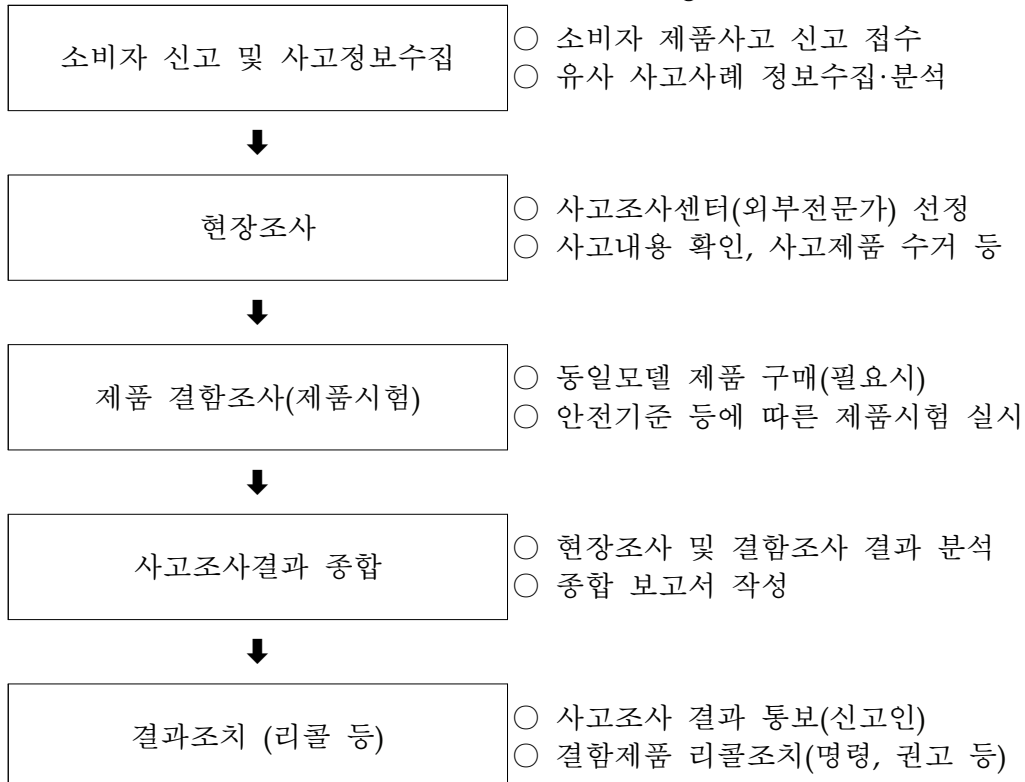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품사고조사)** 국가기술표준원이 사고정보 수집·관리·보급 및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업무를 이행하고, 제품사고조사센터(11개 지정) 및 시험인증기관은 제품결함여부 평가(제품시험) 업무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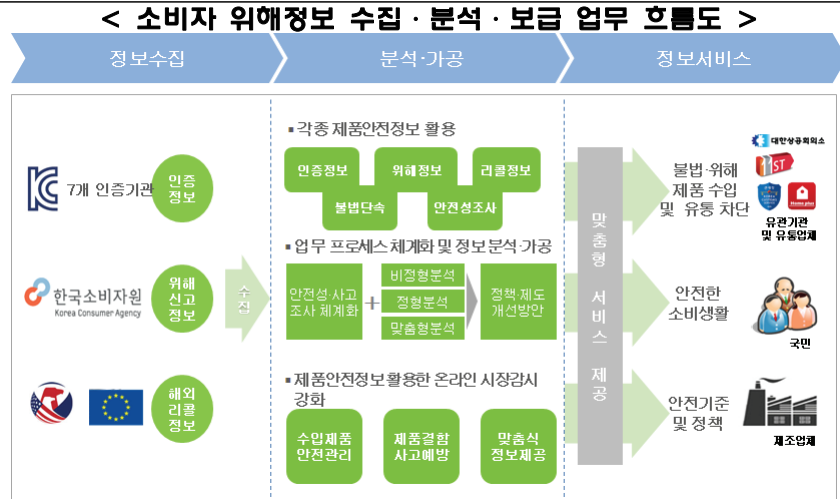
<사고조사 및 리콜조치 이행체계도>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소비자, 기업 등에 보급

* 인증정보, 소비자위해정보, 안전성조사결과정보 등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 **(수입제품안전관리)**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 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수입사업자를 선별하고,
 - 선별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 조치 또는, 국표원에서 리콜조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900	932	964	995	1,025	
'19~'23		863	921	941	961	99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목표)** 제품안전 정보수집을 기반으로 사고조사제도를 이행(사고조사 후 결함제품 리콜) 하고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반입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관리제도 이행
 - **(제품사고 조사제도이행)** 제품사고 및 위해제품 조사를 통해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 등 행정조치
 - **(소비자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한 제품 위해 정보·인증정보 수집·분석 및 보급 체계 구축, 통합 제품안전정보망 운영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차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627	627	0	±24	0	0	627	616	98.3	98.3	0	11
2017	878	878	0	±33	0	0	878	866	98.6	98.6	0	12
2018	900	900	0	±12	0	0	900	885	98.3	98.3	0	15
2019	863	863	0	-	0	0	863	852	98.7	98.7	0	1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사유(±24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부족으로 인해 위탁사업비(210-15), 일반수용비(210-01)에서 세목간 조정 (일반수용비: 9백만원, 위탁사업비: 15백만원 → 시험연구비: 24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정기사고조사 일반연구비 11백만원) : 연구용역 계약체결시 면세기관의 부가세 제외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사유(±33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부족으로 인해 관리용역비(210-15), 일반수용비(210-01)에서 세목간 조정 (일반수용비: 3백만원, 관리용역비: 30백만원 → 시험연구비: 33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 : 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관리용역비 11백만원)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사유(±12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부족으로 인해 관리용역비(210-15), 일반수용비(210-01)에서 세목간 조정 (일반수용비: 3.5백만원, 관리용역비: 8.15백만원 → 시험연구비: 11.65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일반연구비 9백만원, 일반수용비 5백만원, 관리용역비 1백만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일반연구비 2백만원, 관리용역비 9백만원)-

라. 기타 추가자료

□ 사업비목 변경

- 비목의 명확화를 위해 관리용역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 변경 필요
- 관리용역비*(210-15)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 운영”, “제품안전 정보보급”,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 “통관단계 수입제품안전관리”의 내역사업은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예산 비목 변경이 필요
- * 관리용역비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에 대행시키는 비용
- * 민간위탁사업비 : 개별 법령에 규정된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반 비용('19년도 예산 집행지침)

< 제품안전기본법 >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4.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5.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 작성·관리
8. 제품사고 조사·분석 및 위해도 평가
9.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21조의4(운영 자원) ① 관리원은 제21조의3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사 업 명						
(16)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37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 과	홍순파	배종수	
		043-870-5450	043-870-557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 생태계조성	990	990	990	1,360	990	0	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990	990	990 [990]	-	-	990	990	990	990 [990]	-	-	990
· 어린이제품 안전확 보 역량강화	490	490	490 [490]	-	-	490	490	490	490 [490]	-	-	490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440	440	440 [440]	-	-	440	440	440	440 [440]	-	-	440
- 어린이제품 제조기 업 지원	50	50	50 [50]	-	-	50	50	50	50 [50]	-	-	50
· 어린이제품 안전교 육 기반조성	230	230	230 [230]	-	-	230	230	230	230 [230]	-	-	230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160	160	160 [160]	-	-	160	160	160	160 [160]	-	-	160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70	70	70 [70]	-	-	70	70	70	70 [70]	-	-	70
· 어린이제품 안전교 육 프로그램 운영	270	270	270 [270]	-	-	270	270	270	270 [270]	-	-	270
- 안전교육 연구학교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 찾아가는 안전교육	70	70	70 [70]	-	-	70	70	70	70 [70]	-	-	70
- 어린이제품 안전체 험관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 비목별 분류(합계)	990	990	990 [990]	-	-	990	990	990	990 [990]	-	-	990
· 일반수용비(210-01)	50	50	50 [50]	-	-	50	50	50	50 [50]	-	-	50
· 임차료(210-07)	30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일반연구비(260-01)	140	140	140 [140]	-	-	140	140	140	140 [140]	-	-	14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750	750	750 [750]	-	-	750	750	750	750 [750]	-	-	750
·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 사전 예방 및 건강 증진 도모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민원, 리콜 다수 발생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성을 검증·분석하여 제품안전정보 구축/보급 및 안전기준 개선방안 도출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지원: 안전한 어린이제품 보급을 위한 영세 제조/수입업자 대상 시험인증 상담, 시험비용 일부 지원 등 역량강화 지원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기반조성)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사용하는 어린이용 안전교육 교재, 안전체험관용 콘텐츠 개발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강사 대상 전문성 함양을 위해 제품안전 관리제도, 교육컨텐츠 활용법, 교수법 등을 교육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안전교육 선도학교: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을 안전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학교별 안전교육 프로그램(기획, 개발, 운영 등)을 지원
 - 찾아가는 안전교육: 선도학교 외 지방학교 중심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중인 체험관 내 제품안전분야 체험관 구축 등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관련 국정과제: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 실천과제: 57-5. 공산품 생산·유통·사용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② 법령상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조, 제5조, 제27조, 제31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추진경위

- '14.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15. 6월 시행)
- '16. 3월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어린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 490백만원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 440백만원 (11품목×40백만원)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지원 : 50백만원 (10개사×5백만원)

②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기반조성 : 230백만원

- 안전교육 교재 등 콘텐츠 개발 : 160백만원 (4종×40백만원)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 70백만원 (100명×0.7백만원)

③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270백만원

-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 100백만원 (10개교×10백만원)
- 찾아가는 안전교육 : 70백만원 (20개교×3.5백만원)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 100백만원 (2개소×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참가자 (단위:명)	목표	-	300	3,000	4,000	4,500	책정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나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 전년 목표의 약 33%를 높인 최대 목표치 설정	Σ 연간 교육이수 인력	연구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참여자 명단
	실적	-	2,614*	3,783	4,965	-			
	달성도	-	871	126	124	-			

* (목표대비 높은 실적 사유) 당초 방과후 수업 등 소규모의 심층 안전교육으로 기획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교사·학생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 참여대상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추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10개교 1,116명)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20개교 1,498명) : 총 30개교 2,614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 송파 어린이안전교육관, 전북 119안전체험관 내에 구축 '17.12월 ('16년도 송파교육관 : 약8만명, 전북체험관 약17만명 방문) -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안전성 검증·분석 : 10개 품목 어린이용 키보드, 물놀이기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 도출 : 6개 품목 - 성진하이텍 등 어린이제품제조 중소기업 대상으로 유해물질발생 관리, 안전제품 설계, 안전기준·시험방법 등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컨설팅 실시 : 10개 기업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용품, 보행기 등 11개 품목의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성 검증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검토(안) 도출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18개 중소기업 - 미취학 어린이 및 초등학교 중·저학년용 맞춤형 교재 개발: 2건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총 210명 수료 - 12개 유치원·초등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정규 커리큘럼으로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2,130명 수료 - 30개 유치원·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1,653명 수료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재난안전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제품안전체험 시설 구축 : ①부천 119안전센터체험관, ②진천 종합안전교육체험관 등 2개소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 품목(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유아용 의자, 완구,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가구 등) 및 학습용 교구 등에 대한 유해안전성 검증 분석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25 건), 품목별 안전기준 설명회(2회), 현장 방문 자문(49건) 등 - 어린이제품 안전홍보 가상현실(VR) 콘텐츠, 교보재 개발 등 4건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총 210명 수료 - 15개 유치원·초등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2982명 교육 - 40개 유치원·초등학교 대상,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1983명 교육 - 어린이 제품안전 체험관으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설 구축중 (① 몸으로 맞추는 제품안전 퀴즈, ② 실내외 제품안전사고 찾아보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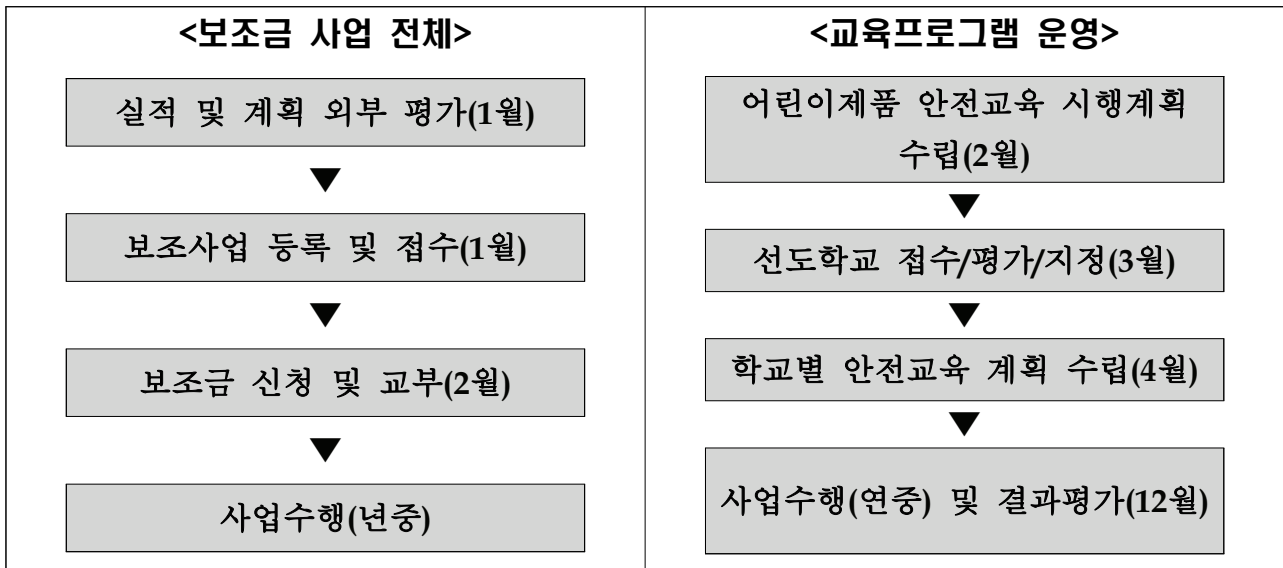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어린이제품 사업자 불법불량제품 단속 위반율 감소: ('18) 40.2% → ('21) 35.0%
-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감소: ('18) 8.5% → ('21) 7.0%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율 15% 감소: ('18) 5,994건 → ('21) 5,000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990	990	1,089	1,198	1,198	
'19~'23		990	1,089	1,198	1,198	1,19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세계 최초로 어린이 안전관련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효과적인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
- (전략 1)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전략 2)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전략 3)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전략 4)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8년 통합 재정사업 일반재정 분야 자체평가 결과
 - 단위사업인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사업: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 강화 >

- 어린이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제품관련 안전사고는 증가 추세
 -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소비자원) : ('13년) 3,403건 → ('15년) 4,656건 → ('17년) 5,261건
- 온라인시장에서 어린이제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고, 신소재·융복합제품의 출시로 신종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위해 가능성 대두
 - * ('14) 2.2조원 → ('15) 2.7조원 → ('16) 2.9조원 → ('17) 3.5조원
 - ** (EU) 유해중금속 관리대상 8종→ 19종 확대, (미국) 위해가소제 관리대상 6종 → 10종 확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시행('15.6.4.)으로 기존 40개에서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관리품목을 확대하고 안전성 검증강화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확대 >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다수가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함에 따라 사전 예방교육의 중요성 증대
 - * 어린이 안전사고 22,545건 중 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약 4,708건(20.8%)('16년)



어린이, 학부모 및 교사 등 어린이안전사고 현장 소비자 중심의 안전의식 제고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필수적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지원 강화 >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은 10인이하 영세기업이 많고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안전한 제품 개발 역량이 현저히 부족
 - * 어린이제품(의류/문구/장난감 등) 업계 평균 종사자 수는 2.4명('10년 통계청)



어린이제품의 근본적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제조기업의 개발 역량 강화,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한 안전품질 향상이 요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	-	-	-	-	-	-	-	-	-	-	-
2017	950	950	-	-	-	-	950	946	99.6	99.6	-	4
2018	990	990	-	-	-	-	990	990	100	100	-	-
2019	990	990	-	-	-	-	990	99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	-	-	-	-	-	-	-	-	-
2017	710	710	710	710	-	710	710	-	-	100
2018	750	750	750	750	-	750	750	-	-	100
2019	750	750	750	750	-	750	75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요약

□ 배경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15.6.시행)」 제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16. 3.)’을 수립·시행

□ 현황 및 필요성

- (현황) 어린이법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대상을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확대하고 불법 위해제품 유통·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
 - * 통관단계 및 유통시장 안전성조사,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등
- (필요성) 어린이는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제품위험 대처능력이 부족하므로 성인 대상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안전관리 필요

□ 추진전략

- “어린이 안전이 중심이 되는 Safety Korea 건설”의 어린이제품안전 비전 실천을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추진과제를 도출 추진

어린이제품 안전 비전	어린이 안전이 중심이 되는 Safety Korea 건설	
목표	건전한 어린이제품 안전 생태계 조성	
지표	1. 안전취약 제품 부적합률 획기적 개선(30% →15%) 2.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율 25% 감축	
추진전략	전략	10대 추진과제
	I 전주기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①제도 정착, ②안전관리 다각화, ③통관 관리강화, ④리콜제도 실효성 제고
	II 어린이제품안전 생태계 기반 조성	⑤제조기업 역량강화 및 수출지원, ⑥인프라 확충, ⑦민관협력 강화
추진전략	III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⑧어린이 안전교육, ⑨교육 인프라 확충, ⑩수요자 중심 홍보 강화 등

1. 기업컨설팅 및 정보제공 강화

[현황 및 정책방향]

- ◇ 어린이제품관련 설계·관리 능력 부족, 안전관리제도 인지 미흡 등으로 불법·불량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영세 기업 다수 존재
 ➔ 다각적 지원으로 안전한 제품생산 및 제도준수 강화 지원

□ 설명회 및 컨설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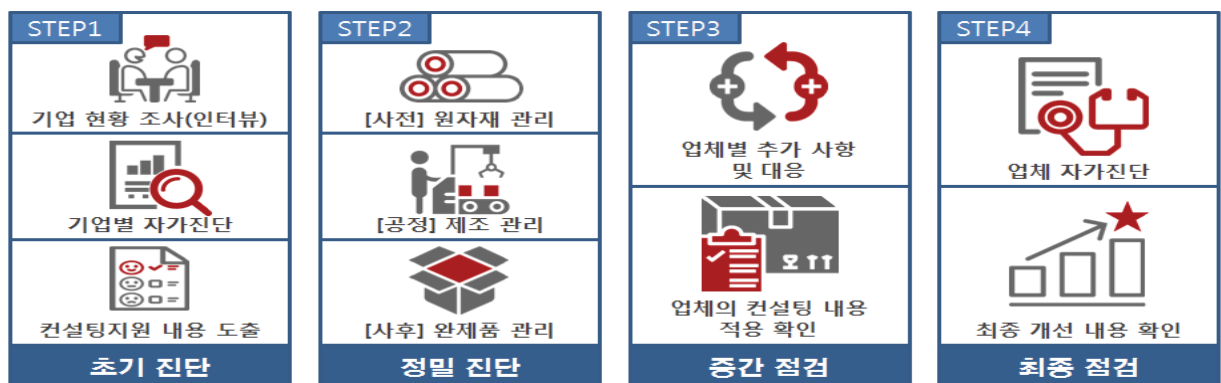
- (개요)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의 안전확보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방문컨설팅*(제도·기술) 및 설명회(1:1 상담포함) 추진

* ('18) 24개사 → ('19) 30개사 → ('20) 50개사 → ('21) 100개사

- (설명회) 법제도, 완구·학용품·섬유제품 등 품목별 안전기준 설명
- (컨설팅) 업체의 상황에 따라 일반(법제도), 심층(법제도+기술) 지원 추진

분야	주요 지원 내용
법제도	① 인증취득절차, 신고방법, 통관절차(안전요건 확인) ② 개별 안전기준 교육 ③ 시험성적서 내용, 제품 표시사항 등
기술	① 제품결함의 개선 (안전기준 부적합, 유해물질 발생 등) ② 유해 화학물질의 기술 자문 ③ 생산시설 및 설계기술 개선 지원

< 심층컨설팅 추진 절차 >



□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 **(직접소통)** 인증 및 시험·검사기관에 등록된 제조·수입 업체* 및 협단체에 주기적으로 제품안전정보** 메일발송 및 의견수렴

* 인증기관에 등록된 어린이제품 제조·수입 업체 15,000여개

** 안전기준 개정안, 법령·관리지침 변경사항, 사고사례, 정책동향, 리콜정보 등

- **(정보다양화)** 제도·기술적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안전한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유도

- **(안전메뉴얼)** 사업자가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을 정리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 법, 인증제도, 유해물질 관리, 수입·통관, 리콜이행 절차 등

- **(부적합 정보)** 어린이제품 시험·검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안전취약 정보*를 종합 분석, 「어린이제품 부적합 보고서」 제작·배포

* 기계적 결함 부위, 유해화학물질, 재질, 색상, 구조, 표시사항 등

- **(안전기준 해설서)** 제조·수입업체를 위하여 품목별 안전기준의 기술적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안전기준 해설서」 제작·배포

< 맞춤형 정보제공 >



2. 시험·검사 비용 절감 지원

[현황 및 정책방향]

- ◇ 어린이제품은 성인제품에 비해 추가 시험·검사 항목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인증비용 발생 → 불법제품의 유통 가능성 증대
 - * 의류제품 평균 KC인증비용 : 유아·아동용 약 80만원, 성인용 약 25만원
- ➔ 국내 중소기업의 시험·검사비용 절감을 통해 안전제품 유통확대

□ 어린이제품 KC인증획득 지원 사업 추진

- (사업개요) 어린이제품 중소기업에 대하여 KC인증을 위한 시험·검사비용의 일부분을 지원 (30~70% 차등지원)
- (지원대상)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국내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예산범위에 따라 직원수, 매출액 등을 조정
- (추진방안) 사업계획* 검토·예산확보('19년) ⇒ 일부 기업·품목에 대하여 시범사업 추진('20년) ⇒ 지원대상 확대 운영('21년~)
 - * 자격·선정 조건, 지원대상 수(특정업체수 또는 예산소진까지), 지원금 범위 등

□ 시험장비 인프라 구축사업 활용 확대

- (사업개요) 일부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영세업자가 저렴한 비용은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전문기관)에 시험장비 구축 지원
 - * 섬유·장신구 시험장비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제품안전 인프라구축 사업('18년 17.4억원)」에 일부 어린이제품을 포함하여 확대 추진
- (지원대상)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및 '개별기준이 없는 기타 어린이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 (점진적 대상품목 확대)
 - * 해당 어린이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비 구축 및 전문인력 교육

□ 시험·검사 비용의 합리적 책정

- (비용 가이드) 현재 지정된 시험·검사 및 인증기관의 제품별 소요 비용 현황을 심층 점검하고, 세부항목별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 제시

1.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현황 및 정책방향]

- ◇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이슈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교육은 교통, 재난 중심으로 추진 중
- ➔ 어린이제품 올바른 사용·구매법,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제품안전 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 및 찾아가는 교육을 전면 확대

□ 안전교육 선도학교 지정확대 및 내실화

- (선도학교 확대) 주요 지역별 어린이제품관련 심층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선도학교 지정·운영 확대 (유치원·초등학교 / 6~8개월 교육)
 - * '18년 12개교 → '19년 15개교 → '20년 20개교 → '21년 30개교
 - 교육부와 협의하여 지정 학교·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운영내실화) 체계적인 공통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재·동영상·완구 등 다양한 교보재를 활용한 자율적 이론·체험 교육 실시
 - * 역할극, 제품별 안전체험 실습, 그림그리기 대회(우수작 포상·전시) 등
 - 교사·학부모 대상으로 안전교육·공개수업을 실시하고,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주변학교로 제품안전교육 전파
 - * 선도학교 on-offline 커뮤니티 활성화 → 우수사례, 교육콘텐츠, 교수법 등 공유

□ 「찾아가는 제품안전 교육」 전면 확대

- (대상확대) 기존 대상인 지방소재 학교 이외에 보육원, 산후조리원, 문화센터 등 제품안전 전문가의 방문교육대상 대폭 확대
 - * ('18) 30개교(1,653명) → ('19) 100개소 → ('20) 200개소 → ('21) 300개소
- (박람회 참여) 국내의 어린이 제품·교육·건강관련 박람회에 '제품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대국민 제품안전 로드쇼」 추진
 - *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 박람회, 안전산업 박람회 등

2. 체험형 어린이교육 시설 확충

[현황 및 정책방향]

- ◇ 어린이 제품안전 체험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투입으로 개수, 규모, 체험구성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 ➔ 전국 지역 거점별 어린이제품안전 체험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소외지역을 위한 이동형 체험시설 도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확대·내실화

- (체험관 확대) 실생활에서 어린이제품으로 기인하는 위험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제품안전 체험시설 5개소 구축(지자체 안전체험관 내)
 - * 개수: ('19) 1개소 → ('20) 2개소 → ('21) 2개소 / 예산: 1억원 이상(개소별)
- (설계 표준화) 제품안전사고 발생장소(집안, 학교, 놀이터 등), 주요 제품(완구, 키보드 등) 특성에 따른 체험시설 설계가이드 개발
 - * 제품안전은 소방·재난·교통안전 분야에 비해 개념과 설계의 명확화가 필요

< 그 간 구축된 체험시설 ('17~'18년) >

서울(송파)	전북(임실)	충북(진천)	경기(부천)
			
▶ 구성 : 가정 내 사고 ▶ '18년 관람 : 4.9만명	▶ 구성 : 제품별 사고 ▶ '18년 관람 : 15.9만명	▶ 구성 : 가정 내 사고 ▶ '18.12월 완공 시범운영 중	▶ 구성 : 실내외 사고(3D촬영) ▶ '19.9월 완공예정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 버스 도입

- (체험버스 도입) 이동과 접근이 용이한 이동형 체험 버스를 제작·운영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의 수혜대상과 효율성 제고
 - * 체험버스 운영 : (기상청) 기후변화, (어린이안전재단) 교통·심폐소생·화재대피, (전기·가스안전공사) 전기·가스안전,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안전 등
- 차량설계, 운영방법, 소요예산 등 세부방안 검토 및 도입('21년)

3.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현황 및 정책방향]

- ◇ 어린이·학부모 등 소비자 대상 제품안전 교육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콘텐츠 연구와 관련 전문인력은 부족
- ➔ 제품안전 연구체계 구성, 교육컨텐츠 개발, 전문강사 육성 등 체계적인 교육인프라 확충

□ 「어린이 제품안전 교육연구회」 발족·운영

- (역할) 제품안전 교육관련 정책지원, 콘텐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수법 개발, 사업성과 분석 등 교육사업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
 - * 초등·유치원·보육교사 정규 교육과정에 제품안전 내용반영, 학교내 제품안전 교사 연구회 활성화 등 제품안전 교육확산 지원
- (구성·운영) 학계(대학·초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단체(어린이안전재단 등), 소비자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전문가 10여명
 - * 교육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무국운영, 공동연구·프로젝트 개발·수행

□ 대상별 교육콘텐츠 개발·활용 확대 (제작물은 유튜브 등 인터넷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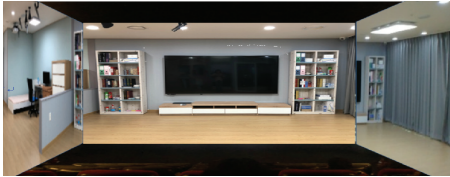
-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 저·중·고 연령별 교육콘텐츠* 개발
 - * 연령별 교재, 주제별 동영상, VR(가상현실) 프로그램, 체험교구(게임, 워크북 등) 등
- (교사) 어린이 교재별 지침서(책·영상), PC형 교안 등 교보재 개발
- (학부모) 안전한 제품 구매·사용법, 장소·제품별 사고사례 브로셔 제작
 - * 대상(영유아 및 예비부모 등), 장소(키즈카페 등), 제품(완구 등)에 따라 별도 개발

□ 제품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 (과정개발) 제품안전교육의 확산을 위해 일반·전문가 교육과정을 개발, 장기적으로 '학교안전교육지도사' 등 정규 자격화
 - ▶ 일반과정 : 교사, 학부모, 대학(원)생 중심으로 기본개념 교육 (1일)
 - ▶ 전문가과정 : 안전교육이 직업인 전문강사 육성 교육 (5일 이상)

1. 사업 개요

- (목적) 어린이의 제품 사용 관련 올바른 생활안전 습관 함양 및 위험 인지 형성 등을 위하여 사고다발 품목 등의 직·간접형 체험 시설 구축
 - * 어린이접근성 및 타 안전체험 연계를 위해 지자체 소속 안전체험관 내 시설 활용
- (예산) 10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 * ('17년) 100만원(2개소) → ('18년) 100만원(2개소) → ('19년) 100만원(1개소)
- (구축현황)

국축 년도	체험관명(지역)	주요 체험 시설	비고
2017	송파어린이 안전체험관 (서울 송파) * 2018년 방문자 수: 5만		가정환경 (거실, 어린이방 등)
	전북119 안전체험관 (전북 임실) * 2018년 방문자 수: 15만		사고 다발 (타는 기구, 삼킴사고 등)
2018	진천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충북 진천)		가정환경 (거실, 주방 등)
	오정119안전센터 (경기 부천)		스크린X(3면 화면)을 활용한 영상 상영

2. 문제점

- 교통, 재난, 소방 등 타 안전체험 시설(타부처 소관)은 시청각, 지각 등을 활용한 직·간접적 체험 시설이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 어린이제품의 경우 예산상 한계로 인해 제품안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실감하기 어려운 실물을 통한 교육 위주 실시

<타 안전체험 교육 예시>

안전 교육	주요 체험 시설 예시		비고
교통			철도, 차량전복 등
재난			지진, 4D영상
화재			소방, 탈출

* 체험시설별 약 2억~4억원 소요

3. 개선방안

- 어린이제품의 위험성 체감이 가능한 영상(3D, 4D) 및 시뮬레이션 (가상/증강현실)형 시설구축 및 콘텐츠 개발

- 기존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의 추가 콘텐츠 반영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 기존의 사고예방 교육 위주의 공간에 체험시설을 보완

사 업 명
(17)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37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 정책과	정해권	석경철	원종두
		043-870-5520	043-870-5529	043-870-552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4,087	4,288	4,288	6,106	4,942	654	15.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100	4,100	4,087 [4,097]	-	13	4,288	4,288	4,288	4,266 [4,266]	-	22	4,942
· 해외 기술 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2,655	2,655	2,646 [2,646]	-	9	3,019	3,019	3,019	3,019 [3,019]	-	-	3,510
· TBT 대응 및 국제 협력 지원	288	288	284 [284]	-	4	314	314	314	301 [301]	-	13	314
· FTA TBT 협상· 이 행 강화	370	370	370 [370]	-	-	250	250	250	41 [41]	-	9	250
· 한· 중 FTA TBT 종합지원	787	787	787 [787]	-	-	705	705	705	705 [705]	-	-	888
○ 비목별 분류(합계)	4,100	4,100	4,087 [4,087]	-	13	4,288	4,288	4,288	4,266 [4,266]	-	22	4,942
· 일반수용비(210-01)	168	168	165 [165]	-	3	154	154	154	154 [154]	-	-	155
· 임차료(220-07)	50	50	49 [49]	-	1	50	50	50	42 [42]	-	8-	50
· 국외업무여비(220-01)	112	112	112 [112]	-	-	132	132	132	127 [127]	-	5	132
· 사업추진비(240-01)	13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2
· 일반연구비(260-01)	3,757	3,757	3,748 [3,746]	-	9	3,939	3,939	3,939	3,930 [3,930]	-	9-	4,59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내역사업 ① 해외 기술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우리기업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의 규제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기업에 전파하고, 국내기업에 애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당사국과의 협상(양자, 다자)을 통해 해당 규제를 제거하거나 완화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

- (내역사업 ② TBT 대응 및 국제협력 지원) 양자협상, 다자협상 및 타국 공조를 위한 전문가 협의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
- 우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WTO TBT 위원회(3,6,11월)에 참석하여 **다자협상**을 실시하는 한편, FTA TBT 위원회(예: 한-콜롬비아), 현지 규제당국 직접방문(예: 케냐 에너지 효율규제 해소) 등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 현안을 적기 해소
- (내역사업 ③ FTA TBT 협상·이행 강화) 상대국의 규제현황, 법, 제도 및 기술규정 등을 분석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
- 분석된 협상 당사국의 규제정보를 사용하여 협상(양자, 다자)시 우리국익에 최대 반영
- * 협상 전 또는 협상 이행시 상대국의 각종 법령, 제도 등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만 우리나라 국익에 유리하게 추진하거나 이행할 수 있음
- (내역사업 ④ 한·중 FTA TBT 종합지원) 중국 규제정보를 업계에 제공하기 위해 주요 규제기관(시장감독관리총국, 국무원 등 21개 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중국 국가표준·기술규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분석된 정보를 **TBT종합포털**에 게재하여 유관 기업이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에 전파 및 애로기업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특화된 대중국 기술규제 종합지원**
-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시장(26.8%, '18년기준)이나, 국제표준과 다른 기술규제가 많고, 제도 운영이 불투명 하므로 기업지원 및 정부차원의 협상 등 특별 대응이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가 우리나라의 무역기술장벽(TBT) 업무를 총괄 하도록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 (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국가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성평가 절차와 달라 국제무역을 불필요한 장애(이하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대표기관) WTO TBT 협정문에서 각 국가는 그 나라의 TBT 관련 대표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을 대표 기관으로 지정
- (무역기술장벽 대표 창구 역할) 우리나라에서 제·개정된 기술규제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WTO TBT에 통보되고, 각 국이 우리나라에 기술규제 관련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이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어 타국에 답변하고 있음

WTO TBT 협정문

제2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2 회원국은 국제무역을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술규정은 비준수에 의해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이다....이하 생략

제10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정보)

10.1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국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아래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10.2 그러나 법적 또는 행정적 이유로 인하여 회원국이 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하는 경우, 이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게 각 문의처의 책임의 범위에 한하여 완전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는 잘못 송부되어진 모든 문의가 정확한 문의처로 신속히 전달되는 것을 보장한다.

- (FTA 협정서에 대한민국의 TBT 대표기관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규정) 국가 기술표준원은, TBT 관련 협상시 대한민국의 대표기관으로 우리나라가 참여한 FTA TBT 협정문*에서 우리나라의 TBT 협상 대표기관으로 명시)

* ①한-미, ②한-중, ③한-칠레, ④한-싱가포르, ⑤한-EU, ⑥한-페루, ⑦한-터키, ⑧한-호주, ⑨한-캐나다, ⑩한-뉴, ⑪한-베, ⑫한-콜롬비아 등 12개 FTA TBT 협정문에서 대한민국의 TBT 대표기관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규정

※ [한-미 FTA TBT 협정문 사례]

한미 FTA TBT 협정문

제9.6조(투명성)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미합중국 질의처, 또는 이 장의 부속서 9-가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조정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을 전달한다.

부속서 9-가(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는 다음이 주관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 경우, 미합중국무역대표부 또는 그 승계기관

② 추진경위

- '06.6 FTA/TBT 협상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과 신설
- '08.9 TBT 중앙사무국 개설 후 무역기술장벽(TBT) 전담 대응(예산 신설)
- '13.12 WTO/FTA-TBT 협상·이행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국 신설
- '15.5.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한·중 FTA TBT 종합지원” 추진
- '17.5. 대선 10대 공약[주변 4국(중·일·러 등)과의 협력외교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통상외교 역량 강화(국익우선 협력외교 2, 3)]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정부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부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모든 수출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사업(4,942백만원)

* ('19년) 4,288백만원 → ('20년) 4,942백만원(654백만원 증액)

○ 해외 기술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 3,510백만원

* ('19년) 3,019백만원 → ('20년) 3,510백만원(491백만원 증액)

- WTO TBT 통보규제/미통보 발굴 규제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 3,400백만원

* ('19년) 2,854백만원 → ('20년) 3,400백만원(546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WTO TBT 통보문 기초분석 : 150백만원

* ('19) 2,200건 × 0.07백만원 = 154백만원 → ('20) 2,142건 × 0.07백만원 = 150백만원(△4백만원)

· WTO TBT 통보 기술규제 조사 및 규제원문 심층분석 : 2,750백만원

* ('19년) 440건 × 5백만원 = 2,200백만원 → ('20년) 550건 × 5백만원 = 2,750백만원(550백만원)

· WTO TBT 미 통보 기술규제 발굴 및 심층분석 : 500백만원

* ('19년) 100건 × 5백만원 = 500백만원 → ('20년) 100건 × 5백만원 = 500백만원

- TBT 대응전략 및 방안마련 : 105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19년) 160백만원 → ('20년) 105백만원(△55백만원)

· 해외기술규제 조사 및 전파 : 80백만원

* ('19년) 4건 × 40백만원 = 160백만원 → ('20) 2건 × 40백만원 = 80백만원(△80백만원)

· 개도국 규제대응 현지 거점 체계구축 : 25백만원

* ('19년) 0원 → ('20년) 1건 × 25백만원 = 25백만원(순증 25백만원)

-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을 위한 대응회의체 운영 : 5백만원[240-01 사업추진비]

* 해외기술규제 조사 분석 대응 회의체 운영 : 5건 × 1백만원 = 5백만원

○ WTO/FTA 협상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 314백만원

* ('19년) 314백만원 → ('20년) 314백만원

- WTO / FTA 협상 및 애로협상 여비 : 132백만원[210-02 국외여비]

* 19건 × 2명 × 3.5백만원 = 132백만원

- 국제회의, 간담회, 포럼 등을 위한 회의장임차 : 50백만원[210-07 임차료]

* 5건 × 10백만원 = 50백만원

- TBT 대응을 위한 전문가 회의 : 20백만원[210-01 일반수용비]
* 20건 × 1백만원= 20백만원
- TBT 대응 관련 외국 법률 자문 : 40백만원[210-01 일반수용비]
* 4건 × 10백만원 =40백만원
-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등 인쇄 : 40백만원[210-01 일반수용비]
* 4건 × 10백만원 = 40백만원
- 통역 및 번역 등 : 24.8백만원[210-01 일반수용비]
* 1건 × 24.8백만원 = 24.8백만원
-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 8백만원[240-01 사업추진비]
* 국제협력 회의체 운영 : 7건 × 1백만원 = 7.2백만원

○ FTA TBT 협상 및 이행 강화 : 230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 ('19년) 250백만원 → ('19년) 230백만원(△20백만원)
- FTA TBT 제도분석 : 80백만원
* ('19년) 2건 × 45백만원= 90백만원 → ('20년) 2건 × 40백만원= 80백만원(△10백만원)
- FTA TBT 기술규정 분석 : 80백만원
* ('19년) 2건×45백만원= 90백만원 → ('20년) 2건×40백만원= 80백만원(△10백만원)
- FTA TBT MRA 연구 : 70백만원
* ('19년) 2건×35백만원= 70백만원 → ('20년) 2건 × 35백만원= 70백만원

○ 한·중 FTA TBT 종합지원 : 888백만원

- * ('19년) 705백만원 → ('20년) 888백만원(183백만원 증액)
- China 기술표준 분석 : 530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19년) 67.8건×5백만원= 339백만원 → ('20년) 106건×5백만원= 539백만원(191백만원 증액)
- FTA TBT 종합지원 포털 운영 : 80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1건 × 80백만원= 80백만원
- FTA TBT 애로 해소 지원 : 110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19년) 55.5건×2백만원= 111백만원 → ('20년) 55건×2백만원= 110백만원(△1백만원)
- 중국 기술표준 교육 : 114백만원
* ('19년) 121백만원 → ('20년) 114백만원(△7백만원)

- 기술표준 교육 : 50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 10건 × 5백만원 = 150백만원
- 교육용 교재 및 팜플렛 인쇄 : 30백만원[210-01 일반수용비]
 - * 2건 × 15백만원 = 30백만원
- 보안 솔루션 설치 : 10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 ('19년) 1건 × 17백만원 = 17백만원 → ('20년) 1건 × 10백만원 = 10백만원(△7백만원)
- 키워드 광고 : 24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 2건 × 12백만원 = 24백만원
- 중국 현지 대응체제 구축·운영 : 54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 ('19년) 54백만원 → ('20년) 54백만원
- 애로 대응을 위한 현지 상담실 운영 : 18백만원
 - * 6개월 × 3백만원 = 18백만원
- 현지 설명회(간담회) 개최 : 36백만원
 - * 2건 × 18백만원 = 3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외국과의 협상 건수(건)	목표	57	67	75	105	107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자국업체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국내 수출업체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 정부와 협상을 실시하고 있는 바, '20년도 성과목표를 최근 3년간 협상건수(평균 82건)보다 24% 상향 설정함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외국과의 협상 건수 = Σ (서면대응 건수 + WIO TBT 다자협상 건수 + FTA TBT 양자협상 건수 + 해당국 방문협상 건수)	국가기술 표준원 통계
	실적	66	91	104	-	-			
	달성도	115	136	13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p>① TBT통보문 번역 및 배포 : 2,336건 (TBT통보문 원문과 번역문을 TBT통합정보포털에 게재하고 자동경보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p> <p>② TBT 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 업그레이드 및 수요자 접근 편리성 확대</p> <p>③ TBT 컨소시엄 구성·운영 : 27개 단체 및 25개 품목협의회 운영</p> <p>④ 수출기업이 호소하는 TBT 애로 66건 중 42건 해소(완전해소 36건, 일부해소 6건)</p> <p>⑤ FTA TBT 협정이행, 협상진행 및 여건조성(EU, 싱가포르, 사우디, 미국, 중국, 인니, 베트남, 한·중·일, 일본, 캐나다) 등 26건</p> <p>⑥ 중소기업을 위한 국내 TBT 설명회(27회), 국외 진출기업의 TBT 설명 및 애로발굴 설명회(2회) 및 수출기업 TBT 현장 컨설팅(125건)</p> <p>⑦ 국내외 기술동향에 대한 뉴스레터(주간 52편, 월간 12편) 발행</p> <p>⑧ 홍보실시(MBC 라디오, 12월), 기획홍보(전자신문, 11월)</p>
2017	<p>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T 통보문 조사) WTO TBT 통보문(2587)의 조사·번역 전파하고 수출액, 적용대상 품목 등 기초조사 실시 ○ (미통보 TBT 발굴·전파) 해외규제 모니터링 및 애로조사를 통해, WTO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306건 발굴·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 해외지사(17건), 국내 규제포털(25건), 시험인증기관 웹사이트(53건), C2P 포털(135건), 설문조사(76건)를 통한 상시 해외기술규제 모니터링 ○ (심층분석) WTO 통보문과 미통보 규제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에 대해 심층분석(678건)을 수행하고 업계 의견수렴(11월말 기준) <p>②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컨설팅)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150건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술자문과 해외인증 취득 지원 ○ (1381 콜센터 연계) '17년 수출기업의 해외기술규제 문의사항 2,562건에 대해 상담, 애로기업 정보제공, 현장방문 컨설팅으로 연계 <p>③ 규제상대국과의 다자 양자 협상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91건대응 45건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委)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WTO TBT 총회(3,6,11월)를 계기로 다자 양자 회의를 개최하여 애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TV 안전·에너지효율 규제 등 37건(3월),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규제 등 30건(6월), △중국 사이버보안 인증 규제 등 33건(11월) 등 ○ (규제당국 방문협의) 상대국과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TBT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국의 규제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협상 실시

* △인도 타이어, 철강규제 3건(7월), △중국 배기가스 관련 애로(9월)

④ TBT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 개선

- **(TBT대응 지원센터)** 해외 TBT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시험인증 기관과 합동으로 **지원센터 설치 추진계획 수립** ('17.11월)
 - 해외 기술규제조사·분석, 수출기업 애로해소 컨설팅 등 통합적 TBT 대응·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구심체 역할담당
- **(TBT 민관협의회)** TBT 관련 주요 부처, 전문기관, 업계가 공동 참여하여 TBT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 구성·운영
 - 특정 이슈에 **다수부처가 관련되거나 범정부적 정보공유** 및 **대응공조**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집중 대응
 - * 中 사이버보안 규제는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7개 부처와 협력('17.10월)
- **(기업간담회)** 수출기업과 긴밀한 의사 소통망을 구축하여 **외국 현지의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업관계자 등과 정기적 **현안 논의**
 - 가전, 자동차 등 **품목별 협의회**를 활성화 하여 **동종업계간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 논의 등 **소통창구**로 활용
 - * ①전기전자, ②화학·생활, ③기계·금속 분야의 품목을 대상으로 개별 협의회 실시
- **(TBT 정책포럼)** 관련 학계/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BT 정책포럼’**을 구성하여('17.9월) 정책자문, 여론수렴, 및 인력양성 추진

⑤ 대상별 TBT 대응인력 역량강화 추진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TBT 설명회(35회)** 개최, **TBT 홍보관 운영 등 상담실시(3회, 302건)**
 - * △ 업종별 협단체 연계 설명회(31회) △ 해외 TBT대응 설명회 (4회, 中북경·상해, 심천, 충칭 등)
△ 한국기계전(130건) '17.10월, 한국전자전(70건) '17.10월, 안전산업박람회(102건) '17.11월
- **(인력양성)** TB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강좌(서울대, 연세대 3학점)** 개설 및 대학(원)생/일반인 대상으로 **논문대회실시(11월, 8개팀 14명 포상)**
 - * 건국대, 서울대, 서울여대, 숭실대, 수원대, 연세대 등 10여개 대학 및 교육기관 특강 실시
- **(민·관 대응 관계자)** TBT 사례 공유, 전문가 의견수렴 등 TBT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심포지엄 개최** 및 **유공자 포상(12월, 6명포상)**
 - * △TBT 민관대응 역량강화 워크숍(2월), △ 국내외 기술규제대응 심포지엄(12월)

⑥ TBT 인식제고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전파

- **(뉴스레터)** TBT 통보문의 내용·통계에 대한 **월간동향(12편)** 및 국내·외 기술규제 동향에 대한 **월간 뉴스레터(12편) 발행·배포**

- (보고서) '16년도 TBT 주요통계, 우리나라 대응사례 등을 수록한 연도별 **TBT 대응 보고서**(5천부) 및 **이슈리포트**(5분야) **제작 배포** (5천부)
- (홍보·광고) **TBT 대응활동 홍보**(7회), TBT 애로창구 정보전달 등을 위한 **신문사 기획홍보**(10회) 게재 및 **라디오 홍보실시**(238회 방송)
 - * △TBT 대응활동 등(전자신문, 한국일보 등), △TBT 성공 기업사례(MBC FM 등, 12월)
- ⑦ **중국 품질검사점역 강화에 대응하여 「한중 FTA TBT 종합지원사업」 추진**
 - 對中 수출기업 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對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인증 획득 및 통관검사 불합격 애로수집·대응 지원 등 **TBT 애로대응 컨설팅**(64건)
 - 입문, 실무, 심화 등 단계별 **TBT 교육**(3회) 및 공기청정기, 밥솥, 비데 등 **품목별 전문교육**(14회) 등 맞춤형 **TBT 교육**(17회) 실시
 - 중국내 주요 규제기관과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규제정보 수집·분석
 - 中 질검총국 등 15개 주요규제기관 일일 모니터링실시하고, 공업정보화부 등 8개 기관은 주간 모니터링 실시하여 **규제정보 수집**(238건), **TBT 뉴스레터 제작·배포**(12건) 및 **CCC가이드북 발간**
 - 중국정부 중점관리대상 10대 소비재* 관련 **기술표준(GB) 분석**(128건)
 - * '16.4월 중국 질검총국(AQSIQ)에서 10대 소비재 품질검사 강화방침을 발표 (공기청정기, 밥솥, 비데, 스마트폰, 완구, 유아용 의류 등 10개)
- ⑧ **한·중 전기전자제품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이행협약('16.12.20. 체결) 후속조치**
 - * (韓-KTR, KTL, KTC, 中-CQC) 한중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품목확대 (KC 173개, CCC 104개 품목)및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16.12.20.)
 - (**한중 FTA TBT위원회**) 우리측은 전자파 분야 상호인정 이행에 대한 中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세부 제안사항을 전달('17.9.27. 회상회의)
 - (**한중 적합성소위**) 전기용품 상호인정 이행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파, 공장심사 분야로 협력확대 논의**('17.11.2. 서울)
 - * (전자파) 상호인정 추진 공동작업반을 '18년 내 설치·운영하고, 실무협의를 연내 개시기로 합의 (공장심사) 국내 심사원이 중국 CCC 인증 공장심사 대행을 위한 교육·등록 방안 검토
- ⑨ **거대시장 진출확대 및 선진기술분야 규제협력을 위한 FTA TBT 협상추진**
 - (**RCEP**) 중국, 인도, 아세안 등 거대시장의 기술규제 투명성 강화* 등의 통한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4차례 협상 추진 (17차: '17.2 ~ 20차: '17.10.)
 - * 기술규정 개발 정보 제공, 30일내 정보제공,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수용 등
 - (**한·이스라엘**) 기술규제관련 협력 강화 향후 MRA 추진 가능성 논의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정문 마련 '16.12월 협상 개시 후 4차 협상을 통해 **TBT협정문 타결**(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RCEP과 차별화된 한중일 경제 공동체를 표방하고 3국간 기술 규제 일치화를 강조하는 협상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타결, 한·일 FTA 협상 재개 등을 고려, 3국간 TBT 공동협력 중점 ⑩ FTA 기체결 주요 수출국과 전략적 FTA TBT 이행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인정 확대 추진) 한·중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MRA) 추진 경험 ('15~'16년)을 바탕으로 인도 등 신흥수출국과 상호인정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계기 TBT/SPS 공동작업반 회의에서 양국간 MRA 추진을 위한 국표원-인도표준청 간 협력 MOU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PA협상) 상품, 서비스, 원산지, TBT/SPS (경과) 1차 협상('16.10월/서울), 2차 협상('17.2월/뉴델리→TBT/SPS분과 논의 개시), 회기간 협상('17.5월/영상회의) - (EFTA) 양국 관심분야(우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 EFTA: 전기전자)에 대한 상호인정 추진 방안 논의 ('17년 WTO TBT 양자회의) ○ (기술규제협력 강화) EU, 아세안 등 주요 수출국가와의 TBT협력 채널 강화를 통한 국내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양국의 전기전자분야 기술규제 정보교환하고, EU 에코디자인, 무선기기지침 등 TBT 현안 및 무선기기분야 협력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제3차 규제대화체('17.6월/서울), 전기안전·무선기기 전문가회의('17.9월, 화상회의) ○ (기타 FTA 위원회) FTA TBT이행 강화를 위한 FTA TBT위원회 개최 및 주요 FTA 체결국과 TBT 애로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콜롬비아) '17.6월/콜롬비아, (한-베트남) '17.7월/베트남 하노이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T 통보문 조사) WTO TBT 통보문 3,065건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대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 (미통보 TBT 발굴·전파) 해외규제 모니터링 및 애로조사를 통해, WTO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510건 발굴·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당국 홈페이지 감시(139건), 국내외 온라인 규제정보포털(203건), 시험인증기관 웹사이트 감시(104건), 국표원-기업 네트워크 해외법인(26건) 등 ○ (심층분석) WTO 통보문과 미통보 규제 3,565건(3,065+510) 중 아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규제 510건에 대해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업계 전파 및 의견수렴 ② 규제상대국과의 다자 양자 협상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104건 협상 49건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委)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WTO TBT 총회(3.6,11월)를 계기로 다자 양자 협상을 통하여 애로 해소

* △브라질 TV 안전·에너지효율 규제 등 35건(3월),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 인정 규제 등 29건(6월), △중국 사이버보안 인증 규제 등 30건(11월)

○ **(규제당국 방문협약)** 상대국과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TBT 애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케냐, 이집트 등의 규제담당부서를 방문하여 현지 협상 실시

* △케냐 에너지 성능 라벨규제 (5월), △이집트 가정용 전기기기 에너지효율규제1건(5월)

○ **(규제당국자 초청협약 등)** 해외 규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8개국 규제당국자를 초청 및 서면협약 등을 통해 규제협력과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 △GSO(UAE 등 6개국) 4건(5월), 인도 2건(9월) 인도네시아 1건(10월) 초청 협약 등

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현장방문 컨설팅)**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방문(580회)하여 224건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중 105건**은 기술자문과 해외인증 취득 지원

* 중기청 설명회(55건), TBT컨소시엄 접수(90건), 전담창구(38건), 기타(41건)

** TBT 기술자문(62건), 해외인증 취득 지원(43건)

○ **(중소기업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TBT 설명회***(62회)개최, **TBT 홍보관** 운영 및 상담** 실시(2회, 161건)

* ① 업종별 협단체 연계 설명회(70회) ② 해외 TBT대응 설명회(4회, 中/상해, 심천, 베이징, 호치민, 하노이)

** 서울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21건 상담/18.9월), KES 한국전자전(140건/18.10월)

④ TBT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 개선

○ **(TBT대응 지원센터)** 해외 TBT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시험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지원센터 설치 추진** (18.5월 국표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 법안상정)

- 해외 기술규제조사·분석, 수출기업 애로해소 컨설팅 등 통합적 TBT 대응·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구심체 역할담당

○ **(TBT 민관협의회)** TBT 관련 주요 부처, 전문기관, 업계가 공동 참여하여 TBT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 구성·운영

- 특정 이슈에 다수부처가 관련되거나 **범정부적 정보공유** 및 **대응공조**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집중 대응

* 中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하여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7개 부처와 협력(17.10월) 및 규제 대응 협의(18.7월)

* 무역기술장벽 협의회 관련 국가표준기본법(26조2) 개정(18.6월)

○ **(기업간담회)** 수출기업과 긴밀한 의사 소통망을 구축하여 **외국 현지의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업관계자 등과 **정기적 현안 논의**

* 상·하반기 대기업/중소기업 핫라인 간담회 추진(4회)

○ **(TBT 정책포럼)** 관련 학계/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BT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정책자문, 여론수렴, 및 인력양성 추진

* ‘중국의 정부조직·표준화법 변화와 표준활동에 대한 우리의 참여 방안 등 총5회 운영

○ **(TBT 인력양성)** TB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강좌**(서울연세대학원, 숭실대 3학점) 개설, 특강* 및 대학(원)생/일반인 대상으로 **논문대회 실시**(11월)

* 무역협회, 한양대학교, 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15회 추진

	<p>⑤ 중국發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한·중 TBT종합지원 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집중관리 대상 소비재에 대한 중국 강제표준 분석(10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표준 요약본 108종을 통해 제품별 中표준 자료집 15건, 중국 TBT 가이드북 3건 개발 ○ 中 주요 규제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中 기술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배포(18건) 및 수출기업 애로 해소(4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TBT 뉴스레터 10건, 中기술규제 심층보고서 및 동향보고서 작성·배포 (18건) ** 접수된 애로에 대해 일반상담(전화·이메일로 정보 제공과 심층상담(해당 전문가가 기업에 연락 또는 방문 하여 상담을 통해 애로 해소 추진(43건) ○ 中현지 TBT지원사무소 운영, 현지 우리기업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 TBT지원사무소 운영 및 상시 애로발굴 (현지 설명회, 간담회 각 2회 개최) ○ 중국 기술규제 분석 정보 제공, 애로 접수 등을 위해 모바일 시스템 구축(18.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웹 구축 및 콘텐츠 정비와 보강으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 中 TBT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교육 17회, 설명회 10회) <p>⑥ FTA 기체결 주요 수출국과 전략적 FTA TBT 이행 협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FTA) 우리 의약품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한·EFTA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고,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은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대응(18.5월) ○ (한·중 상호인정) 정부간 협력 채널(TBT위원회, 적합성소위)을 활용하여 양국간 상호인정(MRA) 활성화(전자과 분야 확대, 공장심사 대행 협의) 추진(18.11월) ○ (한·EU) 한·EU 규제대화체 회의를 통해 양국의 전기전자분야 기술규제 정보를 교환하고, 에코디자인 등 EU측 기술규제 완화 추진(18.11월) ○ (한·아세안) FTA TBT 대화체 개최를 통해 협력 과제* 협의 및 관련 정보 교류, 기술규제 현안 논의 등으로 상호 협력 강화 (18.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관심분야: (韓) 의약품, 건설자재, (아세안) ITS(지능형교통시스템), 의료기기, 화장품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WTO TBT 통보 기술규제 수집, 기초분석 및 기업전파 : 1,225건 ② WTO TBT 통보가 없는 숨은규제 발굴, 분석 및 전파 : 131건 ③ 업계 애로 규제 관련 양자, 다자협상 등 협상건수 : 72건 ④ TBT 통보규제, 미통보 규제 심층분석 및 업계 전파 : 320건 ⑤ TBT 애로 중소기업 현장컨설팅 : 82건 ⑥ 품목별 간담회, 핫라인 간담회, 설명회 등 : 45건 ⑦ 중국 기술규제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규제발굴 : 36건 ⑧ 중국 중점관리 소비재 표준분석 : 21건, 중국 규제맵 제작 : 7건 ⑨ 중국 TBT애로 중소기업 컨설팅 : 41건, 중국 수출업계 교육 : 3건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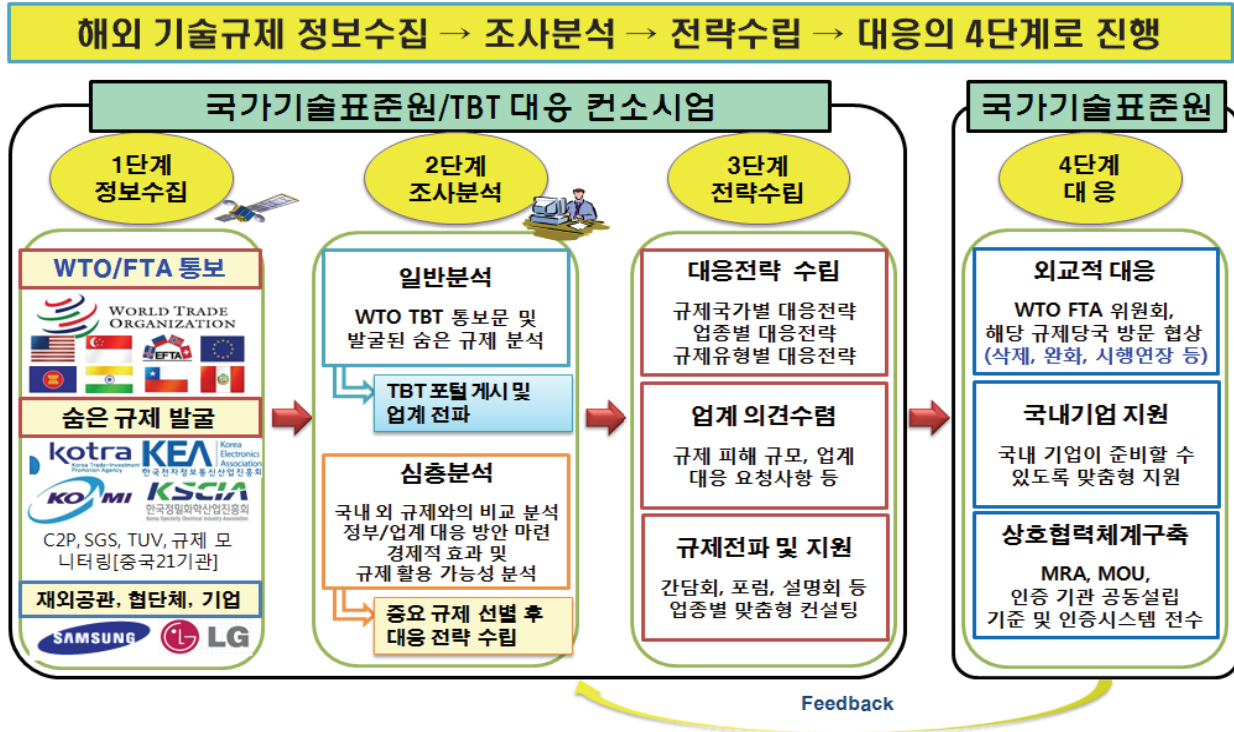
- WTO TBT 통보규제 또는 미통보 숨은 규제 발굴, 분석(3,700건) 후, 관련 업계에 배포하여 업체 애로 수렴할 예정이며, 이 중에 업체에 애로로 작용하거나 정밀 분석이 필요한 약 600여건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실시 후 기업에 제공
- 해외 기술규제 정보 전파를 위해 설명회, 세미나, 간담회, 교육 등을 실시(80건 이상)
- TBT 대응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TBT 애로 해소를 위해 시험인증 전문가에 의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애로를 해소(150건 이상)
- WTO TBT 위원회(연 3회), FTA TBT 위원회 및 규제당사국 방문 협상 등을 통해 100건 이상의 기업 애로 해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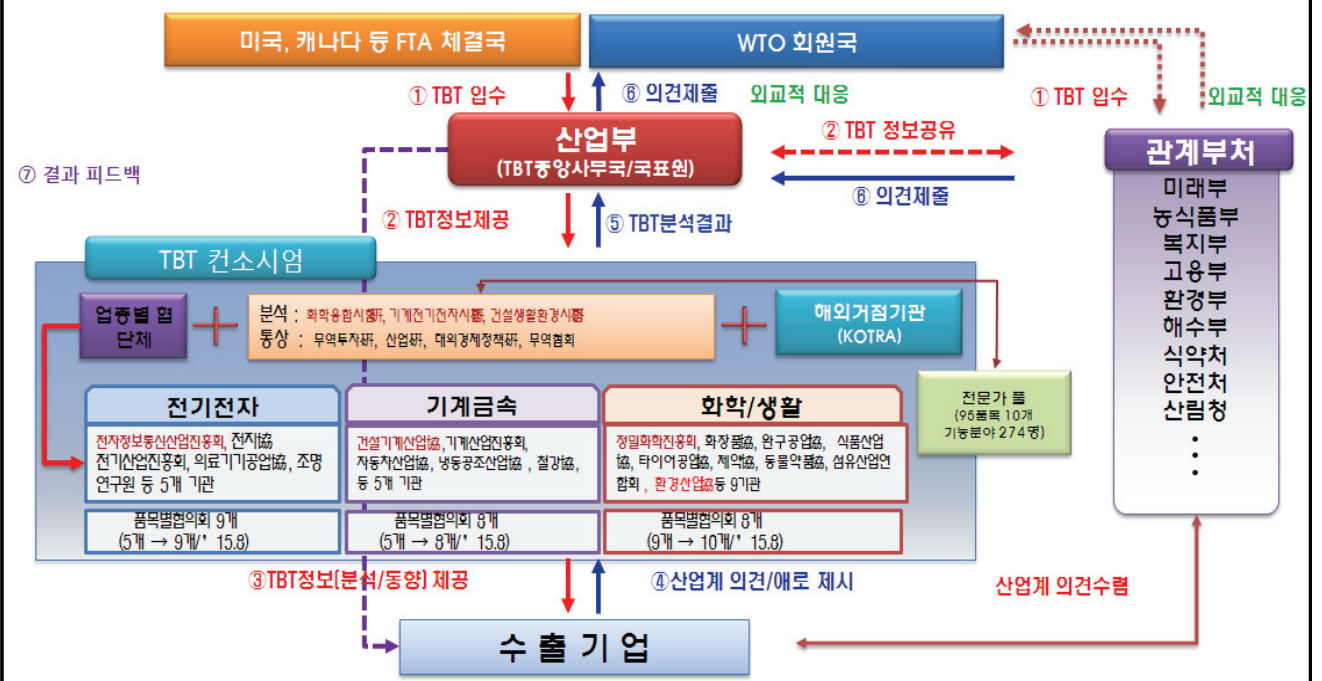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무역기술장벽 대응 절차



□ 무역기술장벽 대응 체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5,694	6,263	6,889	7,578	7,736	
'19~'23		6,263	6,889	7,578	7,736	7,73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최근 3년('16~'18년)간 외국의 기술규제가 평균 18% 이상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외 기술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정보 분석 후 업계 전파하여 업계의 애로를 사전에 해소
 - * WTO 통보규제(3년간 평균 18%증가) : ('15) 1,985건 → ('16) 2,336건 → ('17) 2,585건 → ('18) 3,065건
 - * 미통보규제(3년간 평균 40%증가) : ('15) 195건 → ('16) 275건 → ('17) 306건 → ('18) 510건
- 증가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통보문 기초분석 및 의견수렴, 국내업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제동향분석, 국내제품 수출현황 분석, 기업대응 및 협상전략 마련 등을 위해 규제 심층분석 확대 실시
- WTO/FTA TBT 위원회를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외에, 규제당국 현지 방문협상을 확대하여 장기 미해결 안전 또는 긴급 현안의 해결에 집중
 - * ('16) 81건 중 42건(48%) → ('17) 91건 중 45건(51%) → ('18) 104건 중 49건(49%)
- 중소·중견 기업은 인력·정보력 부족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하므로 TBT 애로기업을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기술자 사업 연계 등) 확대 실시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17년, ’18년) : 우수
- 2)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3)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 4)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를 입안 초기단계에 입수·분석**하여, 양자협상, 다자협상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실질적으로 수출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 외국의 기술규제를 정확히 분석하여 업계에 전파하고, 외국의 기술규제 정보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 등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고, 애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련한 경력을 가진 대응인력이 필요함
- 매년 증가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규제 중 30% 정도의 심층분석이 필요하나, 분석비용 부족으로 13% 정도만 분석하고 있으며, 업계의 현안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당사국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 당사자와 협상하는 것이 절실하나 출장여비 부족으로 일부만 직접 방문하여 해결하는 실정임
 - * (심층분석 현황) ’17년 15.4%(2,587건 중 397건) → ’18년 12.8%(3,065건 중 392건), → ’19년 12.3%(3,600건 중 440건)로 3년 평균 13.5% 심층분석 실시(’19년, ’20년은 예상 건수)
- 기술규제(TBT) 관련 협상은 국제표준과 기술적·공학적 합리성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소 협상을 진행하므로 정치적 사안과는 달리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4,059	4,059	-	-	-	-	4,059	4,051	99.8	99.8	-	8
2017	4,380	4,380	-	3,432	-	-	4,380	4,330	98.9	98.9	-	50
2018	4,100	4,100	-	-	-	-	4,100	4,087	99.7	99.7	-	13
2019	4,288	4,288	-	-	-	-	4,288	4,266	99.5	99.5	-	2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 해당없음 - 불용 : 8백만원(사유 : 집행잔액)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3,432 백만원 · 전용사유 : 당초, 민간위탁사업비목(320-02)으로 3,43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위탁 관련 법 적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일반연구비목(260-01)으로 3,432백만원을 전용하여 집행(사업내용의 변경은 없었으며, 기재부 승인 받은 후 집행) - 불용 : 50백만원(사유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 해당없음 - 불용 : 13백만원(사유 : 집행잔액)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 해당없음 - 불용 : 22백만원(사유 : 집행잔액)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참고 1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상품 수출시 그 나라의 기술기준 충족이 필수조건이나, 융·복합 상품의 개발, 안전·환경에 관한 소비자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TBT의 신설 및 개정이 매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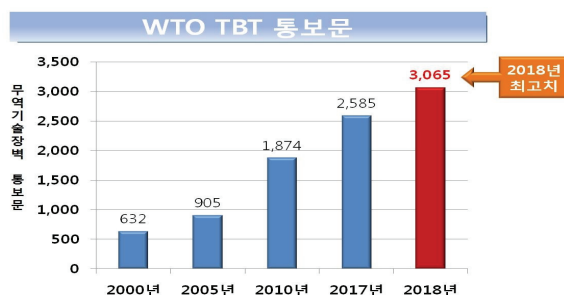
○ '15년 비관세장벽의 관세 환산치는 13.7%로, 세계평균관세인 7.7% 보다 높고 그 중 무역기술장벽이 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95) 13.1% → ('00) 11.07% → ('05) 9.1% → ('15) 7.7% (WorldBank DB)

** 비관세장벽 관세 환산치(13.7%) : TBT 7.3%, SPS 3.5%, 기타 2.9% (2015, OECD)

○ 특히, '18년 세계 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는 3,065건으로 WTO 출범 이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05) 905건 → ('10) 1,874건 → ('16) 2,336건 → ('17) 2,585건 → ('18) 3,065건



□ 불합리한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시 시험인증 시간·비용 증가 및 수출중단* 등 수출기업 애로 증가

* 케냐의 에어컨 규제강화로 우리기업도 수출중단된 상황에서 현지방문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기준 개정시까지 임시통관 허용('18.5월)

○ 우리 기업의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외국 정부와의 양·다자 협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증가

* ('14년) 42건 → ('15년) 56건 → ('16년) 81건 → ('17년) 91건 → ('18년) 104건

- 동남아, 중남미 등 개도국의 WTO 통보 신규규제가 81.2%에 달하고, 융·복합 무역기술장벽(TBT) 이슈가 확산되는 추세

-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숨은규제*도 지속적으로 증가

* 숨은규제 발굴건수(년평균 40% 증가) : ('16년) 275건 → ('17년) 306건 → ('18년) 510건

2. 지원 필요성

- 국표원은 WTO/FTA TBT 협정에 따른 국가 공식 접수처로서 WTO 및 FTA 체결국으로부터 통보된 TBT의 접수와 동 TBT에 관한 국가간 협상 기능을 수행

- 제·개정되는 외국의 기술규제는 번역·분석·전파·대응이 필요하나, 개별 기업 대응은 역량 부족 및 효율성이 낮아 정부 주도가 효율적임

- 기업 애로사항 이더라도 개별 기업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협상의 주체는 국가일 수 밖에 없음

-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완화 내지 해소를 위한 WTO TBT 협상대응

* ① 시험기준이나 절차를 차별적으로 적용, ② 국제표준과 불일치하거나, 과학적인 근거 없음, ③ 충분한 의견 제시기간 없음, ④ 중복검사, ⑤ 인증비용과다, ⑥ 검사지연, ⑦ 판정의 일관성결여 등

- FTA TBT 협상 및 구체적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외국 규제 기관과의 직접 협상(긴급 현안 해소)

- 기술기준 준수 등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 별도의 지원을 통해 산업 저변 및 일자리 확대가 필요

3. 사업내용

- ① (TBT 입수 분석·전파) WTO 통보문과 미통보 숨은규제 3,575건 중 수출에 영향이 큰 주요규제 510건에 대해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업계 전파 및 의견수렴

* (숨은규제발굴) 숨은 기술규제는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18년 510건)

** **(발굴 방법)** C2P, TUV, SGS 등 국외 규제전문사이트, 현지규제당국 및 시험인증 기관 홈페이지 상시모니터링, 업계 및 시험인증기관 해외지사, KOTRA 등

*** **(업계전파)** 지역별 설명회(62회), 간담회(4회), 정책포럼(5회), TBT 홍보관운영(2회), 가이드북, TBT대응보고서, 통계동향(4건), 월간(12건)레터, 경보메일 355,852건 등

②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방문(580회)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224건) 실시

* 기업의 TBT애로 수요 분석을 통해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기술자문, 정부 사업 연계, 교육훈련 등 서비스 제공

③ **(규제협상 및 대응)** 규제상대국과의 다자양자 협상을 통한 불합리한 기술규제 대응

* ('16) 81건(42건 해소) → ('17) 91건(45건 해소) → ('18) 112건(49건 해소)

④ **(중국 기술규제 애로 지원)**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 1 수출시장(26.8%, '18년기준)이나, 국제표준과 다른 기술규제가 많고, 제도 운영이 불투명 하므로 기업지원 및 정부차원의 협상 등 특별 대응이 필요

○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중국 표준분석 업계제공(전자파, 제품기동7품목108종), 주요 규제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정보 업계제공(8건)**, 애로해소 컨설팅 및 맞춤형 TBT교육 등 종합지원사업 실시

* 시장감독관리총국, 국무원 등 21개 기관 상시 점검, 중국 수출기업 애로규제 43건 해소

** 상해 TBT지원사무소 운영(현지 설명회, 간담회 각 2회), 맞춤교육(17회), 설명회(10회)

⑤ **(규제협상 및 대응)** 규제상대국과의 다자양자 협상을 통한 불합리한 기술규제 대응

* ('16) 81건(42건 해소) → ('17) 91건(45건 해소) → ('18) 112건(49건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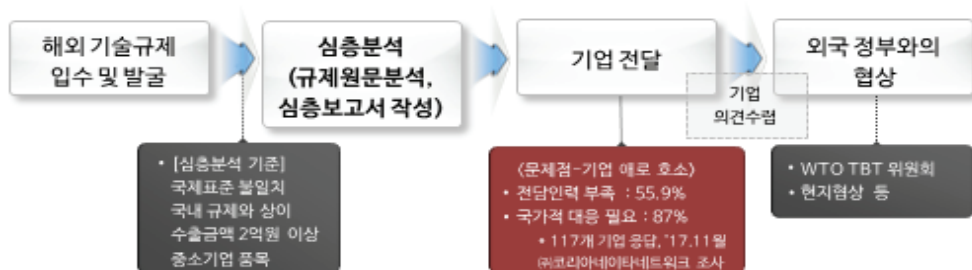
⑥ **(TBT 이행 협력)** FTA 협정 등 국가간 TBT 분야는 국가기술표준원이 협상 대표로서 협상 당사국과 직접 협상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가, 행정 불투명성이 높은 국가 등에 대해서는 상호인정 확대

* 현재 30개의 FTA가 발효 또는 제결 협상을 추진 중에 있음(발효 15개, 타결 1개, 협상진행 6개, 개선협상 4개, 개시여건 조성 6개 FTA)

** 한중 상호인정 확대(전자파 분야 공장심사 대행 '18.11월), 한EFTA 의약품 상호인정 추진('18.5월)

참고 2 해외 기술규제 대응절차

□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 해외 기술규제는 ① 규제입수 → ② 기초분석 → ③ 심층분석 및 정보전달 → ④ 정부 대응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단계 절차 모두 중요
- (1단계: 규제입수) WTO TBT 통보문 규제 및 미 통보 숨은 규제 발굴
- (2단계: 기초분석) 통보문 전체('18년 3,565건)에 대해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부처 및 관련기업의 의견 수렴을 실시
- (3단계: 심층분석, 업계전파 및 대응전략 마련) 각 부처 및 기업 의견조사시 애로 규제, 중소기업 품목, 수출금액 2억원 이상 품목 등에 적용되는 규제는 심층분석, 그 결과를 제공하여 제품설계 및 제조시 반영토록 하고,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
- (4단계 : 불합리한 규제 정부대응) 업계 애로규제, 국제표준 불일치 규제,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해당 정부와 직접 협상하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
- 해외 기술규제는 당사국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사안의 특성상 기업의 자체 해결에 한계가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정보력 부족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하므로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

참고 3 우리나라의 FTA TBT 협상 추진 및 이행 현황

1.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FTA TBT 협상 및 이행

- 수출시장의 규제장벽 개선을 위한 다자·양자 FTA/TBT 협상 진행
 - (한·메르코수르) 기체결 한-중남미 FTA 협정(콜·페·칠 등)을 기반으로 국제표준 부합화, 규제 투명성 제고 등 **WTO Plus 수준의 협상 추진**
 - (한·영국) 브렉시트에 대비, 한·영 교역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한·EU FTA/TBT 협정을 기반으로 한-영 FTA/TBT 협상 추진
 - (RCEP) 기존 미합의 잔여조문* 협의를 완료하여 연내 협상타결
 - * (잔여조문) 현안 해소를 위한 작업반 설치, TBT 현안 관련 책임있는 규제부서의 회의참석 등
- 다자·양자 FTA/TBT 이행으로 불합리한 해외규제를 지속 개선
 - (EU) 한-EU FTA 전기전자 부속서 이행 점검(안전인증품목 축소 등), 양측의 TBT 현안* 해소 및 기술규제 협력 추진(†한-EU 규제대화체, '19.下)
 - * 전자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소비·대기전력 기준 및 재활용 요건을 강화하는 에코디자인 등
 - (아세안) 한-아세안 대화체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건설자재표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우리기업 진출을 위한 신규 TBT협력사업 추진 지원

2. 對 중국 기술규제 애로대응 강화

- 한·중 적합성 소위, FTA TBT 위원회 등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 상호인정(MRA)을 활성화하고 중국발 TBT 애로에 적극 대응
 - 양국대표(국표원-CNCA)로 한중 적합성 소위 정책작업반을 구성('19.上)하여 주요 정책과제 및 협력분야*를 논의하고 한중적합성소위에 상정('19.下)
 - * 전자파 상호인정, 공장심사성적서 상호인정, SDoC 협력사업추진 등
 - 한·중 FTA TBT 위원회를 개최하여 WTO TBT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19.上)
 - * 네트워크 안전법상의 기술유출문제, 의료기기 공인성적서, 화장품 라벨링 등

3. 우리나라 FTA 협상 현황

□ 현재, 30개국과 FTA가 발효 EH는 협상 중으로 FTA 협정 등 국가간 TBT 분야는 국가기술표준원이 협상 대표로 협상 당사국과 직접 협상

* 단장 1명(국장 또는 과장), 실무자 1명(5급), 전문가 1명(5급)

※FTA(30개) 현황 : 발효 15개, 타결 1, 협상진행 6, 개선협상 4개 개시여건 조성 4개A

단계	FTA (발효일)	이행관련 주요현안
발효된 FTA (15개)	- 한-칠레 ('04.4월)	o 인증기관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범위 확대 (공장심사 등)('16)
	- 한-싱가포르 ('06.3월)	-
	- 한-EFTA ('06.9월)	o MRA 논의(전기전자, 의료기기, 의약품)
	- 한-ASEAN ('09.5월)	o TBT대화체 사전협약('17)
	- 한-인도 (CEPA, '10.1월)	o 표준·적합성평가(상호인정포함) 협력 MoU 추진 ('17.2월~)
	- 한-EU('11.7월)	o 전기전자 국장급 규제대화체('17) - (EU) 에코디자인, (韓) 안전인증품목 축소
	- 한-페루 ('11.8월)	-
	- 한-미 ('12.3월)	o 美 피뢰침 규정, 韓 화평법 애로
	- 한-터키 ('13.5월)	o 전기전자 MRA 타당성 검토
	- 한-호주 ('14.12월)	-
	- 한-캐나다 ('15.1월)	o 목재 기술규제 정보교환 (검사기관 상호지정 등) 등
	- 한-중 ('15.12월)	o 상호인정, TBT애로, 제품안전 협력
	- 한-뉴질랜드 ('15.12월)	o MRA 가능성 논의(전기전자, 정보통신, 전자파, 의료기기, 알콜음료)
	- 한-베트남 ('15.12월)	o 베 2차전자 규제·의약품 조달등급 애로
	- 한-콜롬비아 ('16.7월)	o 콜 에너지효율라벨링 규정 애로
타결된 FTA (1개)	- 한-중미 ('15.9~'16.8, 5차)	o 협정 발효전
협상진행 FTA (6개)	- RCEP ('13.3~'18.10, 24차)	o 진행중
	- 한-메르코수르 ('18.9월, 1차)	o 진행중
	- 한-중-일 ('13.3~'16.4, 10차)	o 진행중
	- 한-에콰도르 ('16.1~'11, 5차)	o 에콰도르 요청으로 잠정 협상 중단
	- 한-인도네시아	
	- 한-이스라엘 ('16.9~'17.5 5차)	o TBT 분과 타결
개선협상 (4개)	- 한-ASEAN	
	- 한-인도 CEPA	
	- 한-칠레	
	- 한-영	o 한-EU FTA 기반으로 논의
개시 여건 조성 (4개)	- 한-PA (Pacific Alliance, 태평양동맹) - 한-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경제연합) - 한-말레이시아 - 한-필리핀	

참고 4 무역기술장벽(TBT) 주요 대응 사례

【 TBT 대응 사례 】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 애로

- (개요) 중국내 3.5톤 이하 승용·화물차에 적용되는 배기가스 배출규제가 EURO-6 기반 CHINA 6와 LEV-III(미국) 기반 BEIJING VI로 강화
 - * 대상제품 對중국 수출액 : 9억 3천만불('15年)
 - * 수출기업 : 현대, 기아 등 자동차
- (애로 사항) CHINA-6와 BEIJING-VI(지방표준)는 배출가스 평가기준 및 규제치, 시험방법이 달라, 각 규제 만족을 위해 별도의 차량개발 필요
- (대응 활동) 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16.11)를 통해 중국측에 규제 시행계획과 시점을 질의하고 지방정부의 전시행 계획 관련 정보 제공 및 규제 일원화를 요청
- (대응 성과) 중국은 배기가스 규제를 CHINA 6로 일원화

콜롬비아 에어컨 등의 제품 에너지효율 인증·라벨 규제 애로

- (개요)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는 에어컨 등 6개 품목에 대한 에너지 효율 인증 및 라벨 규제를 신설하여 '16.8.31일부터 시행할 계획
 - * 對중국 수출현황(억불) : ('16年) 35 → ('17年) 31 → ('18年) 30
- (애로사항)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공개되지 않고, 라벨 세부도안이 미확정되어, 9월부터 콜롬비아에 수출되는 6개 품목에 대한 인증 취득 및 라벨 제작이 어려워 수출·통관을 우려
 - *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캐리어에어컨,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금호전기, 웅진코웨이 등 기업에서 에어컨, 냉장고, 모터, 온수기 등 수출
- (대응활동) 국표원은 WTO TBT 위원회*('16.6.14일) 및 주콜 한국대사관('16.6.17일)을 통해 콜롬비아 당국(광물에너지부)과 협의
- (대응성과) 시행 후 1년간 제조자 성적서를 인정하고, 시행 이전 생산제품은 라벨 부착을 면제

캐나다 TV 에너지효율 기준 관련 애로

- **(개요)** 캐나다에 TV를 수출하는 S사는 신규 개발된 고해상도(UHD)·대형 TV가 '19년 시행 예정인 퀘벡주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수출이 불가능
* 對캐나다 수출 현황(백만불) : ('16年) 8.2 → ('17年) 9.2 → ('18年) 11.4
- **(대응활동)**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캐나다측에 공식서한을 발송하였고, WTO TBT 양자·다자협상 등을 실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초기단계인 4K초과 UHD TV에 대해서는 인증 적용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요청
- **(대응 결과)** 캐나다 규제 당국이 4K초과 UHD TV에 대해서는 인증 적용 대상에서 면제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고해상도/대형 TV제품에 대해 원활히 수출을 진행

에콰도르 가정용 냉장·냉동고 에너지효율 인증 애로

- **(개요)** 에콰도르 규제기관이 지정한 시험소 성적서만 인정하도록 에콰도르 '가전기기(냉장고, 냉동고) 품질·라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애로를 호소
* 對에콰도르 수출현황(천불) : ('16年) 655 → ('17年) 779 → ('18年) 1,229
- **(대응활동)** 2018년 3월, 국표원은 IAF-MLA 협정에 따라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KAS인증(적합성증명서)이 추가 시험 없이 인정하고, 시행일을 관보 게재 후 1년으로 연기 요청
- **(대응결과)** 규제당국은 기존과 같이 한국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인정기로 하였으며,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규제 준수를 위해 시행일을 관보게재 후 6개월이 아닌 1년 후 규제 시행으로 변경

사 업 명						
(18)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37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조정과	오경희	류연욱	
		043-870-5550	043-870-555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구축	1,048	1,210	1,210	1,127	1,127	△83	△6.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63	1,063	1048 [1,048]	-	15	1,210	1,210	1,210	1,190 [1,190]	-	20	1,127
· 기술규제영향평가	708	708	703			655	655	655	644 [644]	-	11	572
· 중소·중견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171	171	163			171	171	171	168 [168]	-	3	171
· 미통보 기술규제 발굴	184	184	182			384	384	384	378 [378]	-	6	384
○ 비목별 분류(합계)	1,063	1,063	1048 [1,048]	-	15	1,210	1,210	1,210	1,190 [1,190]	-	20	1,127
· 일반수용비(210-01)	31	31	22		9	31	31	31	31 [31]	-	-	31.7
· 임차료(210-07)	10	10	9		1	10	10	10	10 [10]	-	-	10
· 국내여비(220-01)	5	5	5		-	5	5	5	5 [5]	-	-	5
·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11	11	11	11 [11]	-	-	10.3
· 일반연구비(260-01)	1,006	1,006	1,001		5	1,153	1,153	1,153	1,133 [1,133]	-	20	1,0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각 부처 제·개정 법률에 대해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과도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국내·외 규제와 비교하여 기준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여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해소 추진 등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술규제 분야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규제 영향평가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0호)
- ② 추진경위
 - '12.12.1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신설
 - '12.12.13. 국무총리실, 국무총리훈령 개정
 - '13.01.01.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 '18. 3.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에 포함
 - '18.6.12.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조항을 신설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 '18.12.24. 국무총리훈령 개정(제730호)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기술규제 영향평가 : 572백만원

- 각 부처별 기술기준, 시험·검사·인증 관련 법령 제·개정시 기술규제 영향 평가를 위한 사업비
- 전문가분석 : 462건 × 1.4백만원* = 647백만원(2019년) → 394건 × 1.43백만원* = 564백만원(2020년) (260-01 연구개발비)
 - * 1건당 : (0.35백만원 × 3일 = 1.05백만원) + 자료구입비 0.35백만원(2019년) → (0.36백만원 × 3일 = 1.08백만원) + 자료구입비 0.35백만원(2020년)
 - * '17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기술사 평균 : 355,290원) → '18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기술사 평균: 360,870원)
- 간사기관 운영비=4백만원(2019년) → 4백만원(210-01 일반수용비)(2020년)
- 사업추진비=4백만원(2019년) → 4백만원(2020년) (240-01 사업추진비)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 171백만원

- 기업현장의 기술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연계 등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애로발굴을 위한 사업비
- 전문가 분석(120건 × 1.05백만원) = 126백만원(2019년) → 전문가 분석 117건 × 1.08백만원 = 126백만원(2020년) (260-01 연구개발비)
 - * 1건당 : 0.35백만원 × 3일 = 1.05백만원(2019년) → 0.36백만원 × 3일 = 1.08백만원(2020년)
 - * '17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기술사 평균 : 355,290원) → '18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기술사 평균: 360,870원)
- 기술규제정책포럼운영비 = 5백만원(2019년) → 5.7백만원(2020년) (210-01 일반수용비)
- 기업애로 발굴과제에 대한 부처협의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기술규제전문위원회 운영 사업비
- 회의비·자문비 = 22백만원(2019년) → 회의비·자문비 = 22백만원(2020년) (210-01 일반수용비)
 - * 회의비·자문비: 15만원 × 15인 × 10회 = 22백만원(2019년) → 15만원 × 15인 × 10회 = 22백만원(2020년)
- 기술규제정책 포럼, 워크숍 개최 등 = 10백만원(2019년) → 10백만원(2020년) (210-07 임차료)
- 사업추진비=4백만원(2019년) → 3.3백만원(2020년) (240-01 사업추진비)
- 국내여비=4백만원(2019년) → 4백만원(2020년) (220-01 국내여비)

○ 미통보 기술규제 발굴 : 384백만원

- 각 부처에서 기술규제 제·개정시 국조실에 미통보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사례 및 이로 인한 기업불편 제거를 위한 사업비
- 전문가 분석 : 110건×1.05백만원*=115백만원(2019년) → 108건×1.07백만원*=115백만원(2020년) (260-01 연구개발비)

- * 1건당 : (0.35백만원 × 2일 = 0.7백만원) + 자료구입비 0.35백만원(2019년) → (0.36백만원 × 2일 = 0.72백만원) + 자료구입비 0.35백만원(2020년)
- * '17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기술사 평균 : 355,290원) → '18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기술사 평균: 360,870원)
- 각 부처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 매3년마다 순차적으로 실효성검토를 실시하여 개선·통합·폐지 등 제도정비
 - * 인증현황 : 총 186개(국토부 31, 산업부 26, 해수부 21, 농림부 18, 환경부 15, 그 외 75)
- 전문가 분석 : 62건×4.3백만원* = 265백만원(2019년) → 62건×4.3백만원* = 265백만원(2020년) (260-01 연구개발비)
 - * 1건당 : 0.355백만원 × 12일 ≒ 4.3백만원(2019년) → 0.36백만원 × 12일 ≒ 4.3백만원(2020년)
 - * '17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기술사 평균 : 355,290원) → '18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기술사 평균: 360,870원)
- 사업추진비=3백만원(2019년) → 3백만원(2020년) (240-01 사업추진비)
- 국내여비= 1백만원(2019년) → 1백만원(2020년) (220-01 국내여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술규제영향평가 의견반영률 (단위: %)	목표	66	67	69	70	71	최근 4개년 실적치의 평균(66.75%) 보다 107% 상향조정하여 71%로 설정	기술규제영향 평가 의견반영률 = 의견수렴건수/ 검토의견제시 건수 x 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자료(국무 조정실)
	실적	65	68	69	70	-			
	달성도	98%	101%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 기술규제 영향평가 : 329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77건 → 반영 47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38건) → 검토 후 개선(10건)
2017	- 기술규제 영향평가 : 368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101건 → 반영 69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54건) → 검토 후 개선(16건)
2018	- 기술규제 영향평가 : 273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53건 → 반영 37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56건) → 검토 후 개선(20건)
2019	- 기술규제 영향평가 : 344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37건 → 반영 26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56건) → 검토 후 개선(1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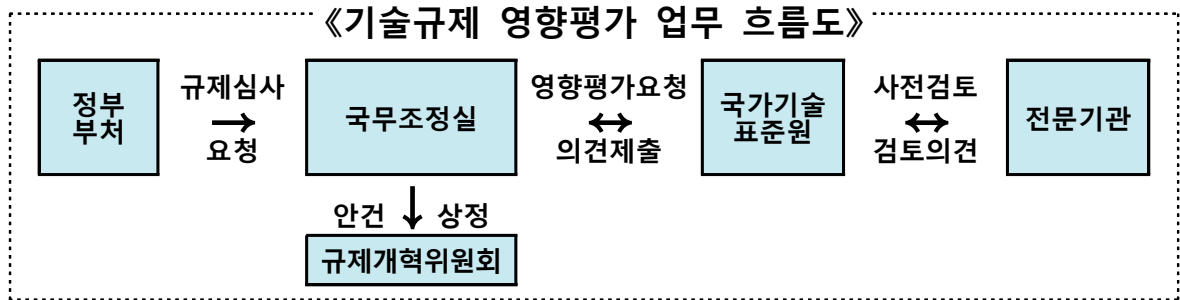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각 부처의 기술기준 및 인증·시험 등 규제 신설·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추진 등 기업 부담 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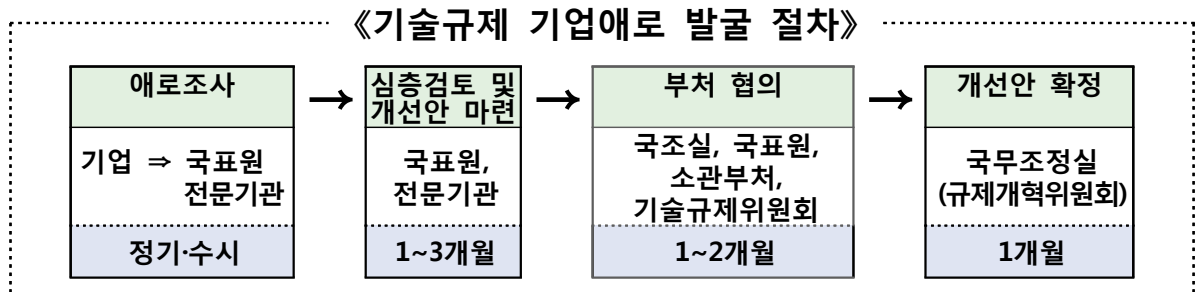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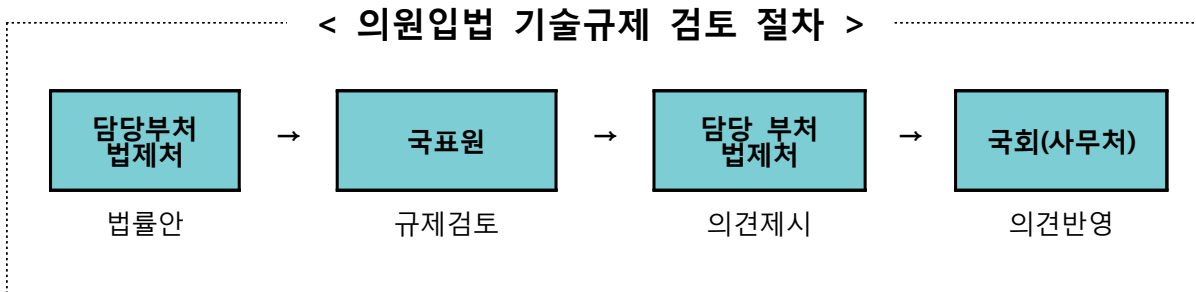
○ 기술규제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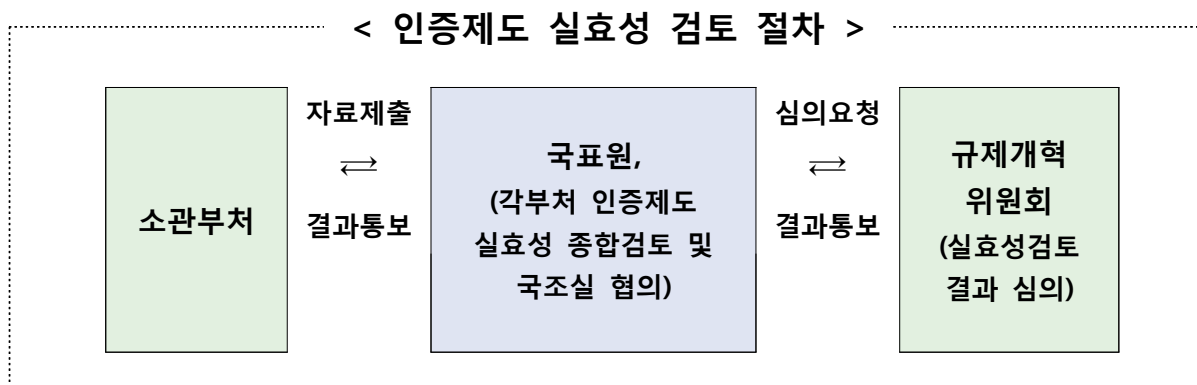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 미통보 규제 발굴



○ 3년주기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1,063	1,210	1,331	1,464	1,464	
'19~'23		1,210	1,320	1,440	1,570	1,71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19년 예산 산중위 검토보고서) 적합성평가의 실효성 검토대상 명확화 필요
 - (조치사항)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 평가대상에 대한 기준 및 검토대상을 명확히 하고 운영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조치 완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술규제 신설·강화 사전 방지
 - 소 부처의 법령 등 제·개정 시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의견제시
- 기술규제 사후 정비 및 개선
 -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타당성·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수렴,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
 - 대표적 기술규제인 법정인증제도에 대해 매 3년 주기로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 통합, 폐지 등 제도 정비
-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 방지하고 사후 제도정비·개선 등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기술규제위원회 운영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1,119	1,119	-	-	-	-	1,119	1,086	97.1	97.1	-	33
2017	1,172	1,172	-	-	-	-	1,172	1,158	98.8	98.8	-	14
2018	1,063	1,063	-	-	-	-	1,063	1,048	98.6	98.6	-	15
2019	1,210	1,210	-	-	-	-	1,210	1,190	98.3	98.3	-	2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6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17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18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19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9)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37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협력과	박재형	유용재	-
		043-870-5560	043-870-5562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IT기반기술표준 정보화체계구축	620	710	710	959	959	249	35.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27	627	620 [620]	-	7	710	710	710	707 [707]	-	3	959
· 법무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19	419	416 [416]	-	3	480	480	480	478 [478]	-	2	480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85	185	181 [181]	-	4	185	185	185	184 [184]	-	1	185
· 전산장비 및 SW구매	23	23	23 [23]	-	-	45	45	45	45 [45]	-	-	294
○ 비목별 분류(합계)	627	627	620 [620]	-	7	710	710	710	707 [707]	-	-	959
· 관리용역비(210-15)	604	604	597 [597]	-	7	665	665	665	662 [662]	-	-	665
· 자산취득비(430-01)	23	23	23 [23]	-	-	45	45	45	45 [45]	-	-	2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부처 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구축('14~'16)된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e-나라표준인증, <https://standard.go.kr>)의 안정적인 운영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표준·인증 정보를 원스톱(one-stop)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홈페이지 등 6개 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유지보수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대국민 정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직원들의 행정·정책업무 수행 지원

- (전산장비 및 SW 구매)

국가기술표준원 업무포털 및 홈페이지 구현을 위한 서버 등 관련 하드웨어(HW) 교체·보수 지원 및 PC 백신 라이선스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② 추진경위

- '07.12월 : IT 기반의 국가표준 정보화 전략('08~'12) 수립
- '09.2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부처별 실행계획('09~'12)에 반영
- '12.7월 :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VIP 보고(국경위)
 - * 국가표준·인증 선진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필요성 공감 및 조속히 구축 지시
- '13.5월 : 국정과제 '정부3.0'(행자부 주관)의 세부 사업과제로 반영
- '14.3월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VIP 지시 및 후속조치 이행
 - *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것은 의견제시 가능토록 실시간 정보 제공할 것
- '14.5월 :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도입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조기구축 요구
- '14.6월 : 총리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중요성 언급
- '15.11월 :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인증제도 혁신방안)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19) 480 → ('20요구) 480백만원

- 정부 28개 기관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및 해외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 통보문) 정보 등 총 5만여종의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원문정보 포함)
-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완료('14-'16)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 정보시스템(포털 등) 관제 및 통합 DB 운영관리 지원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유지보수, 관리용역비)

구분	금액	요율	유지보수비
통합정보시스템 개발비	5,529,842,000원	7.7%	425,797,834원
상용SW 도입비	787,400,000원	6.9%	54,330,600원
합 계(백만단위 미만 절사)			480,000,000원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19) 185 → ('20요구) 185백만원

표준정책, 소비자 제품안전, 기술규제, 시험인증 정책 등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국가기술표준원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업무포털 시스템 관제,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5개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 전산인프라 관리 / 헬프 데스크 종합 운영지원)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위탁운영, 관리용역비)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인력	4	10	14
노임단가(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준참조)	305,433원	239,748원	215,681원
월평균일수	21		
직접인건비합계	139,413,666원		
제경비	직접인건비×10%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합 계(백만원단위 미만 절사)	185,000,000원		

○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19) 45 → ('20요구) 294백만원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PC 보안 관리를 위한 SW 도입 비용

- 국가기술표준원 서버·PC 등 보안관리를 위한 SW 라이선스 비용
- 백신 등 SW 라이선스 비용(기타운영지원, 자산취득비)
- * 산출근거 : (PC백신500개×0.028백만원)+(내PC지킴이SW500개×0.034백만원)
 +(윈도우서버백신30개×0.3백만원)+(리눅스서버백신5개×1백만원)
 +(비표준플러그인제거 {2식×47.5백만원}+{2식×19.5})
 +(윈도우 OS 교체 PC460개×0.2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만건)	목표	165	184	444	488	537	최근 3년간 목표치의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설정	연간 포털검색 이용건수 (로그기록 기준)	e-나라표준인증 로그분석을 통한 데이터 수집 합산
	실적	208	404	573	590	-			
	달성도	126.0	219.6	129.1	120.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6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구축(범부처 표준인증시스템 및 e-나라표준인증 포털 고도화 서비스 개시)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8%)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2017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e-나라표준인증 포털 연간 400건 이상 접속)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2018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e-나라표준인증 포털 연간 500건 이상 접속)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홈페이지 개편(18.6)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2019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e-나라표준인증 포털 연간 600건 이상 목표), 특허청과 업무협약 체결(표준용어DB연계)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③ 향후('20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5만여종에 이르는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원문정보와 메타 데이터 최신화,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e-나라표준인증 포털 이용자수가 연간 600만건 이상 상회(로그기록 기준) 추진
- 국가기술표준원 주요 정책정보(표준·안전·시험인증·기술규제)가 대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콘텐츠 최신화 및 가동률 99.9%이상 무중단 정보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정보화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및 운영관리 수행

정보화 유지보수 사업 추진계획 수립

정보화 운영 대응체계 추진반 구성
(기술규제협력과 및 각 부서 표준정보화 담당)

정보화 운영사업자 선정 및 착수보고회 개최

정보화 사업수행 및 정기점검 (매월)
(정보시스템 HW 및 SW 관제, 헬프데스크 운영 등)

정보화 사업수행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정보화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590	590	590	590	590	
'19~'23		755	755	755	755	75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지적 및 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정보서비스 확충 및 과학기술·산업무역 유관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시스템 활용도 지속확산 추진(연중)
 -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통합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NTIS 시스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속 표준 개발 지원을 위해 신속 표준개발 시스템 구축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수요자 중심 기능개선으로 원내 행정·정책업무 지원 및 맞춤형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연중)
 - * 표준·제품안전·해외기술규제·시험인증 정책 및 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 추진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종합점수 83.0점)
- 2016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
- 2017년 통합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
- 2018년 통합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755	755	-	-	-	-	755	736	97.5	97.5	-	19
2017	590	590	-	-	-	-	590	573	96.0	76.0	-	17
2018	627	627	-	-	-	-	627	620	98.9	98.9	-	7
2019	710	710	-	-	-	-	710	707	99.6	99.6	-	3

2) 주요 결산사항

2016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17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18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19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라. 기타 추가자료

- 별첨 참조

붙임 1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사업현황('14~'16)

□ 사업목적

-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정보가 산재되어 기술정보 획득이 어렵고 부처간 소통부재에 따른 중복규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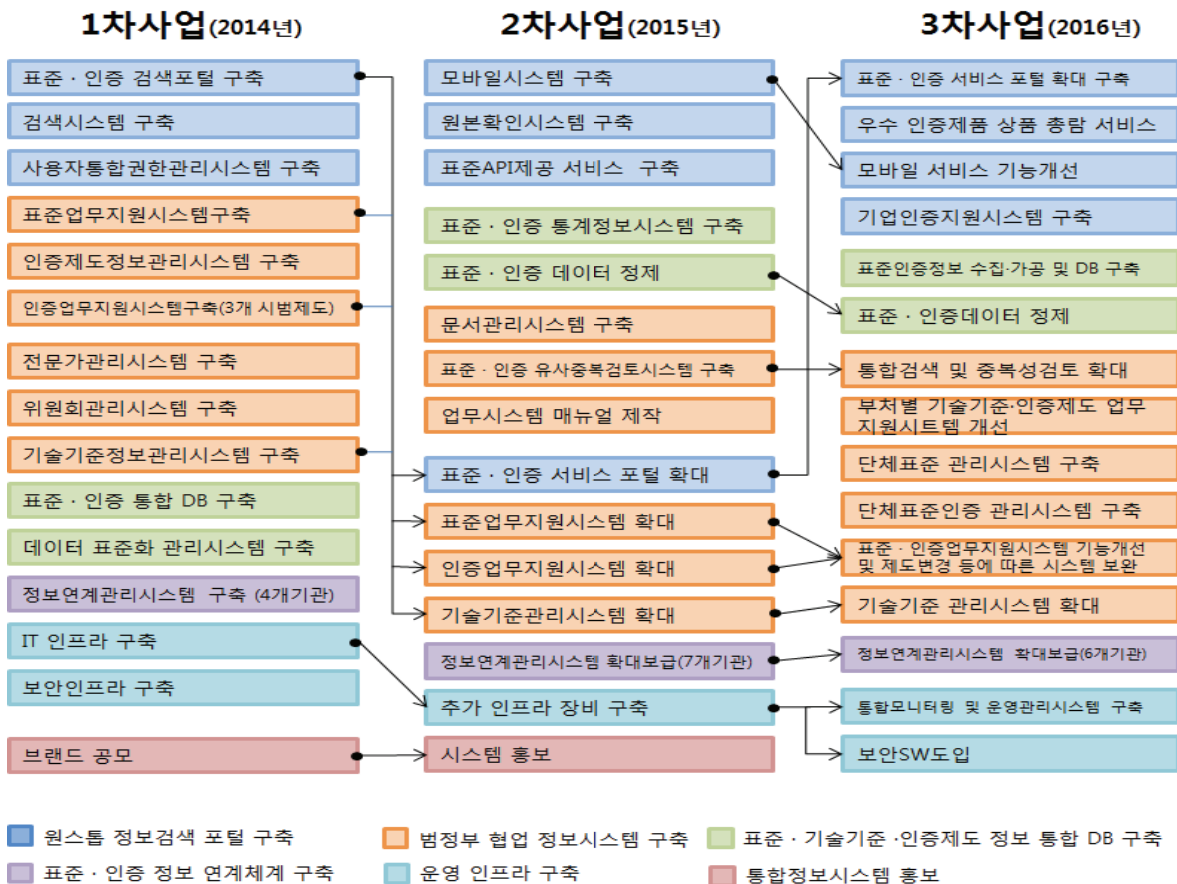
* 정부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에 대한 통합정보 관리체계 구축으로 실시간 정보제공 및 중복해소 필요성 강조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애로과제, '14.3.20.)

□ 추진경과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범부처 차원의 종합 정보관리 및 부처간 협업을 위한 「국가표준 인증 통합정보시스템(사업명)」 구축

* ('14) 시스템 기반구축, 35억 → ('15) 시스템 확대, 38억 → ('16) 시스템 고도화, 19억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현황('14~'16) >



붙임 2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현황('14~'16)

구분	정보시스템 명칭	주요 업무기능	구축연도
대국민 종합포털	포털·검색·사용자 권한 관리 시스템 (e-나라표준인증 포털)	정부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단체표준·해외 기술규제(TBT) 통합검색, 사용자 권한 부여, API 지원, 모바일 검색서비스 제공	'14년 ~ '16년
범부처 협업 시스템 구축	표준업무지원시스템	국가표준 개발, 국제표준 투표지원 시스템	
	인증업무지원시스템	범부처 국가표준(KS) 인증지원사무국 업무 처리 지원(인증업체 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전문가관리시스템	국가표준 개발 전문가 생성·관리	
	위원회관리시스템	국가표준 개발 위원회 생성·관리	
	기술기준 정보관리시스템	정부 기술기준 정보의 통합관리 시스템	
	유사중복성 시스템	표준·기술(인증)기준 유사중복 내용 검증	
	통계정보 시스템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종합통계 정보제공	
	기업인증지원시스템	KS 인증 자가진단, 인증가이드 정보제공	
	단체표준·인증관리시스템	단체표준 개발업무 처리지원 및 단체표준 인증기관 관리지원 시스템	
	문서관리시스템	생성·수정 문서, 이미지 등 통합관리	
	인증제도 정보관리시스템	법정인증제도 정보 통합관리 지원시스템	
통합 DB 관리	데이터표준화 관리시스템	표준·기술기준·인증 DB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연계	정보연계관리시스템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운영 관계부처·기관 연계정보 관리시스템	
인프라 지원	운영인프라 및 관제시스템	서비스 무중단 시스템, 운영관제 시스템 웹 서비스 및 서버 보안 솔루션 등	

e-나라표준인증

국가표준 인증제도 기술기준 TBT 정보 인증지원 지식공감 알림마당 고객지원

② 품목별 인증검색 ③ 분야별 상세검색

표준인증정보를 한눈에!

통합검색

표준인증검색 ① 통합검색

인기검색 | 자전거 LED 집치영광고 농광고 KS 사물인터넷

품목별 인증 길잡이

품목별 인증 조회

품목별로 필요한 정부 인증 및 관련기준을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분야별 정보검색

인증제도 국가표준 기술기준 TBT통보문 인증지원

④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

KS인증기관조회 KS인증업체확인 표준개정·개정신청 단체표준통합정보센터 표준용어사전

정책동향

이보기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 경제성장의 지원금으로 톺... 2016-05-20
- [특허청] 대한민국, 표준특허 세계 Top 5 진입 2016-05-20
- [미래창조과학부] 재난당 국제표준 완료 2016-05-20
- [미래창조과학부] 재난당 국제표준화 주도 2016-05-20

공지사항

보도자료 행사안내

이보기 +

- KS 작성 프로그램 (KSOT) 다운로드 안내 2017-01-06
- e-나라표준인증 포털 개편 안내 2016-12-29
- 원문보기 여러 발행 시 대처 사항입니다. 2016-08-18
- 표준문서편집기(KSDT) 설치전 확인해야할 사항 안내 2016-03-09

상단신청

1381 인증 표준 콜센터

국립신물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국가기술표준법

(27737) 충북 음성군 영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법

Copyright 2017 e-나라표준인증. All Rights Reserved.

시스템 관련 문의 043-870-5697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국가기술표준법

- ① 통합검색 서비스 : 표준·인증 통합검색 정보서비스 제공(5개 항목*)
- * 국가표준(2만여종), 기술기준(3천여종), 인증제도(200여개), 단체표준(4천여종), TBT통보문(2만여종)
- ② 품목별 인증검색 : 검색 품목에 대한 인증제도-인증기준-KS 표준간 상호연관 정보 제공
- ③ 분야별 상세검색 : 국가표준, 인증제도, 기술기준, TBT 통보문, 단체표준 항목별 조건검색
- ④ 주요서비스 바로가기 : 자주 찾는 서비스에 대한 단축메뉴 제공(5개 주요 서비스)

□ **법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제20조)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

- 제15조의 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 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법제도 정비 실적 및 계획**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 보고(2013.8, 국가정책조정회의)

- 다양한 인증제도 간의 시험검사 성적 상호인정 제도화 추진
- 신규 인증제도 도입 및 기존 인증제도 변경 시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 검토

○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보고(2014. 8, 총리주재 규제개혁위원회)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신속구축 지시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완료(2015. 7.1 시행)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망 구축·운영근거 마련(법 제20조 제3항)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완료(2015. 7.29 시행)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세부규정 마련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고시(2016. 6)

1. 추진목표 및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정책정보(표준, 안전, 기술규제, 시험인증) 제공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업무포털 시스템* 및 전산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업무포털, TBT 포털, 인체치수 포털, 인정통합 포털

2. 추진경과

- 국가기술표준원이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포털·홈페이지 및 전산 인프라 유지보수 대응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

구분	정보시스템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목적	오픈일	비고
1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 업무포털 (www.kats.go.kr)	국가기술표준원 소개, 공지사항, 각종 행사, 분야별 주요업무 게재, 홍보관 운영 등	‘10.01	대국민 /업무지 원
2	TBT 포털 (www.knowtbt.kr)	무역기술장벽(TBT) 중앙사무국 소개, WTO 무역기술장벽, TBT 통보문 등 정보 제공	‘12.01	대국민
3	인정통합 포털 (www.knab.go.kr)	- 공인 인정기관 평가, 사후관리 등 공인 인정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 공인인정기구 제도 소개, 국제공인 인정 기관 검색정보 제공	‘19.05	대국민/ 업무지원
4	인체치수 포털 (sizekorea.kr)	- 한국인 인체치수 참조표준 정보 제공 - 인체치수 표준 디지털 가이드 라인 제공	‘14.01	대국민

□ **범정부 표준·인증 통합정보 허브(Hub)로 대외 인지도 확산**

- 기술규제 통합검색 포털(e-나라표준인증) 서비스 개시('15.1) 이후 이용자수가 계속 증가하여 연간 500만건(로그기록 기준) 이상 방문 접속 중

* 접속자 현황 : ('16) 208만건 → ('17) 404만건 → ('18) 573만건

- 200여 개국 해외 기술규제정보(TBT 통보문) 및 정부 28개 기관 표준·인증 등 5만여종의 기술규제 정보를 최신화하여 검색 서비스 제공

* 국가표준(2만여종), 인증제도(200여건), 기술기준(3천여종), 단체표준(4천여종), TBT 통보문(2만여종)

-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신규 기술규제 DB 구축(원문포함) 및 국내·외 기술규제 동향 정보, 보도자료 등 관련 정보 서비스도 동시 제공

* 국가표준(4천여종), 기술기준(1천여종), 인증제도(100여개) DB 현행화 및 표준 원문 갱신

□ **신속 민원 대응 체계 구축으로 포털 만족도 향상**

- 포털 이용시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사항 등은 헬프 데스크(Help Desk)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민원 대응체계 구축

- 연간 2천여건에 달하는 포털 이용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소

* e-나라표준인증 포털 “민원 알림기능”을 신설하여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간 대외 소통 기능 강화

- 외부 전문 평가기관(정보화진흥원)을 통한 만족도 조사로 사용자경험 환류

* 만족도 조사결과 : ('16) 70.36점 → ('17) 76.55점 → ('18) 81.93점

□ **포털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스템 연계·홍보 강화**

- 산·학·연 등 대상으로 표준·인증 등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활용 통합 DB 연계, 포털 시연 교육 등 인지도 제고

- 방사청 국방규격 시스템과 국가표준 정보연계 체계 고도화('18.2)

- 고용부 표준 및 기술규제 인력양성 사업 교육프로그램 포함('18.7)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NCS 기반 온라인 실무자 교육 교재 활용('18.12)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기술표준원 정책 정보를 손쉽게 찾도록 메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UI 대폭 개편 추진

* 홈페이지 접속자 현황 : ('16) 323만건 → ('17) 345만건 → ('18) 382만건

- 주요 정책 정보는 “카드뉴스” 항목으로 제공하고, 포토 뉴스 게시판을 신설하여 정책활동 정보제공 강화

《 카드뉴스 제공 현황 》



- 홈페이지 방문기록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자주 찾는 메뉴는 중심에 배치하고 국표원 전문 포털 연계 메뉴도 신설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개편 현황 》



○ 매년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 품질 제고

* 만족도 현황(리커드 5점척도) : ('16) 75.2% → ('17) 76.3% → ('18) 78.0%

□ 무역기술장벽 포털(www.knowtbt.kr)

- 포털 사용자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UI 개편(SNS 연계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 기술장벽 정보 제공 항목 신설
 - 중국 기술규제 동향, 중국 표준·인증 분석 정보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항목 신설
- * 품목별 중국 인증 정보, 중국표준(GB)과 KS 표준 비교정보 제공(600여종)

《 중국 인증·표준 정보 제공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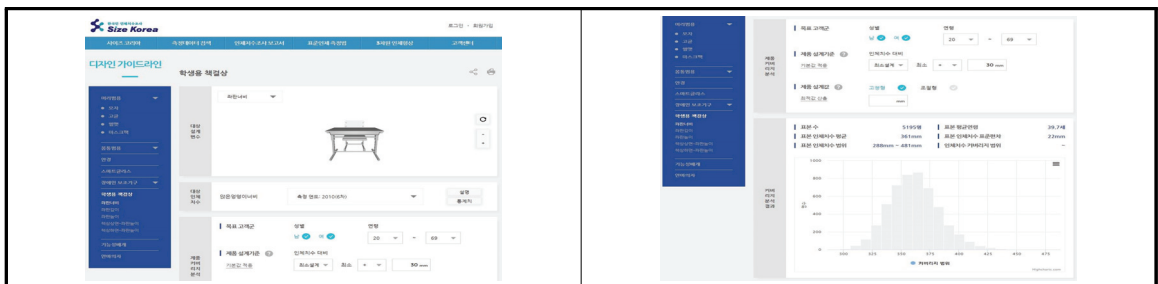
The image displays three screenshots of the KnowTBT portal interface. The first screenshot shows a search results table for 'China Technical Regulations' (중국 기술규제) with columns for item number, title, and date. The second screenshot shows a search results table for 'China Standards' (중국 표준) with columns for item number, title, and date. The third screenshot shows a search results table for 'China Certifications' (중국 인증) with columns for item number, title, and date.

- 연간 200여개국의 해외 기술규제 통보문(TBT) 제·개정 정보제공
 - * TBT 통보문 보유 정보 : 3만여건('18년 TBT 통보문 신규 DB 구축 : 3,015건)

□ 인체치수 포털(sizekorea.kr)

- 제품 설계시 한국인 인체치수를 적용하기 쉽도록 온라인 구현 디지털 가이드라인 툴(tool) 개발 제공
 - 학생용 책걸상, 베개, 안마의자, 스마트 글라스 등 총 8개 품목에 대한 한국인 인체 치수 표준 통계 분포 정보 제공

《 디지털 제품설계 가이드라인 제공 현황 》



- 한국인 3차원 인체형상 표준, 동적 측정표준 정보 제공
 - * 인체치수 참조표준 다운로드 현황 : ('16) 6,724건 → ('17) 6,266건 → ('18) 8,411건

□ 인정 통합 포털(www.knab.go.kr, '19.5)

- 새로운 국제 공인기관 관리체계(ISO 국제표준 17011)에 맞추어 공인 시험·제품 인정기관 통합관리 시스템 신규 구축
 - 공인기관 인정평가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온라인 평가관리 시스템* 및 평가사 관리시스템** 구축
 - * 제품 인정기관 및 시험인정기관 인정평가 관리시스템 통합
 - ** 공정한 인정평가를 위해 “자동 평가사 추천” 기능 신설
- 연간 1천여 건에 달하는 온라인 인정업무 평가 및 정보 제공



붙임 9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SW 현황

☐ 홈페이지 · 업무포털 지원 전산장비(HW)

구분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서버 / 스토리지	통합가상화 서버(업무망)	HP Blade BL460c G8	1
	통합가상화 서버(인터넷망)	HP Blade BL460c G8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업무망)	HP Storwize V3700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업무망)	MSA 2052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인터넷망)	HP Storwize V3700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인터넷망)	MSA 2042	1
	e-KOLAS AP	IBM P720	1
	e-KOLAS DB	IBM P720	1
	e-KOLAS 스토리지	IBM DS3512	1
	e-KOLAS HMC	IBM X3550 M3	1
	사이즈코리아 웹서버	DELL R410	4
	사이즈코리아 DB서버	DELL R610	2
	사이즈코리아 파일서버	HP DL360 G5	2
	사이즈코리아 PSM	DELL 1950	1
	백업서버	Arcserve-9040V	1
	IP관리 서버(업무망)	IBM X3550 M3	1
	IP관리 서버(인터넷망)	IBM X3550 M3	1
	IP관리프로그램 관리 서버(내부망)	INI MAX IPKeeper	1
	IP관리프로그램 관리 서버(인터넷망)	INI MAX IPKeeper	1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서버	DELL PowerEdge R520	1
	PMS 및 PC 보안관리 서버	HP DL380 G6	1
	보안USB 서버(업무망)	HP ProLiant DL380 G6	1
	보안USB 서버(인터넷망)	HP ProLiant DL380 G6	1
	보조기억매체관리 서버(업무망)	IBM X3550 M3	1
	보조기억매체관리 서버(인터넷망)	IBM X3550 M3	1
	웹키퍼 미러링 서버	CT-1000	1
	V3 배포서버(업무망)	AhnLab EMS 2000A	1
	V3 배포서버(인터넷망)	AhnLab EMS 2000A	1
	개발서버(업무망)	HP ProLiant DL380 Gen9	1
	개발서버(인터넷망)	HP ProLiant DL380 Gen9	1
	소계		35

구분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전송장비	업무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제품명 : BigIron RX-4 제조사 : BROCADE	1
	인터넷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제품명 : OmniSwitch OS9700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업무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FWS 624 제조사 : BROCADE	35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witch OS6700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witch OS6300 제조사 : Alcatel Lucent	7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witch OS6400 제조사 : Alcatel Lucent	32
	업무망 L4 스위치	제품명 : PIOLINK 제조사 : Application Switch 3000	1
	인터넷망 광포트	제품명 : OS9-GNI-U24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소계		
보안장비	NAT 방화벽	제품명 : AhnLab TrusGuard 제조사 : 안랩	1
	업무망 방화벽	제품명 : ISG-1000 제조사 : 주니퍼	1
	인터넷망 방화벽	제품명 : WeGuardia XTM6000 제조사 : 퓨처시스템	1
	인터넷망 웹방화벽	제품명 : WAPPLES-2400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1
	зомбиPC방지용 방화벽	제품명 : AhnLab TrusWatcher 제조사 : 안랩	1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	제품명 : VENUS 제조사 : 엑스큐어넷	1
	IP 관리 시스템	제품명 : IPKEEPER 제조사 : 아이앤아이맥스	2
	IPS(사이버안전센터 연동)	제품명 : Sniper IPS NE2000 제조사 : 윈즈	1
	소계		
총 합 계(서버 · 스토리비, 전송장비, 보안장비)			112

□ 상용 패키지 SW

패키지명	패키지 SW		
	모델명	용도	수량
제품명 : VMWare vCenter	제조사 : VMWare	가상화서버 운영 SW	4
제품명 : VMWare vSphere	제조사 : VMWare	가상화서버 관리 SW	4
제품명 : IPKeeper	제조사 : INIMAX	IP관리 솔루션	1
제품명 : D'amo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개인정보보호 솔루션(DB 암호화)	1
제품명 : Privacy-i	제조사 : 소만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PC 보안)	1
제품명 : CharkraMax	제조사 : (주)펜타시큐리티	개인정보 접근제어	1
제품명 : UBI SAFER-PSM MASTER	제조사 : 이지서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보안관리 솔루션)	1
제품명 : UBI SAFER-PSM MANAGER	제조사 : 이지서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로그수집 서버)	1
제품명 : UBI SAFER-PSM AGENT	제조사 : 이지서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로그수집 에이전트)	1
제품명 : PDF-Gateway	제조사 : 이파파루스	KS표준 e-book열람시스템	1
제품명 : NetClient	제조사 : (주)닥터소프트	SW자산관리 솔루션	2
제품명 : SafeUsb	제조사 : 닥스테크(주)	보조기억매체 관리 솔루션	2
제품명 : Rpoint	제조사 : 코드링크	인터넷망PC 문서삭제 SW	1
제품명 : nProtect Enterpirse	제조사 : 잉카인터넷	PC 보안솔루션	1
제품명 : Backup Exec	제조사 : Symantec	백업SW	1
제품명 : BigLook WASS	제조사 : 이븐스타	웹취약점 점검 SW	1
제품명 : MS-SQL 2008	제조사 : Microsoft	통합DB운영	1
제품명 : Window Server 2008	제조사 : Microsoft	서버 운영체제	2
제품명 : ContentWise CMS	제조사 : ContentWise	업무포털 CMS	1
제품명 : Jeus+Webtob	제조사 : 티맥스소프트	e-KOLAS WEB/WAS	1
제품명 : Tiberio	제조사 : 티맥스소프트	e-KOLAS DBMS	1
합 계			30

사 업 명
(20)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71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이용구	김진구	이미지
		043-870-5320	043-870-5328	043-870-5333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기술표준 원기관운영	1,576	1,644	1,644	1,644	1,644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에 상액	불용예 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 (합계)	1,576	1,576	1,576	1,533	-	43	1,644	1,644	1,644	1,611 <1,611>	-	33	1,644
· 상용임금	-	-	-	-	-	-	-	-	-	-	-	-	508
· 운영비	1,507	1,507	1,507	1,493	-	14	1,575	1,575	1,575	1,559	-	16	919
· 업무추진비	-	-	-	-	-	-	-	-	-	-	-	-	9
· 보전금	2	2	2	2	-	-	2	2	2	2	-	-	2
· 민간이전	67	67	67	38	-	29	67	67	67	49	-	18	185
· 자산취득비	-	-	-	-	-	-	-	-	-	-	-	-	21
○ 비목별 분류 (합계)	1,576	1,576	1,576	1,533	-	43	1,644	1,644	1,644	1,611	-	33	1,644
· 상용임금(110-03)	-	-	-	-	-	-	-	-	-	-	-	-	508
· 임차료(210-07)	400	400	400	393	-	-	400	400	400	397	-	3	400
· 유류비(210-08)	15	15	15	12	-	3	15	15	15	12	-	3	15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85	85	85	65	-	5	153	153	153	153	-	-	154
· 복리후생비 (210-12)	-	-	-	-	-	-	-	-	-	-	-	-	6
· 관리용역비 (210-15)	1,007	1,007	1,007	1,023	-	6	1,007	1,007	1,007	997	-	10	344
· 업무추진비 (240-02)	-	-	-	-	-	-	-	-	-	-	-	-	9
· 포상금 등 (310-03)	2	2	2	2	-	-	2	2	2	2	-	-	2
· 민간경상보조 (320-01)	67	67	67	38	-	29	67	67	67	49	-	18	67
· 고용보험금 (320-09)	-	-	-	-	-	-	-	-	-	-	-	-	118
· 자산취득비 (430-01)	-	-	-	-	-	-	-	-	-	-	-	-	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2) 사업개요

3) '20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 상용임금(508백만원)

시설관리직 5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22명x23백만원)

○ 임차료(400백만원)

통근버스 5대 운영(5대×200일×400천 원)(2019년)

→ 통근버스 5대 운영(5대×200일×400천 원)(2020년)

○ 차량유류비(15백만원)

평균연간유류비(2.5백만원) x 6대(2019년)

→ 평균연간유류비(2.5백만원) x 6대(2020년)

○ 시설장비유지비(154백만원)

건물유지비(53백만원), 기계·통신·전기 및 환경 시설유지비(100백만원)(2019년)

→ 건물유지비(77백만원), 기계·통신·전기 및 환경 시설유지비(77백만원)(2020년)

○ 복리후생비(6백만원)

시설관리직 5월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복리후생비(22명x0.27백만원)

○ 관리용역비(344백만원)

청사관리용역비(1,007백만원)(2019년) → 청사관리용역비 : 344백만원(2020년)

* 장기 계속계약 '19.5~'20.4 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부족분을 관리용역비 잔여분에서 대체 예정

○ 관서업무추진비(9백만원)

시설안전평가회의등(9백만원)

○ 포상금 등(2백만원)

포상금 등(2백만원)(2019년) → 포상금 등(2백만원)(2020년)

○ 민간경상보조(67백만원)

충북혁신도시 공동 보육시설 운영비(6,700원×10명)(2019년)

→ 충북혁신도시 공동 보육시설 운영비(6,700천원×10명)(2020년)

○ 고용부담금(118백만원)

시설관리직 5월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부담금(22명×5백만원)

○ 자산취득비(21백만원)

관리용역 계약종료로 용역회사 투입 장비 및 기자재 등의 철수에 따른 물품 구입(1식)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1,576	1,644	1,644	1,644	1,644	
'19~'23		1,644	1,644	1,638	1,685	1,732

※ '20년 관리용역직 정규직 전환으로 '21년도 예산감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1,451	1,451	-	-	-	-	1,451	1,384	95.4	95.4	-	67
2017	1,444	1,444	-	6	-	-	1,450	1,444	100	99.6	-	6
2018	1,576	1,576	-	-	-	-	1,576	1,533	97	97	-	43
2019	1,644	1,644	-	-	-	-	1,644	1,611	98	98	-	33

2) 주요 결산사항

2016	해당사항없음
2017	해당사항없음
2018	해당사항없음
2019	해당사항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1) 기술표준정책 (71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02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	기술표준정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오광해	-	전설 연구사
		043-870-5340	-	043-870-534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술표준정책	1,538	1,473	1,473	1,943	724	△749	△50.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523	1,575	1,538	-	37	1,473	1,473	1,573	1,557	-	16	724
· 운영비	729	729	694	-	35	679	679	679	669	-	10	720
· 포상금 운영	5	5	3	-	2	5	5	5	5	-	-	4
·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부담금	789	841	841	-	-	789	789	889	883	-	6	-
○ 비목별 분류(합계)	1,523	1,575	1,538	-	37	1,473	1,473	1,573	1,557	-	16	724
· 상용임금(110-03)	433	433	400	-	33	444	444	444	434	-	10	481
· 일반수용비(210-01)	140	140	140	-	-	53	53	53	53	-	-	50
· 복리후생비(210-12)	8	8	8	-	-	8	8	8	8	-	-	8
· 일반용역비(210-14)	104	104	104	-	-	98	98	98	98	-	-	90
· 포상금(310-03)	5	5	3	-	2	5	5	5	5	-	-	4
· 고용부담금(320-09)	44	44	42	-	2	76	76	76	76	-	-	91
· 국제부담금(340-02)	789	841	841	-	-	789	789	889	883	-	6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 분야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전문관 보수)
-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품질명장 기술전수 등을 통한 품질경영 우수기업·유공자 포상 및 품질경영 문화 확산
- (운영비) 전문관(=무기계약직) 보수(상용임금+복리후생비+고용부담금),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등
- (포상금 운영)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정책을 개발한 부서 포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인증), 제23조(시험·검사 기관 인정),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계량산업의 지원)
-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② 추진경위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06.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12.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2016.4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17.4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수립
- 2017.12 『유망 신산업(12대 분야) 표준화 로드맵』수립
- 2018.5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수립
- 2019.5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수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20년도 현재 확정 : 724 백만원 >

○ 운영비 : ('19) 679백만원 → ('20) 720백만원

① 운영지원(전문관 보수) : ('19) 528백만원 → ('20) 580백만원

- 정책수립,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관(무기계약직) 운영
- 산출내역 : ('19년) 상용임금 444백만원(16명x231만원x12개월) + 복리후생비 8백만원(16명x50만원) + 고용부담금 76백만원(16명x475만원) = 528백만원
→ ('20) 상용임금 481백만원(16명x251만원x12개월) + 복리후생비 8백만원(16회x50백만원) + 고용부담금 91백만원(16명x569백만원) = 580백만원

②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 ('19) 151백만원 → ('20) 14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핵심 행사*인 국가품질경영대회 추진 운영
- * '19년 개최 시 산업부장관 포함 2천여명 참석, 404점 포상('20년 국무총리 초청 추진)
- 품질 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우수품질분임조를 발굴·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운영
- * ('18년 행사) (기간) '18.8.27.~8.31., (참석자) 산업현장 근로자, 시민관람객 등 8,000여명, (주요내용) 17개 시·도에서 지역예선을 통과한 268개팀 약 2,500명의 품질경진대회
- 산출내역 : ('19년)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98백만원(1식x98백만원, 일반용역비) + 우수기업 심사 및 문화확산 53백만원(5개분야x30만원x2일x18명) = 151백만원
→ ('20)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 90백만원(1식x90백만원, 일반용역비) + 우수기업 심사 및 문화확산 50백만원 = 14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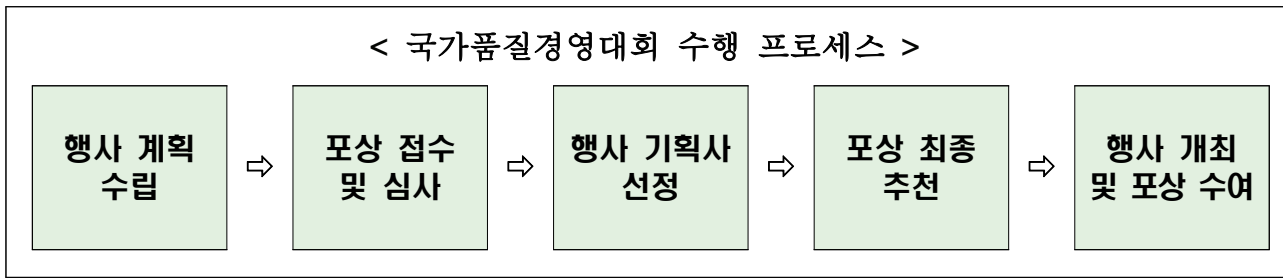
○ 포상금 운영 : ('19) 5백만원 → ('20) 4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1,523	1,473	1,620	1,782	1,782	
'19~'23		1,523	1,473	1,873	1,923	1,92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전문관 고용유지를 통해 일자리 유지 추진
- 국가품질경영대회 내실화를 통해 품질우수기업의 품질노하우 및 경영기술을 중소기업에 전수·전파하여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도모.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우리원 대표 행사인 국가품질경영대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증액이 필요한 실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6	1,687	1,687	-	21	-	-	1,708	1,647	97.6	96.4	-	30
2017	1,529	1,529	-	130	-	-	1,659	1,642	107.4	98.9	-	17
2018	1,523	1,523	-	52	-	-	1,575	1,538	100.9	97.7	-	37
2019	1,473	1,473	-	100	-	-	1,573	1,557	58.5	98.9	-	1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6	-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제부담금 부족분 21백만원 전용 및 전문관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 61백만원 불용
2017	- 상용임금(9백만원, 전문관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7백만원,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포상금(1백만원, 집행잔액) 등 17백만원 불용 - 국가품질경영대회 행사 추진을 위한 경비 120백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에서 일반용역비(210-14)로 전용 - 학술연구용역 예산 부족분 130백만원을 국가기술표준원 기본경비(7118-251) 일반수용비(210-01)에서 일반연구비(260-01)로 전용 -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국제부담금 부족분 4백만원을 일반연구비(260-01)에서 국제부담금(340-02)으로 전용
2018	- 통보액 증가로 인한 국제기구 국제부담금 부족분을 납부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기본 경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52백만원 전용 - 휴직에 따른 인건비 및 집행잔액, 포상금 잔액 등 37백만원 불용
2019	- 통보액 증가로 인한 국제기구 국제부담금 부족분을 납부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기본 경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100백만원 전용 - 국제부담금 집행잔액 6백만원, 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 10백만원 불용

□ 사업 개요

- (목적) 11개 국제표준화기구 정회원국 지위 유지를 통한 국제표준 협력 활동 확대·강화* (~1963)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의2 및 산업표준화법 제29조

- (최근 3년간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예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800	819	789	793	789	841	789

- (전용 방지 필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확대, 상호인증서 발급 증가로 인한 부담금 증가에 따라 예산 확대 필요

< 최근 국제부담금 예산 집행 결과 (단위: 백만원) >

	예산	전용	집행	전용사유	전용비목
'16년	800	21	819	환율변동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17년	789	4	793	환율변동	동일사업 - 일반연구비
'18년	789	52	841	부담금 증액	기본경비 - 공공요금 및 제세
'19년	789	100(예상)	880(예상)	부담금 증액	전용 준비 중

< 예시: ISO 부담금 증액 사유 >

- 부담금 납부 목적 : 전기전자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 국제표준 제정 및 보급을 위한 의무분담금 납부(ISO 정관 제17조)
- 부담금 산정 공식(ISO Formula) : ①부담금 단위(UNIT) x ②단위 금액
 - ① 회원국 별 경제규모를 측정하여 배분
 - * 우리나라 UNIT이 증가: ('17 UNIT) 96 → ('18 UNIT) 107
 - ② 매년 총회에서 승인하며, '18년 베를린에서 5,118 CHF에서 4,904 CHF로 결정
 - ⇒ ②단위 금액은 전년 대비 5,118 CHF에서 4,904 CHF로 감소하였으나,
 - ①부담금 단위(UNIT)가 상승하여 부담금이 약 52백만원 상승 ('18년 중, 프, 독, 일, 영, 미 310 UNIT, 이탈리아 135, 러시아 120, 한국 107)

< 각 기구별 국제부담금 예산 내역 ('19.7.18. 기준) >

파란색 : 납부 완료

빨간색 : 납부 예정

국제기구명		'19년 예산액	'19년 지출액	담당과
영문	한글			
ISO	국제표준화기구	544 백만원	620 백만원 (+76)	국제표준협력과 ISO 상반기 301백만원 지출 완료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170 백만원	173 백만원(+3)	
APLMF	아태평양법정계량포럼	6 백만원	6 백만원	계량측정제도과
IECEE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9 백만원	14 백만원(+5)	전기통신제품안전과
IECEX	국제방폭기기인증제도	4 백만원	4 백만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IECQ	국제전기전자부품품질인증제도	6 백만원	5 백만원(-1)	전기전자정보표준과
APLAC	아시아태평양시험소인정협력체	19 백만원	23 백만원 (통합, -1)	적합성평가과
PAC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	5 백만원		
ILAC	국제시험소인정기구	13 백만원	14 백만원(+1)	
IAF	국제인정포럼	5 백만원	5 백만원 (예정)	
IECRE	신재생에너지적합성평가시스템	8 백만원	19 백만원(+11)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총 계		789 백만원	883 백만원	전용예정 : 94 백만원

□ 지출의 필요성

- 정회원국의 기초 의무인 국제부담금 미납 시 국제표준화 활동 불가, 기업의 수출경쟁력 저하 및 국제위상 악화가 불가피
 - (국제표준화활동 불가) 국제표준 제정 불가, 국제표준 제정·개정 과정에서 투표권(국가당 1표) 박탈, 국제표준 문서 수령 불가 등
 - (수출경쟁력 저하) 국내에서 발급된 시험인증서의 해외 상호 인정 불가*에 따라 수출 기반 붕괴
 - * 타국에 국내 제품 수출 시, 현재는 국내 발급 시험성적서로 성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상호 인정 불가 시 타국의 시험인증서에 의존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 발생 및 수출 일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
 - (국제적 위상 악화) 자격정지 관련 문서가 국제적으로 회람
-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과 동시에 타국의 국제표준 제안 시 우리 기업의 이해 반영을 통한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가 필수적

사 업 명
(22) 이차전지화재안전성검증센터구축(R&D)(5806-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10	115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에너지및자원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800	5806	317
명칭	에너지기술기반확충	기반구축(기금)	이차전지화재안전성검증센터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장혁조	노학엽	이현진
		043-870-5440	043-870-5441	043-870-5444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B-A)/A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 센터 구축	-	-	-	14,950	14,950	14,950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계 획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에 상액	불용예 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	-	-	-	-	-	-	-	-	-	-	-	14,950
·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 센터 구축	-	-	-	-	-	-	-	-	-	-	-	-	14,397
· 기획평가관리비	-	-	-	-	-	-	-	-	-	-	-	-	553
○ 비목별 분류(계)	-	-	-	-	-	-	-	-	-	-	-	-	14,95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	-	-	-	-	-	-	-	-	-	-	14,9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등 내역사업은 이차전지의 화재안전성 시험평가·인증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ESS 확대 여건 마련 및 시험평가 지원을 통한 국내 이차전지의 수출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② 추진경위

- '17.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 '19.6.04,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심의·확정
- '19.6.11, 관계부처 합동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대책 발표
- '19.10 ESS용 이차전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99억원
- 사업기간 : '20~'21
- 사업규모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장비 8종(12개) 등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사업수행자 유형별 정부매칭)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ESS용 이차전지 시험인증기관 (참여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사업 수혜자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학·연 등 관계 기관	수행 형태에 따라 33~100% 이내	전기사업법 제 49조(기금의 사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3) '20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 센터 구축 사업 : 14,397백만원 요구('19년 대비 +14,397백만원)

- ESS 관련 화재표준 연구 및 화재시험장 구축, 이차전지 셀 및 모듈단위 화재시험 평가 기반구축에 14,397백만원
 - 산출내역
- 신규 : 14,397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다/상	1개	19,196백만원	9/12	14,397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553백만원

구 분	'19예산	'20요구	연구개발단계	주관기관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 센터 구축	-	14,950백만원	-	-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 센터 구축	-	14,397백만원	-	-
▪ 기평비	-	553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신규사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중장기 과제(지정공모)		단기 과제(지정 및 자유공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실시 (지정공모에 한함)	제출자→전담기관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수요조사서 심의 (지정공모에 한함)	전담기관
기획과제도출	기획위원회/PD	신규지원대상기술 및 예산(안) 심의·확정(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과제기획수행 (산업 및 특허·표준분석)	기획위원회/PD	신규 사업 공고	기획위원회/PD
기획과제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사업계획서 접수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기술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청과제 평가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전담기관	확정과제 협약 체결	주관기관→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중간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확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 주관기관(참여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전담기관→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8	'19	'20	'21	'22	'23
'18~'22	-	-	--	-		
'19~'23		-	14,950	14,950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 방향

- **(추진방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하여 기존의 시험인증기관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인력을 보유한 기관내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 센터 구축을 위하여,

-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기술 개발 및 시험평가 장비 구축을 지원

○ **(추진계획)**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에 대한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요구 증대 및 국내 안전인증(KC)제도 도입에 따라 수요 증가 예상됨에 따라,

- 국내 안전인증 도입 및 해외 수출 제품의 시험인증 수수료를 구축 장비 유지 보수와 전문인력 채용 등에 활용하여 센터 운영에 활용

* ESS 세계시장은 '18년 4.7GWh에서 '30년 약 305GWh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인증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

○ 정부 및 민간역할 분담에 의한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 시험평가·인증 기반 활성화로 수출 경쟁력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전의사항

- ESS 화재사고 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19.6.11)
- (제도개선) ESS용 이차전지를 안전관리(KC인증)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국내 시험평가 인프라 미 구축시 안전인증제도 운영 차질 발생
 - * 국제기준(IEC 62619)에서도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에 대한 열폭주시험을 요구
- (시험평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사고로 이차전지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필요성 제기
 - * 소용량 및 전기차 배터리 위주의 이차전지 시험평가 장비로는 현재 ESS용 등으로 널리 보급되는 대용량 이차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한계
- (업계요구) 시료운반 문제 및 기술 유출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이차전지에 대한 열폭주 시험을 희망
 - * 일본은 약 600억원을 투자하여 열폭주 시험까지 가능한 이차전지 시험소 운영 중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신규사업)

라. 기타 추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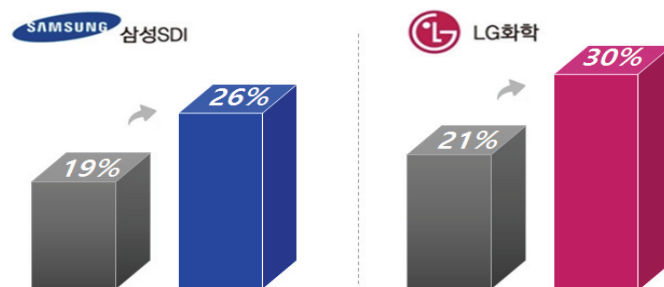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확보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요 창출 및 이차전지 수출 경쟁력 강화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연도별 목표	○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인증) 도입을 위한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방법 개발	○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인증) 도입을 위한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인프라 및 검증센터 구축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전지에 대한 한국형 화재안전성 시험 운용 및 평가기술 개발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절차서 개발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열폭주) 등 시험장 구축을 위한 국제표준에 따른 시험평가 장비 단계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전지 전용 화재안전성(열폭주) 시험장 구축을 위한 국제표준에 따른 시험평가 장비 단계별 구축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열폭주) 시험인증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 등 시험평가인증 체계 구축 ○ 해외 시험소 지정을 통한 국내 수출 업체 지원

□ 기대효과·성과

- (세계시장) 국내 기반의 이차전지 안전성 적기 검증 및 안전성 인증을 통한 이차전지/ESS분야 글로벌 시장 우위 점유 지속 강화



< 한국 업체 글로벌 ESS 시장 점유율_출처:SNE리서치 >

- (신산업창출) 국내 에너지신산업으로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 센터' 활성화를 기반으로 이차전지에 대한 세계적인 시험평가·인증 국가로의 역량강화 및 신산업 창출
-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품(이차전지 셀, 모듈, 팩 등)의 국제표준 기반의 화재안전성 검증·인증의 일원화 및 체계화를 통한 세계 시장 진출 기반 확보 및 기술력 강화 지원

□ 추진배경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ESS 화재사고 원인으로부터 일부 배터리에서 제조상 결함이 발견되어 이차전지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 수립 필요

* ESS 사고원인조사 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6.11)

- ESS용 이차전지 배터리 셀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이차전지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

* (안전인증) 제품시험 + 공장심사, (안전확인) 제품시험

□ 추진경과

- (법령) ESS용 이차전지의 안전인증제도(KC인증) 도입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10.21)

< 개정안 주요내용 >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 사용 대상에서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에 한해 정격 전압 직류 1,500V 이하의 제품으로 확대

- ESS용 이차전지를 안전관리대상에 포함 : 비대상 → 300KW급 이하

- (안전기준) 이차전지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5.31~7.31.) 및 시행

< 제정안 주요내용 >

- 산업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규정(IEC 국제표준 동일)

- 외부단락, 충돌, 낙하, 내부단락시험(내부단락 또는 열폭주)

- ESS에 사용된 이차전지의 잦은 화재로 이차전지에 대한 안전관리 도입이 시급하여 우선 내부단락 시험으로 진행하고, 열폭주 시험은 시험평가 장비 구축 완료 이후 도입 예정

* 미국 등에서는 ESS 설치를 위해 열폭주 시험을 요구함에 따라 국내 이차전지 업계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서도 열폭주 시험 필요